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2180-01

정책보고서 2017-62

2016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



박종서 유삼현 이소영 이상림 변수정 김은정 최인선

【책임연구자】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공동연구진】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은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유삼현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제출문 <<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2016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목 차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5
제2장 기존 연구 및 연구 방법	7
제1절 기존 연구 검토	9
제2절 연구의 내용 구성	21
제3절 연구방법	23
제3장 지방자치단체 인구특성 기초분석	26
제1절 인구 변화 추세	28
제2절 인구통계 기초분석: 출산	33
제3절 인구통계 기초분석: 혼인	37
제4절 인구통계 기초분석: 인구이동	42
제5절 인구통계 기초분석: 고령화	49
제6절 주요 인구변동 요인과 인구증가율	53
제4장 지방자치단체 심층 사례분석	57
제1절 지방자치단체 인구유형화	59
제2절 지역 유형별 인구 특성 분석	69
제3절 지역 유형별 정책 환경 분석	182
제4절 지역 유형별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 내용 분석	197

제5장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내용분석	231
제1절 분석 방법	233
제2절 공통사업 분석	236
제3절 자체사업 분석	284
제4절 소결	361
 제6장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성과관리 방안	 369
제1절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 성과와 한계	371
제2절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성과 관리의 필요성	376
제3절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성과 관리 방안	377
 참고문헌	 387

표 목차

〈표 2-1〉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변천	10
〈표 2-2〉 지방자치단체 평가체계	13
〈표 2-3〉 저출산·고령화 자체 사업 우수사례 평가 기준	17
〈표 3-1〉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합계출산율 평균 및 분포, 2005~2015	33
〈표 3-2〉 지방자치단체별 평균초혼연령(SMAM) 상·하위 10지역, 2005~2015	39
〈표 3-3〉 지방자치단체별 순이동률 상·하위 10지역, 2005~2015	44
〈표 3-4〉 지방자치단체별 20~49세 순이동률 상·하위 10지역, 2005~2015	46
〈표 3-5〉 지방자치단체별 65세 이상 순이동률 상·하위 10지역, 2005~2015	48
〈표 3-6〉 지방자치단체별 조사망률 상·하위 10지역, 2005~2015	50
〈표 3-7〉 지방자치단체별 주요 요인 간 상관관계	54
〈표 4-1〉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기초자치단체별 지역분류	64
〈표 4-2〉 상대적 인구이동에 따른 기초자치단체별 지역분류	65
〈표 4-3〉 기초자치단체 인구특성별 유형화 리스트	67
〈표 4-4〉 사회적·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12개 지역 유형 선정	69
〈표 4-5〉 경상남도 창원시의 합계출산율 및 연령별 출산율(천 명당) 변화	75
〈표 4-6〉 경기도 이천시 합계출산율 및 연령별 출산율(천 명당) 변화	83
〈표 4-7〉 부산 강서구 합계출산율 및 연령별 출산율(천 명당) 변화	93
〈표 4-8〉 서울특별시 종로구 합계출산율 및 연령별 출산율(천 명당) 변화	104
〈표 4-9〉 강원도 강릉시 합계출산율 및 연령별 출산율(천 명당) 변화	113
〈표 4-10〉 인천광역시 연수구 합계출산율 및 연령별 출산율(천 명당) 변화	122
〈표 4-11〉 전라남도 보성군 합계출산율 및 연령별 출산율(천 명당) 변화	131
〈표 4-12〉 전라남도 함평군 합계출산율 및 연령별 출산율(천 명당) 변화	141
〈표 4-13〉 전라남도 나주시의 합계출산율 및 연령별 출산율(천 명당) 변화	150
〈표 4-14〉 부산광역시 동구 합계출산율 및 연령별 출산율(천 명당) 변화	159
〈표 4-15〉 단양군 합계출산율 및 변화	167
〈표 4-16〉 충청북도 괴산군의 합계출산율 및 연령별 출산율(천 명당) 변화	176
〈표 4-17〉 심층사례분석 지역의 인구정책 전담 조직 현황(2017. 12월 기준)	183
〈표 4-18〉 산업별 사업체수	184
〈표 4-19〉 산업별 종사자수	186
〈표 4-20〉 사업장 규모별 사업체 수	187

〈표 4-21〉 사업장규모별 종사자 수	188
〈표 4-22〉 농가 수 및 농가인구	189
〈표 4-23〉 의료시설 수	190
〈표 4-24〉 병상 수	191
〈표 4-25〉 보건의료원 수	192
〈표 4-26〉 보육시설 수	193
〈표 4-27〉 보육 아동	194
〈표 4-28〉 주택 현황	196
〈표 4-29〉 창원시 저출산 분야 정책 내용	199
〈표 4-30〉 창원시 고령사회 분야 정책 내용	200
〈표 4-31〉 이천시 저출산 분야 정책 내용	201
〈표 4-32〉 이천시 고령사회 분야 정책 내용	202
〈표 4-33〉 부산 강서구 저출산 분야 정책 내용	204
〈표 4-34〉 부산 강서구 고령사회 분야 정책 내용	206
〈표 4-35〉 강릉시 저출산 분야 정책 내용	208
〈표 4-36〉 강릉시 고령사회 분야 정책 내용	210
〈표 4-37〉 인천 연수구 저출산 분야 정책 내용	212
〈표 4-38〉 인천 연수구 고령사회 분야 정책 내용	213
〈표 4-39〉 보성군 저출산 분야 정책 내용	215
〈표 4-40〉 보성군 고령사회 분야 정책 내용	216
〈표 4-41〉 함평군 저출산 분야 정책 내용	217
〈표 4-42〉 함평군 고령사회 분야 정책 내용	218
〈표 4-43〉 나주시 저출산 분야 정책 내용	219
〈표 4-44〉 나주시 고령사회 분야 정책 내용	220
〈표 4-45〉 부산광역시 동구 저출산 분야 정책 내용	222
〈표 4-46〉 부산광역시 동구 고령사회 분야 정책 내용	223
〈표 4-47〉 단양군 저출산 분야 정책 내용	225
〈표 4-48〉 단양군 고령사회 분야 정책 내용	226
〈표 4-49〉 괴산군 저출산 분야 정책 내용	228
〈표 4-50〉 괴산군 고령사회 분야 정책 내용	229
〈표 5-1〉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분야별 정책 영역	233
〈표 5-2〉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공통사업 분석 대상	234
〈표 5-3〉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자체사업 분석 대상	235
〈표 5-4〉 2016년도 전체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공통사업규모	236

〈표 5-5〉 시도에 따른 영역별 저출산 사업	238
〈표 5-6〉 시도에 따른 영역별 고령사회 및 대응기반사업	239
〈표 5-7〉 시지역 군지역 구지역에 따른 영역별 저출산 사업	240
〈표 5-8〉 시지역 군지역 구지역에 따른 영역별 고령사회 및 대응기반 사업	241
〈표 5-9〉 지역유형에 따른 영역별 저출산 사업	242
〈표 5-10〉 지역유형에 따른 영역별 고령사회 및 대응기반 사업	243
〈표 5-11〉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서울시)	244
〈표 5-12〉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부산시)	244
〈표 5-13〉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대구시)	244
〈표 5-14〉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인천시)	245
〈표 5-15〉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광주시)	246
〈표 5-16〉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대전시)	246
〈표 5-17〉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울산시)	247
〈표 5-18〉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세종시)	247
〈표 5-19〉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경기도)	248
〈표 5-20〉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강원도)	248
〈표 5-21〉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충청북도)	249
〈표 5-22〉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충청남도)	249
〈표 5-23〉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전라북도)	250
〈표 5-24〉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전라남도)	250
〈표 5-25〉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경상북도)	251
〈표 5-26〉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경상남도)	251
〈표 5-27〉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제주도)	252
〈표 5-28〉 시도별 예산집행정도	252
〈표 5-29〉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부산시)	253
〈표 5-30〉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대구시)	254
〈표 5-31〉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인천시)	254
〈표 5-32〉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광주시)	255
〈표 5-33〉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대전시)	255
〈표 5-34〉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울산시)	256
〈표 5-35〉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세종시)	257
〈표 5-36〉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경기도)	257
〈표 5-37〉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강원도)	258
〈표 5-38〉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충청북도)	259

〈표 5-39〉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충청남도)	259
〈표 5-40〉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전라북도)	260
〈표 5-41〉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전라남도)	260
〈표 5-42〉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경상북도)	261
〈표 5-43〉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경상남도)	262
〈표 5-44〉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제주도)	262
〈표 5-45〉 시도별 예산달성정도별 고령사회 및 대응기반 사업 수	263
〈표 5-46〉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265
〈표 5-47〉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267
〈표 5-48〉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일반-인구유출)	268
〈표 5-49〉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일반-평균)	268
〈표 5-50〉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일반-인구유입)	269
〈표 5-51〉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초저출산-인구유출)	270
〈표 5-52〉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초저출산-평균)	270
〈표 5-53〉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초저출산-인구유입)	271
〈표 5-54〉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초고령-인구유출)	271
〈표 5-55〉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초고령-평균)	272
〈표 5-56〉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초고령-인구유입)	272
〈표 5-57〉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초저출산 초고령-인구유출)	273
〈표 5-58〉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초저출산 초고령-평균)	273
〈표 5-59〉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초저출산 초고령-인구유입)	274
〈표 5-60〉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일반-인구유출)	275
〈표 5-61〉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일반-평균)	276
〈표 5-62〉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일반-인구유입)	277
〈표 5-63〉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초저출산-인구유출)	277
〈표 5-64〉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초저출산-평균)	278
〈표 5-65〉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초저출산-인구유입)	279
〈표 5-66〉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초고령-인구유출)	279
〈표 5-67〉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초고령-평균)	280
〈표 5-68〉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초고령-인구유입)	281
〈표 5-69〉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초저출산초고령-인구유출)	282
〈표 5-70〉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초저출산초고령-평균)	282
〈표 5-71〉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초저출산초고령-인구유입)	283
〈표 5-72〉 2016년도 전체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자체사업과 중앙정부 사업의 규모	285

〈표 5-73〉 2016년도 전체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공통사업과 자체사업의 규모	286
〈표 5-74〉 시도에 따른 영역별 저출산 자체사업	287
〈표 5-75〉 시도에 따른 영역별 고령사회 및 대응기반 자체사업	288
〈표 5-76〉 시지역·군지역·구지역에 따른 영역별 저출산 자체사업	289
〈표 5-77〉 시지역·군지역·구지역에 따른 영역별 고령사회 및 대응기반 자체사업	290
〈표 5-78〉 지역유형에 따른 영역별 저출산 사업	291
〈표 5-79〉 지역유형에 따른 영역별 고령사회 및 대응기반 자체사업	292
〈표 5-80〉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서울시)	293
〈표 5-81〉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부산시)	293
〈표 5-82〉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대구시)	294
〈표 5-83〉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인천시)	294
〈표 5-84〉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광주시)	295
〈표 5-85〉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대전시)	296
〈표 5-86〉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울산시)	296
〈표 5-87〉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세종시)	297
〈표 5-88〉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경기도)	298
〈표 5-89〉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강원도)	298
〈표 5-90〉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충청북도)	299
〈표 5-91〉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충청남도)	299
〈표 5-92〉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전라북도)	300
〈표 5-93〉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전라남도)	301
〈표 5-94〉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경상북도)	301
〈표 5-95〉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경상남도)	302
〈표 5-96〉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제주도)	303
〈표 5-97〉 시도별 예산달성정도별 저출산 사업 수	304
〈표 5-98〉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부산시)	305
〈표 5-99〉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대구시)	306
〈표 5-100〉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인천시)	306
〈표 5-101〉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광주시)	307
〈표 5-102〉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대전시)	307
〈표 5-103〉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울산시)	308
〈표 5-104〉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세종시)	308
〈표 5-105〉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경기도)	309
〈표 5-106〉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강원도)	310

〈표 5-107〉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충청북도)	310
〈표 5-108〉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충청남도)	311
〈표 5-109〉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전라북도)	312
〈표 5-110〉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전라남도)	312
〈표 5-111〉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경상북도)	313
〈표 5-112〉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경상남도)	314
〈표 5-113〉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제주도)	314
〈표 5-114〉 시도별 예산달성정도별 고령사회 및 대응기반 사업 수	315
〈표 5-115〉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317
〈표 5-116〉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319
〈표 5-117〉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일반-인구유출)	320
〈표 5-118〉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일반-평균)	320
〈표 5-119〉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일반-인구유입)	321
〈표 5-120〉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초저출산-인구유출)	322
〈표 5-121〉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초저출산-평균)	322
〈표 5-122〉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초저출산-인구유입)	323
〈표 5-123〉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초고령-인구유출)	324
〈표 5-124〉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초고령-평균)	324
〈표 5-125〉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초고령-인구유입)	325
〈표 5-126〉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초저출산 초고령-인구유출)	326
〈표 5-127〉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초저출산 초고령-평균)	326
〈표 5-128〉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초저출산 초고령-인구유입)	327
〈표 5-129〉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일반-인구유출)	328
〈표 5-130〉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일반-평균)	329
〈표 5-131〉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일반-인구유입)	330
〈표 5-132〉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초저출산-인구유출)	331
〈표 5-133〉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초저출산-평균)	332
〈표 5-134〉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초저출산-인구유입)	333
〈표 5-135〉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초고령-인구유출)	333
〈표 5-136〉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초고령-평균)	334
〈표 5-137〉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초고령-인구유입)	335
〈표 5-138〉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초저출산초고령-인구유출)	336
〈표 5-139〉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초저출산초고령-평균)	337
〈표 5-140〉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초저출산초고령-인구유입)	338

〈표 5-141〉 시도별 저출산 사업별 급여(서비스) 기준	339
〈표 5-142〉 시도별 고령사회 사업별 급여(서비스) 유형	341
〈표 5-143〉 시도별 대응기반 사업별 급여(서비스) 기준	344
〈표 5-144〉 시지역·군지역·구지역별 저출산 사업별 급여(서비스) 기준	345
〈표 5-145〉 시지역·군지역·구지역별 고령사회 사업별 급여(서비스) 기준	345
〈표 5-146〉 시지역·군지역·구지역별 대응기반 사업별 급여(서비스) 기준	346
〈표 5-147〉 지역유형별 저출산 사업별 급여(서비스) 기준	347
〈표 5-148〉 지역유형별 고령사회 사업별 급여(서비스) 기준	349
〈표 5-149〉 지역유형별 대응기반 사업별 급여(서비스) 기준	350
〈표 5-150〉 시도별 저출산 사업별 급여(서비스) 유형	351
〈표 5-151〉 시도별 고령사회 사업별 급여(서비스) 유형	353
〈표 5-152〉 시도별 대응기반 사업별 급여(서비스) 유형	355
〈표 5-153〉 시지역·군지역·구지역별 저출산 사업별 (서비스) 유형	356
〈표 5-154〉 시지역·군지역·구지역별 고령사회 사업별 (서비스) 유형	356
〈표 5-155〉 시지역·군지역·구지역별 대응기반 사업별 (서비스) 유형	357
〈표 5-156〉 지역유형별 저출산 사업별 (서비스) 유형	358
〈표 5-157〉 지역유형별 고령사회 사업별 (서비스) 유형	359
〈표 5-158〉 지역유형별 대응기반 사업별 (서비스) 유형	360
〈표 6-1〉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자체평가 작성서식 예(공통사업)	383
〈표 6-2〉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자체평가 작성서식 예(자체사업)	384

그림 목차

[그림 2-1] 정부업무평가 체계	9
[그림 2-2]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운영체계	16
[그림 2-3] 연구 내용의 체계도	22
[그림 3-1] 합계출산율 및 총출생아수 추이, 1970~2016	28
[그림 3-2] 합계출산율 및 총출생아수 추이, 1970~2016	29
[그림 3-3]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 추세, 1993~2016	30
[그림 3-4] 여성의 연령별 첫째아 출산율 추세, 1990~2015	31
[그림 3-5] 유소년, 생산가능, 노년인구 비율 변화, 1992~2015	32
[그림 3-6] 노년인구비 및 고령화지수 변화, 1992~2015	32
[그림 3-7] 시군구별 5년간 20~24세 출산율 하락정도 비교	34
[그림 3-8] 시군구별 5년간 25~29세 출산율 하락정도 비교	35
[그림 3-9] 시군구별 5년간 30~34세 출산율 하락정도 비교	37
[그림 3-10] 시군구별 5년간 여성 평균초혼연령 변화 비교	38
[그림 3-11] 여성 평균초혼연령(SMAM)과 합계출산율의 변화, 2005, 2010, 2015	40
[그림 3-12] 25~29세 및 30~34세 여성 미혼율의 비교, 2015	41
[그림 3-13] 지자체별 총전입률과 총전출과의 관계, 2015	43
[그림 3-14] 유소년인구(0~14세)와 노년인구(65+세)의 구성비율의 관계 변화, 2005~2015	52
[그림 3-15] 시군구별 고령화지수 변화, 2005~2015	53
[그림 3-16] 지방자치단체별 조출생률, 순이동률과 인구증가율의 관계	55
[그림 4-1]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기초자치단체별 지역분류	64
[그림 4-2] 상대적 인구이동에 따른 기초자치단체별 지역분류	66
[그림 4-3] 통합 창원시의 인구 및 세대수 변화, 2005~2016	72
[그림 4-4] 통합 창원시 외국인주민 변화, 2007~2015	72
[그림 4-5] 통합 창원시 주요 인구동태 변화, 2012~2015	73
[그림 4-6] 경상남도 창원시 다문화 혼인 및 이혼건수와 다문화 혼인비중, 2010~2015	75
[그림 4-7] 통합 창원시 시군구 및 시도간 총전입률, 총전출률, 순이동률 변화, 2010~2016	77
[그림 4-8] 통합 창원시 성 및 연령별 순이동률 변화, 2010~2015	78
[그림 4-9] 경상남도 창원시의 인구피라미드 변화, 2010~2015	79
[그림 4-10] 경기 이천시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수 변화, 2005~2016	81
[그림 4-11] 경기도 이천시 외국인주민 인구변화, 2007~2015	82

[그림 4-12] 경기도 이천시 주요 인구동태 변화, 2005~2015	82
[그림 4-13] 경기도 이천시 혼인상태별 혼인건수, 2005~2016	84
[그림 4-14] 경기도 이천시 다문화 혼인건수 및 전체 혼인 중 비중 변화, 2008~2015	85
[그림 4-15] 경기도 이천시의 연령표준화 사망률, 2005~2015	86
[그림 4-16] 경기도 이천시 지역단위별 총전입률, 총전출률, 이동률의 변화, 2005~2016	88
[그림 4-17] 경기도 이천시 성 및 연령별 순이동률, 2005~2015	88
[그림 4-18] 경기도 이천시의 성 및 연령별 인구구조, 2005~2015	89
[그림 4-19] 부산 강서구의 인구 및 세대수 변화, 2005~2016	91
[그림 4-20] 부산 강서구 외국인주민 인구변화, 2007~2015	91
[그림 4-21] 부산 강서구의 주요 인구동태 변화, 2005~2015	92
[그림 4-22] 부산 강서구 혼인상태별 혼인건수, 2005~2016	94
[그림 4-23] 부산 강서구의 고령인구비율과 고령화지수, 2005~2016	95
[그림 4-24] 부산 강서구의 성별 연령표준화 사망률, 2005~2015	96
[그림 4-25] 부산 강서구 지역단위별 총전입률, 총전출률, 이동률의 변화, 2005~2016	97
[그림 4-26] 부산 강서구 성 및 연령별 순이동률, 2005~2015	98
[그림 4-27] 부산 강서구의 성 및 연령별 인구구조, 2005~2015	99
[그림 4-28]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수 변화, 2005~2016	101
[그림 4-29] 서울특별시 종로구 외국인주민 인구변화, 2007~2015	102
[그림 4-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요 인구동태 변화, 2005~2015	102
[그림 4-3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혼인상태별 혼인건수, 2005~2016	105
[그림 4-32]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요 사망원인별 연령표준화 사망률, 2015	106
[그림 4-3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지역단위별 총전입률, 총전출률, 이동률의 변화, 2005~2016	107
[그림 4-34]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성 및 연령별 순이동률, 2005~2015	108
[그림 4-35]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성 및 연령별 인구구조, 2005~2015	109
[그림 4-36] 강원도 강릉시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수 변화, 2005~2016	111
[그림 4-37] 강원도 강릉시 외국인주민 인구변화, 2007~2015	112
[그림 4-38] 강원도 강릉시의 주요 인구동태 변화, 2005~2015	112
[그림 4-39] 강원도 강릉시 혼인상태별 혼인건수, 2005~2016	114
[그림 4-40] 강원도 강릉시의 성별 연령표준화 사망률, 2005~2015	115
[그림 4-41] 강원도 강릉시 지역단위별 총전입률, 총전출률, 이동률의 변화, 2005~2016	116
[그림 4-42] 강원도 강릉시 성 및 연령별 순이동률, 2005~2015	117
[그림 4-43] 강원도 강릉시의 성 및 연령별 인구구조, 2005~2015	118
[그림 4-4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수 변화, 2005~2016	120
[그림 4-45] 인천광역시 연수구 외국인주민 인구변화, 2007~2015	120

[그림 4-46]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요 인구동태 변화, 2005~2015	121
[그림 4-47] 인천광역시 연수구 혼인상태별 혼인건수, 2005~2016	123
[그림 4-48]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성별 연령표준화사망률, 2005~2015	124
[그림 4-49]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단위별 총전입률, 총전출률, 이동률의 변화, 2005~2016	125
[그림 4-50]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성 및 연령별 순이동률, 2005~2015	125
[그림 4-5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성 및 연령별 인구구조, 2005~2015	126
[그림 4-52] 전라남도 보성군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수 변화, 2005~2016	128
[그림 4-53] 전라남도 보성군 외국인주민 인구변화, 2007~2015	129
[그림 4-54] 전라남도 보성군 주요 인구동태 변화, 2005~2015	130
[그림 4-55] 전라남도 보성군 혼인상태별 혼인건수, 2005~2016	132
[그림 4-56] 전라남도 보성군 다문화 혼인비중 및 다문화 이혼비중 변화, 2008~2015	133
[그림 4-57] 전라남도 보성군의 연령표준화 사망률, 2005~2015	134
[그림 4-58] 전라남도 보성군 지역단위별 총전입률, 총전출률, 이동률의 변화, 2005~2016	135
[그림 4-59] 전라남도 보성군의 성 및 연령별 순이동률, 2005~2015	135
[그림 4-60] 전라남도 보성군의 성 및 연령별 인구구조, 2005~2015	136
[그림 4-61] 전라남도 함평군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수 변화, 2005~2016	138
[그림 4-62] 전라남도 보성군 외국인주민 인구변화, 2007~2015	139
[그림 4-63] 전라남도 함평군 주요 인구동태 변화, 2005~2015	140
[그림 4-64] 전라남도 함평군 혼인상태별 혼인건수, 2005~2016	142
[그림 4-65] 전라남도 함평군의 성별 연령표준화 사망률, 2005~2015	143
[그림 4-66] 전라남도 함평군 지역단위별 총전입률, 총전출률, 이동률의 변화, 2005~2016	144
[그림 4-67] 전라남도 함평군의 성 및 연령별 순이동률, 2005~2015	145
[그림 4-68] 전라남도 함평군의 성 및 연령별 인구구조, 2005~2015	146
[그림 4-69] 전라남도 나주시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수 변화, 2005~2016	148
[그림 4-70] 전라남도 나주시 외국인주민 인구변화, 2007~2015	148
[그림 4-71] 전라남도 나주시 주요 인구동태 변화, 2005~2015	149
[그림 4-72] 전라남도 나주시 혼인상태별 혼인건수, 2005~2016	151
[그림 4-73] 전라남도 나주시의 성별 연령표준화 사망률, 2005~2015	152
[그림 4-74] 전라남도 나주시 지역단위별 총전입률, 총전출률, 이동률의 변화, 2005~2016	153
[그림 4-75] 전라남도 나주시의 성 및 연령별 순이동률, 2005~2015	154
[그림 4-76] 전라남도 나주시의 성 및 연령별 인구구조, 2005~2015	155
[그림 4-77]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수 변화, 2005~2016	157
[그림 4-78] 부산광역시 동구 외국인주민 인구변화, 2007~2015	157
[그림 4-79] 부산광역시 동구 주요 인구동태 변화, 2005~2015	158

[그림 4-80] 부산광역시 동구 혼인상태별 혼인건수, 2005~2016	160
[그림 4-81] 부산광역시 동구의 연령표준화 사망률, 2005~2015	161
[그림 4-82]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단위별 총전입률, 총전출률, 이동률의 변화, 2005~2016	162
[그림 4-83] 부산광역시 동구의 성 및 연령별 순이동률, 2005~2015	163
[그림 4-84] 부산광역시 동구의 성 및 연령별 인구구조, 2005~2015	164
[그림 4-85] 단양군 인구 및 세대수 변화, 2005~2016	166
[그림 4-86] 단양군 주요 인구동태 변화, 2005~2015	166
[그림 4-87] 단양군 혼인상태별 혼인건수, 2005~2016	168
[그림 4-88] 충청북도 단양군의 성별 연령표준화 사망률, 2005~2015	169
[그림 4-89] 단양군 지역단위별 총전입률, 총전출률, 이동률의 변화, 2005~2016	170
[그림 4-90] 충청북도 단양군의 연령별 순이동률, 2005~2015	171
[그림 4-91] 단양군 성 및 연령별 인구구조, 2005~2015	172
[그림 4-92] 충청북도 괴산군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수 변화, 2005~2016	173
[그림 4-93] 충청북도 괴산군 외국인주민 인구변화, 2007~2015	174
[그림 4-94] 부산광역시 동구 주요 인구동태 변화, 2005~2015	175
[그림 4-95] 충청북도 괴산군 혼인상태별 혼인건수, 2005~2016	177
[그림 4-96] 충청북도 괴산군 사망원인별 연령표준화 사망률, 2015	178
[그림 4-97] 충청북도 괴산군 지역단위별 총전입률, 총전출률, 이동률의 변화, 2005~2016	179
[그림 4-98] 충청북도 괴산군의 성 및 연령별 순이동률, 2005~2015	180
[그림 4-99] 충청북도 괴산군의 성 및 연령별 인구구조, 2005~2015	181
[그림 6-1] 정책평가 논리 모형 예시	378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983년 인구대체수준 2.1이하로 하락하면서 저출산 수준에 진입하였고, 2001년에 1.3까지 하락하여 초저출산 수준을 나타냄
 - 2001년부터 현재까지 합계출산율 1.3을 넘어서지 못하여 ‘저출산의 덫’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저출산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 인구학적으로 인구의 구조가 고령화되어 사회 경제 제 분야에서 부정적 파급효과가 커질 수 있음
 - 또한 출산율 수준은 한 사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해석되어, 낮은 출산율은 미래 사회에 대한 희망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제기됨
- 정부는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이와 같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고, 현재 제3차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매 5년 단위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년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음
 -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년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적극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포함된 정책과제는 총 3,724개(저출산 2,224, 고령사회 1,198, 대응기반 강화 302개)에 달함
-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 본격 추진 후 10년이 경과하면서, 정책의 적정성 및 효과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현재 중앙정부 시행계획 매년 성과관리 지속되고 있으나, 지자체 시행계획 성과관리는 추진되지 않고 있음
 - 행정안전부의 정부합동평가 중 저출산대책 관련 평가가 일부 추진 중이나, 한 개의 평가항목으로 반영되어 있을 뿐이며 그것도 우수사례 중심의 정성 평가에 머물고 있음(행정자치부, 2017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및 매뉴얼)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지속가능성 위협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 대응 필요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요구됨
-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와 같은 인구변동의 복잡성을 고려, 기본계획 및 중앙부처 시행계획만으로 한계가 있는 바, 지자체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관리를 통하여 지역 단위 정책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지자체 정책역량을 강화할 필요 있음
-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관리는 진행된 바가 없음
- 매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이 수립되고 있지만, 성과 관리(평가)를 위해 형식적 내용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시행계획의 내용 및 체계를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 인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성과 관리방안을 제안할 것임

제 2 장

기존 연구 및 연구 방법

제1절 기존 연구 검토

제2절 연구의 내용 구성

제3절 연구방법

2

기존 연구 및 연구 방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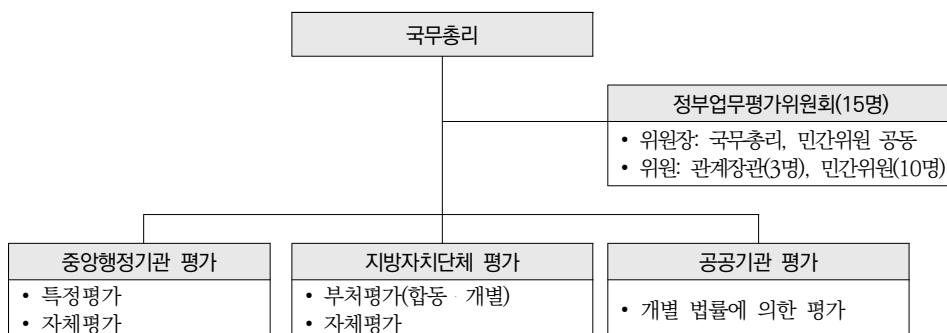
제1절 기존 연구 검토

- 본 절에서는 정부의 업무평가체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한 평가 내용을 담고 있는 지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1. 정부업무평가

- 정부 업무(사업)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국정과제와 핵심개혁과제 등을 평가하여 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이루어짐
 - 정부업무의 평가는 정부 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01년 「정부업무평가 등에 관한 기본법」, 이를 수정하여 2006년 제정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을 토대로 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에 대한 통합적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하여 정부의 효율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림 2-1] 정부업무평가 체계



출처: 국무조정실(2016) p.2

○ 정부업무 평가는 사업의 수행 주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평가, 지방자치단체 평가, 공공기관 평가로 구분되며 평가는 성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이외에 정부 사업의 수행 주체와 상관없이 정부의 예산 또는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 사업을 평가하는 정부업무 평가로 통합재정사업 평가가 있음

- 통합재정사업 평가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로 구성된 메타평가부처에서 확인하고 점검하며 평가하고 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표 2-1〉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변천

단계 내용	도입	과도		재정비	발전
담당기관	기획조정실	경제기획원	행정조정실	행정조정실	국무조정실
시기	1961.9~ 1981.10	1981.11 ~1990.3	1990.4 ~1994.12	1994.12 ~1998.2	1998.3 ~2006.3
내용	5·16직후 1961년 정부부문에 서 최초로 심사 분석 제도를 도입하여 기획조정실에서의 평가 기능을 수행	1981년에 심사 분석업무를 경제기획원심사평가국으로 이관	행정조정실에 정책 평가 기능 신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경제기획의 심사분석업무와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 업무를 통합하여 심사평가 기능 수행-정부투자기관 평가는 경제기획원에서 계속 수행	국민의 정부출범과 함께 심사평가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기관평가제도〉 도입
근거	정부의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6143호 1972.4)	정부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10821호 1982.5)	정부주요정책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14531호 1995.2)	정부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14531호 1995.2)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 6347호 2001.1.8.)

출처: 국무조정실(2007) p.8; 황혜신, 최성락(2013). p.48에서 재인용

○ 정부업무평가 중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 평가는 국무총리의 통합적 국정관리를 위해 주요정책과 기관역량을 평가하는 특정평가와 중앙부처의 주요정책, 재정사업, R&D사업, 행정관리역량 등을 평가하는 자체평가로

구분됨. 지방자치단체평가는 국가위임 등에 대한 평가, 부처합동평가와 자체 평가로 구분되어 이루어짐. 개별 법률에 의해 평가가 실시되고 있는 공공기관 평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실적, 연구실적 등을 평가함

○ 우리나라의 정부업무평가제도는 2006년 통합 정부업무평가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를 ‘도입, 과도, 재정비, 발전’의 4단계로 구분되어 발전됨(국무조정실, 2007; 황혜신, 2013)

- 2016년까지 정부업무평가는 정부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과 성과 창출을 위해 국정과제 중심의 정부업무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체제를 국민중심, 현장중심으로 설계하며, 평가결과를 환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짐
- 2017년 정부업무평가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실적과 일자리 창출 노력을 최우선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추진됨.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 부문을 국정과제와 핵심 현안인 일자리 창출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평가하며, 국민과의 정책소통과 국민들의 국정평가(국민만족도)도 중점 평가함
 - 특히 국민만족도의 경우 기존에 국정과제 평가의 일부분으로 평가하던 것을 별도의 평가부문으로 설정하여, 평가에 있어서 국민 의견과 체감도 반영을 강화하였음. 또한, 갈등관리(갈등해소 노력 및 성과), 현안관리(대통령 지시사항 등 관리실태), 인권개선(인권위 권고에 대한 수용률 등 인권개선 노력)에 대해서도 평가하여 가감점으로 반영할 계획임. 평가의 주체는 2016년과 동일하게 부문별 주관기관이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지원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예정임

○ 2016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따르면, 특정평가와 자체평가로 구분되는 중앙행정기관 평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음

- 목적: 42개의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특정평가는 구체적으로 국정과제와 핵심개혁과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정성과 창출, 규제개혁노력과 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함. 이를 통해 국민의 정책성과 이해 및 체감 확산, 관행·제도, 비리·부패 등을 바로 잡아 국정

운영성과 창출, 정부 3.0·성과관리·특정시책 이행노력 및 성과평가를 목적으로 함(국무조정실, 2016)

- 평가대상 및 평가항목: 2016년까지는 국정과제와 국정과제 관련 주요정책과제, 핵심개혁과제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대로 집행했는지의 집행이행도,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 정책 체감 성과와 같은 정책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함

- 규제개혁평가의 경우는 등록규제 수가 작거나 부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기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규제심사, 규제시스템, 규제개혁체감도를 기준으로 평가함. 평가 주체로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민관합동 규제개혁 평가지원단(규제개혁위원회의 민간위원, 규제관련 민간전문가, 규제조정실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이 평가함
- 정책홍보 평가는 42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과제 홍보활동과 홍보성과, 기관의 쉽고 바른 보도자료 사례를 기준으로 함. 평가는 평가를 위해 구성된 민관합동 정책홍보 평가지원단(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이 평가함. 정상화과제의 경우는 정부핵심과제가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과제선정 및 계획의 충실도, 이행계획의 완수를 평가하는 과제이행도, 정상화 효과, 정상화 홍보·확산을 기준으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정상화과제 평가지원단(정부업무평가위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이 평가함
- 기관 공통사항 평가는 42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부 3.0 변화관리 및 확산노력 실적(추진역량)과 중점과제성과를 기준으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정부 3.0 평가지원단(행정자치부 주관)이 평가함
-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수립하는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관리과제와 일반재정사업, R&D 사업, 지역발전사업, 행정관리(조직, 인사, 정보화 관리 등) 효율화의 역량을 연도별 자체평가계획을 기준으로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가 평가함

-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평가와 합동평가가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정 주요시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개별평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관 정책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자체평가로 구분됨. 평가지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설정하고 민간이 2/3이상 참여하는 자체평가위원회가 평가함

〈표 2-2〉 지방자치단체 평가체계

평가유형		평가부문 · 내용	평가시행기관
중앙행정기관평가	합동평가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	행정자치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장
	개별평가	업무특성·평가시기상 합동평가 곤란시(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	중앙행정기관장
자체평가		소속기관의 정책등	지방자치단체장

출처: 국무조정실(2016). p.17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근거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2006년부터 5년마다 수립되고 있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연도별 시행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 및 해당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별로 매년 수립하며 추진하게 되어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수립된 시행계획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성과를 평가받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실시 이후 매년 중앙정부 200~250개의 세부 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립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평가”를 통해 평가되고 있음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부터 현재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획에 따른 연도별 중앙부처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성과평가는 해당 기간 동안 매년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경우는 지방정부의 평가 준비와 관련된 업무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포함되어 2009년부터 실시됨(이삼식 외, 2014)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책 평가를 위한 성과평가는 시행계획에 포함된 세부 정책 과제의 설정된 성과지표의 목표치에 근거하여 각 부처별 자체 평가 보고서, 결산보고서 등을 토대로 하여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 시행계획 수립 시 과제별로 책정된 예산에 대한 집행률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 평가는 통상적으로 총 6단계를 거쳐 실시됨(이소영 외, 2016)

- 1 단계: 시행계획 상 제시된 과제 관련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일정, 평가방법, 성과지표 등을 수록한 지침을 해당 부처에 통보
- 2 단계: 해당 부처에서는 기본 과제의 경우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해당 연도 과제별 목표치, 추진실적, 목표달성률, 예산계획, 집행액, 집행률 등)을 해당 부처에서 작성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까지 포함되었던 핵심과제의 경우 성과지표와 산식, 목표치와 실적치, 실적에 대한 근거수치 및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3 단계: 성과평가 연구 주체(기관)는 각 부처에서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한 실적을 검토하고, 미비점 등에 대해서는 부처 확인을 통해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거침
- 4 단계: 성과평가 연구 주체(기관) 부처 확인을 통해 완료된 추진실적에 대해 목표달성률, 예산집행률 등을 산출하고 분석·평가하며 핵심과제에 대한 성과지표 또는 핵심성과지표(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지표 값은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을 통해 수집하여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
- 5 단계: 완료된 성과평가 결과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

- 6 단계: 성과평가 결과를 해당 부처에 통보하여 향후 시행계획에 환류(feedback)토록 함

3.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경우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평가를 통해 매년 평가가 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포함되어 2009년부터 별도로 실시됨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을 토대로, 동 법 21조(국가 위임사무등에 대한 평가) 4항에 의거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실시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1999년 시범평가를 시작으로 2000년에는 10개 부처의 50개 시책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이 후 매년 10개 이상 부처의 30~70개 시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초기에는 서류 평가와 현장평가의 방법을 사용했으나 2004년 이후 가상정책스튜디오(VPS:Virtual Policy Studio)를 만들어 각 시·도에서 실적을 직접 입력하도록 하는 온라인 공개평가 방법이 도입되어, 기관방문 검증 평가와 함께 평가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음.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추진 역량, 주요 시책, 만족도를 평가하였고, 2002년부터는 주요시책과 고객 체감도를 평가함(인병택 외, 2015)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운영체제는 다음과 같음
 - 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하는 합동평가위원회와, 민간·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평가분야에 따라 평가를 시행하는 합동평가단, 평가수행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평가지원반으로 구성되어있음

[그림 2-2]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운영체계



출처: 안혁근 외(2015). p. 24

- 평가결과는 시책 분야에 따라 3등급으로 제시되어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되며, 언론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됨. 또한, 인센티브로 평가 대상 시책 분야별 우수 지자체는 특별 교부세를 지급받고, 업무 추진 유공자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이 주어짐. 또한 실적이 부진한 시책에 대해서는 지자체 합동평가 사후관리로서 행정 컨설팅이 추진됨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국정원의 통합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가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 성과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평가하여 중앙정부시책을 지방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인병택 외, 2015)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해 평가한다고 볼 수 있는 즉,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지표는 매년 조금씩 변화하며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음. 대체로 매년 포함된 지표는 ‘저출산·고령화 자체 사업 우수사례’로 독창성, 효과성, 지자체 노력도, 활용 및 전파가능성의 네 가지 기준을 통해 정성적으로 평가됨

〈표 2-3〉 저출산·고령화 자체 사업 우수사례 평가 기준

평가항목	주요 평가내용
독창성 (30%)	해당 자치단체 특성 반영 정도, 타 자치단체 유사사업과의 차별성·독특성 등 비교우위 등 평가
효과성 (30%)	지역의 저출산·고령화 극복 기여 정도(예: 목표 대비 실적, 지역출생 관련 통계 지표 향상 정도, 주민 만족도 향상 등)
지자체 노력도 (20%)	홍보활동, 시책개발 노력도, 자치단체 역량 투입정도(예산확보 등), 기관장 관심도 및 관련 단체(민·관) 협력 정도 등 평가
활용·전파 가능성 (20%)	우수사례의 실제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의 활용 정도,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 등 평가

출처: 행정자치부(2016)

4. 해외사례

가. 미국의 정부업무평가제도

- 미국 성과관리제도는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시작됨(황혜신, 최성락, 2013). 미국의 정부업무에 대한 평가제도는 1949년 성과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를 시작으로 1960년대 중후반의 계획예산제도(Planning, Programing, and Budgeting System: PPBS), 1970년대 초반의 목표에 의한 관리(Management By Objective:MBO), 1970년대 말 영기준 예산(Zero-Base Budgeting)으로 예산의 합리화라는 측면이 강조된 성과관리제도로서 발전함(공동성 외, 2013)
- 미국의 정부업무 성과관리 제도의 변화는 1993년 정부성과결과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GPRA)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고, 이러한 법률의 제정은 다른 국가의 평가제도의 설계에 많은 영향을 미침(황혜신, 최성락, 2013). 이후 GPRA는 2010년 정부성과결과 현대화법(GPRA Modernization Act)의 제정으로 수정보완됨. GPRA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률의 목적은 다음의 여섯 가지로 정리됨
 - 첫째, 연방행정기관이 집행하는 정책의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연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고, 둘째, 정책의 목적을 설정하고

이러한 목적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며 정책의 진행과정을 국민에게 공표하는 등 정책성과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셋째,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만족도의 향상에 초점을 두으로써 정책의 효과성과 공공책무성을 향상시키고, 넷째, 연방행정기관의 관리자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의 결과와 서비스의 질에 대한 정보를 통해 연방관리자의 서비스 전달력을 향상시키고, 다섯째, 법적인 목적의 달성여부와 연방정책의 예산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의회에 제공하여 의사결정을 질을 향상시키고, 여섯 번째, 연방정부 내부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이근주, 2001, p. 23-24; 김성준, 윤수재, 2002, p. 10)

○ GPRA는 연방정부의 14개 부처, 관련된 행정기관(agency), 공기업(government corporation)을 대상으로 적용됨. 관련법에 의거하여 국가안보상 정보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을 제외하고 모든 연방행정기관이 GPRA에 따른 평가를 받음. 평가는 의회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과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에 의해 이루어짐

○ GPRA에 의한 평가는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의 측정, 성과 보고의 3단계로 이루어짐. 추가적으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서 제시된 성과 자료에 대한 검증의 절차가 있음. 연방정부의 평가 대상 기관들은 설정한 미션, 목표,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포함한 5년간의 전략계획(Strategic Plan), 연도별 목표와 성과평가방법을 포함한 성과계획서(Performance Plan)를 제출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평가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음

- 성과목표 설정의 경우, 모든 부처에 적용되는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함에 따라 기본적인 목표달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고 일반적인 성과평가의 틀을 준용함. 단, 성과지표 설정 시 정책 산출(output)지표뿐만 아니라 성과(outcome)지표를 중심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포괄할 수 있도록 원칙을 두고 있음
- 성과의 보고는 GPRA의 대상이 되는 연방정부기관이 장은 매년 3월 말까지 전년 성과에 근거한 당해 성과계획의 평가, 전년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부

진한 경우 원인과 개선방안 등이 포함된 성과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 보고된 성과보고서는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됨

- GPRA 한계는 평가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업무수행능력이 저하된 측면이 있다는 점(주혜정, 2009)과 평가결과의 환류가 제한적이라는 점(황혜신, 최성락, 2013)에 있음

나. 영국의 정부업무평가제도

- 영국에서 본격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제도가 자리 잡은 시기는 1960년대임. 해당시기 미국과 마찬가지로 1960년대에는 예산을 중심으로 정책 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됨(김명수, 2003). 이후 1970년대에는 사업심사분석(Program Analysis and Review), 1980년대에는 자원 활용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재무관리이니셔티브(the Financial Management Initiative: FMI), 1990년대에는 산출 및 성과분석제도(Output and Performance Analysis: OPA), 2010년까지 체계적인 성과평가제도인 공공서비스협약제도(Public Service Agreement: PSA)가 대표적인 정부업무에 대한 평가제도로 운영됨. 2011년 이후는 비즈니스 플랜(Business Plan)이 정부업무에 대한 평가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음(황혜신, 최성락, 2013)
- 비즈니스 플랜은 법률을 근거로 이루어지지 않음. 다만, 2011년 7월 발표된 향후 정부의 운영 및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본적 방향을 담은 「공공 서비스 개방 2012 백서(Open Public Service 2012)」에서 비즈니스 플랜이 제시됨. 비즈니스 플랜은 정부의 각 부처들이 자신이 업무를 추진할 것인지를 국민에게 설명하여 추진 계획을 약속하는 문서임. 비즈니스 플랜의 평가 계획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부처가 작성하는데, 기본적으로 평가를 위한 해당 부처의 전략적 목표인 우선순위(Priorities),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Structural Reform Plan), 예산 집행(Departmental Expenditure), 국민의 체감도(Transparency)의 분야로 나누어져 계획되고, 이에 따른 부처의 1년 간 추진 실적을 가지고 평가함. 2011년도 계획에서는 2012년부터 2015년

까지 4년 동안 각 개별 부처의 비전과 업무의 우선순위, 1년 단위의 추진 계획, 예산 집행 실적, 부처의 실적을 측정하는 지표를 포함하고 있음. 비즈니스 플랜의 평가 주체는 각 부처로, 부처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짐. 더불어 객관성 확보의 차원에서 정책 대상자인 국민이 목표달성 여부와 예산 집행에 대한 정보가 담긴 비즈니스 플랜을 참조하여 해당 부처의 업무에 대한 평가를 직접 진행함. 비즈니스 플랜은 ‘부처 내에서 자발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과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황혜신, 최성락, 2013, p.207)

5. 소결

- 정부의 개별 사업은 중복해서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구조적인 한계를 가짐. 즉, 정부의 개별 사업은 정부업무평가(국무조정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평가, 행정관리역량평가(행정안전부), 재정사업자율평가(기획재정부) 등 다양한 이름의 평가를 중복해서 받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평가는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처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토대로 독립된 성과평가로 추진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로 추진됨에 따라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음. 우선 지자체 합동평가의 일부분으로 실시되고 있어 지자체 합동평가가 가지고 있는 한계인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나 연도별 정책수행의 모니터링과 환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음. 더욱이 지자체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평가는 지자체 합동평가의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으로서의 효과성의 측면에서 실질적인 평가와 지속적인 검토와 환류가 어려움. 이는 지자체 합동평가 내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만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일부 지표는 합동평가 내의 다른 영역과 중복되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으로서 모니터링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며,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은 거시적 틀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체계화하여 기본계획을 구성하고 있으나, 지자

체의 해당 사업이 반드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지 않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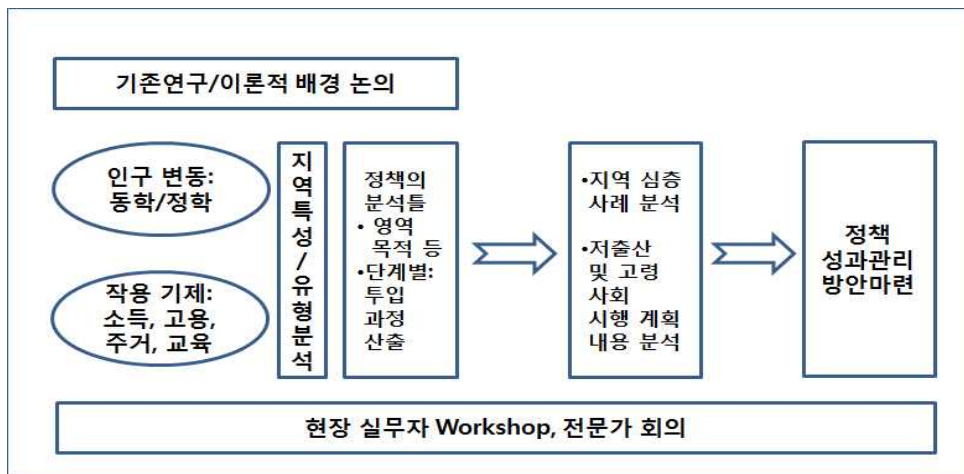
-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평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으로서의 성과를 평가하되 지자체별 예산 수준(안혁근 외, 2015)과 인구 변화와 가족구성,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지역적합성, 지역 특성 반영도, 욕구반영도 등에 대해 고려될 필요가 있음. 특히, 영국의 비즈니스 플랜과 같은 평가 제도처럼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받기 위한 과정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제2절 연구의 내용 구성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성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중심으로 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인구 특성을 분석하고, 지자체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의 내용 분석, 지역 심층 사례 분석 등을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성과관리 방안을 제안함
-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은 기본적으로 지역적 특성과 인구현상의 동학(Dynamics) 및 기재(Mechanism)를 고려하여 수립 추진되어야 함
 -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인구 변동의 동태적, 정태적 특성과 영향요인의 작용 기제가 다를 것이므로 정책은 이와 같은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 추진되어야 함
-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지자체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의 작용 기제를 반영하여 전체 연구 내용의 체계를 구성하였음
 - 인구특성분석: 기초지자체 단위 인구변동의 동태적 요소와 정태적 요소에 대한 분석을 진행함. 동태적 요소는 출생, 사망, 이동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정태적 요소로 인구의 구조를 분석함
 - 지역 유형화: 인구변동 요소를 중심으로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유형화하여 분류함. 유형 분류에 사용하는 인구 변동 요소는 출산율, 고령화, 인구 이동 3 요소를 기준으로 지역을 분류함

- 정책분석 틀 정립: 기초 지자체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지자체 시행계획의 정책 영역, 사업의 영역별 구성, 지역 유형별, 지역 구분, 정책 투입요소로 예산 규모, 급여 특성별 구성 등을 분석함
- 지역 심층 사례 분석: 지역 유형화 결과를 바탕으로, 유형별 1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대한 심층 사례분석을 실시함. 심층 사례 분석은 인구특성 분석, 정책환경 분석, 시행계획 내용 분석을 중심 내용으로 함
- 지자체 시행계획 내용 분석: 시행계획 내용 분석은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가 수립 제출한 정책 내용을 분석함. 정책 내용 분석은 크게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로 정책의 구성적 특성, 지역 유형별 구성, 사업 예산 규모 분석, 급여 특성 분석 등을 실시함
- 정책 분석과 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지자체 시행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관리방안을 마련함
- 연구 추진과정에서 내용분석 및 향후 성과 관리 방안에 대하여, 현장 실무자의 워크숍,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연구에 반영함

[그림 2-3] 연구 내용의 체계도



제3절 연구방법

- 기존 연구 및 이론적 설명을 위하여 관련 문헌을 고찰함
 -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정부합동평가 관련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관련 문헌을 고찰함
- 지방자치단체의 종괄적 인구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초 통계분석을 실시함
 - 주민등록인구자료, 인구주택총조사자료, 출생통계, 혼인 및 이혼통계, 인구 이동 통계 등을 활용하여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인구구조 분석 및 인구동태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실시함
 - 전체 기초자치단체를 유형화하고, 지역 유형별로 인구통계를 비교분석함
- 정책 및 지역 사례 분석
 - 사례는 가장 전형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특수성 또는 보편성을 고려하여 지역 사례를 선정함
 - 지역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로 전형적인 지역을 사례로 선정하고, 각 사례에 대하여 인구 특성 분석, 정책 환경 분석, 정책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구성함
-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워크숍
 - 담당자 워크숍: 정부합동평가의 일반적 문제점 및 개선 사항, 저출생정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시행계획 평가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성과 관리 방안 마련에 반영함
- 전문가 자문회의
 -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정책 분석 결과, 향후 시행계획 성과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에 반영함

24 2016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

제 3 장

지방자치단체 인구특성 기초분석

제1절 인구 변화 추세

제2절 인구통계 기초분석 : 출산

제3절 인구통계 기초분석 : 혼인

제4절 인구통계 기초분석 : 인구이동

제5절 인구통계 기초분석 : 고령화

제6절 주요 인구변동 요인과 인구증가율

3

지방자치단체 인구특성 기초분석 <<

○ 본 장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특성을 분석하여, 최근 인구 특성의 변화를 분석함

-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특성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 직접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 즉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이 지역의 인구 특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이며, 향후 인구 특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기 때문임
- 지역 단위에서 인구의 변동은 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정책도 또한 지역의 인구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본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분석에 앞서,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인구 특성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법정행정구역(기초자치단체) 변경과 분석에 활용한 지역구분

- 2015년을 기준으로 가용한 법정행정구역 228개 지역을 토대로 분석함
 -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창원시는 하나의 지역으로 분석에 포함하며, 시계열 분석의 경우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자치시·도 및 통합지역을 제외한 226 지역을 활용함
 - 2006년 7월 1일부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각각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통합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 2010년 7월 1일부로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되어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진해구로 개편됨
 - 2012년 6월 30일부로 충남 연기군이 폐지되고, 2012년 7월 1일부로 충남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일부 및 충북 청원군 일부를 편입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함
 - 2012년 1월 1일부로 당진군은 당진시로 2013년 9월 23일부 여주군은

여주시로 승격되었지만 각각 동일 지역으로 간주하여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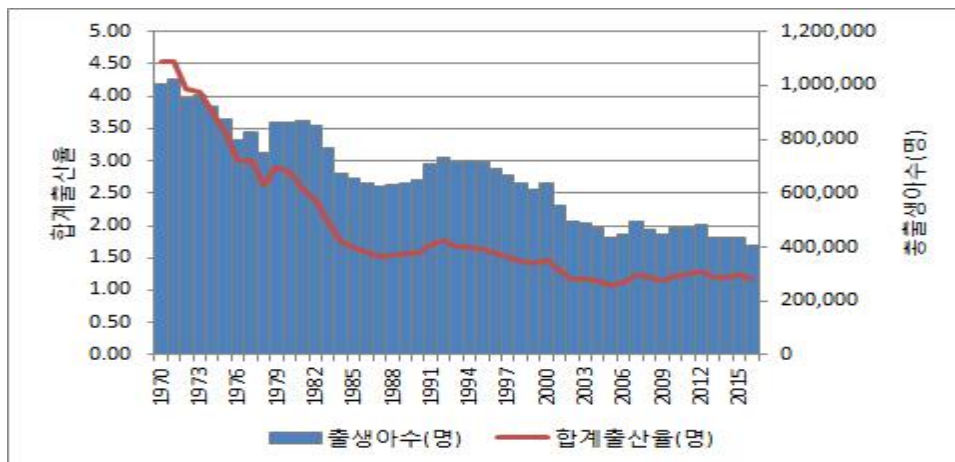
- 분석시점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숫자: 2005년 시군구 234개, 2010년 시군구 229개(제주특별자치도, 통합창원시 포함;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제외), 2015년 시군구 228개(세종특별자치시 포함; 연기군, 청원군 제외)로 구분함

제1절 인구 변화 추세

1. 합계출산율과 평균출산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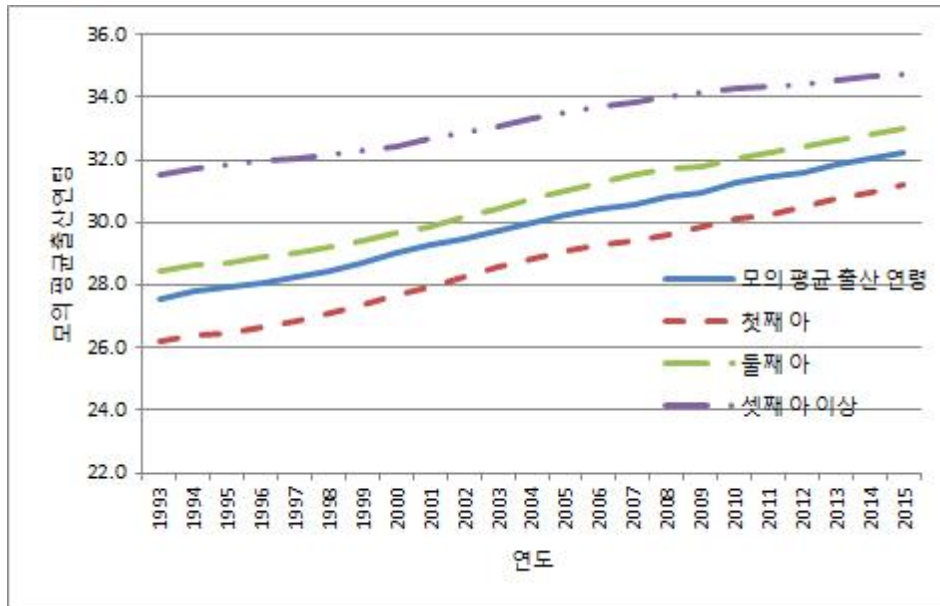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지난 1983년 대체수준(2.1) 이하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2001년 이후 초저출산(1.3)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모의 평균출산연령 역시 1993년 27.6세에서 2015년 32.2세로 꾸준히 상승하였고, 첫째아 평균출산연령은 2015년 31.2세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나라 중 하나임

[그림 3-1] 합계출산율 및 총출생아수 추이, 1970~2016



자료: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그림 3-2] 합계출산율 및 총출생아수 추이, 1970~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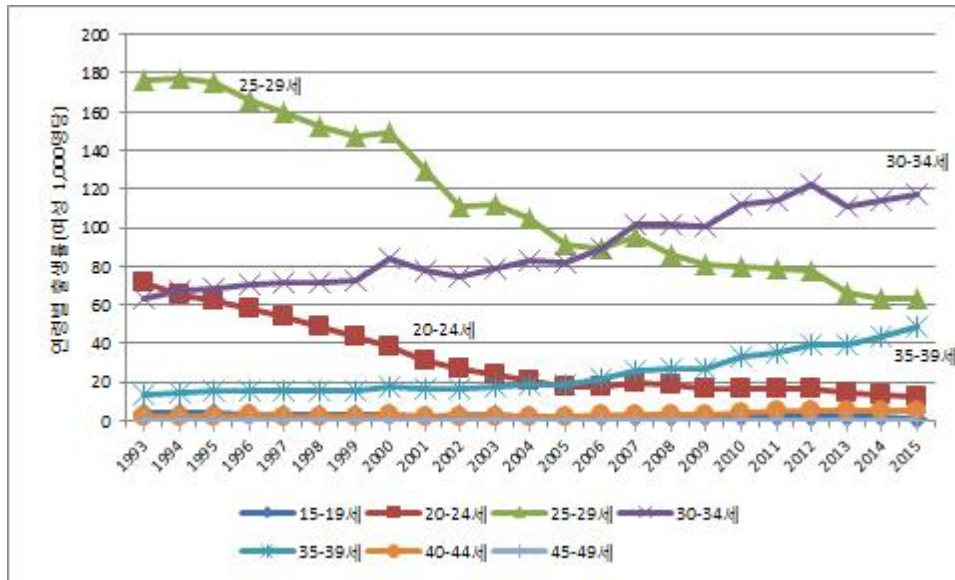
자료: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2. 여성의 연령별(5세 간격) 출산율 추세

- 미혼·만혼, 저출산, 출산연령의 고령화로 인해 여성의 5세 간격 연령별 출산율이 30세를 기준으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 1990년대 중반 이후 30세 이하 여성의 모든 연령집단에서 출생률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 특히 25~29세 출산율의 꾸준한 감소가 두드러지며, 반면 20~24세 출산율은 2005년 이후 감소세가 상당히 완만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같은 시기 30세 이후 여성의 모든 연령집단에서 출생률이 증가함
 - 1993년 이후 30~34세 출산율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35~39세 출산율은 2005년 전후로 완만히 상승하고 있음
 - 40~44세 출산율 역시 상승 조짐을 보이지만, 아직 전체 합계출산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함

- 지난 2006년 이후 우리나라 여성의 주요 출산시기가 25~29세에서 30~34세로 전환되었으며, 두 연령별 출산율의 차이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

[그림 3-3]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 추세, 1993~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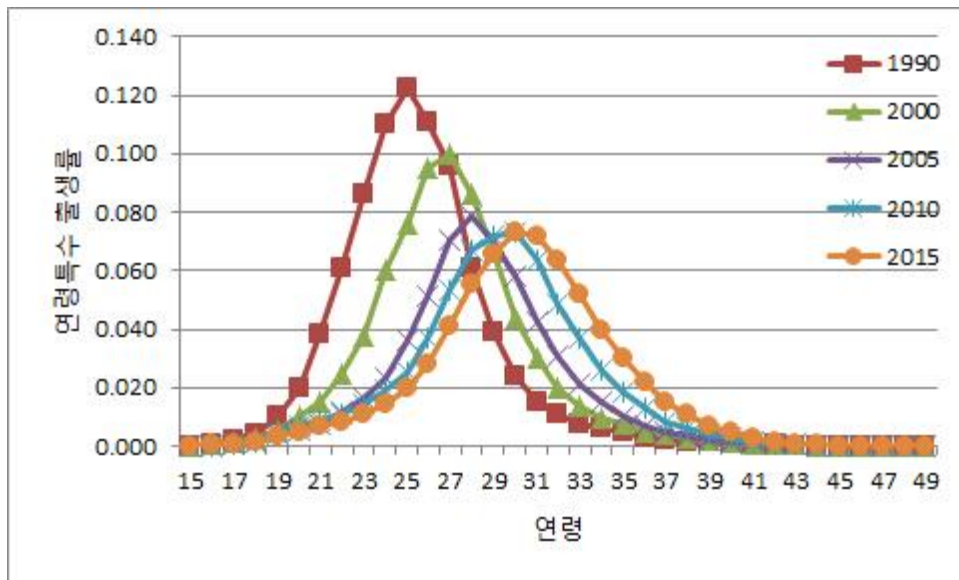
자료: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3.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과 초산연령의 변화

-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과 그 형태의 변화를 통해 전체적인 출산력 수준(quantum)과 출산 시기(tempo)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음
- 연령별 첫째아 출산율을 살펴보면, 1990년 이후 2005년까지 출산율 감소와 출산연령의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었으나, 2005년 이후 출산율 감소는 정체되고 출산연령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전체적으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출산율 등 출산순위별 출산율은 모두 지난 2005년 이후 하락세가 감소하였으나, 각 출산순위별 출산연령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음

- 출산연령의 지속적 상승은 장기적으로 다자녀 여성의 감소뿐 아니라, 무자녀 여성과 한자녀 여성의 상대적 증가를 초래하여 사회 전체의 출산력 감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

[그림 3-4] 여성의 연령별 첫째아 출산율 추세, 199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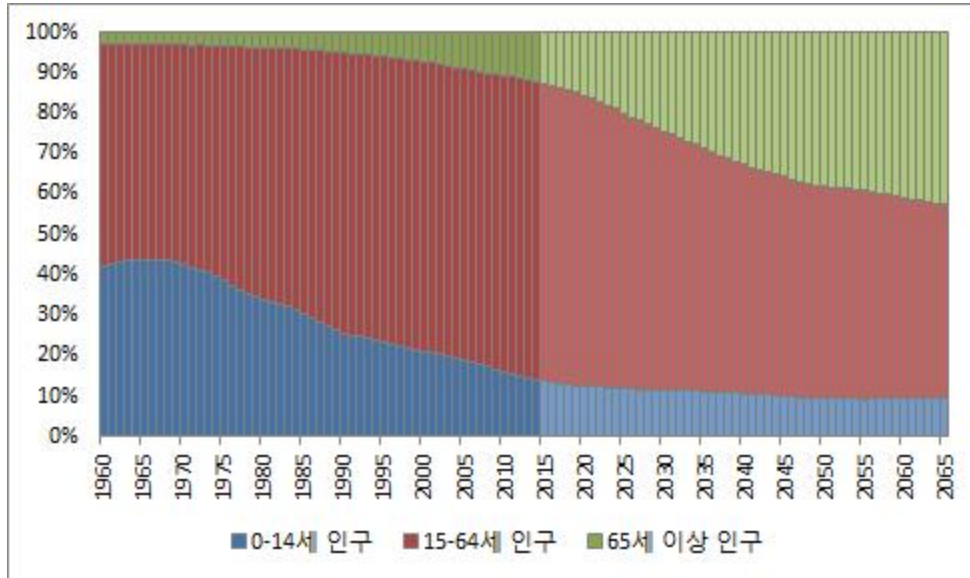


자료: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4. 고령화 및 인구구조의 변화

- 저출산·고령화의 지속으로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의 비중이 지난 1966 가장 높았던 43.9%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5년 13.8%로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같은 기간 3.1%에서 12.8%로 증가함
-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당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계산되는 노인부양비 역시 1960년 5.3에서 2000년 10.1, 그리고 2015년 17.5로 상승함
- 고령화지수는 역시 1960년 6.9에서 2000년 34.3으로 증가하였고, 2015년에는 93.1을 기록하여 유소년 인구 1명당 노인 인구 역시 약 0.9명 정도인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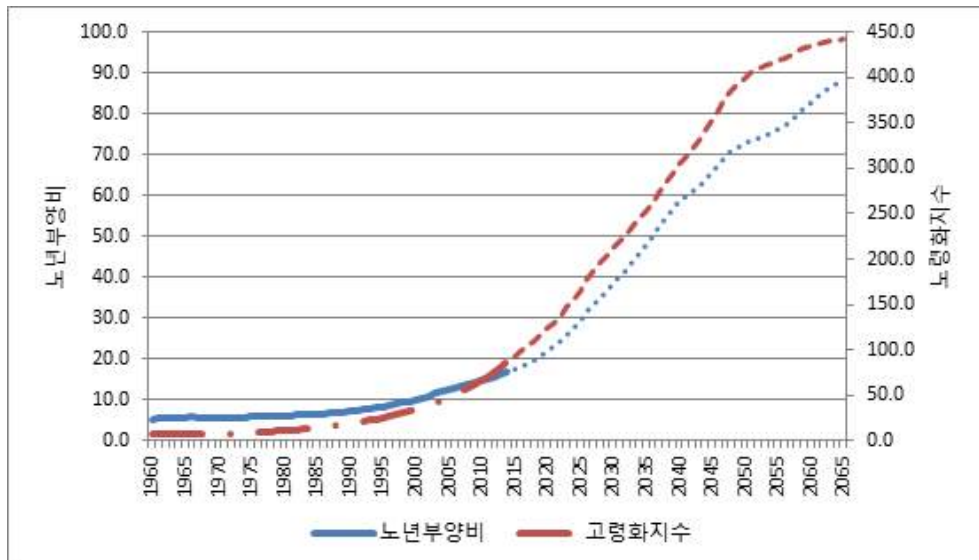
[그림 3-5] 유소년, 생산가능, 노년인구 비율 변화, 1992-2015



주: 1960~2015년은 확정인구 2016~2065년은 추계인구

자료: 장래인구추계 1960~2065(통계청 2016)

[그림 3-6] 노년인구비 및 고령화지수 변화, 1992-2015



주: 1960~2015년은 확정인구 2016~2065년은 추계인구

자료: 장래인구추계 1960~2065(통계청 2016)

제2절 인구통계 기초분석: 출산

1. 합계출산율

- 지역의 인구규모와 상관없이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지역과 지방 농어촌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분석단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정행정구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합계출산율은 그 평균값이 전국을 대상으로 한 합계출산율 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 있음
 - 전국의 합계출산율이 2001년 이후 1.3 이하 초저출산(lowest-low)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지역 중 과반 또는 그에 준하는 숫자의 지역에서 1.3 이상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별 합계출산율의 중위값은 2007년 이후 약 1.3에서 유지됨
- 연간 변동이 존재하지만, 2005년 이후 장기적인 추세에서 지역별 합계출산율 격차는 조금씩 상승하고 있음

〈표 3-1〉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합계출산율 평균 및 분포, 2005~2015

	평균	1Q	중위값	3Q	범위 (최대-최소)	최소값	최대값	사례수
2005	1.15	1.02	1.13	1.29	1.01	0.70	1.71	226
2006	1.19	1.06	1.19	1.32	1.04	0.72	1.76	226
2007	1.35	1.21	1.33	1.51	1.49	0.84	2.33	226
2008	1.28	1.13	1.27	1.42	1.42	0.79	2.21	226
2009	1.26	1.09	1.24	1.41	1.33	0.73	2.06	226
2010	1.34	1.17	1.32	1.48	1.63	0.78	2.41	227
2011	1.35	1.16	1.34	1.49	1.43	0.86	2.28	227
2012	1.41	1.22	1.38	1.56	1.58	0.89	2.47	228
2013	1.29	1.10	1.27	1.43	1.62	0.73	2.35	228
2014	1.31	1.11	1.29	1.46	1.64	0.79	2.43	228
2015	1.34	1.16	1.31	1.50	1.65	0.81	2.46	228

주: 2015년 기준으로 228개 법정행정구역을 사용함; 당진시나 여주시의 승격이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의 경우 구 행정구역 자료(당진군, 여주군, 제주도)로 대체하였음; 세종특별자치시(2012)와 통합창원시(2012) 출범 이전 자료는 분석에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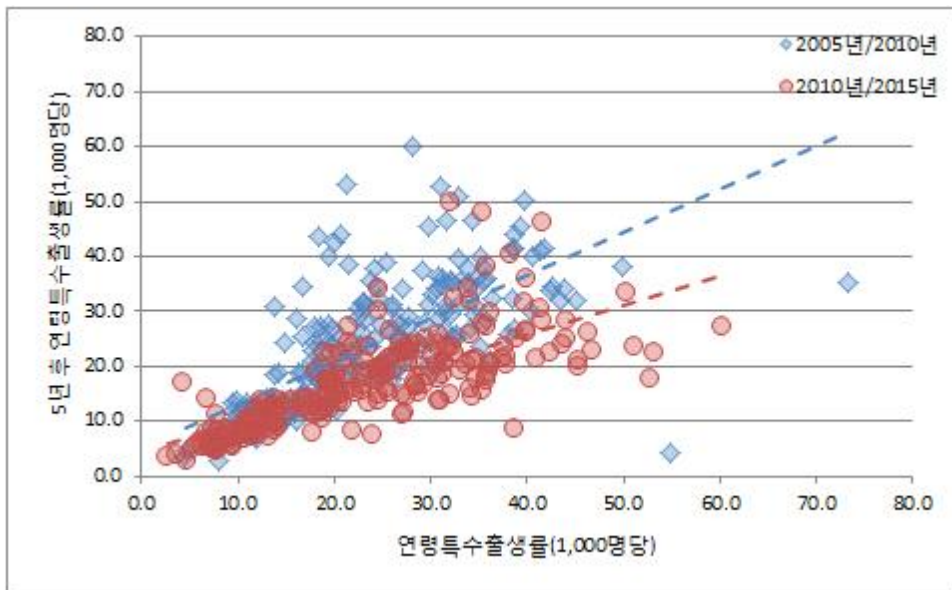
자료: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2. 여성 주요 연령별 출산율

가. 20~24세 출산율

- 지방자치단체별 여성의 20~24세 출산율(1,000명 당)이 감소하고 있음
 - 2005~2010년 사이 보다 2010~2015년 사이 20~24세 출산율 하락폭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며, 동시에 해당 연령대 출산율 하락을 경험하는 지자체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임
 - 5년 전후 지자체별 여성 20~24세 출산율을 대조시킨 그림에서 추세선의 기울기가 2005~2010년에 비해 2010~2015년에 더 낮아짐: 연령별 출산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의미함
 - 대부분의 지역에서 여성 20~24세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음

[그림 3-7] 시군구별 5년간 20~24세 출산율 하락정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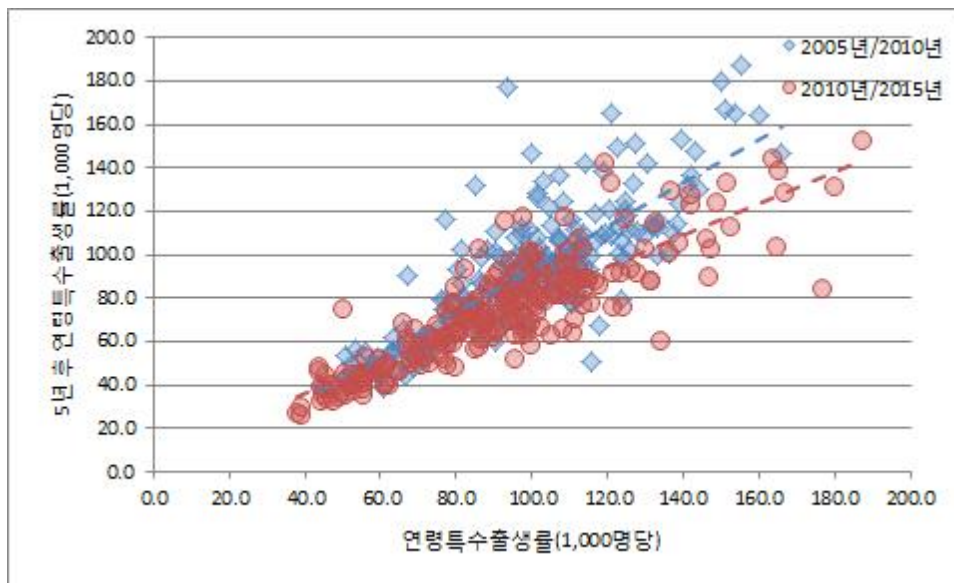
자료: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 2005~2010년 사이에는 농어촌 지역의 국제결혼 증가 등으로 20~24세 출산율의 상승을 경험한 지자체가 102곳이나 있었던 반면, 2010~2015년 사이에는 그 숫자가 29곳으로 크게 줄었으며 그나마도 그 상승폭도 미약한 수준임
- 2015년 기준 20~24세 출산율이 여성 1,000명 당 10명 이하인 지역이 55곳에 이르고 있음

나. 25~29세 출산율

- 여성의 25~29세 출산율 역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하락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2005~2010년 사이 보다 2010~2015년 하락폭이 더 큰 편임
- 25~29세 여성 1,000명당 50명 이하의 출생률을 보이는 지역이 2005년의 경우 서울 종로구와 강남구 두 지역이었던 것에 비해 2015년 전국 48개 지역으로 확대됨

[그림 3-8] 시군구별 5년간 25~29세 출산율 하락정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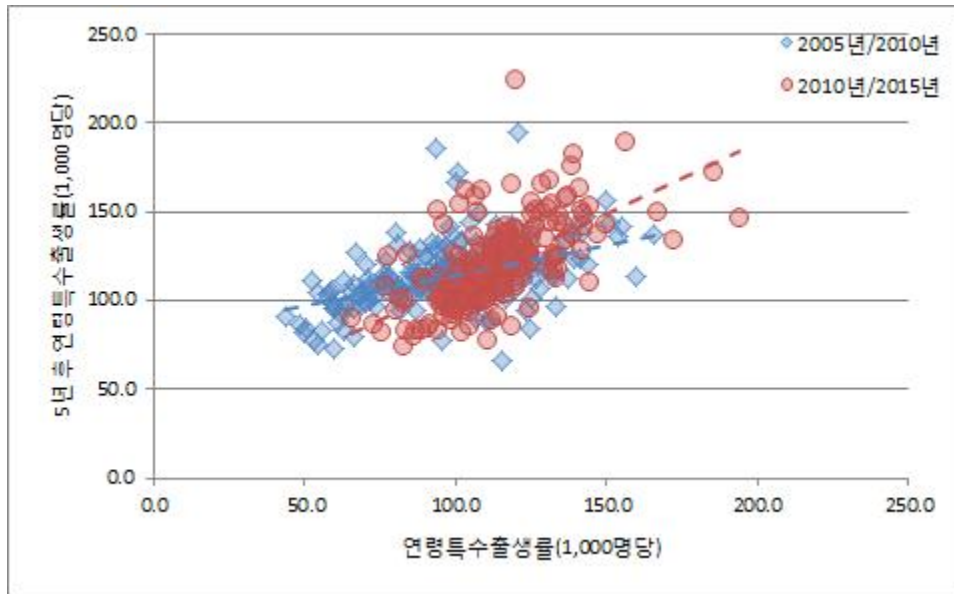
자료: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 여성의 25~29세 출산율 하락은 비혼·만혼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출산연령의 고령화를 반영함
 - 최근까지 여성의 주요 출산시기였던 25~29세의 출산율 하락은 추가적인 출산 지연과 둘째아, 셋째아 등 고순위 출생아수의 감소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향후 여성의 완결출산력(여성 1인당 평생 낳는 총출생아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 여성의 25~29세 출산율을 5년 전과 비교할 경우 과거 출산율이 높았던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이 지속되고 있지만, 출산율 하락을 경험하는 지역의 숫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음

다. 30~34세 출산율

- 지역마다 변동 폭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30~34세 출산율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2005~2010년 보다 2010~2015년 사이에 더욱 증가하였음
 - 20대 중·후반에 미루어지던 출산이 30대 초반 해소되는 것으로 여겨지며, 많은 여성들이 점차 20대 후반 보다는 30대 초반을 출산시기로 선택하는 것으로 판단됨
- 지난 2005년 30~34세 출산율이 여성 1,000명당 100명 이상인 지역이 7곳에 불과하였으나, 10년 후 2015년 전국 191곳으로 크게 확대됨
 - 여성의 주요 출산시기가 30대 초반으로 변화되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의 경우 추가적인 출산 연기 및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여성의 30~34세 출산율 상승은 20~24세 및 25~29 출산율 하락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다만, 여성의 30~34세 출산율 증가가 꾸준히 지속되기 어려운 만큼, 향후 30~34세 출산율이 정체되는 시기에 지방자치단체별 합계출산율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그림 3-9] 시군구별 5년간 30~34세 출산을 하락정도 비교



자료: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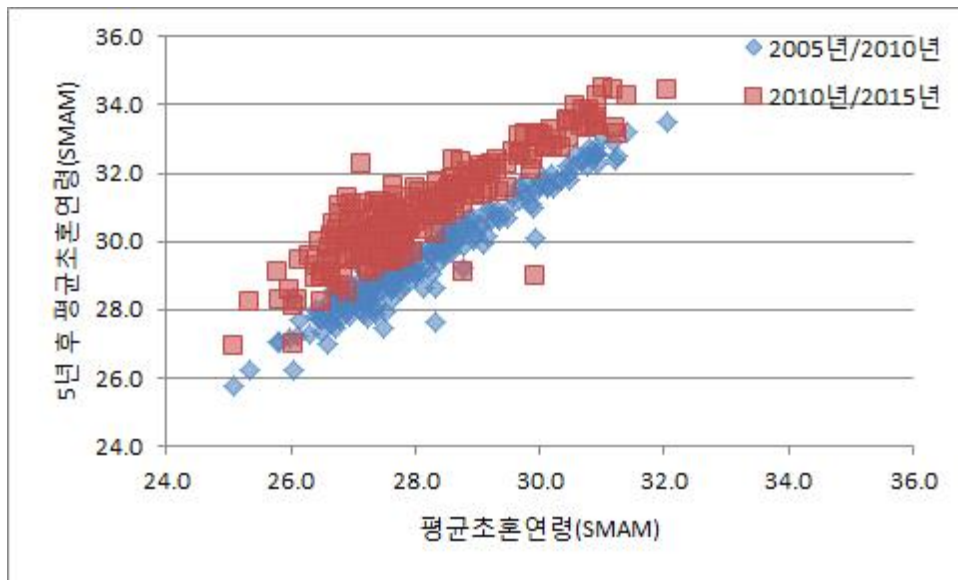
제3절 인구통계 기초분석: 혼인

1. 평균초혼연령(singulate mean age at marriage)

- 평균초혼연령(SMAM)은 일반적으로 통계청에서 인구동향조사 혼인신고자료에 기초하여 제공하는 혼인(초혼)한 자의 평균연령과 달리, 각 연령별 여성의 미혼인구 비율에 기초하여 작성되는 인구학 지표로서 출산력 논의와 관련하여 혼인력(nuptiality)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됨
 - 예컨대, 전국 15~49세 여성 전체의 평균초혼연령은 2005년 28.8세에서 2010년 30.2세, 2015년 31.5세로 10년간 2.7세 상승하였음
- 지방자치단체별 여성의 평균초혼연령은 농어촌지역 등 평균초혼연령이 낮은 지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전체 여성의 평균초혼연령 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005~2015년 사이 유사하게 2.7세 상승하였음

- 여성의 평균초혼연령이 32.0세 이상 높은 지역이 과거 2005년에는 서울 강남구 한 곳이었으나 2010년에는 20곳, 2015년에는 51개 지역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2015년, 여성의 평균초혼연령이 34.0세 이상인 곳 역시 서울 관악구, 종로구 등 5개 지역이 출현함
- 평균초혼연령 상위10위에 해당하는 지역들은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지역에 위치하는 반면 하위 10위에 해당하는 지역들은 강원 북부를 포함한 농어촌지역에 집중되고 있음
- 지난 10년간 상·하위 10곳에 해당 지역들이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연령별 혼인율과 혼인연령 등 혼인 관련 지표들이 지역별에 따라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그림 3-10] 시군구별 5년간 여성 평균초혼연령 변화 비교



주: 인구주택총조사 연령별(5세) 미혼율을 토대로 자체계산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표 3-2〉 지방자치단체별 평균초혼연령(SMAM) 상·하위 10지역, 2005~2015

2005 년			2010년		2015 년	
	시군구	평균초혼연령	시군구	평균초혼연령	시군구	평균초혼연령
상위	서울 강남구	32.1	서울 강남구	33.5	서울 관악구	34.5
	부산 중구	31.4	부산 중구	33.2	서울 강남구	34.5
	대구 중구	31.3	서울 관악구	33.1	서울 종로구	34.4
	서울 서초구	31.2	서울 종로구	32.9	부산 중구	34.3
	서울 종로구	31.2	대구 남구	32.7	부산 동구	34.2
	서울 관악구	31.0	부산 서구	32.7	서울 광진구	34.0
	광주 동구	30.9	서울 서대문구	32.6	부산 수영구	33.9
	부산 동구	30.9	광주 동구	32.6	부산 서구	33.8
	서울 용산구	30.9	서울 광진구	32.5	광주 동구	33.7
	서울 마포구	30.9	서울 용산구	32.5	서울 동작구	33.7
하위	강원 화천군	25.1	강원 화천군	25.7	강원 화천군	26.9
	강원 양구군	25.3	강원 양구군	26.2	강원 인제군	27.0
	강원 철원군	25.8	강원 인제군	26.2	인천 옹진군	28.1
	전남 완도군	25.8	전남 영암군	27.0	충남 당진시	28.2
	전남 진도군	26.0	강원 철원군	27.0	강원 양구군	28.2
	강원 인제군	26.1	전남 완도군	27.1	전남 완도군	28.3
	인천 옹진군	26.1	전남 진도군	27.1	경남 거제시	28.3
	경남 거제시	26.1	경남 거제시	27.2	경북 칠곡군	28.5
	전남 해남군	26.1	전북 장수군	27.3	전남 진도군	28.6
	전북 장수군	26.3	충남 당진군	27.4	경기 연천군	28.7

주: 인구주택총조사 연령별(5세) 미혼율을 토대로 자체계산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2. 평균초혼연령(SMAM)과 합계출산율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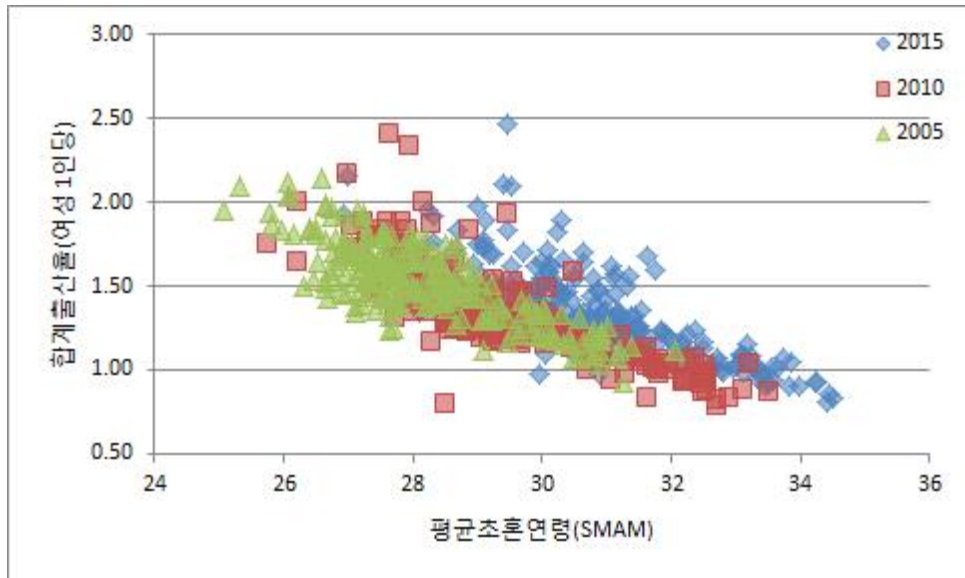
○ 평균초혼연령(SMAM)과 합계출산율은 강한 부적 관계를 가지며, 이 같은 관계가 2005년 이후 유지되고 있음

- 단순히 평균초혼연령과 합계출산율을 놓고 봤을 때, 2015년 평균초혼연령

의 차이가 지역의 차별출산력 차이를 약 62%(상관계수: -.79)를 설명함

- 지속된 비혼·만혼 추세로 여성의 평균초혼연령이 상승하고 있으며, 더불어 합계출산율 1.0 이하인 지역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혼인력이 낮은 지역에서 출산력도 낮은 양상이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평균초혼연령이 32.0세 이상인 51개 지역 모두 합계출산율 1.3 이하의 초저출산 지역으로 확인됨
 - 평균초혼연령 32.0세 이하인 지역의 경우, 평균초혼연령별 합계출산율의 분포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어 향후 혼인과 출산의 관계 변화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음

[그림 3-11] 여성 평균초혼연령(SMAM)과 합계출산율의 변화, 2005, 2010,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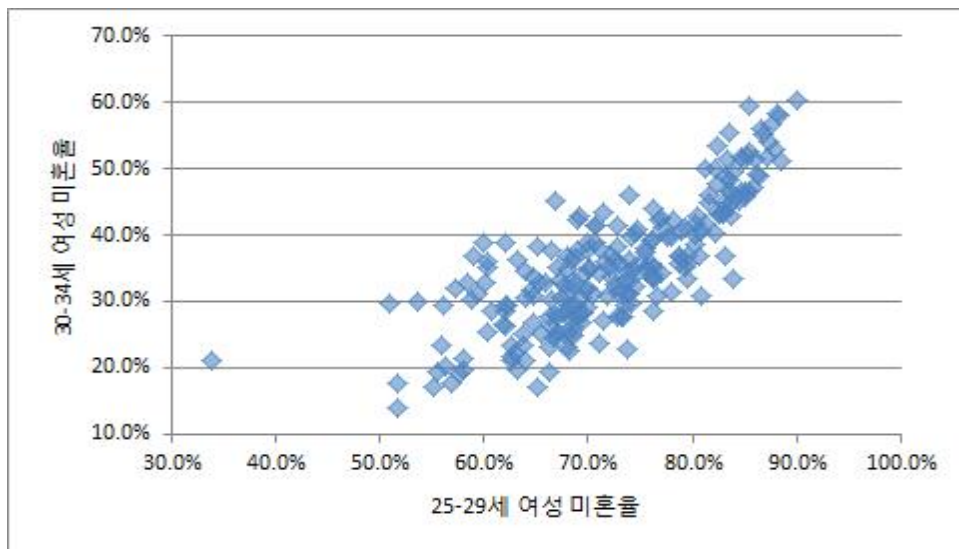


주: 인구주택총조사 연령별(5세) 미혼율을 토대로 자체계산
 자료: 인구동태통계 및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3. 주요 연령별 여성 미혼율

-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여성 미혼율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부산 강서구와 경북 영양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과거 2005년에 비교하여 2015년 여성 25~29세 미혼율이 상승하였음
 - 2005년 25~29세 여성 미혼율이 80% 이상인 지역은 서울 강남구가 유일하였으나 2010년 20개 지역, 2015년 56개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음
- 2005년 이후 30~34세 여성 미혼율 역시 동반 상승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여성 미혼율 40% 이하 지역이 전무하였으나 2015년에는 67개 지역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특히, 2015년 서울 종로구의 경우 25~29세와 30~34세 여성 미혼율이 각각 90.0%와 60.3%를 기록하면서 해당 연령대 여성 미혼율 1위를 차지함

[그림 3-12] 25-29세 및 30-34세 여성 미혼율의 비교, 2015



주: 인구주택총조사 연령별(5세) 미혼율을 토대로 자체계산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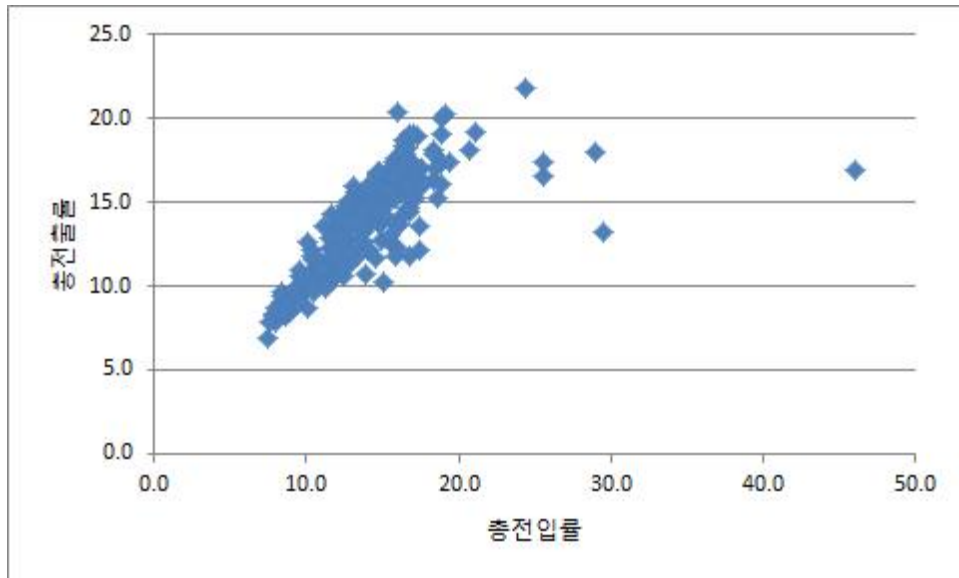
- 2015년 25~29세와 30~34세 여성 미혼율 상위 지역은 주로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 대도시 지역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위 지역은 울산 북구를 제외하고 대부분 농어촌지역이나 도농복합지역에 분포함
 - 30~34세 여성 미혼율은 도시와 농촌에서 함께 상승하고 있지만, 도농간 격차는 좀 더 벌어지고 있음
- 25~29세 여성 미혼율의 증가는 곧이어 30세 이상 연령대의 여성 미혼율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30대 중반 이후 만혼이 크게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49세까지 미혼으로 남는 여성의 생애미혼율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제4절 인구통계 기초분석: 인구이동

1. 총전입률 및 총전출률

- 2015년 총전입률(인구 1,000명 당) 상위 지역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여 지방혁신도시 및 신도시 지역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인천 중구, 대구 중구 등 일부 대도시 지역 역시 포함되어 있음
- 2015년 총전입률 하위 지역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주로 영호남 및 충청지역 농어촌지역에 집중되고 있음
- 2015년 총전출률 상위 지역은 충남 계룡시를 포함하여 서울, 인천, 광주 등 대도시 상업밀집지역이나 주거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하위 지역은 영호남 및 충청지역 농어촌지역으로 나타남

[그림 3-13] 지자체별 총전입률과 총전출률의 관계, 2015



자료: 인구이동통계 각 연도

- 일반적으로 총전입률이 높은 지역에서 총전출률 역시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세종특별자치시, 부산 강서구, 경기 하남시, 전남 나주시 등 복합행정도시, 지방혁신도시, 신도시 등 지자체별 특성에 따라 총전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들이 확인됨
 - 충남 계룡시의 경우, 2005년 이후 꾸준히 총전입률·총전출률 상위 지역에 포함되고 있어 직업과 관련된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2. 순이동률

- 지역자치단체별 순이동률(총전입률-총전출률)은 지방혁신도시 또는 신도시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가 2015년 인구 1,000명 당 29명으로 제일 높고, 부산 강서구(16.3)와 경기 하남시(11.0)가 그 뒤를 따르고 있음
 - 2015년 지역별 순이동률 상위 5개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 부산 강서구,

경기 하남시, 경기 화성시, 전남 나주시 등으로 총전입률 상위 5개 지역과 일치함

○ 순이동률 하위 10개 지역은 지역별 편차가 크지 않으며 주로 도시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 대도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유입된 인구 보다 지방이전 또는 신도시 등 인근 베드타운으로 유출된 인구가 좀 더 많은 것으로 여겨짐

〈표 3-3〉 지방자치단체별 순이동률 상·하위 10지역, 2005~2015

	2005년		2010년		2015년	
	시군구	순이동률	시군구	순이동률	시군구	순이동률
상위	충남 제천시	9.3	부산 기장군	12.5	세종특별자치시	29.0
	경기 화성시	8.0	경기 오산시	11.6	부산 강서구	16.3
	대전 유성구	7.4	경기 파주시	8.1	경기 하남시	11.0
	경기 용인시	7.2	경기 광명시	7.1	경기 화성시	8.9
	경기 남양주시	6.9	경기 양주시	6.3	전남 나주시	8.1
	경기 오산시	5.6	경기 남양주시	5.7	전북 완주군	5.2
	경기 파주시	5.6	광주 광산구	4.4	부산 기장군	4.9
	인천 옹진군	5.2	대전 유성구	4.3	충북 증평군	4.9
	경기 양주시	4.6	경기 김포시	4.3	충북 진천군	4.1
	인천 서구	4.5	경기 양평군	3.9	경기 광주시	3.8
하위	서울 종로구	-2.9	서울 도봉구	-2.1	인천 동구	-2.2
	광주 동구	-2.9	서울 성동구	-2.0	서울 성북구	-2.1
	인천 남구	-2.7	부산 중구	-2.0	부산 중구	-2.0
	전남 고흥군	-2.7	대구 서구	-1.9	인천 계양구	-2.0
	경남 하동군	-2.7	서울 양천구	-1.8	광주 동구	-2.0
	강원 화천군	-2.6	서울 관악구	-1.8	광주 서구	-2.0
	충남 금산군	-2.6	부산 서구	-1.8	경기 안산시	-2.0
	전북 남원시	-2.6	부산 부산진구	-1.8	서울 용산구	-1.9
	강원 정선군	-2.5	부산 북구	-1.8	부산 사하구	-1.9
	부산 금정구	-2.4	경기 의정부시	-1.8	강원 삼척시	-1.9

자료: 인구이동통계 각 연도

3. 주요 연령별 순이동률

가. 20~49세 순이동률

- 지역자치단체별 순이동률을 경제활동과 출산활동에 집중하는 20~49세 연령대와 노년층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연령대로 구분하여 살펴 볼 경우, 국내이동의 유형과 방향이 연령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인됨
- 20~49세 순이동률(전입률-전출률) 상위지역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지방혁신도시와 신도시 지역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연령 전체 순이동률 상위지역과 유사하지만, 강원 철원군과 인제군 등 예상하지 못한 지역이 포함되어 있음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또는 사업 형태로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음. 예컨대 “내고장 주민등록갯기 운동” 같은 캠페인에 의한 ‘주민등록인구 증가’를 추진하고 있음
- 청년층에 해당하는 20~49세 순이동률(전입률-전출률) 하위지역은 농어촌지역과 인근 지역에 신도시가 개발되는 곳들로 전연령 순이동률 하위지역과 일부 다른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음
 - 순이동률 최상위지역인 세종특별자치시 인근의 충남 공주시, 대전 동구, 대전 대덕구가 20~49세 순이동률 하위 10지역에 속해 있으며, 일부 대도시 지역 서울 강동구, 대구 서구 역시 포함되어 있음

〈표 3-4〉 지방자치단체별 20~49세 순이동률 상·하위 10지역, 2005~2015

	2005 년	순이동률	2010년	순이동률	2015 년	순이동률
	구시군	20~49세	구시군	20~49세	구시군	20~49세
상위	경기 화성시	9.7	부산 기장군	14.4	세종특별자치시	33.8
	충남 계룡시	9.2	경기 오산시	12.6	부산 강서구	21.4
	인천 용진군	8.9	경기 파주시	9.9	전남 나주시	13.1
	대전 유성구	8.4	경기 광명시	8.4	경기 하남시	12.4
	경기 용인시	8.1	경기 양주시	6.8	경기 화성시	10.9
	경기 오산시	7.6	경기 남양주시	6.4	강원 철원군	7.1
	경기 남양주시	7.5	광주 광산구	5.3	전북 완주군	6.6
	경북 울릉군	7.2	대전 유성구	5.2	충북 증평군	5.9
	경기 파주시	6.9	경기 김포시	4.8	부산 기장군	5.9
	경기 양주시	4.9	충남 당진군	4.8	강원 인제군	5.3
하위	경기 과천시	-13.6	경남 합천군	-7.8	강원 삼척시	-5.8
	전북 장수군	-8.8	광주 동구	-6.1	경남 합천군	-5.2
	전북 진안군	-6.8	경남 남해군	-4.5	전남 강진군	-5.0
	경남 의령군	-5.7	전남 해남군	-4.0	서울 강동구	-4.8
	경북 군위군	-5.4	울산 동구	-3.7	충남 공주시	-3.9
	경남 하동군	-5.1	서울 서대문구	-3.7	경남 의령군	-3.9
	전남 고흥군	-5.1	부산 영도구	-3.6	대전 동구	-3.9
	부산 동구	-5.0	전남 고흥군	-3.5	대전 대덕구	-3.5
	인천 동구	-4.8	대구 남구	-3.1	대구 서구	-3.4
	경기 연천군	-4.8	전남 함평군	-3.1	경북 고령군	-3.3

주: 인구가동통계 및 주민등록연앙인구를 토대로 자체계산

자료: 인구가동통계 및 주민등록연앙인구 각 연도

나. 65세 이상 순이동률

- 지방자치단체별 65세 이상 인구 순이동률 상·하위 지역들의 분포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임
- 부산 강서구, 경기 하남시, 경기 화성시 등 신도시 개발지역은 타 연령대와 동일하게 65세 이상 순이동률 상위 지역에 포함되지만 대부분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다른 연령대와 다르게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지방핵신도시의 이름이 보이지 않음
- 65세 이상 순이동률 하위지역은 모두 서울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음
- 지난 10년간 65세 이상 인구의 순이동률 상·하위 지역을 함께 고려해 볼 때, 대도시 지역 노인들이 은퇴 후 대도시 및 대도시 인근 지역의 신도시 및 주거단지로 이주하는 형태가 해당 연령층의 주요 이동경로 중 하나인 것으로 판단됨

〈표 3-5〉 지방자치단체별 65세 이상 순이동률 상·하위 10지역, 2005~2015

	2005 년	순이동률	2010년	순이동률	2015 년	순이동률
	구시군	65+세	구시군	65+세	구시군	65+세
상위	충남 계룡시	6.3	경기 오산시	11.3	세종특별자치시	9.6
	대전 유성구	6.1	부산 기장군	7.5	경기 하남시	5.7
	경기 용인시	5.8	경기 양주시	4.5	경기 화성시	3.5
	경기 남양주시	4.6	경기 남양주시	4.4	부산 기장군	3.3
	경기 양주시	4.2	경기 광명시	3.3	부산 강서구	3.2
	울산 북구	4.1	대전 유성구	3.3	대구 달성군	3.2
	인천 서구	4.1	경기 김포시	3.0	인천 남동구	3.0
	인천 연수구	3.6	광주 광산구	2.9	경기 양평군	2.6
	경기 동두천시	3.5	경남 양산시	2.9	경기 고양시	2.6
	경남 양산시	2.9	경기 파주시	2.8	경기 광주시	2.6
하위	경기 과천시	-8.3	서울 서대문구	-3.1	서울 중구	-3.1
	서울 종로구	-3.4	광주 동구	-2.4	서울 강동구	-2.9
	인천 동구	-3.0	서울 영등포구	-2.3	서울 동작구	-2.8
	서울 중구	-2.8	서울 종로구	-2.2	서울 성북구	-2.8
	경기 구리시	-2.4	서울 용산구	-2.1	서울 종로구	-2.7
	서울 강동구	-2.1	서울 강남구	-2.0	서울 용산구	-2.7
	대구 수성구	-1.9	서울 금천구	-1.9	서울 서초구	-2.6
	부산 동구	-1.9	서울 동작구	-1.9	서울 영등포구	-2.4
	서울 광진구	-1.8	서울 성동구	-1.9	서울 관악구	-2.2
	부산 연제구	-1.8	서울 관악구	-1.8	서울 마포구	-2.1

주: 인구가동통계 및 주민등록연앙인구를 토대로 자체계산

자료: 인구가동통계 및 주민등록연앙인구 각 연도

제5절 인구통계 기초분석: 고령화

1. 조사망률

- 지자체별 조사망률(인구 천 명당 사망자수)의 변화는 안정적인 가운데 전체적으로 농어촌지역 위주로 2005~2015년 사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
- 2015년 조사망률 상위 10개 지역은 모두 영호남 농어촌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높은 노년인구 비중과 연관되는 것으로 판단됨
- 마찬가지로 2015년 조사망률 하위 10개 지역은 서울의 강남3구를 비롯해 생산가능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확인됨
- 사망력 상·하위 10개 지역의 명단은 2005~2015년 사이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지역별 인구구조와 고령화 추세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표 3-6〉 지방자치단체별 조사망률 상·하위 10지역, 2005~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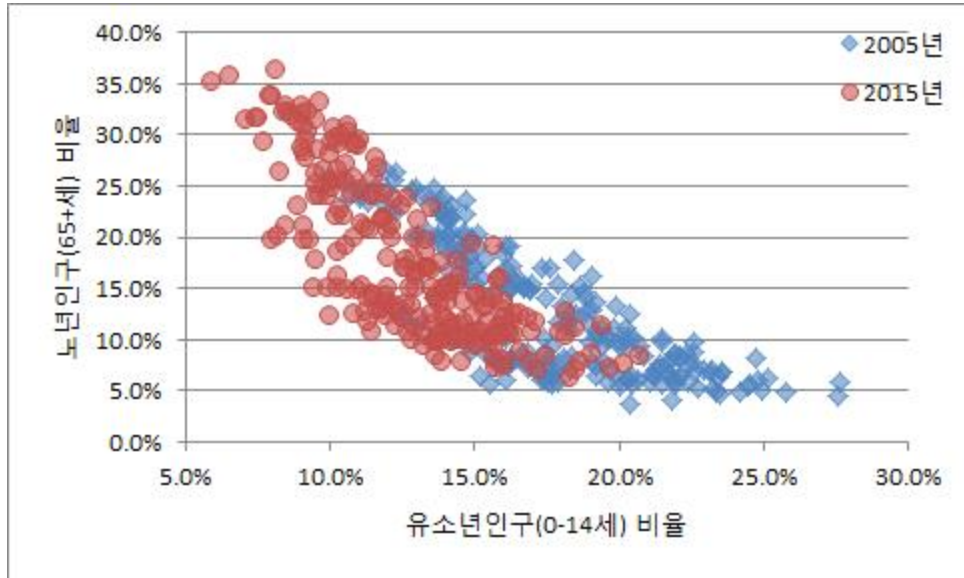
	2005년		2010년		2015년	
	시군구	조사망률	시군구	조사망률	시군구	조사망률
상위	경북 청도군	13.8	경북 군위군	14.3	경남 남해군	16.0
	경북 의성군	13.2	경남 남해군	13.9	경북 의성군	15.9
	경북 군위군	13.1	충남 청양군	13.6	전남 고흥군	15.5
	경남 의령군	13.0	전남 고흥군	13.4	경북 영양군	15.1
	경남 산청군	13.0	경북 청도군	13.3	경남 의령군	15.1
	전남 고흥군	12.9	경북 예천군	13.3	경북 군위군	14.9
	경북 예천군	12.9	경남 합천군	13.3	경남 합천군	14.7
	경남 합천군	12.9	경북 의성군	13.2	전북 진안군	14.1
	경북 영양군	12.8	전남 진도군	13.1	경북 봉화군	14.1
	전북 임실군	12.7	경북 영양군	13.1	경북 청도군	13.9
하위	서울 송파구	3.0	서울 강남구	2.9	서울 강남구	3.1
	경기 시흥시	3.0	서울 서초구	3.0	서울 서초구	3.2
	서울 강남구	3.1	충남 계룡시	3.2	울산 북구	3.2
	대전 서구	3.1	서울 송파구	3.3	서울 송파구	3.3
	울산 북구	3.1	대전 유성구	3.3	대전 유성구	3.3
	서울 광진구	3.2	울산 북구	3.3	경기 오산시	3.4
	서울 양천구	3.2	경기 과천시	3.3	경북 구미시	3.4
	서울 서초구	3.2	경기 오산시	3.3	경기 군포시	3.5
	울산 남구	3.2	경기 군포시	3.3	경기 화성시	3.5
	경기 안산시	3.2	서울 양천구	3.4	경기 시흥시	3.6

자료: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2. 인구구조

- 지방자치단체별 전체인구 중 유소년인구(0-14세) 인구의 비중은 전국적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
 - 2005년 42개 지역에서 유소년인구가 전체인구의 30%를 넘었었지만, 2015년의 경우 유소년인구 최상위 지역인 경기 화성시(29.2%)조차도 30%를 넘지 못한 실정임
- 한편 각 지역에서 유소년 인구의 비중이 감소하는 만큼, 노년인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2015년 전체 인구 중 노년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고흥군(36.3%)이며, 다른 상위 지역 모두 영호남의 농어촌지역으로 확인됨
- 노년인구가 전체 인구 중 7%, 14%, 20% 이상 넘는 지역을 각각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구분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초고령사회 지역이 2005년 42개에서 2015년 82개로 빠르게 증가함
 -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노년 인구가 40%가 넘는 “초초고령사회”의 출현도 머지않을 것으로 전망됨
- 유소년인구 비중과 노년인구 비중은 부적 상관관계를 갖지만, 그 관계 변화를 통해 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좀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음
 - 유소년과 노년 인구를 백분율로 표현한 수와 그 상관관계를 비교할 경우, 2005년 오른쪽 아래편에 위치하던 산포도의 위치가 2015년 왼쪽 위쪽으로 이동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유소년 인구 비율의 감소 +노년 인구 비율의 증가)

[그림 3-14] 유소년인구(0~14세)와 노년인구(65세)의 구성비율의 관계 변화, 2005~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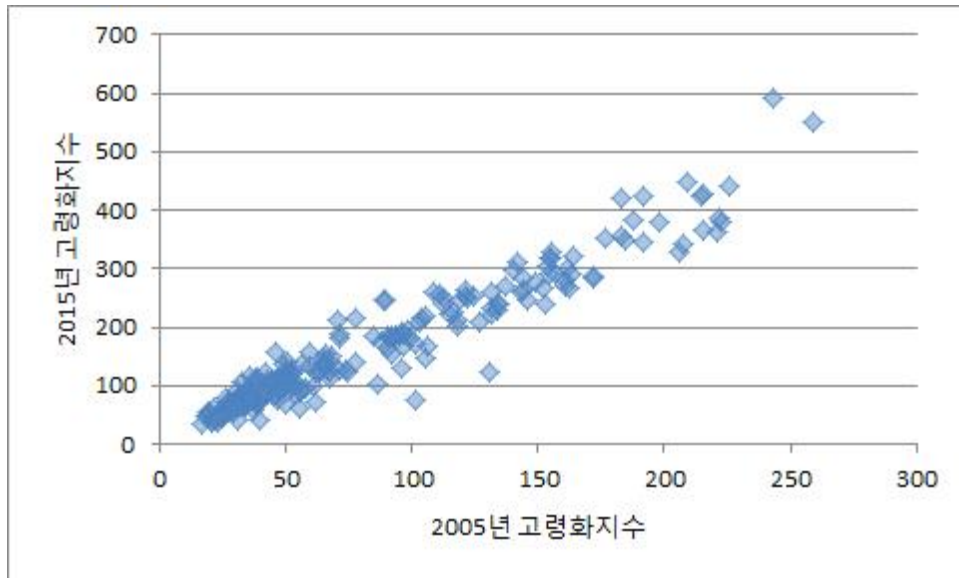


자료: 주민등록연앙인구 각 연도

3. 고령화 지수(ageing index)

- 고령화지수 또는 노령화지수는 유소년 인구(0~14세)에 대한 노년인구(65세 이상)의 비로 표현되며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예컨대, 2015년 경북 군위군의 경우 고령화지수 최상위 지역(592.5)으로 유소년 인구 1명당 노인 인구가 약 6명일 정도로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이며, 유소년 인구 1명당 노인 인구 2명 이상인 지역 역시 71개 지역에 달함
 - 반면, 유소년 인구 1명당 노인 인구가 1명이 되지 않는 지역, 즉 연령구조가 전국 전체의 고령화 추세 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지역은 81개로 확인됨
- 지자체별 고령화 진행속도 역시 지역별 특성에 따라 빠르게 차별화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그림 3-15] 시군구별 고령화지수 변화, 2005~2015



자료: 주민등록연앙인구 각 연도

제6절 주요 인구변동 요인과 인구증가율

- 인구 3요소, 출생, 사망, 인구이동 중, 지자체별 인구증감에 인구이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2015년 현재 지역자치단체별 자료로 볼 때 지역의 인구증가율과 순이동률이 매우 강한 정적 상관관계(0.98)를 갖고 있으며, 이는 인구증가율과 조출생률 사이의 관계(상관계수: 0.47) 보다 큰 것으로 확인됨
 - 인구증가율과 순이동률만 놓고 본다면, 지역별 순이동률의 차이가 인구증가율 차이의 약 96.5%(R-square)를 설명하고 있음
 - 횡단자료로 요인 간 인과관계를 특정할 수 없지만, 지역자치단체별 인구증가율에 대한 순이동률의 매우 높은 영향력은 조출생률과 조사망률을 함께 포함한 회귀분석에서도 확인됨
- 지방자치단체별 인구증감은 인구이동에 의해 주로 결정되고 있으며, 출산·사

망 등 자연증가에 의한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음

- 이는 우리 사회의 출산력과 사망력이 모두 매우 낮게 유지되고 있는 측면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인구의 자연증가와 사회적 이동이라는 서로 다른 두 측면(예, 발생 빈도)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순이동률이 높은 지역에서 조출생률도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인과관계(예, 선별성 및 템포효과)를 추정하기 어려운 관계로 좀 더 포괄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예컨대, 인구이동 후 혼인 및 출산이 증가하는지 아니면 혼인 및 출산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이동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동시에 이동 전후 과정에서 대개 출산이 연기되기도 하고 정착 후 미루어오던 출산을 서둘러 출산력이 상승하기도 함
-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의 합계출산율 상승은 이 같은 맥락에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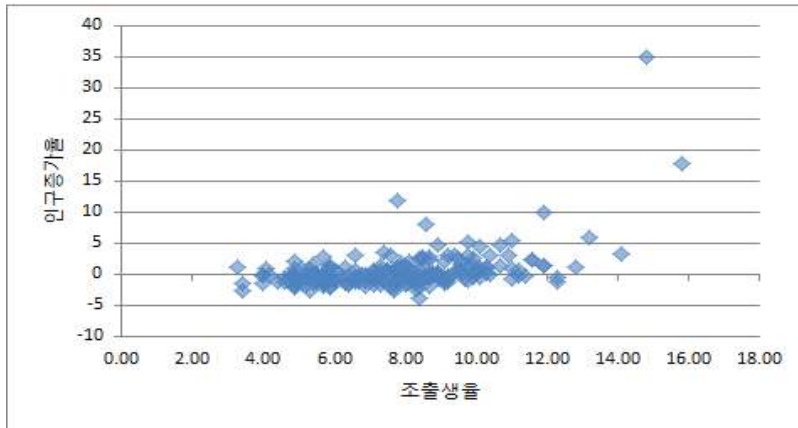
〈표 3-7〉 지방자치단체별 주요 요인 간 상관관계

	조출생률	조사망률	순이동률	인구증가율
조출생률	1			
조사망률	-0.684***	1		
순이동률	0.337***	-0.003	1	
인구증가율	0.465***	-0.161*	0.98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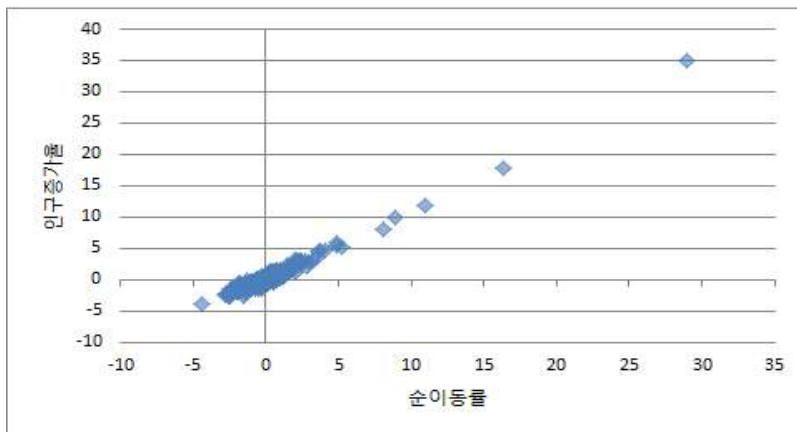
주: * $p < .05$; *** $p < .001$

[그림 3-16] 지방자치단체별 조출생률, 순이동률과 인구증가율의 관계

〈조출생률과 인구증가율〉



〈순이동률과 인구증가율〉



- 요컨대, 지방자치단체별 인구기초통계 분석결과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출산, 혼인, 인구이동, 고령화 등 인구현상의 지역별 격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확연히 구별되어 지고 있음

- 지자체 수준의 인구증감과 관련해서는 인구이동에 의한 영향이 출산·사망 등 자연증가에 의한 영향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

제 4 장

지방자치단체 심층 사례분석

제1절 지방자치단체 인구유형화

제2절 지역 유형별 인구 특성 분석

제3절 지역 유형별 정책 환경 분석

제4절 지역 유형별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 내용 분석

4

지방자치단체 심층 사례분석 <<

제1절 지방자치단체 인구유형화

1. 인구특성과 지역의 유형화 방법

-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지역 간 인구변동의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대책이 준비되고 또 시행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별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지역별 인구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향후 성과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인구특성별로 유형화한 후 유형별 특성 차이를 분석하고자 함
- 이 보고서는 ‘저출산·고령사회’라는 주제에 맞게 지역의 인구특성 중 출산력, 고령화, 그리고 인구이동에 초점을 두고 지역을 분류하였음
- 우선 ‘저출산고령사회’를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인구특성으로 간주함
 - 출산력 측면에서 분석기준이 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2015년 합계출산율 평균은 1.338으로 초저출산의 구분점으로 사용되는 1.3을 조금 넘는 수준임. 합계출산율은 연간 변화가 크고 출산연령의 변화에 민감한 편임. 이를 감안하여 기초자치단체별 지난 5년 간 합계출산율 평균(1.341)을 살펴 보더라도 1.3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
 - 한편 고령화 측면에서 보자면, 2015년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평균 18.3%로 ‘고령사회’로 분류됨
 - 따라서 우리 사회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일반적인 인구특성은 합계출산율이 1.3을 조금 웃도는 ‘저출산’과 고령인구 비율이 14~20% 사이에 있는 ‘고령사회’로 간주될 수 있음. 동시에 저출산이 좀 더 심각한 ‘초저출산’ 현상이 나타나는 곳과 고령인구 비율이 더 높은 ‘초고령사회’의 특성을 갖는 곳은

잠재적으로 심각한 인구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곳으로 정책적 관심이 좀 더 필요한 지역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임

-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인구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출산과 사망에 의한 자연증가 보다는 인구이동과 같은 사회적증가의 영향력이 더 클 수 있음. 저출산·고령화의 지속으로 인해 출산과 사망에 의한 인구변화는 상대적으로 안정적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측면이 있음.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인구변동은 지역의 주택, 건설, 교통, 산업, 교육, 관광 등 해당 지역사회는 물론 인근 지역 등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과거 산업화와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던 시절에 비해 그 규모가 감소했을지 몰라도 국내이동은 여전히 활발함. 혁신도시와 신도시 건설, 지방이전, 산업단지 조성, 기업체의 신설과 폐업, 교육기관의 신설과 통폐합, 관광 또는 여가시설의 확충 등 다양한 이유로 기초자치단체 간 인구이동이 지속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그 변화의 방향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음. 심지어 일부 농어촌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역시 종종 인구이동의 흐름을 바꾸기도 함
- 기초자치단체별 인구특성을 파악하고 유형화하기 위해 이 연구는 출산, 고령화, 인구이동, 이 세 가지 요인들을 반영함. 이를 위해 각 요인별 대표 지표로서 합계출산율, 노년인구비, 순이동률을 활용함. 우선 인구의 자연증가 측면에서 저출산·고령화 정도를 반영함
 - 합계출산율은 출산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됨. 하지만 연간 변동이 활발한 편이며, 무엇보다 여성의 출산연령이 우리 사회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경우 지표를 과대 또는 과소추정하게 하는 단점이 있음(Bongaarts and Feeney 1998; Bongaarts and Sobotka 2012; Yoo and Sobotka 2017). 따라서 특히 인구규모가 작은 기초자치단체의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음. 대안으로 이 연구는 2011~2015년 사이의 합계출산율을 평균한 값을 활용하였음. 지난 5년간 평균 합계출산율이 1.3 이상인 지역을 일반적인 ‘저출산’ 사회로, 1.3 이하인 지역을 ‘초저출산’ 사회로 단순 구분함. 우리 사회의 많은 지역에서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

에, 여기에서는 매우 낮은 출산력의 ‘초저출산’ 지역이 관심의 대상임

- 고령화에 따른 분류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을 사용함. 지난 2015년 말 주민등록통계 기준, 기초자치단체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20% 이상인 지역을 고령화가 특히 심한 지역으로 구분함. 인구의 연령구조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서 해마다 점진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지난 5년 간 평균값을 사용한 것과 결과가 다르지 않음. 고령인구 비율 20%는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국가 간 고령화 정도를 비교하는데 종종 사용되며, ‘초고령사회’로 일컬어짐. 이 연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일반적인 ‘고령사회’와 고령화가 심각한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초고령사회’ 지역을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곳으로 간주함
- 인구의 자연증감에 관해 사망력이 아닌 고령화 정도를 사용하는 것은 분석의 편의를 도모하고, 동시에 연구의 주제인 저출산·고령화에 집중하기 위한 것임. 우리 사회는 사망력이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고령층의 사망력 수준 자체를 사회문제로 간주하기는 어려움. 아울러 고령화가 아닌 사망력을 사용할 경우 인구의 연령구조를 반영하기 위해 추가 변수를 고려해야 하며, 이 경우 분석 및 설명과정이 불필요하게 복잡해짐. 노년인구 비율은 고령화 정도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인구의 연령구조까지 반영하는 지표로 연구의 목적에 좀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이 연구는 저출산과 고령화 정도에 관한 구분을 조합하여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네 개의 집단으로 구분함. 우선 ‘저출산’과 ‘고령사회’로 구분된 기초자치단체를 우리 사회의 1) 일반적인 ‘저출산·고령사회’ 지역으로 간주하고 ‘초저출산’과 ‘초고령사회’의 조합으로 나머지 집단을 정의함. 즉, 2) ‘초저출산’의 특성만 갖는 지역, 3) ‘초고령사회’ 특성만 갖는 지역, 4) ‘초저출산’과 ‘초고령사회’ 특성을 동시에 갖는 지역으로 구분함. 출산력과 고령화를 나타내는 지표의 간단한 조합으로 지역 인구의 연령구조는 물론 인구의 자연증감 정도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 저출산·고령화 지역 분류

- 저출산·고령화 일반: 초저출산 및 초고령 사회가 아닌 지역(아래 기준 참조)
- 초저출산 사회: 합계출산율(2011-2015년 연간 평균) 1.3 이하인 지역
- 초고령 사회: 지역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년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지역
- 초저출산·초고령 사회: 초저출산과 초고령이 공존하는 지역

○ 인구이동에 의한 사회적 증감은 중요한 인구변동 요인 중 하나로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임. 특히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인구이동의 영향은 출산과 사망에 의한 자연증가보다 그 영향력이 클 수 있음. 다만 기초자치단체 간 인구이동은 연간 변동이 심한 편이라 안정된 지표로 활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음. 이를 극복하고 또 지역 간 인구이동의 상대성을 반영하고자, 2011~2016년 5년 간 지방자치단체별 연단위 순이동률의 평균값을 활용하였음. 구체적으로 5년 평균 순이동률을 토대로 1사분위(하위 25%)에 해당하는 지역을 '인구유출 지역'으로, 가운데 사분범위(25~75%)에 해당하는 지역을 인구이동 '평균 지역', 4사분위(상위 25%)에 해당하는 지역을 '인구유입 지역'으로 구분함. 인구이동에 의한 분류결과 2011~2015년 순이동률 평균이 -0.83 이하인 곳들이 1사분위로, 0.59 이상이 곳들이 4사분위로 분류되었음. 결국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인구이동을 그 정도에 따라 a) 인구유출 지역, b) 인구이동 평균 지역, c) 인구유입 지역으로 구분함

○ 인구이동에 의한 지역 분류(국내이동의 상대성을 고려함)

- 인구유출 지역: 순이동률(2011-2015년 연간 평균) 하위 25% 지역
- 평균 지역: 순이동률(2011-2015년 연간 평균) 상·하위 25%를 제외한 지역
- 인구유입 지역: 순이동률(2011-2015년 연간 평균) 상위 25% 지역

○ 위에서 정의한 저출산·고령화 정도 그리고 인구이동 정도에 따라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유형화함. 저출산·고령화 정도에 의한 '일반', '초저출산', '초고령 사회', '초저출산·초고령 사회' 4가지 유형과 인구이동 정도에 의한 '인구유출', '인구이동 평균', '인구유입' 지역 등 3가지 유형을 혼합하여 총 12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후 각 지역들을 분류하였음. 분류에 사용된 지표가 단순하여 세부적

인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자연증감, 사회적 증감, 연령구조를 반영하여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크게 1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해 볼 수 있음

- 12개 유형별로 한 지역을 선정하여 인구·산업·주택·경제활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구변화와 그 배경에 관해 살펴볼 것임. 이에 앞서 저출산·고령화 정도에 의한 분류와 인구이동의 상대적 정도에 의한 분류를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시하고 그 특성을 확인함

2.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분류

-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일반(저출산·고령사회), 초저출산, 초고령, 초저출산·초고령 지역으로 구분한 결과를 아래 표에 제시함. 분석에 포함된 총 228개 구시군 기초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포함)를 대상으로 할 경우 전체 65개 지역이 일반, 77개 지역이 초저출산, 60개 지역이 초고령사회, 26개 지역이 초저출산·초고령사회 지역으로 구분됨
- 저출산·고령화 정도에 따라 지역을 구분할 경우, 고령화 수준은 지역의 도시화 정도에 반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도시화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고령화 정도는 높게 나타남.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리 사회에 일반적인 수준의 저출산·고령사회의 특성을 보임. 반면 주로 대도시 지역에 해당하는 ‘구’ 지역의 경우 대부분 초고령사회로 발전되지 않은 초저출산의 특성만 갖는 지역으로 구분됨. 예외적으로 부산광역시의 4개 지역(동구, 서구, 영도구, 중구)의 경우 대도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초고령사회 지역으로 분류됨. 반면 울산광역시의 경우 ‘시’ 지역의 경우 일반 41곳, 초저출산 20곳, 초고령사회 12곳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경상남도 밀양시와 충청남도 공주시 두 곳은 초저출산·초고령사회 지역으로 분류됨. 농어촌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는 ‘군’ 지역의 경우 초저출산 지역으로 구분된 곳이 없이 대부분 초고령사회 또는 초저출산·초고령사회 지역으로 분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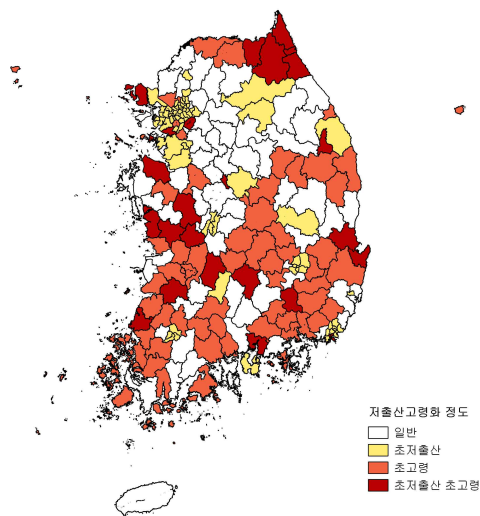
〈표 4-1〉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기초자치단체별 지역분류

	광역시도	구	시	군	전체
일반	2(세종, 제주)	8	41	14	65
초저출산	0	57	20	0	77
초고령	0	0	12	48	60
초저출산·초고령	0	4	2	20	26
전체	2	69	75	82	228

주: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각각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분석에 포함됨

○ 이 같은 분류는 아래의 지도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됨. 우선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대도시의 조밀한 지역 대부분이 노란색의 초저출산 지역으로 분류됨. 드물게 일부 농어촌지역에서도 노란색의 초저출산 지역이 확인됨. 울산광역시의 경우 중구가 초저출산 지역으로 분류되고, 나머지 지역들은 모두 다른 곳에 비해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하지 않은 일반지역으로 분류됨. 초고령 지역과 초저출산·초고령 지역은 주로 농어촌 지역에서 확인되며, 주요 산맥과 일부 해안을 따라 나타나고 있음

[그림 4-1]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기초자치단체별 지역분류



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228개 분석대상 분류, 본문 참고
 자료: 주민등록인구통계 2015, 인구동태통계 2011~2015

3. 인구이동에 따른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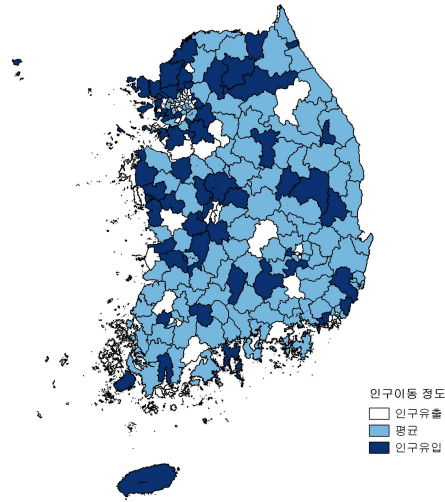
-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인구이동의 상대적 정도에 따라 구분하였고 이를 아래의 표와 그림으로 제시함.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 2011~2015년 사이의 평균순이동을 하위 25%, 사분범위, 상위 25%를 각각 인구유출 지역, 인구이동 평균, 인구유입 지역으로 구분하였음
- 인구이동에 의한 분류 결과, 인구이동 역시 지역의 도시화와 어느 정도 연관성을 맺는 것으로 나타남. 우리 사회는 과거 산업화·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던 시절 농촌의 많은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는 경험을 한 바 있음. 하지만 이 연구의 분석기간이 2011~2015년 사이에는 농촌-도시 인구이동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도시 지역에서 교외 인근 지역이나 지방의 혁신도시·신도시 지역으로 인구가 좀 더 유출되는 것이 확인됨. 대도시 지역에 해당하는 69개 ‘구’ 지역 중 무려 40개 지역이 인구유출 지역으로 분류됨.
 - 대도시 지역 중 상대적으로 유입된 지역은 인천의 4개 지역(중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과 부산 강서구, 대구 중구, 광주 광산구, 대전 유성구로 제한됨. 대도시 도심지역의 높은 주거비용뿐만 아니라, 최근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신도시 건설,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 등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여겨짐.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난 5년 간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으며, 행정기능 이전(세종)과 제주 지역에 대한 관심의 확대에 의한 것으로 여겨짐

〈표 4-2〉 상대적 인구이동에 따른 기초자치단체별 지역분류

	광역시도	구	시	군	전체
인구유출	0	40	12	5	57
인구이동 평균	0	21	40	53	114
인구유입	2(세종, 제주)	8	23	24	57
전체	2	69	75	82	228

주: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각각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분석에 포함됨

[그림 4-2] 상대적 인구이동에 따른 기초자치단체별 지역분류



주: 2011~2015년 순이동률 평균에 따른 228개 분석대상 분류, 본문 참고
자료: 인구이동통계 2011~2015

- 지방의 ‘시’와 ‘군’ 지역은 대부분 인구이동이 평균적인 수준이거나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으로 분류됨. 하지만 ‘시’와 ‘군’ 지역 중 일부 인구유출 지역으로 분류된 곳이 존재함. ‘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인구유출 정도가 높은 곳으로 나타난 12지역은 주로 경기도(안양시, 부천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시흥시, 군포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강원도 태백시, 충청남도 공주시와 계룡시, 전라남도의 목포시, 경상남도의 창원시를 포함하고 있음. 아울러 상대적으로 인구가 유출된 ‘군’ 지역은 전라남도의 보성군, 화순군, 강진군, 영암군 지역과 경상북도의 울릉군으로 남해안의 농어촌지역과 도서지역을 포함함
- 인구이동의 경우 지리적 분포의 특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음. 인구유출 지역은 주로 대도시 또는 지방의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대도시의 경우 그 면적이 작아 지도상에서 시각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움.
 - 인구유입 지역은 그 분포가 특정 유형을 따른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자세히 살펴보면, 주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주변, 지방혁신도시 지역, 귀농·귀촌 또는 여가를 목적으로 선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4. 기초자치단체별 인구특성에 따른 지역유형화

○ 저출산·고령화와 인구이동 정도에 따른 분류를 함께 조합할 경우 아래와 같이 총 12개의 기초자치단체 유형을 생성할 수 있음.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유형화는 우리 사회의 기초자치단체별 인구특성을 파악하고, 그것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기초자치단체별로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은 적합한지, 그리고 개선점이나 대안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임.

- 유형화 자체는 분석을 위해 고안된 이념형으로 사용되며, 특정 지역을 고려하거나 염두에 두지 않았음. 다만 이 유형화는 분석목적과 자료, 그리고 분석시기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표 4-3〉 기초자치단체 인구특성별 유형화 리스트

	일반	초저출산 사회	초고령 사회	초저출산·초고령 사회
인구 유출	A 강원 태백시, 경기 군포시, 경기 시흥시, 경남 통합 창원시, 전남 목포시, 충남 계룡시	D 경기 과천시, 경기 구리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광주 동구, 광주 서구, 대구 남구, 대구 북구, 대구 서구, 대전 대덕구, 대전 동구, 대전 서구, 대전 중구, 부산 남구, 부산 동래구, 부산 부산진구, 부산 사상구, 부산 사하구, 서울 강동구, 서울 강북구, 서울 관악구, 서울 광진구, 서울 구로구, 서울 금천구, 서울 노원구, 서울 도봉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성동구, 서울 성북구, 서울 송파구, 서울 양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용산구, 서울 중구, 서울 중랑구, 인천 계양구, 인천 남구, 인천 동구, 인천 부평구	G 전남 강진군, 전남 보성군, 전남 영암군, 전남 화순군	J 경북 울릉군, 부산 동구, 부산 서구, 부산 영도구, 부산 중구, 충남 공주시
평균	B 강원 동해시, 강원 속초시, 강원 인제군, 강원 철원군, 경기 동두천시, 경기 안성	E 강원 강릉시, 강원 춘천시, 경기 광명시, 경기 성남시, 경기 의정부시, 경남 진주	H 강원 고성군, 강원 삼척시, 강원 홍천군, 경기 연천군, 경남 거창군, 경남 고성군	K 강원 양양군, 강원 영월군, 강원 정선군, 강원 평창군, 경남 남해군, 경남 밀양시,

[illegible]

○ 전체 12가지 유형에 속한 기초자치단체들을 분류한 후 각 유형별 심층분석 사례지역을 한 곳씩 선정함(〈표 4-4〉 참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분류와 상대적 인구이동에 따른 분류를 조합하였기 때문에 각 분류별 지역의 분포는 앞서 살펴본 것과 동일한

- 다만 인구유출이 많은 57개 지역 중 41개 지역이 초저출산 사회로 분류된 반면 인구유입이 많은 57개 지역 중 33개 지역이 일반 지역으로 분류됨
- 대도시의 주요 지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초저출산과 인구유출을 지적하고 있으며, 반대로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은 초저출산 또는 초고령 문제로 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함
- 각 유형별 심층분석 사례지역의 간략한 선정이유와 해당 지역의 인구특성 등은 다음 절에서 설명함

〈표 4-4〉 사회적·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12개 지역 유형 선정

	일반	초저출산 사회	초고령 사회	초저출산·초고령 사회
인구유출	A - 6개 지역 경남 창원시	D - 41개 지역 서울 종로구	G - 4개 지역 전남 보성군	J - 6개 지역 부산 동구
평균	B - 25개 지역 경기 이천시	E - 27개 지역 강원 강릉시	H - 48개 지역 전남 함평군	K - 14개 지역 충북 단양군
인구유입	C - 33개 지역 부산 강서구	F - 9개 지역 인천 연수구	I - 9개 지역 전남 나주시	L - 6개 지역 충북 괴산군

주: 유형분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가변적일 수 있음; 노년인구비는 2015년 자료를 사용한 반면, 합계출산율과 특히 순이동률은 연간 변동폭이 큰 관계로 5년 평균값을 사용하였음

제2절 지역 유형별 인구 특성 분석

1. 저출산·고령화 일반지역

- 이 절에서는 앞서 분류한 12개 유형별로 한 지역씩 심층분석 사례지역을 선정하고, 각 지역의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함
 - 이 절에서 사용된 자료와 유의사항에 관해 간략히 설명하면, 주요 통계자료는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 kosis.kr)을 활용하였으며, 분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2015년으로 설정하였고, 시군구 행정구역 역시 2015년 말을 기준으로 정리함
 - 이 연구의 주요 작업 당시 2016년 자료의 일부 지표만 확인이 가능했던 반

면, 2015년 자료의 경우 거의 모든 지표들이 공개된 상태였음. 따라서 2015년 통계를 기준으로 분석하며 일부 2016년 자료가 가용한 경우 함께 제시함

- 앞서 언급한대로 연간 변화가 심한 지표의 경우 2011~2015년 평균치를 사용하였으며, 인구통계의 추세를 확인할 경우 2005년 이후를 분석시기로 삼았음. 자료원에 따라 가용한 시기가 다를 경우 분석에 포함되는 기간이 좁아지기도 함. 예컨대, 국가통계포털에서 제시하는 시군구 행정구역별 외국인주민 현황, 다문화 출생·혼인·이혼, 연령별 주민등록인구 등은 2008년 이후부터 공개되고 있음

- 먼저 통계청 자료의 경우, 인구동태진수 및 동태율은 인구동향조사, 국내 이동자수와 이동률은 국내인구이동통계를 활용하였고, 각 기초자치단체별 인구와 세대수는 매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집계되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을 활용함. 외국인주민 현황의 경우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외국인주민 현황을 참고함
-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자료원과 세부항목에 따라 통계의 분석시기가 조금씩 상이하다는 점임. 예컨대 인구동태통계 중 혼인의 경우 신고기준으로 집계되는 반면, 다문화 혼인은 부부의 국내 주소지 또는 남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집계되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아울러 시군구 인구이동통계에서 총전입률과 총전출률은 2016년까지 공개되어 있지만, 연령별 총전입률 및 총전출률 등 세부자료는 2015년까지만 가용하였음
- 한편 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2010년 7월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의 통합으로 인해 자료에 따라 이내 2010~2012년 이후부터 통계자료가 공개됨. 따라서 다른 지역에 비해 분석기간이 짧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현황과 외국인주민현황 자료에 한해 통합 이전 세 지역의 단순합계를 제시함

가. 저출산·고령화 인구유출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 저출산·고령화 정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하지 않은 지역들 중 지난 5년간

인구 순이동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을 묶어 저출산·고령화 인구유출 지역으로 분류하였음. 해당 지역 모두 지방 중소도시로서 폐광지역, 산업중심지역, 항구도시 또는 국방 중심지 등 각 지역의 특성이 확연히 드러나는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음. 지방 고유의 특성이 다른 만큼 인구유출의 형태와 원인이 달라 유사점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일부 지역의 특정 시기를 제외하고 최근 인구가 꾸준히 유출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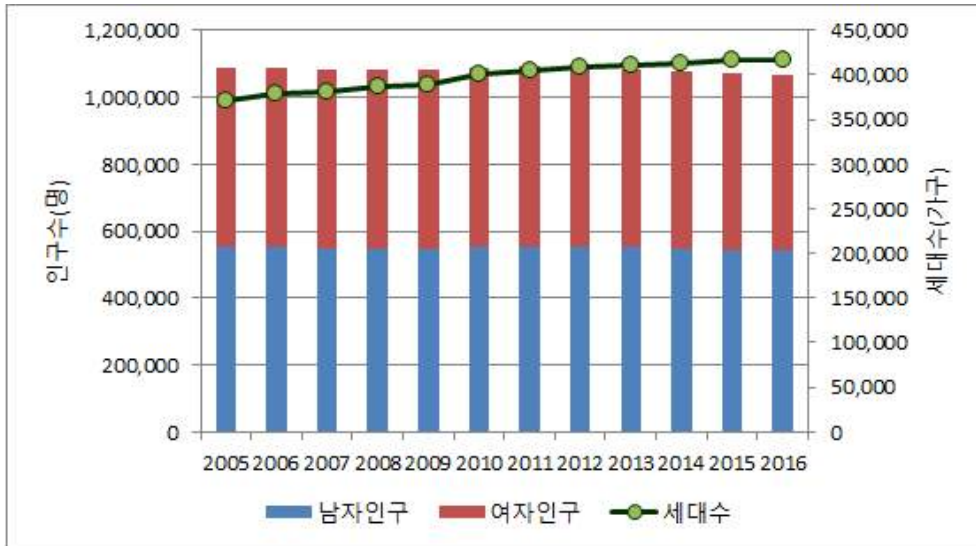
- 해당지역(6곳): 강원 태백시, 경기 군포시, 경기 시흥시, 경남 창원시, 전남 목포시, 충남 계룡시

- 경상남도 (통합)창원시는 해당 유형의 지역 중에서 상대적인 인구 유출 규모가 작지 않은 편이며, 지난 2010년 7월 마산·창원·진해 통합으로 인구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여 심층평가 사례지역으로 선정함. 다만 2010년 통합 창원시 출범으로 인해 주요 통계자료가 2010년, 인구동태통계의 경우 2012년부터 제공됨. 따라서 창원시의 경우 심층분석에 포함된 다른 지역과 다르게 주로 과거 5년간의 통계자료를 살펴봄

1) 인구, 가구, 인구동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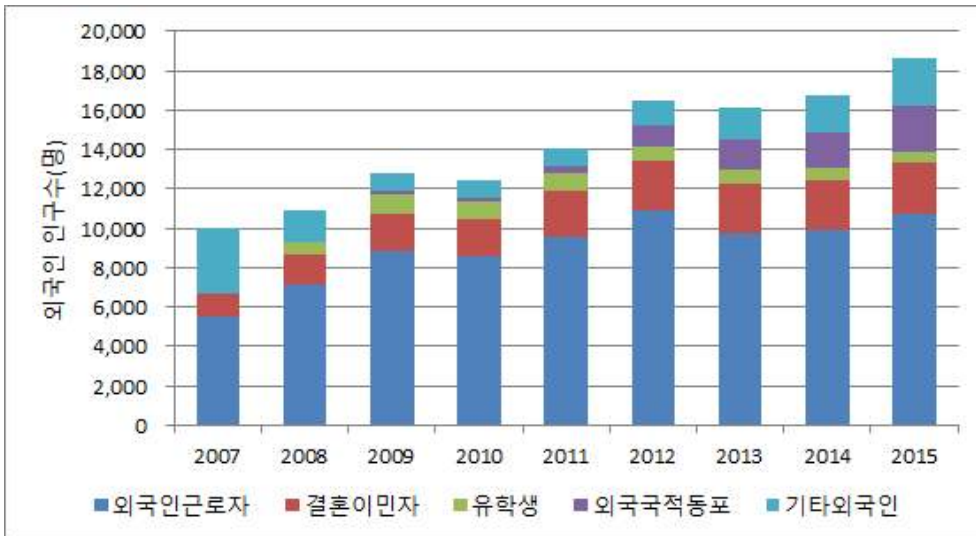
- 창원시의 주민등록인구는 통합 이전 마산·창원·진해 세 지역의 주민등록인구를 단순 합산하여 비교할 경우, 2005년 주민등록인구는 총 1,086,530명으로 확인됨. 특히 2011년에는 1,091,881명으로 가장 많은 인구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감소하여 2016년 1,063,907명을 기록하고 있음. 통합 이전 2005년과 비교하면 2016년까지 22,623명의 인구가 감소함.
- 주민등록인구가 감소세를 기록한 것에 반해, 주민등록세대수는 2005년 마산·창원·진해 합산하여 총 371,546세대에서 2016년 417,762세대로 무려 46,216세대가 증가함. 전반적인 인구감소 추세에도 세대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세대 당 평균 구성원 감소와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짐

[그림 4-3] 통합 창원시의 인구 및 세대수 변화, 2005~2016



주: 2010년 이전 자료는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 세 지역의 주민등록인구 합계
 자료: 주민등록인구(통계청 2017)

[그림 4-4] 통합 창원시 외국인주민 변화, 2007-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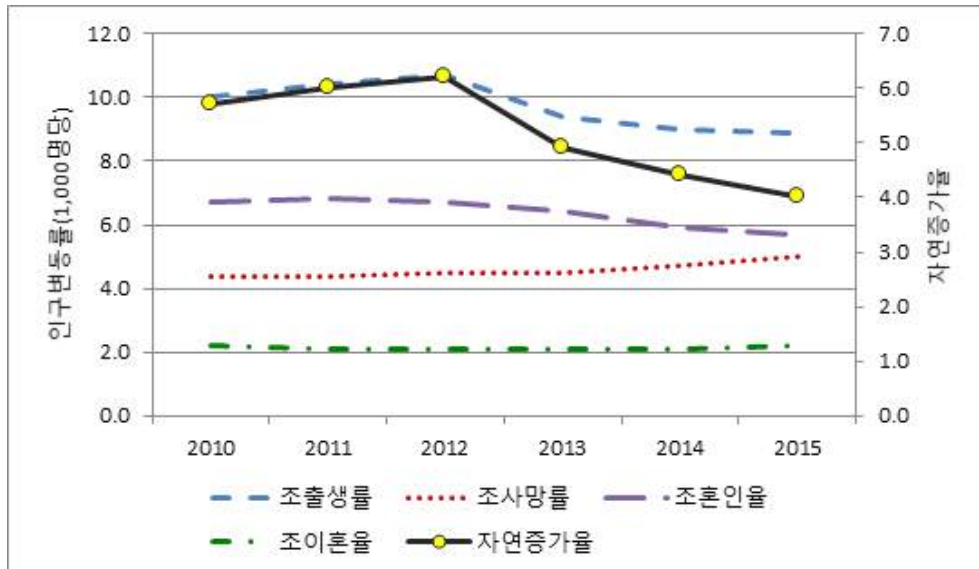


주: 2010년 창원시 통합 이전의 외국인주민은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의 합을 활용함
 각 연말 기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주민
 자료: 시군구별 외국인주민 현황(행정자치부 2017)

○ 주민등록인구가 백만 명이 넘는 도시답게 창원시 거주 외국인 주민들이 많은 편이며 그 숫자 역시 해마다 증가함

- 통합 창원시 출범 전 2007년 마산·창원·진해에 거주하는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주민은 9,963명임. 그 중 외국인근로자가 절반을 넘는 5,501명(55.2%), 결혼이민자가 1,217명(12.2%), 그리고 기타외국인이 3,245명(32.6%)이었음
- 외국인 주민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였고, 특히 창원시 통합 이후 더 증가하여 2015년말 현재 총 18,611명이 거주함. 유학생의 경우 창원시 통합 이전에 비해 줄어들어 2015년 516명에 그치고 있음
- 반면,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는 2007년에 비해 약 두 배 이상 증가하여 각각 10,771명과 2,600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외국국적동포 역시 크게 증가하여 2015년 2,309명을 기록하고 있는 등 창원시의 외국인 주민 증가가 두드러짐

[그림 4-5] 통합 창원시 주요 인구동태 변화, 2012~2015



주: 2010년 통합 창원시 출범 후, 주요 인구동태통계가 2012년부터 제공되고 있음
 자료: 시군구 동태통계건수 및 동태율(통계청 2017)

-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들을 살펴볼 경우 2015년 말 기준 혼인귀화자는 1,538명, 기타사유는 306명을 기록함. 위에서 이미 언급한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를 함께 고려한다면 총 4,444명의 혼인 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창원시에 거주하며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음
 - 특히, 외국인 주민자녀의 경우 총 3,654명(외국인 부모 153명, 외국인-한국인 부모 3,337명, 한국인 부모 164명)으로 창원시 관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정 규모가 작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통합 창원시 출범 후 확인이 가능한 2012년 이후 인구동태통계를 살펴보면, 조출생률은 2010년 인구 천 명당 10.0명에서 2015년 8.9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조사망률은 같은 기간 4.4명에서 5.0명으로 조금 상승함
 - 결과적으로 창원시의 자연증가율은 2010년 인구 천 명당 5.7명에서 2015년 4.0명으로 감소하였고, 전국의 3.2명 보다 조금 높았음. 2015년 조혼인율과 조이혼율은 각각 인구 천 명당 5.7명과 2.2명으로 전국의 5.9명과 2.1명과 유사한 수준임

2) 출산 및 혼인 동향

- 창원시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 1.323에서 2012년 1.462로 조금 상승한 적도 있었지만, 2015년 현재 1.345를 기록하며 큰 변동이 없이 초저출산의 기운이 되는 1.3 근처에 머물러 있음
 - 모의 연령별 출산율은 2015년 현재 30~34세에서 여성 천 명당 129.6명으로 가장 높고, 25~29세 74.3명, 35~39세 45.0명 순으로 이어짐. 여성의 주요 출산연령대는 통합 창원시 출범 이전부터 이미 30~34세로 전환되어 있었고, 30~34세 연령별 출산율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임. 반면, 25~29세 출산율은 하락하는 반면, 35~39세 출산율은 조금씩 상승함. 합계출산율의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출산연령의 고령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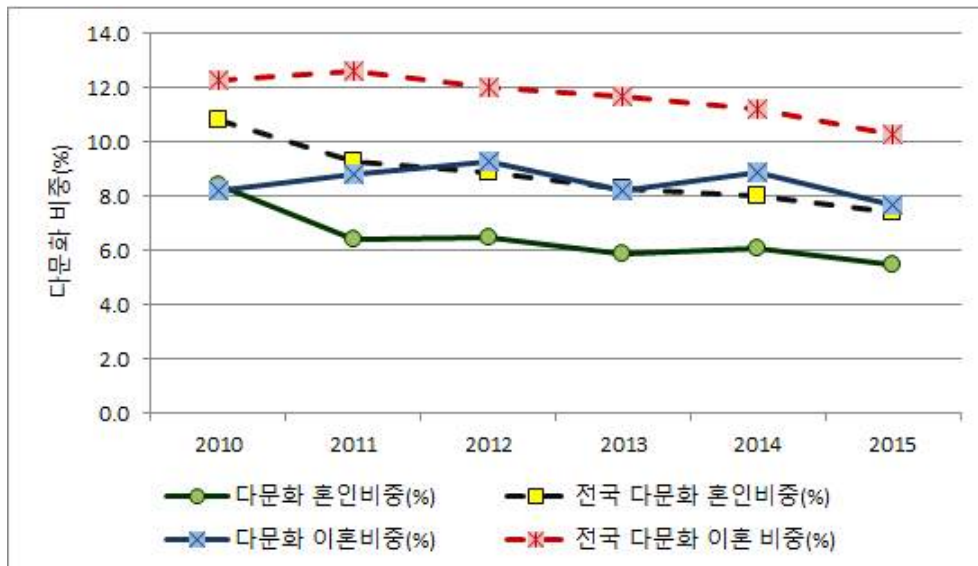
〈표 4-5〉 경상남도 창원시의 합계출산율 및 연령별 출산율(천 명당) 변화

연도	합계출산율	연령별 출산율(천 명당)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2010	1.323	1.3	16.7	96.9	121.8	28.6	3.1	0.2
2011	1.384	1.7	16.3	99.8	127.2	32.7	3.8	0.2
2012	1.462	1.7	15.5	98.4	140.0	36.2	3.6	0.1
2013	1.326	1.6	13.6	82.6	126.8	36.4	4.4	0.1
2014	1.314	1.1	13.1	75.9	126.3	40.7	4.3	0.1
2015	1.345	1.5	12.7	74.3	129.6	45.0	4.7	0.1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 창원시에서 태어나는 총출생아수는 2010년 10,865명에서 2012년 11,627명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한 후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2015년 9,526명을 기록하고 있음. 다문화 출생아수 역시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382명으로 전체 총출생아수 중 4.0%를 차지하여, 전국 다문화 출생비중 4.5% 보다 조금 낮은 수준임

[그림 4-6] 경상남도 창원시 다문화 혼인 및 이혼건수와 다문화 혼인비중, 2010~2015



자료: 시군구 동태통계건수 및 동태율(통계청 2017)

- 혼인건수를 살펴보면, 통합 창원시 출범 후 2011년 7,320건으로 정점을 기록하였고 매년 조금씩 줄어 2016년 5,835건까지 감소함. 2010년 혼인건수에 비해 무려 19.8% 감소한 수준임
 - 평균초혼연령의 경우 남성은 2010년 31.4세에서 2016년 32.4세로, 여성은 같은 기간 29.0세에서 30.0세로 각각 1.0세 상승함
- 다문화 혼인의 경우 2010년 615건으로 창원시 전체 혼인 중 8.4%를 기록한 후 2015년 338건, 5.5%로 감소함. 같은 기간 다문화 이혼건수는 2010년 197건 8.2%에서 2015년 180건 7.7%로 소폭 감소함. 창원시의 다문화 혼인·이혼 비중은 전국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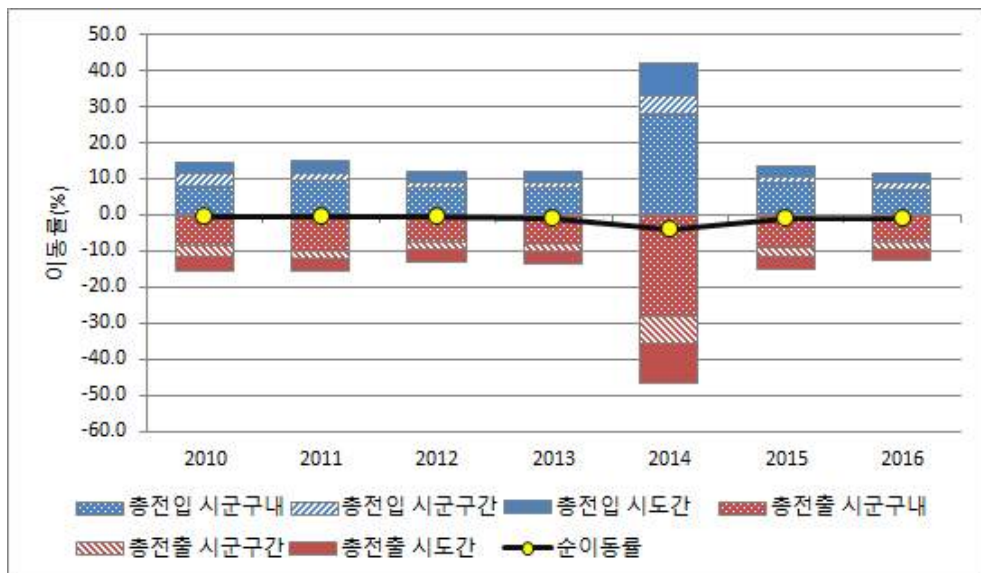
3) 고령화 및 사망력

-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2010년 연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8.1%였으나, 2016년 11.0%로 상승함. 이는 전국 13.5%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음. 지역사회 인구의 연령구조가 상대적으로 젊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 1명 당 65세 이상 고령인구 역시 0.8명 정도로 낮은 고령화지수를 보임
- 창원시는 인구 백만 명이 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사망력 수준은 전국에 비해 높은 수준임. 2015년 연령표준화 사망률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인구 십만 명당 544.9명으로 전국의 480.6명 보다 64.3명 이상 매우 높은 수준이며, 여성의 경우 273.1명으로 전국의 244.4명 보다 역시 높은 수준임
 - 남녀 모두 순환계통 질환,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사망률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노인 관련 보건·의료시설이 부족하거나 또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 볼 필요가 있음

4) 인구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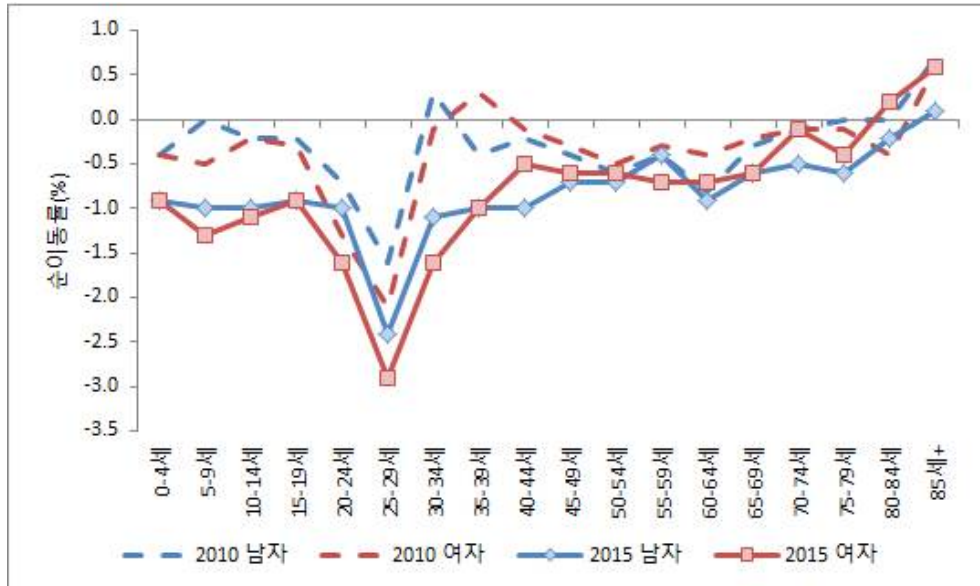
- 창원시는 인구의 유출이 유입 보다 많은 지역임. 특히 2014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총전입률과 총전출률이 모두 크게 증가하여 각각 42.3%와 46.3%를 기록함. 2016년 총전입률과 총전출률은 각각 11.6%와 12.5%로 -0.9%의 인구 순이동률을 기록함. 매년 전입 인구의 55.0~66.2% 정도가 창원시 관내에서 이동하였으며, 무엇보다 2014년의 유례없이 증가한 인구이동의 원인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연령별 순이동률의 경우, 2010년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유출이 유입 보다 많은 순유출을 기록하였음. 이 같은 연령별 유형은 2015년에도 지속되었으며, 오히려 인구 순유출 정도는 더 심화됨. 특히 25~29세의 인구 순유출은 더욱 두드러짐. 진학·취업·혼인·출산 등 주요 생애과정이 집중되는 20대 및 30대 청년층의 인구 순유출은 지역사회 청년층의 주거 및 일자리 문제를 암시하며, 적절한 관심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그림 4-7] 통합 창원시 시군구 및 시도간 총전입률, 총전출률, 순이동률 변화, 2010~2016



자료: 국내이동통계(통계청 2017)

[그림 4-8] 통합 창원시 성 및 연령별 순이동률 변화, 201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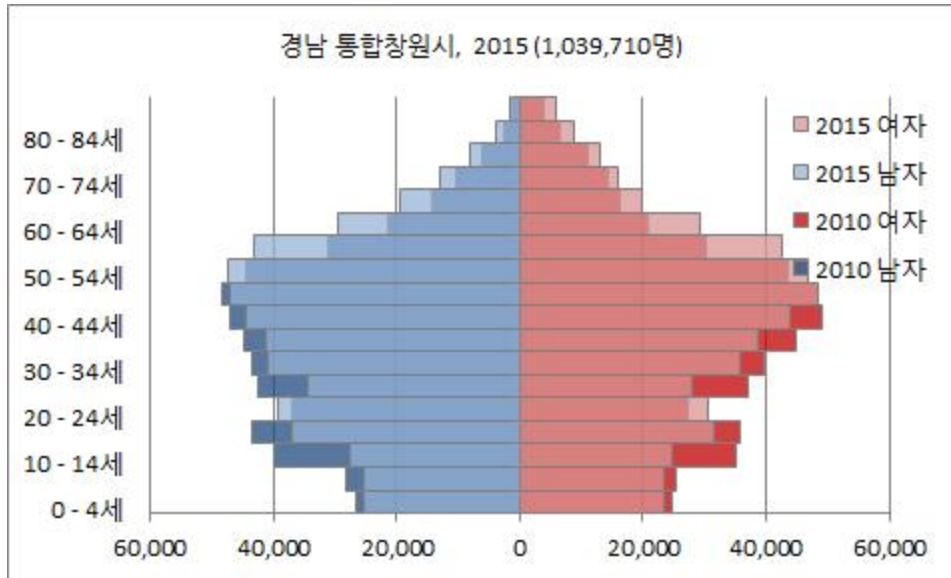
자료: 국내이동통계(통계청 2017)

5) 인구변동과 인구구조

○ 경상남도 창원시는 혼인과 출산의 감소, 그리고 인구의 순유출로 인해 인구구조가 점차 고령화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다른 지역에 비해 그 추세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이라고 할 수 있음.

- 지속적인 저출산과 인구고령화로 하단이 얇고 상단이 두터워지는 오각형 형태 인구피라미드를 갖게 만들어짐
- 창원시의 2010년과 2015년 인구피라미드를 비교할 경우, 30~50대 청장년층의 인구감소와 그에 수반한 자녀 세대, 즉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 인구감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음
- 현 추세의 저출산과 인구 순유출이 향후 지속된다면 창원시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추세 역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4-9] 경상남도 창원시의 인구피라미드 변화, 2010~2015



자료: 주민등록인구(통계청 2017)

나. 저출산·고령화 일반 - 인구이동 평균지역: 경기도 이천시

-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하지 않은 지역들 중 지난 5년간 인구이동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곳들은 주로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에 집중됨. 대도시 지역 중에서는 예외적으로 울산 남구, 동구, 북구가 이 유형에 포함되어 있음
- 25개 지역: 강원 동해시, 강원 속초시, 강원 인제군, 강원 철원군, 경기 동두천시, 경기 안성시, 경기 양주시, 경기 여주시, 경기 이천시, 경기 포천시, 경남 사천시, 경남 통영시, 경북 구미시, 경북 칠곡군, 경북 포항시, 울산 남구, 울산 동구, 울산 북구, 전남 광양시, 전남 순천시, 전남 여주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충북 제천시, 충북 청주시
- 경기도 이천시는 일부시기를 제외하고 인구 순이동률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서울 인근의 수도권 지역임에도 합계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저출산·고령화 일반지역 중 인구이동이 평균 수준인 곳의 심층평가 사례지역으로 선정함

1) 인구, 가구, 인구동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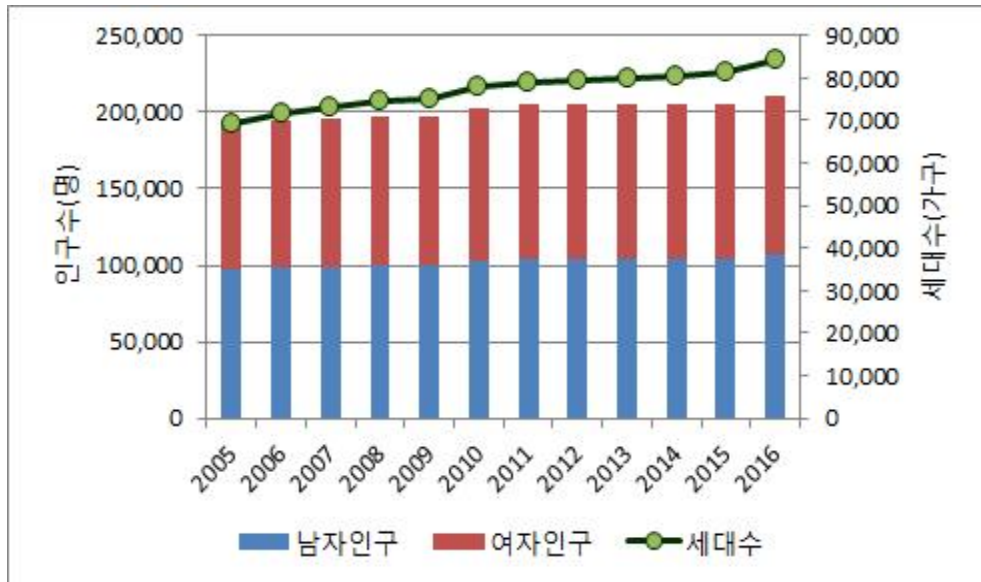
○ 경기도 이천시의 주민등록인구는 지난 2005년 192,271명에서 2016년 210,359명으로 11년 간 18,088명 증가함

- 2013년까지 느리지만 조금씩 인구성장을 이어 왔으며, 2015년과 2016년 사이 1년간 무려 5,424명이 증가한 것이 인상적임
- 완만한 인구성장 속도에 발맞추어 주민등록세대수 역시 2005년 69,206세대에서 2016년 84,339세대로 증가하였음
- 역시 2016년 한해 증가한 주민등록세대수가 무려 3,111세대를 기록함. 2016년 이천시 지역에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 등 강한 인구유입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짐

○ 경기도 이천시의 외국인주민 인구는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함. 지난 2007년 2,554명이었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주민은 2015년 6,558명까지 증가하였으며, 그 중 4,422명 약 2/3(67.4%)가 외국인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이천시의 결혼이민자는 2015년 670명으로 확인되며, 한국 국적을 취득한 혼인귀화자 444명을 포함할 경우, 무려 1,114명의 혼인이주민이 관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됨
- 2015년 현재 부모 한 쪽 또는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자녀들의 수는 1,113명(외국인-한국인부모 1,086명, 외국인 부모 27명)이었으며, 기타 귀화자, 한국인 부모, 그리고 그 부양가족을 모두 고려한다면, 경기도 이천시 관내 다문화 인구는 약 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상과 다문화 인구의 비중을 고려할 때, 외국인 및 다문화 관련 공공시설과 복지서비스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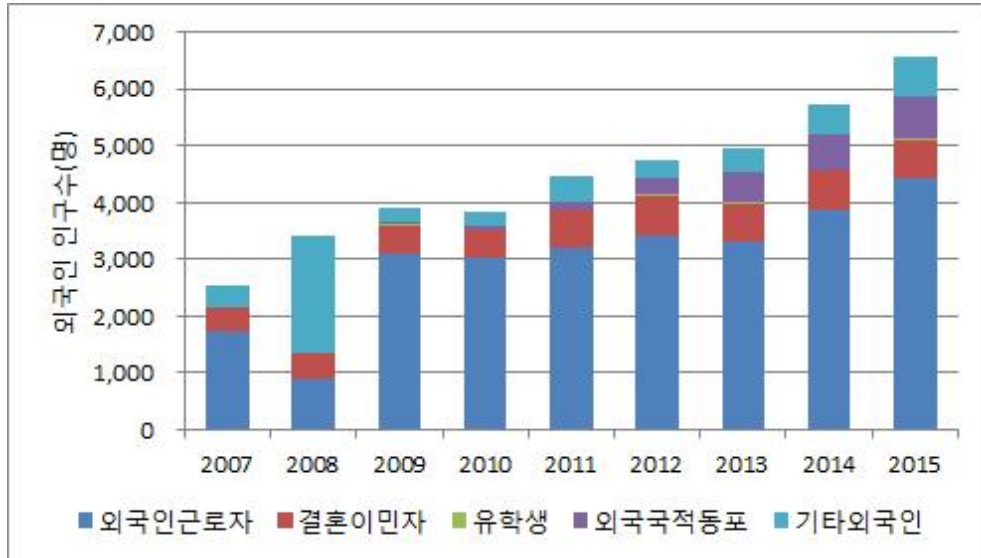
[그림 4-10] 경기 이천시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수 변화, 2005~2016



자료: 주민등록인구통계(통계청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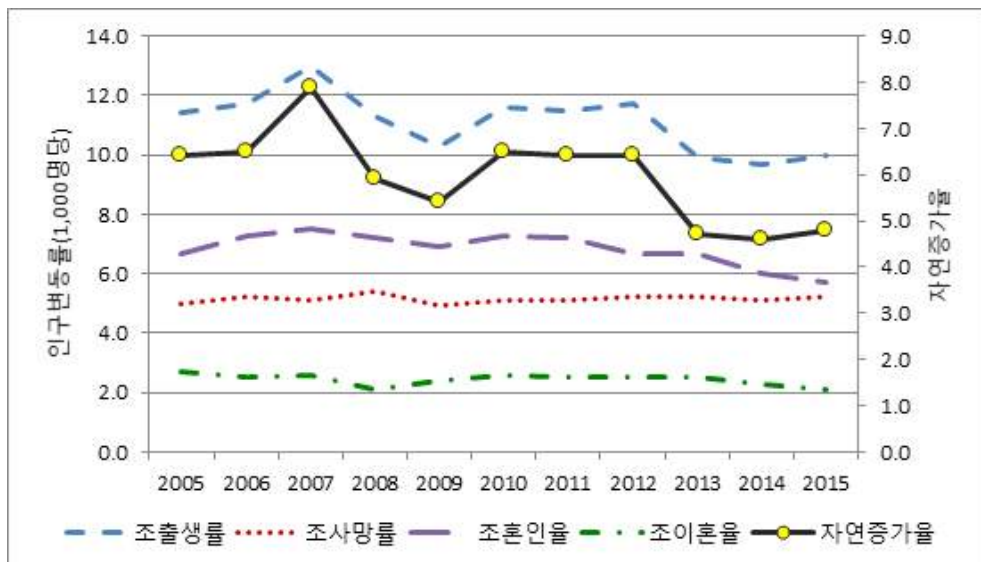
- 경기도 이천시의 인구동태율은 감소세에 있는 조출생률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조사망률이 대비됨
 - 조출생률은 2005년 인구 천 명당 11.4에서 2015년 10.0건으로 조금 감소한 반면, 조사망률은 2005년 인구 천 명당 5.0건에서 2015년 5.2건으로 큰 변화가 없음
 - 이천시의 조출생률은 2015년 전국의 인구 천 명당 8.6건 보다 높은 수준임. 2015년 자연증가율 역시 인구 천 명당 4.8명으로 전국의 3.2명 보다 조금 높은 수준임
 - 조혼인율과 조이혼율은 모두 완만한 감소세에 있지만 전국 평균적인 수준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음

[그림 4-11] 경기도 이천시 외국인주민 인구변화, 2007-2015



자료: 외국인주민 현황(행정자치부 2017)

[그림 4-12] 경기도 이천시 주요 인구동태 변화, 2005~2015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2) 출산 및 혼인 동향

○ 경기도 이천시의 출산율은 상대적으로 연간 변화폭이 큰 편임. 합계출산율의 경우 지난 2005년 1.327에서 2007년 1.551까지 상승하였지만, 곧 2009년에 1.286까지 하락함.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12년 1.562로 정점을 기록하였으나 2015년 현재 1.470을 기록함. 등락이 큰 편이었음에도, 합계출산율 1.3 이하로 하락한 적은 2009년(1.286)이 유일함

- 연령별 출산율의 경우 여성의 만 30세 이전 5세 간격 연령별 출산율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30세 이후의 연령별 출산율은 뚜렷한 상승세를 보임. 예컨대 주요 출산시기인 25~29세의 경우 2005년 여성 천 명당 132.9명에서 2015년 106.6명으로 감소한 반면, 30~34세의 경우 같은 기간 74.4명에서 119.3명으로 증가함
- 다른 지역처럼 여성 출산연령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진행 상황은 상대적으로 느린 것으로 여겨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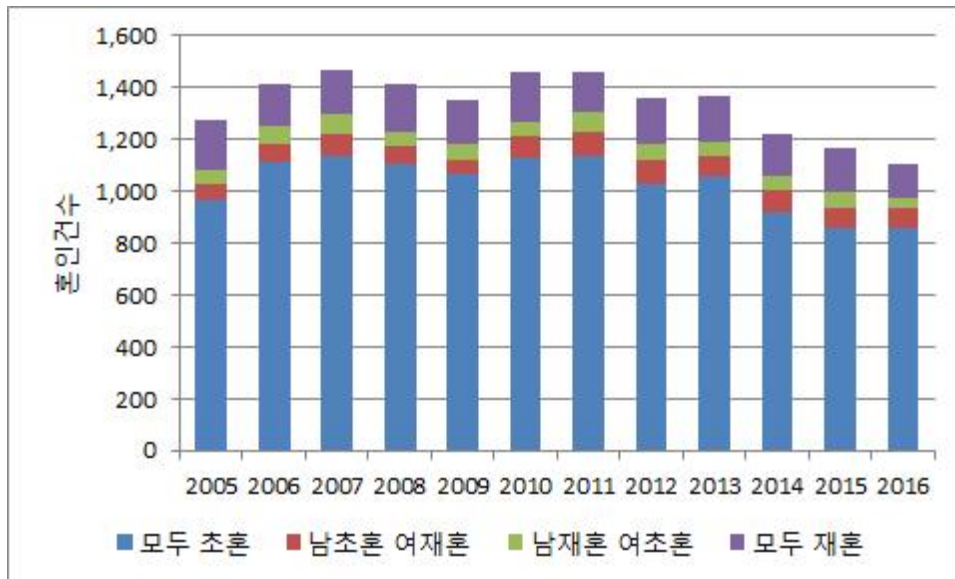
〈표 4-6〉 경기도 이천시 합계출산율 및 연령별 출산율(천 명당) 변화

연도	합계출산율	연령별 출산율(천 명당)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2005	1.327	3.2	33.9	132.9	74.4	18.9	3.4	0.6
2006	1.389	2.3	36.6	130.0	84.4	21.2	3.5	0.6
2007	1.551	2.8	31.0	148.6	99.4	26.6	2.7	0.1
2008	1.388	2.5	30.1	126.9	94.3	21.2	3.0	0.1
2009	1.286	1.4	29.1	108.2	90.8	24.7	3.1	0.5
2010	1.483	2.4	37.8	112.6	114.1	25.8	5.2	0.5
2011	1.503	3.1	37.2	114.5	111.6	30.0	5.2	0.1
2012	1.562	2.5	34.4	118.5	113.7	39.3	4.7	0.0
2013	1.367	2.5	28.1	100.5	106.0	31.0	4.5	0.1
2014	1.387	2.0	22.9	101.3	113.6	34.2	2.7	0.1
2015	1.470	2.0	20.4	106.6	119.3	40.5	4.1	0.2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 총출생아수는 관찰기간 중 2007년 한 때 최고 2,530명을 기록하였으나 점차 감소하여 2015년 2,036명이 신고됨. 출산순위별 출생아 분포의 경우 2015년 현재 첫째아 비중이 48.7%로 전국 52.1%에 비해 조금 낮으며, 둘째아 및 셋째아 이상 출생아 비중이 높은 편임
- 경기도 이천시의 총출생아수 중 다문화 출생건수는 2015년 76건(3.7%)으로 2012년 120명(5.1%)에 비해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전국에 비해 이천시의 다문화 출생아 비중 감소가 두드러진 편임

[그림 4-13] 경기도 이천시 혼인상태별 혼인건수, 2005~2016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 혼인의 경우 2011년(1,462건) 이후 감소세에 접어들어 2016년 1,108건을 기록함. 감소세로 전환된 2011년 이후 혼인유형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초혼인 사례가 2011년 1,139건에서 2016년 860건으로 빠르게 감소함. 남녀 한쪽 또는 남녀 모두 재혼인 유형 모두 감소하였으나, 남성이 재혼인 경우 그 감소폭이 더 컸던 것으로 확인됨
- 평균초혼연령의 경우 남성은 2005년 29.9세에서 31.9세로 만2세 증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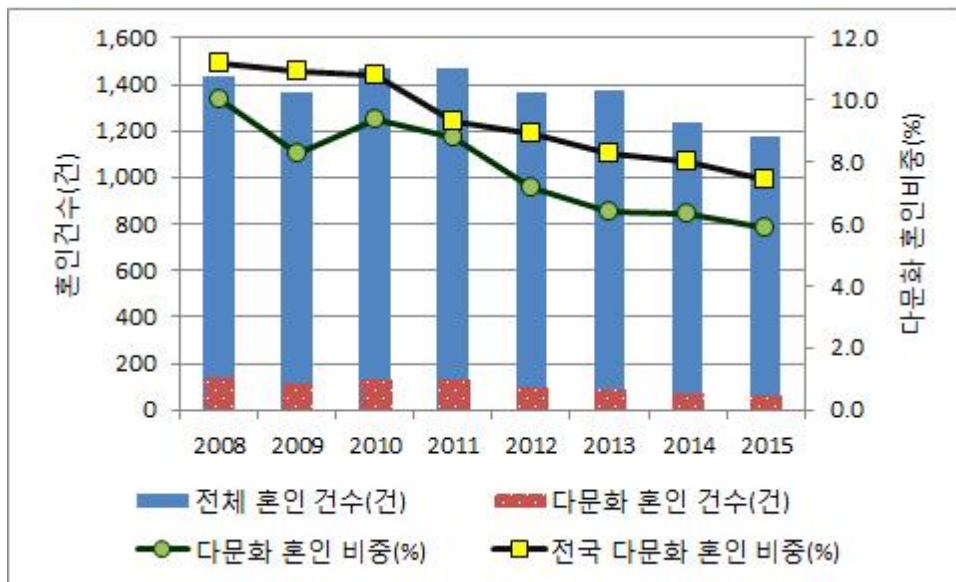
였고, 여성은 같은 기간 26.9세에서 29.2세로 약 2.3세 증가하였음

- 전체적인 혼인건수는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천시의 남녀 평균초혼연령은 전국의 32.8세와 30.1세 (2016년) 보다 각각 약 0.9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음
- 경기도 이천시의 경우 혼인 및 출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혼시기가 빠르고 출산력도 조금 높음

○ 경기도 이천시의 다문화 혼인 비중은 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 다문화 혼인은 지난 2008년 143건으로 전체 혼인 중 10.0%에서 2015년 69건 5.9%로 빠르게 감소함. 하지만 2015년 전국 다문화 혼인 비중 7.4% 보다 낮은 수준이며 전반적인 감소세 역시 일치하고 있음

- 다문화 이혼 역시 2015년 32건으로 전체 이혼 중 7.5%를 기록하여 전국의 다문화 이혼 비중 10.3%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함

[그림 4-14] 경기도 이천시 다문화 혼인건수 및 전체 혼인 중 비중 변화, 2008-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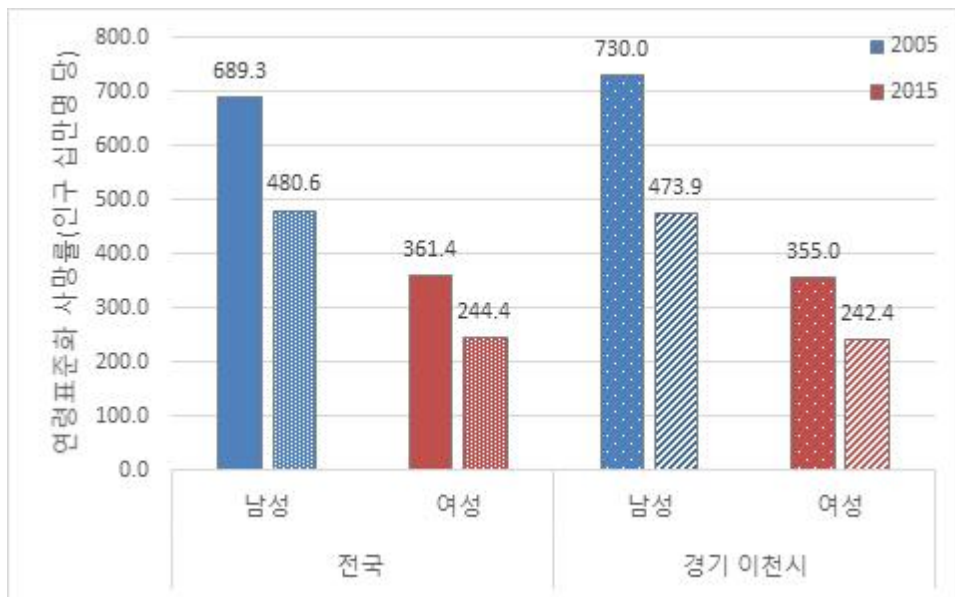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3) 고령화 및 사망력

- 도농복합지역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이천시의 고령화 수준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님. 2016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2.1%로 전국의 13.5% 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함. 고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100) 역시 2008년 49.5에서 2016년 77.1로 서서히 증가하고 있지만, 2016년 전국의 101.1 보다 낮은 수준임. 즉, 2016년 현재 유소년인구 10명당 노인 인구가 7.7명 정도로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경기도 이천시의 사망력 수준은 성별에 관계없이 전국의 사망력 수준과 매우 유사함. 2015년 연령표준화 사망률의 경우 경기도 이천시 남성이 인구 십만 명당 사망자수가 473.9명으로 전국 남성의 480.6명과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여성 역시 242.4명으로 전국의 244.4명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지역 의료시설의 개선 및 향상과 인근 대도시 의료시설과의 접근성 등으로 인해 전국 평균 수준 이상의 보건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그림 4-15] 경기도 이천시의 연령표준화 사망률, 2005~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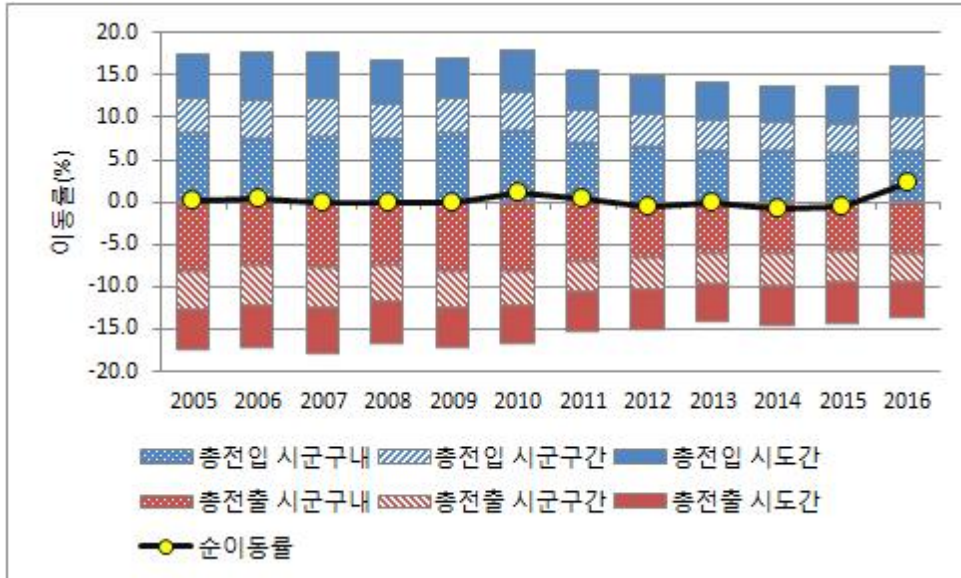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4) 인구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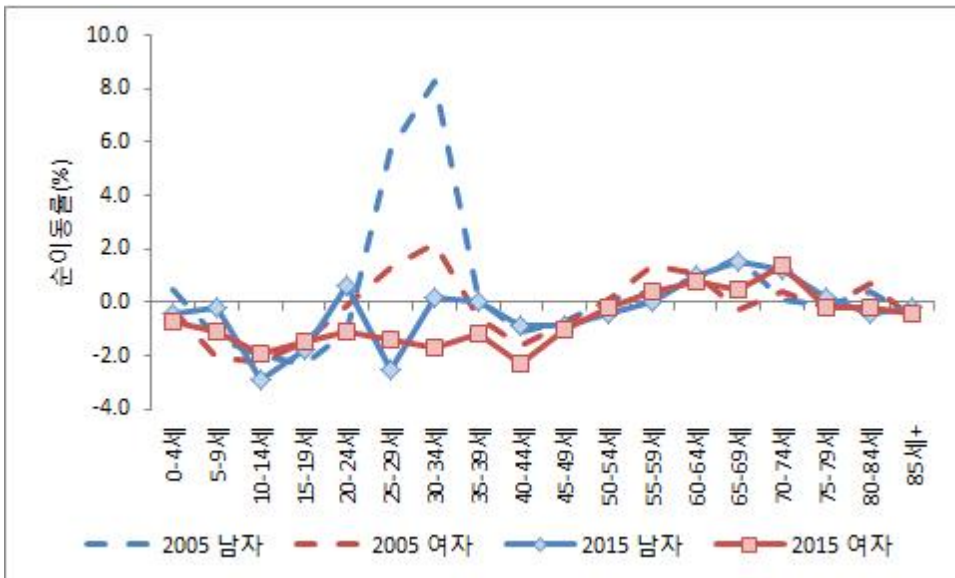
- 경기도 이천시는 2010년 순이동률 1.2%, 2016년 2.2%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 매년 인구의 유입과 유출이 비슷하여 순이동률이 +/- 1.0% 이내를 유지함
 - 전체 전입률 및 전출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군구내 전입 및 전출 비중이 높은 편이며, 경기도 내 다른 시군구 지역에서 유입되거나 유출되는 비율은 매년 조금씩 감소함
 - 다만 순이동률이 크게 상승한 2016년의 경우 경기도 내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지역에서 유입된 전입률이 모두 상승하였음
 - 주로 경기도 또는 서울 등 인근 지역에서 유입된 주빈이 많았던 것으로 여겨짐
- 경기도 이천시의 2005년과 2015년 성별 및 연령별 인구이동률을 비교해보면 청년층에서 조금 변화된 양상이 확인됨
 - 우선 2005년 25~29세와 30~34세 연령대에서 특히 남성에게서 매우 높은 수준의 인구 유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지난 2005년 당시 또는 그 이후 이천시 소재 특정 기업 및 기관의 신규채용과 주택단지 건설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해당 연령대를 제외하면 2015년 성별 및 연령별 인구이동 유형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연도별 지역 상황에 따라 아동·청소년층과 청년층의 경우 유입과 유출 수준이 해마다 가변적이었던 반면, 중장년층에서는 1% 내외의 꾸준한 순인구 유입이 유지되고 있음
 - 은퇴 또는 귀농 등의 이유로 중장년층의 꾸준한 전입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그림 4-16] 경기도 이천시 지역단위별 총전입률, 총전출률, 이동률의 변화, 2005~2016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그림 4-17] 경기도 이천시 성 및 연령별 순이동률, 2005~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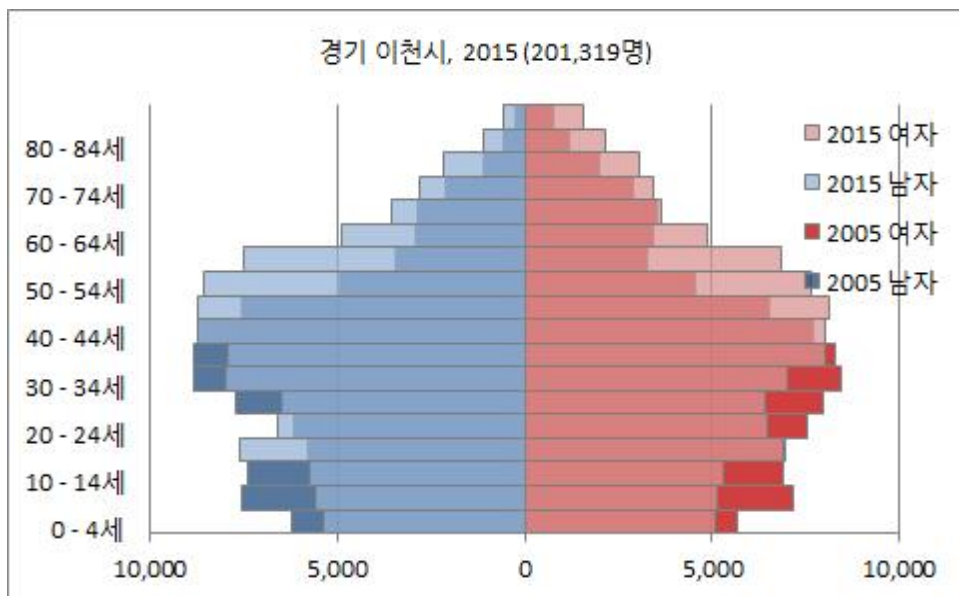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5) 인구변동과 인구구조

○ 경기도 이천시는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저출산, 전국 수준의 사망력,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인구이동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안정적인 인구구조를 갖고 있음

- 인구피라미드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소년 및 청소년층이 두껍고 중장년층에 해당하는 40~50대 인구가 가장 많으며, 고령층 비중이 높지 않은 안정적인 오각형 형태를 보임
- 2005년과 2015년 인구피라미드를 비교하였을 때, 10년 간 고령화를 반영하여 5세 연령간격이 위로 두 칸 이동한 것이 확인될 뿐임
- 저출산·고령화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도 이천시의 인구구조 및 인구변동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됨

[그림 4-18] 경기도 이천시의 성 및 연령별 인구구조, 2005~2015



자료: 주민등록인구(통계청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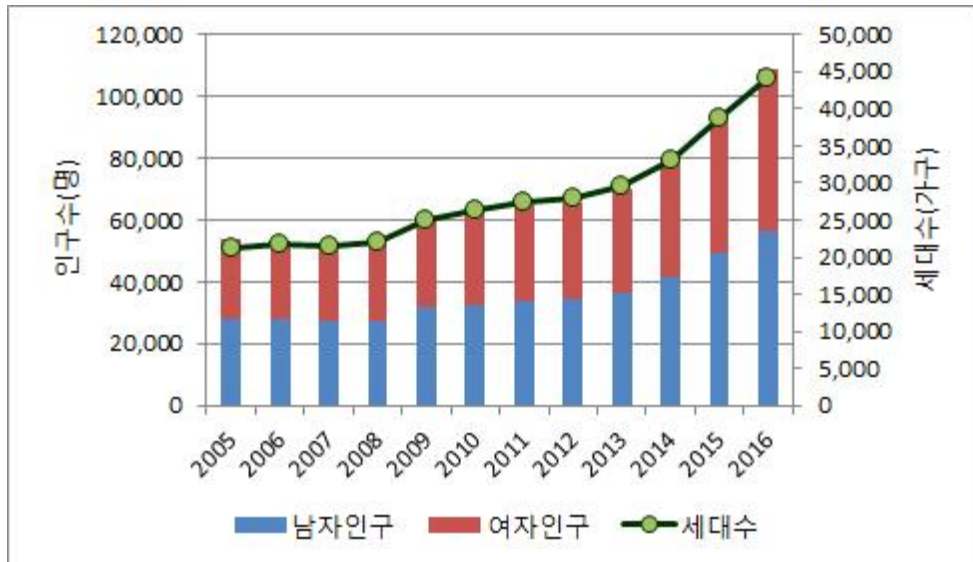
다. 저출산·고령화 일반 - 인구유입 지역: 부산광역시 강서구

- 저출산·고령화 일반 지역 중 지난 5년 평균 순이동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지역 들은 서울을 제외하고 지방의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이 골고루 포함됨
- 33개 지역: 강원 양구군, 강원 화천군, 경기 광주시, 경기 김포시, 경기 오산시, 경기 용인시, 경기 파주시, 경기 평택시, 경기 화성시, 경남 거제시, 경남 김해시, 경남 양산시, 경남 함안군, 경북 경산시, 경북 김천시, 광주 광산구, 대구 달 성군, 대전 유성구, 부산 강서구,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인천 서구, 인천 중 구, 전남 무안군, 전북 완주군, 제주특별자치도, 충남 당진시, 충남 서산시, 충 남 아산시, 충남 천안시, 충북 음성군, 충북 증평군, 충북 진천군
- 부산광역시 강서구는 인구유입 지역 중에서도 특히 인구 순이동률이 높았던 지역이며 대도시 지역임에도 합계출산율 역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 유형의 심층평가 사례지역으로 선정함

1) 인구, 가구, 인구동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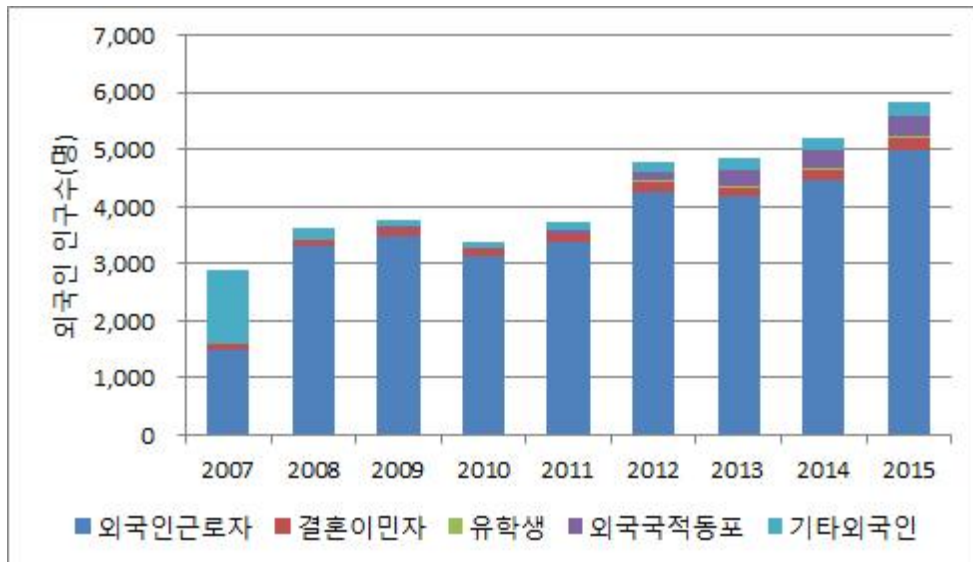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주민등록인구는 2005년 53,808명에서 2016년 108,909명으로 2배 이상 크게 증가함
 - 지난 2007년(51,819명)을 제외하면 관찰기간 동안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 였으며, 특히 2009년 이후 확실한 인구증가세에 접어들은 것으로 판단됨
 - 주민등록세대수 역시 인구증가와 유사하게 2005년 21,311명에서 2016년 44,12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여 가파른 성장세를 보임
-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주민은 2007년 2,903명에서 1년 후 2008 년 3,621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5,831 명을 기록함. 2015년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 숫자는 212명으로 전 체 외국인 주민의 3.6%에 불과함. 결과적으로 2015년 현재 외국인주민의 85.8%가 외국인근로자(5,001명)로 구성됨

[그림 4-19] 부산 강서구의 인구 및 세대수 변화, 2005~2016



자료: 주민등록인구통계(통계청 2017)

[그림 4-20] 부산 강서구 외국인주민 인구변화, 2007-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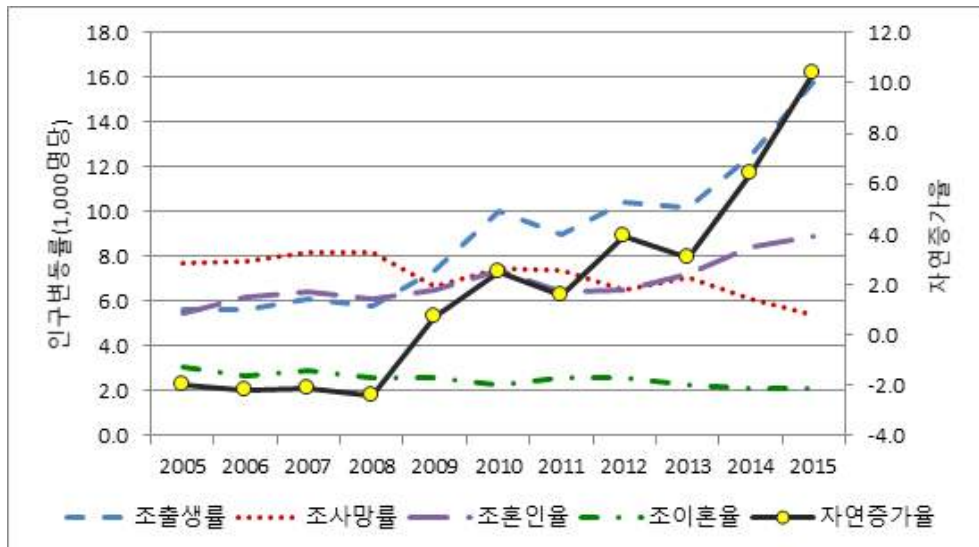


자료: 외국인주민 현황(행정자치부 2017)

○ 부산 강서구는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한 인구변동을 보이고 있으며, 인구동태통계의 경우 2011년 이후 과거와 명확히 구분되는 모습을 보여줌.

- 조출생률의 경우 2005~2010년 사이 인구 천 명당 5.6~7.4건 사이에 유지되었으나 2010년부터 상승하여 2015년 인구 천 명당 15.8건까지 상승함. 전국 단위 조출생률 8.6건과 비교할 때 인구 천 명당 연간 출생아수가 약 7.2명 더 많은 수준임. 반면 조사망률은 2005년 인구 천 명당 7.7건에서 2010년 6.7건으로 감소하였고 2015년 5.4건을 기록함
- 결과적으로 자연증가율은 2005년 인구 천 명당 -2.0명에서 2008년 -2.4명까지 자연감소를 기록한 후, 자연증가로 전환되어 2015년 인구 천 명당 10.4명까지 증가하여 전국의 3.2명 보다 월등히 높았음
- 조혼인률의 경우 2015년 8.9건을 기록하여 전국 5.9건을 상회하였고, 조이혼율은 2.1건으로 전국의 2.1건과 같은 수준임. 2000년대 후반 이후 부산 강서구의 활발한 인구변동이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 지역 개발, 산업변화 등 개발 및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

[그림 4-21] 부산 강서구의 주요 인구동태 변화, 2005~2015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2) 출산 및 혼인 동향

○ 우리 사회의 지속되는 저출산에도 불구하고, 부산 강서구의 출산력 수준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줌

- 부산 강서구의 지난 2005년 합계출산율은 0.947로 대표적인 초저출산 지역이었지만, 2015년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2배 이상 높은 1.982를 기록함. 특히 2010년, 2014년, 2015년의 합계출산율 증가폭이 두드러짐
-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 역시 이 같은 출산율 상승 추세와 출산연령의 고령화를 반영함. 2006년 여성의 주요 출산시기가 25~29세에서 30~34세로 전환된 점은 전국적인 추세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25~29세 출산율이 전환점 이후 감소하지 않고 30~34세, 35~39세 연령대와 함께 동반 상승해왔다는 점은 다른 지역과 확연히 구분되는 점임. 특히 2010년을 지나 대다수의 연령대에서 출생률 상승을 경험하고 있음

〈표 4-7〉 부산 강서구 합계출산율 및 연령별 출산율(천 명당) 변화

연도	합계출산율	연령별 출산율(천 명당)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2005	0.947	0.6	14.9	80.2	64.8	21.3	0.5	0.4
2006	0.954	2.5	17.5	70.0	73.1	17.8	2.6	0.4
2007	1.046	2.0	16.7	75.6	80.3	25.0	2.2	0.0
2008	1.005	2.8	12.2	59.1	88.8	28.5	5.3	0.0
2009	1.177	2.7	15.7	73.2	101.6	36.4	6.1	0.4
2010	1.483	2.6	24.5	93.2	138.4	41.5	2.6	0.0
2011	1.321	3.9	13.7	86.5	121.7	38.5	5.4	0.0
2012	1.505	3.4	20.6	86.3	140.0	47.8	8.7	0.5
2013	1.424	1.4	16.3	81.6	136.7	46.6	6.6	0.0
2014	1.688	1.3	15.5	111.3	151.3	55.8	6.6	0.0
2015	1.982	1.2	30.3	114.9	176.1	72.1	10.4	0.4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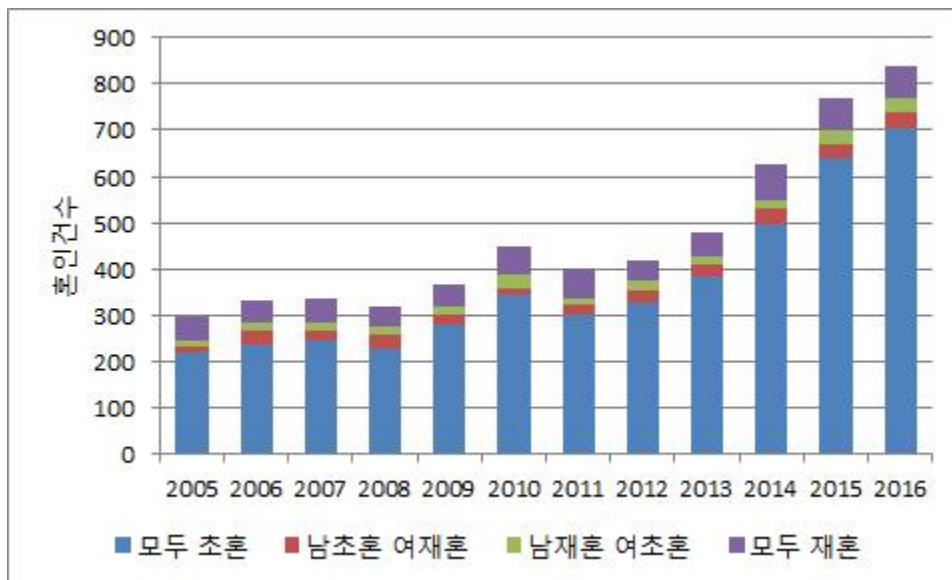
- 부산 강서구는 한해 총출생아수가 지난 2005년 305명에 불과하였지만, 2015년 1,365명으로 크게 증가함. 총출생아수의 빠른 증가에도 다문화 출

생아수는 2015년 49건, 전체 출생아수의 3.6%(전국 다문화 출생비중 4.5%)에 그침. 이를 감안하면 부산 강서구의 출산력 변화 역시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빠른 인구이동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짐

○ 부산 강서구의 혼인신고건수 역시 빠르게 증가함. 지난 2015년 298건에 불과했던 혼인건수가 2016년 무려 839건으로 11년 사이에 무려 2.8배 증가함. 혼인유형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초혼이 사례가 2005년 217건에서 2016년 705건으로 세배 이상 증가하여 혼인건수 증가를 주도함. 전체혼인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가 전체 혼인건수의 84.0%를 차지하여, 전국의 78.5% 보다 높은 수준임

- 인구 및 혼인의 증가와 높은 초혼 비중을 감안할 때, 부산 강서구가 대규모 주거시설이나 기타 편의 등을 이유로 부산이나 인근 지역의 신흥부부 또는 청년층의 주거지로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한편 남녀 평균초혼연령은 전국과 유사한 수준임. 예컨대, 2016년 남성의 평균초혼연령은 32.8세로 전국과 같은 수준이며, 여성 평균초혼연령의 경우 30.3세로 전국에 비해 0.2세 높은 수준임

[그림 4-22] 부산 강서구 혼인상태별 혼인건수, 2005~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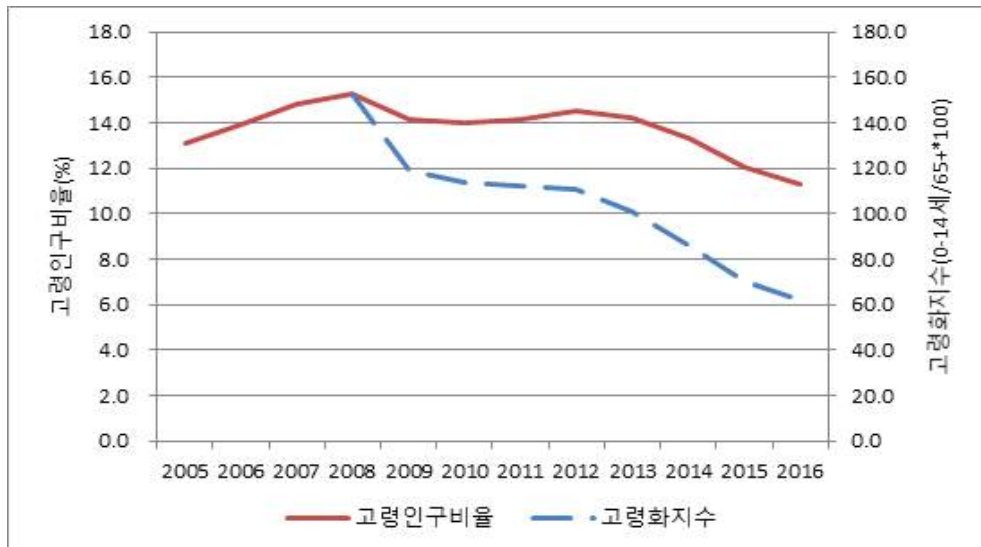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 혼인건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산 강서구의 다문화 혼인 및 이혼건수는 큰 변화가 없음. 다문화 혼인 및 이혼건수는 2015년 각각 45건과 11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혼인건수 및 이혼건수에 대해 5.7%, 5.8%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각각 7.4%, 10.3%)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3) 고령화 및 사망률

- 전국적인 인구고령화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인구구조는 젊어짐. 고령인구 비율이 지난 2005년 전체 인구의 13.1%에서 조금씩 상승하여 2008년 15.3%에 이르렀지만, 이후 장기적인 추세에서 감소세로 전환되어 2016년 11.3%를 기록함

[그림 4-23] 부산 강서구의 고령인구비율과 고령화지수, 2005~2016



자료: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통계청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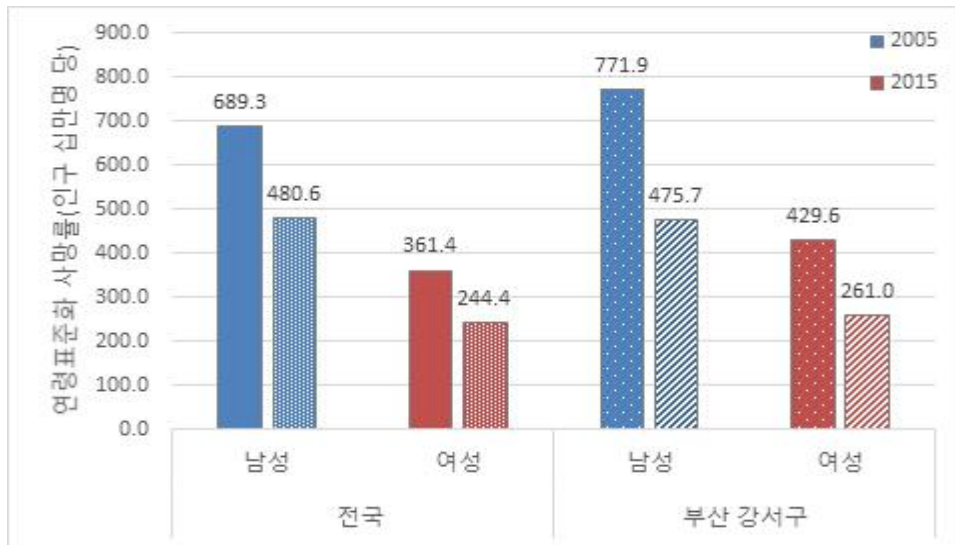
- 이 같은 고령인구 비율은 전국의 13.5%로 보다 낮은 수준이며, 특히 2014년 이후 최근 2~3년 사이의 고령인구 비율 감소가 두드러지는 것을 감안할 때, 근래 지속되고 있는 인구유입이 주로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은

것으로 여겨짐. 마찬가지로 0~4세의 유소년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의 비로 계산되는 고령화지수역시 2008년 152.6에서 2016년 61.9로 빠르게 감소함

○ 부산 강서구의 사망력은 과거 2005년 전국에 비해 남녀 모두 높은 수준이었으나, 이후 빠르게 개선되어 2015년 현재 남녀 모두 전국의 사망력 수준과 유사하게 나타남

- 구체적으로 연령표준화 사망률의 경우 남성이 2005년 인구 십만 명당 771.9명에서 2015년 475.7명으로 감소하였고, 같은 해 전국의 480.6명(2015년)과 유사한 수준임
- 여성 역시 2005년 429.6명에서 2015년 261.0명으로 하락하여 전국의 244.4명(2015년)과 매우 가까운 수준으로 개선됨
- 사망원인별 연령표준화 사망률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순환기계통 질환이, 여성의 경우 운수사고 및 자살을 포함하는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의한 사망률이 전국에 비해 조금 높은 편임

[그림 4-24] 부산 강서구의 성별 연령표준화 사망률, 2005~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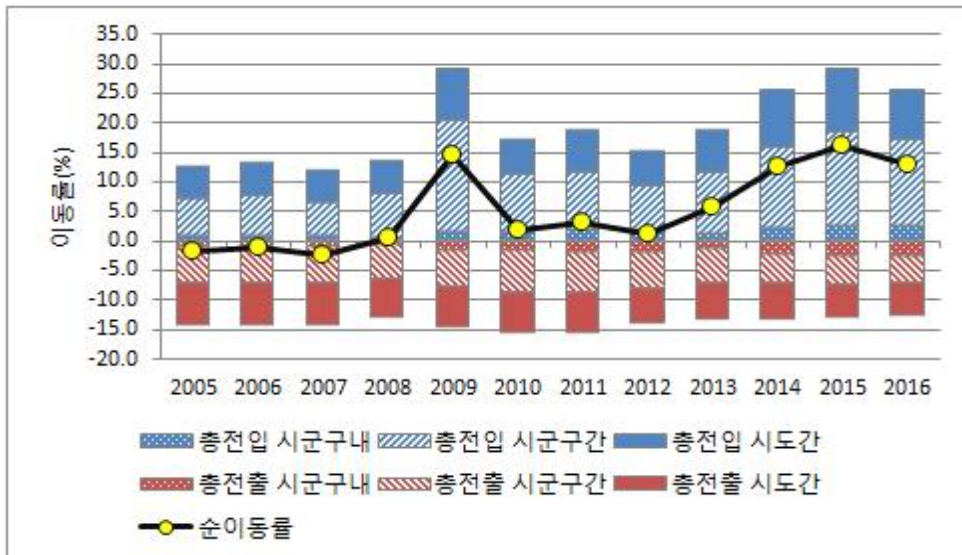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4) 인구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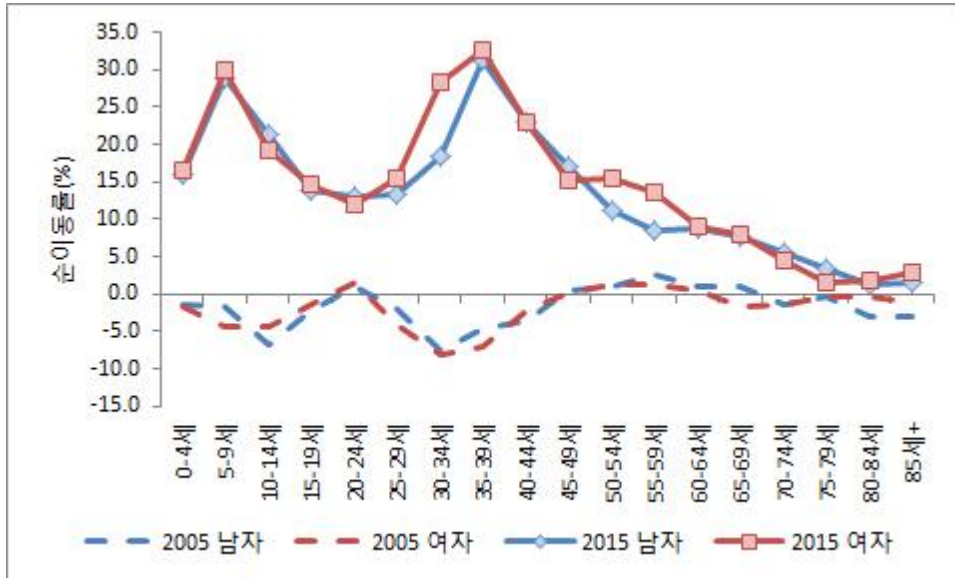
- 부산 강서구의 인구이동은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며, 2009년 이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총전출률과 매우 큰 폭으로 변화해온 총전입률이 인상적임
- 특히 2009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했던 인구유입은 앞에서 확인한 부산 강서구의 인구성장, 출산 및 혼인의 증가, 그리고 인구고령화의 역전현상을 함께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인구 순이동률이 마이너스 또는 1% 미만으로 유지되어 왔지만, 2009년 갑자기 14.5%로 상승하였고 그 후 줄곧 인구 순유입을 기록함
 - 무엇보다 2014~2016년 연속으로 10.0% 이상 높은 인구 순이동률을 기록하고 있음
 - 인구가 크게 유입되는 해마다 총전입률의 과반 이상이 부산 내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함

[그림 4-25] 부산 강서구 지역단위별 총전입률, 총전출률, 이동률의 변화, 2005~2016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그림 4-26] 부산 강서구 성 및 연령별 순이동률, 2005~2015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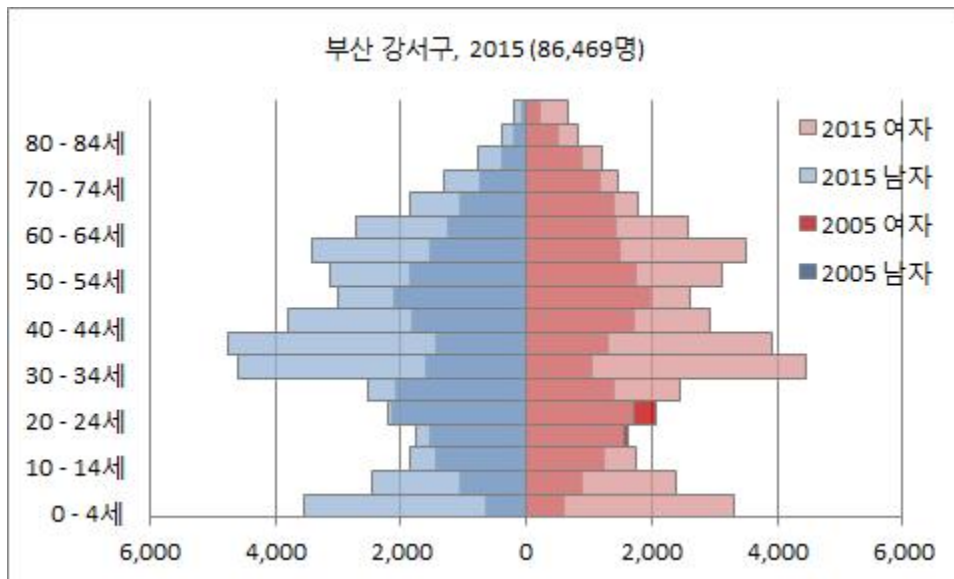
○ 성 및 연령별 순이동률을 살펴보면 인구이동의 변화가 더욱 극명하게 확인됨

- 과거 2005년의 경우 50대 중장년층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인구 순유출을 경험하였고, 특히 25~49세에 이르는 주요 경제활동 연령대와 그 자녀들에 해당하는 10대들의 인구 순유출이 높았음
- 하지만 2015년은 모든 연령대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방향으로 크게 전환되었고, 무엇보다 과거 인구 순유출 정도가 심하던 30~44세, 0~14세 연령대에서 매우 높은 순이동률을 보임
- 부산 강서구의 경우 지역의 인구구조 자체에 큰 변화를 가져올 만큼 대규모의 인구유입을 경험한 것으로 판단됨

5) 인구변동과 인구구조

- 부산 강서구는 2009년 이후 매우 활발한 인구유입으로 인구구조가 조금 예외적인 형태로 발전해 옴. 과거 2005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인구규모에 노년과 유소년 인구 비중이 매우 낮아 나뭇잎 형태의 인구구조를 갖고 있었음. 하지만 절대적인 인구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청장년층 및 유소년 인구가 크게 늘어나 2015년 인구피라미드는 폭이 넓은 삼(또는 스페이드) 모양의 형태를 나타냄
- 부산 강서구 지역의 경우 자녀를 동반한 가족 형태의 가구 비중이 높을 것으로 여겨지며, 현재의 출산력 수준이 유지된다면 수년 내 육아·보육·교육 관련 공공기관과 서비스 수요의 빠른 증가가 예상됨. 대규모 인구의 유입으로 해당 지역에서 향후 수년간 저출산·고령화 측면에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많은 인구가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만큼 지역의 정체성이나 사회통합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대도시의 베드타운 역할을 하는 만큼 교통이나 환경 등 도시 및 주거기능에 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4-27] 부산 강서구의 성 및 연령별 인구구조, 2005~2015



자료: 주민등록인구(통계청 2017)

2. 초저출산 지역

가. 초저출산 - 인구유출 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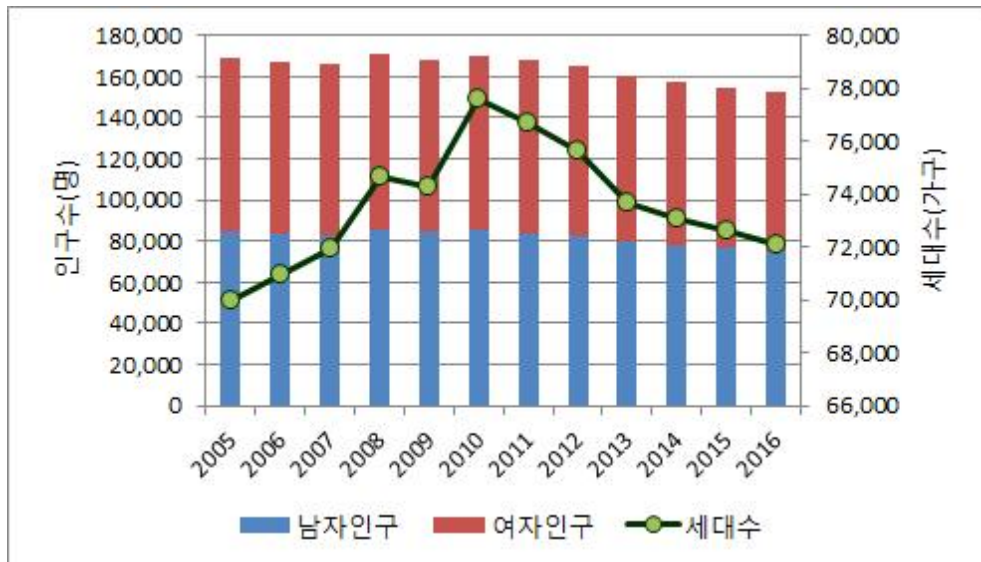
- 지난 5년간 합계출산율 평균이 1.3 이하이며, 상대적으로 인구의 유출 정도가 심한 지역들을 초저출산 인구유출 지역으로 분류하였음. 해당 지역들은 주로 서울 중심으로 전국의 대도시와 수도권 인근 위성도시가 구성됨
- 41개 지역: 경기 과천시, 경기 구리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광주 동구, 광주 서구, 대구 남구, 대구 북구, 대구 서구, 대전 대덕구, 대전 동구, 대전 서구, 대전 중구, 부산 남구, 부산 동래구, 부산 부산진구, 부산 사상구, 부산 사하구, 서울 강동구, 서울 강북구, 서울 관악구, 서울 광진구, 서울 구로구, 서울 금천구, 서울 노원구, 서울 도봉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성동구, 서울 성북구, 서울 송파구, 서울 양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용산구,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서울 중랑구, 인천 계양구, 인천 남구, 인천 동구, 인천 부평구
-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지난 2001년 이후 합계출산율 1.0 이하의 초저출산율 유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꾸준한 인구 순유출을 경험함. 뿐만 아니라 서울의 전통적 중심지역으로 다른 대도시 지역에 함의를 가질 것으로 판단되어 초저출산 인구유출 지역의 심층평가 사례지역으로 선정함

1) 인구, 가구, 인구동태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주민등록인구는 2005년 169,315명에서 2016년 152,737명으로 11년 간 16,578명이 감소함. 특히 2011년부터는 매해 2,007~5,137명 정도의 주민등록인구가 꾸준히 감소해 옴. 지난 2005년에는 남성인구가 84,981명으로 여성인구 84,334명 보다 조금 많았지만, 2016년의 경우 남성인구가 75,201명으로 여성인구 77,536명 보다 2,335명 더 작은 것으로 확인됨. 또한 전국적인 1인가구 확대와 평균 가구원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의 주민등록세대수는 2011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구체적으

로 2005년 69,982세대에서 2010년 77,621세대로 증가하였지만, 그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6년 72,118세대를 기록함

[그림 4-28]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수 변화, 2005~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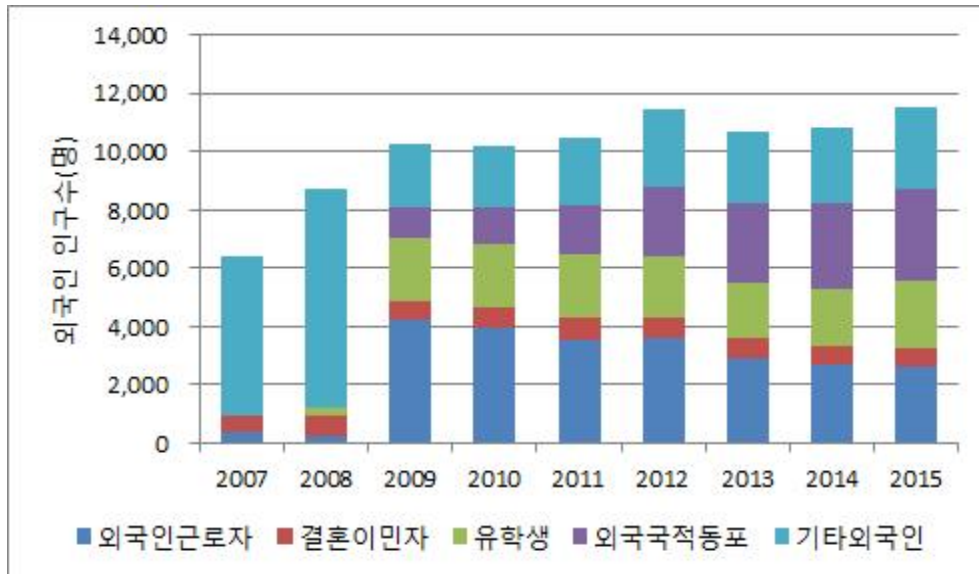


자료: 주민등록인구통계(통계청 2017)

○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같은 규모의 인구규모를 가진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편임.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주민이 이미 지난 2007년 6,382명이었으며, 2009년에 만 명을 넘어섰으며, 2015년 11,554명을 기록함. 2015년 현재 종로구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주민의 구성은 외국국적동포 27.8%, 기타외국인 24.2%, 외국인근로자 22.8%, 유학생 20.0%, 결혼이민자 5.2% 순이며, 상대적으로 다양한 외국인들이 골고루 분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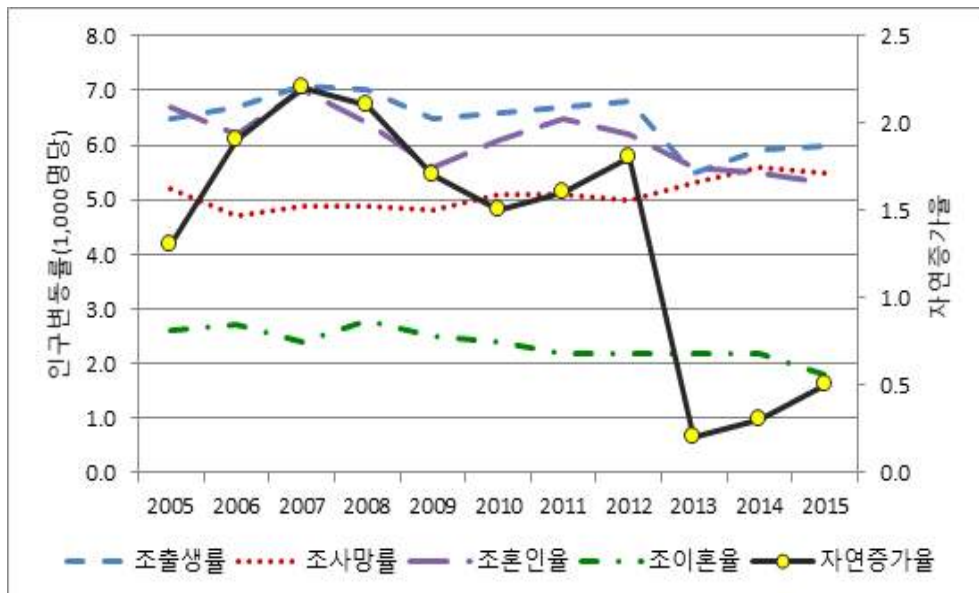
- 혼인 또는 기타사유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주민 역시 2015년 683명(혼인귀화자 393명, 기타사유 290명)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의 경우 각국 대사관, 국제기구, 다국적기업의 국내 지점 등 관공서, 사무실,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국제학교가 위치해 있는 만큼 외국인근로자를 비롯한 외국인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아울러 일부 사립대학이 위치해 있는 만큼 외국인 유학생 비중도 높은 것으로 판단됨

[그림 4-29] 서울특별시 종로구 외국인주민 인구변화, 2007-2015



자료: 외국인주민 현황(행정자치부 2017)

[그림 4-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요 인구동태 변화, 2005-2015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조출생률은 2005년 인구 천 명당 6.5건에서 2015년 6.0건으로 하락한 반면 조사망률은 같은 기간 인구 천 명당 5.2건에서 5.5건으로 조금 상승함. 결과적으로 자연증가율은 2005년 인구 천 명당 1.3명에서 2015년 0.5명으로 조금 감소하였고, 전국의 자연증가율 3.2명에 비해 작은 수준임. 조혼인율의 경우 2005년 인구 천 명당 6.7건에서 2015년 5.3건으로 감소하였고, 조이혼율 역시 마찬가지로 2005년 2.6건에서 2016년 1.8건으로 감소함. 전체적으로 출산과 혼인·이혼은 감소하는 반면 사망이 증가하면서 인구변동이 감소 및 정체되는 추세에 있음

2) 출산 및 혼인 동향

-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국내에서 출산력이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로 지난 2001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0 아래에서 머무르고 있음. 지난 2005년 0.759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던 합계출산율은 매해 등락을 거듭하다 2015년 현재 0.813을 기록하고 있음. 관찰기간 동안 합계출산율의 최고점이 2012년 0.890이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초저출산 현상이 유지되는 지역임
- 종로구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은 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아울러 출산연령의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 편임. 관찰기간인 2005년 이전부터 이미 여성 30~34세 출산율이 다른 연령대의 5세별 출산율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구체적으로 2005년 30~34세 출산율이 여성 천 명당 69.0명으로 25~29세의 천 명당 48.2명 보다 높은 수준임. 이후 30~34세 출산율은 조금 상승하여 2015년 79.9명을 기록하였지만, 전국 동일 연령대 116.7명에 비해 무려 36.8명이나 낮은 수준임
 - 흥미로운 점은 25~29세 출산율이 꾸준히 감소하는 동안 35~39세 출산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 역전되었다는 점임. 예를 들어, 2015년 35~39세 출산율이 인구 천 명당 45.1명으로 25~29세의 26.8명 보다 높은 수준임

- 종로구에서 출산연령의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한국 사회의 연령별 출산율 변화 또는 대도시 지역의 출산율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함의를 지니는 것으로 여겨짐

○ 국제교류 증가와 외국인주민이 증가한 탓에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출생 비중은 전국에 비해 높은 편임. 지난 2008년의 경우 다문화 출생이 38명, 3.2%로 전국의 2.9%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그 후 해마다 54~73건 정도의 다문화 출생을 기록하며 조금씩 그 비중이 증가함

- 2015년의 경우 다문화 출생이 73건으로 전체 출생아수 중 8.1%를 차지하였고, 같은 해 전국 다문화 출생 비중 4.5%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함

〈표 4-8〉 서울특별시 종로구 합계출산율 및 연령별 출산율(천 명당) 변화

연도	합계출산율	연령별 출산율(천 명당)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2005	0.759	0.8	8.3	48.2	69.0	20.5	3.8	0.1
2006	0.796	0.8	6.3	51.1	72.5	22.7	2.6	0.1
2007	0.863	1.4	8.7	53.2	76.2	26.0	3.7	0.3
2008	0.857	0.2	7.8	42.8	84.8	28.3	5.1	0.1
2009	0.796	0.0	7.7	39.2	79.5	28.1	4.1	0.0
2010	0.837	1.0	5.8	38.0	86.1	30.7	5.2	0.1
2011	0.860	0.6	7.9	39.5	84.6	34.0	5.4	0.0
2012	0.890	0.2	5.9	33.6	92.6	38.1	5.8	0.2
2013	0.729	0.0	4.9	30.3	72.2	32.1	5.5	0.2
2014	0.790	0.5	4.3	27.7	74.4	43.6	6.9	0.2
2015	0.813	0.5	5.8	26.8	79.9	45.1	4.9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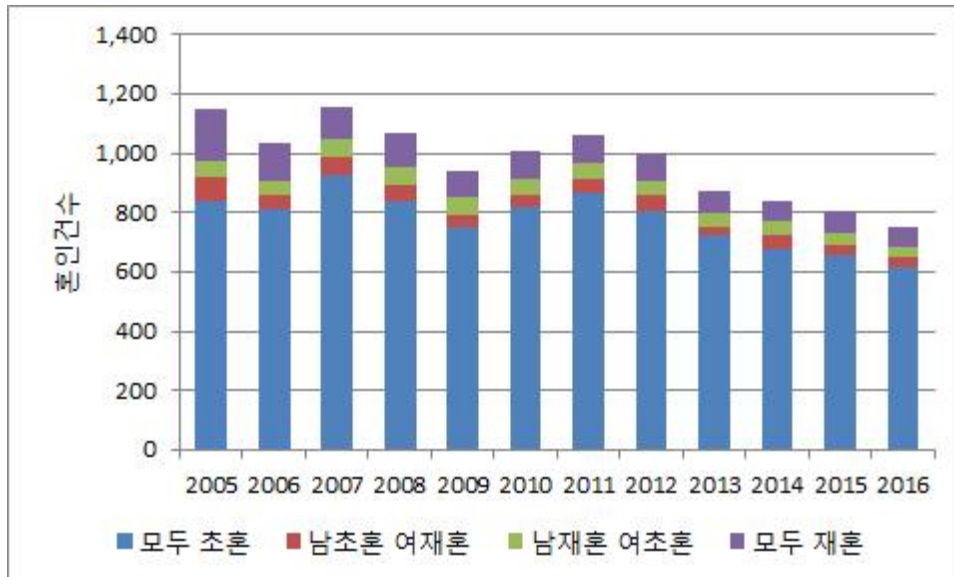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혼인건수는 2005년 1,155건에서 매년 등락을 반복해왔지만, 지난 2011년 이후 해마다 감소하며 2016년 760건을 기록함. 특히 2013년 한 해 무려 123건, 12.3% 감소하였음. 또한 2005년과 비교할 때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 보다 여성이 재혼이거나 남녀 모두 재혼인 커플의 감소율

이 더 높았음

- 평균초혼연령의 경우 2005년에 남성은 32.4세, 여성은 29.1세로 당시 전국의 30.9세와 27.7세 보다 각각 약 1.5세, 1.4세 높은 수준임. 하지만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혼연령의 상승세가 둔화되어 2016년 평균초혼연령은 남성 33.5세, 여성 31.3세로 여전히 전국에 비해 높지만, 그 격차가 남녀 각각 0.7세, 1.2세로 좁아짐. 결과적으로 남녀 평균초혼연령의 차이 역시 2005년 만 3.3세에서 2015년 만 2.2세로 줄어들었음

[그림 4-3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혼인상태별 혼인건수, 2005~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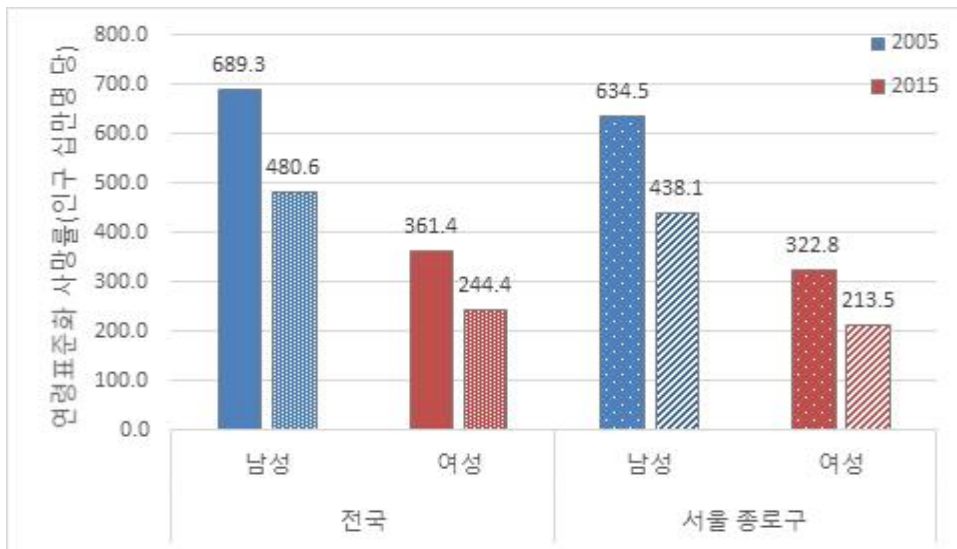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 비중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2008년 전체 혼인 중 16.0%(183건)이 다문화 혼인이었으며 이후 조금씩 감소하였지만 2015년 12.7%(107건)을 기록하여 같은 해 전국의 7.4% 보다 높은 수준임. 다문화 이혼 역시 과거 2008년에 전체 이혼건수의 19.0%(94건)를 차지하였으나, 2015년 10.8%(31건)로 감소하여 전국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3) 고령화 및 사망력

○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다른 대도시 지역에 비해서 고령인구가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음. 실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05년 10.1%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16년 16.3%를 기록하였고, 이는 전국의 13.5% 보다 높은 수준임. 마찬가지로 고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100) 역시 2008년 87.3에서 2016년 172.1로 증가함. 다시 말해, 종로구 유소년인구 10명 당 노인 인구가 17.2명 정도 수준으로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분류됨

[그림 4-32]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요 사망원인별 연령표준화 사망률, 2015



주: 일부 사망원인의 경우 대분류와 세분류를 함께 포함하고 있음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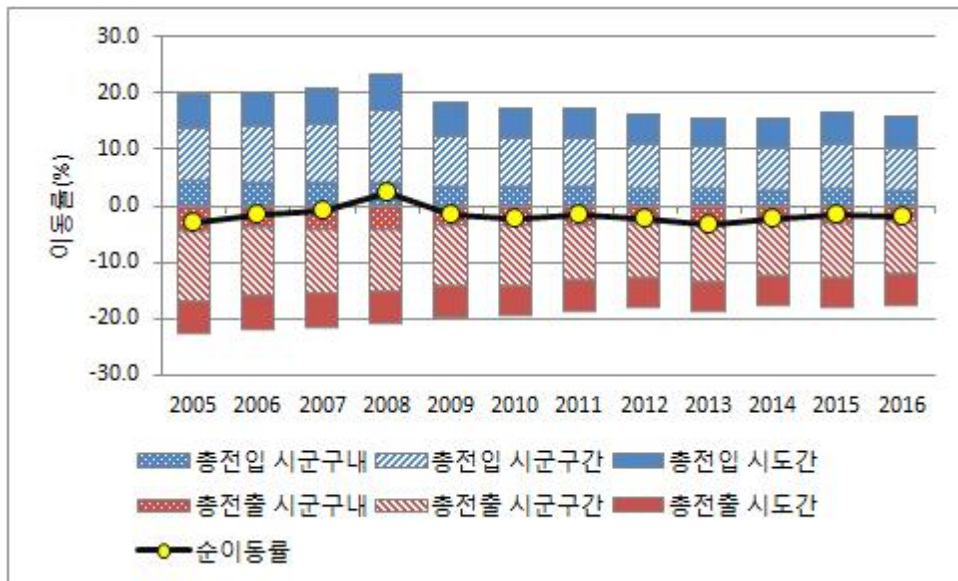
○ 종로구의 연령표준화사망률은 전국 보다 조금 낮은 수준임. 남성의 경우 2015년 인구 십만 명당 438.1명으로 전국 480.6명 보다 낮으며, 여성 역시 213.5명으로 전국 244.4명 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됨.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 역시 전국적인 수준과 유사하거나 좀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됨.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인구비율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보건복지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4) 인구이동

○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지난 2008년 한해 순이동률이 2.5%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2005년 이후 줄곧 인구의 유출이 유입을 초과하는 순유출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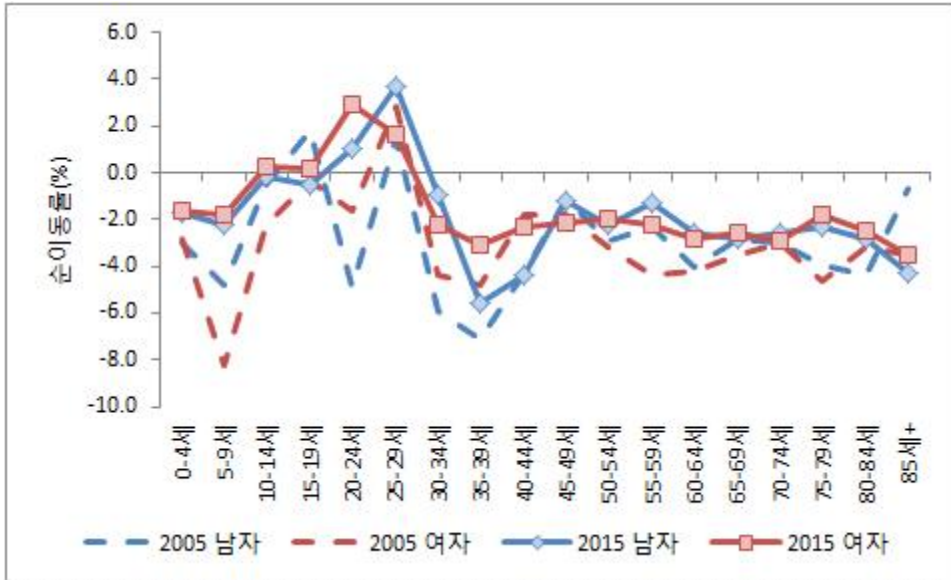
- 총전입률의 경우 지난 2005년 19.9%에서 2016년 15.9%로 감소하였고, 총전출률 역시 같은 기간 22.8%에서 17.8%로 감소함
- 결과적으로 인구 순이동률은 앞서 언급한 2008년을 제외하고, 매년 -3.4~-0.9% 정도 기록하고 있음
- 인구이동의 점진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구이동 자체는 여전히 활발할 편이어서 총전입률과 총전출률 모두 2016년 전국의 14.4%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냄
- 아울러 총전입과 총전출의 각각 47.2%와 52.8%가 서울특별시 내 이동이라는 점도 큰 특징임

[그림 4-3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지역단위별 총전입률, 총전출률, 이동률의 변화, 2005~2016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그림 4-34]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성 및 연령별 순이동률, 2005~2015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 종로구의 성 및 연령별 순이동률을 살펴보면 연령별 인구이동이 어느 정도 유형화되어진 것이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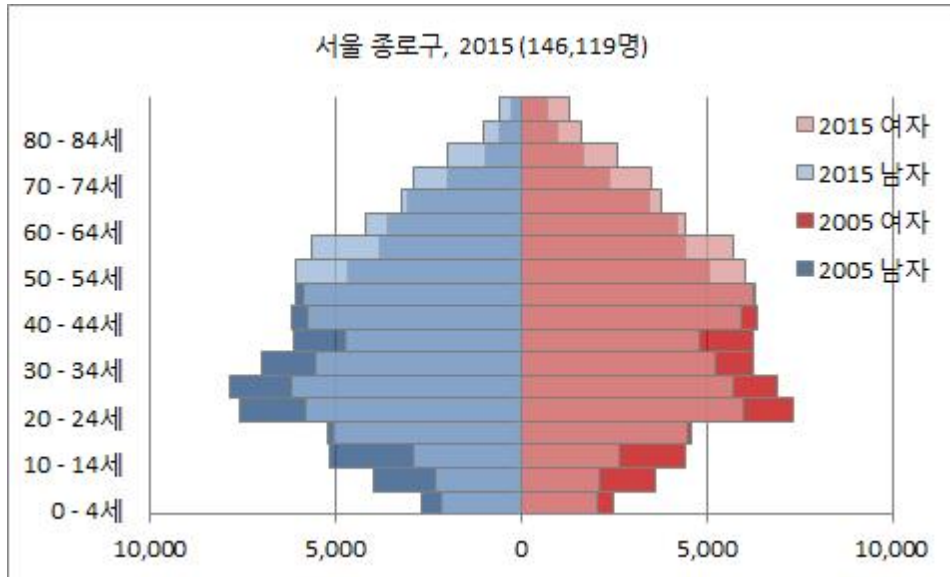
- 2005년 당시 10대 후반부터 20대 후반까지 확인되던 인구 순유입이 2015년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이 연령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인구 순유출을 보여줌
- 일부 대학과 사무실, 그리고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특성상 청년층 인구가 꾸준히 유입됨
- 반면 유소년 및 청소년층, 그리고 30대 초반부터 노년층까지 남녀 구분 없는 인구 순유출은 종로구가 지역주민의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함
- 무엇보다 관찰기간 동안 큰 변화 없이 꾸준히 인구유출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인구의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음

5) 인구변동과 인구구조

○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매우 낮은 출산율, 증가하는 고령인구 비율, 그리고 꾸준한 인구 순유출로 인해 인구구조 형태가 빠르게 변화함

- 구체적으로 지난 2005년 인구피라미드는 초저출산으로 인해 매우 얇은 하단과 상대적으로 두꺼운 20대와 30대 인구를 갖고 있었지만, 2015년에는 인구고령화, 청년층 인구감소, 지속적인 초저출산으로 인구피라미드가 더 얇아지고 하단 역시 더 가늘어 나뭇잎 형태를 보임
- 현 상태의 인구변동이 지속된다면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급격한 인구감소는 물론, 도심 지역의 인구공동화 등으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그림 4-35]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성 및 연령별 인구구조, 2005~2015



자료: 주민등록인구(통계청 2017)

나. 초저출산 사회 - 인구이동 평균: 강원도 강릉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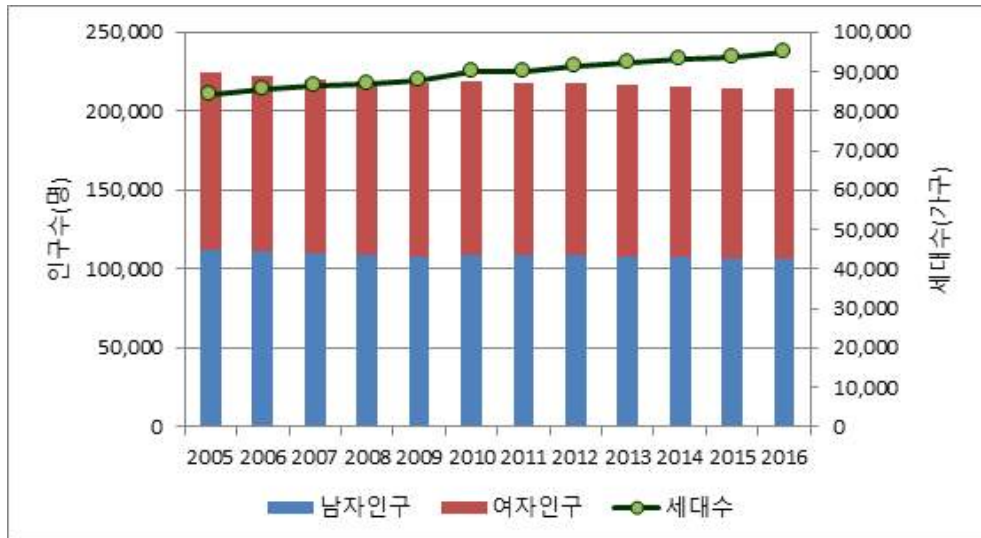
- 초저출산 지역 중 인구이동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역들은 주로 대도시 지역과 각 지역별 거점 중소도시로 구성됨
- 27개 지역: 강원 강릉시, 강원 춘천시, 경기 광명시, 경기 성남시, 경기 의정부시, 경남 진주시, 경북 경주시, 광주 남구, 광주 북구, 대구 달서구, 대구 동구, 대구 수성구, 부산 금정구, 부산 북구, 부산 수영구, 부산 연제구, 부산 해운대구, 서울 강남구, 서울 강서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동작구, 서울 마포구, 서울 서초구, 서울 은평구, 울산 중구, 전북 전주시, 충북 충주시
- 강원도 강릉시는 2002년 합계출산율이 1.3이하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인 초저출산을 경험하고 있으며, 인구의 유입과 유출이 균형을 이루거나 유출이 조금 더 많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지역과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초저출산 사회의 인구이동 평균지역을 대표하는 사례지역으로 선정함

1) 인구, 가구, 인구동태

- 강원도 강릉시의 주민등록인구는 2005년 224,391명에서 2016년 213,846명으로 11년 간 10,545명이 감소함. 지난 2010년 1,039명과 2012년 170명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분석기간 동안 해마다 인구가 감소함. 점진적인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세대수는 2005년 84,259세대에서 2016년 94,781세대로 10,522세대 증가하였다. 전국적인 1인가구 증가가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짐
- 강원도 강릉시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주민은 2007년 1,298명에서 2015년 1,930명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함. 외국인주민의 구성은 2015년 현재 외국인근로자 26.2%, 결혼이민자 21.4%, 유학생 20.7%, 외국 국적동포 14.1%, 기타외국인 17.6%로 고르게 분포됨. 농어촌지역의 인력수요와 국제결혼, 그리고 영동지방의 주요 대학이 모여 있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

로 판단됨. 2015년 현재 한국국적을 취득한 혼인귀화자는 214명, 기타사유 귀화자는 31명으로 많지 않은 편임. 하지만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를 함께 고려할 경우 다문화가정의 규모는 결코 작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무엇보다 외국인 주민의 자녀가 2015년 587명(외국인 부모 13명, 외국인-한국인부모 547명, 한국인 부모 27)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다 많은 점이 인상적이며,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사회·문화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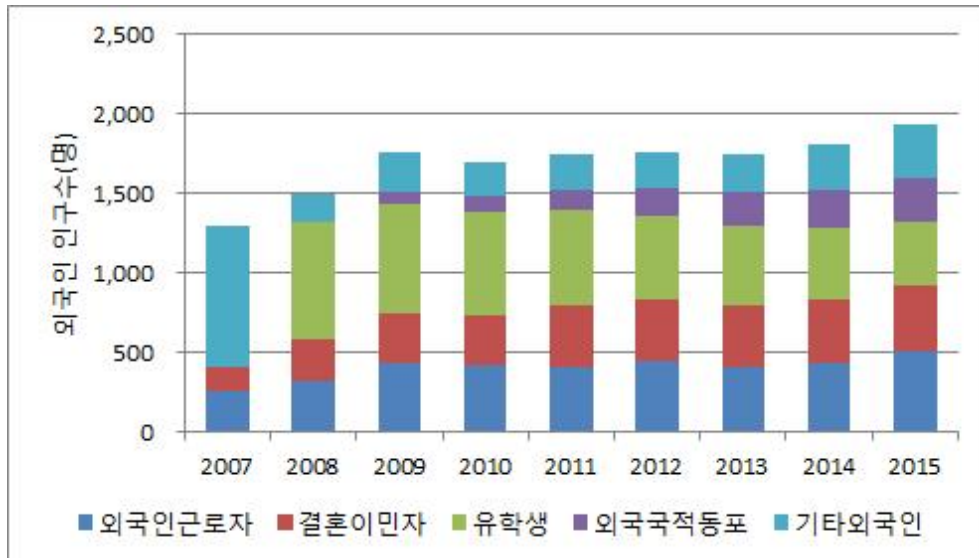
[그림 4-36] 강원도 강릉시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수 변화, 2005~2016



자료: 주민등록인구통계(통계청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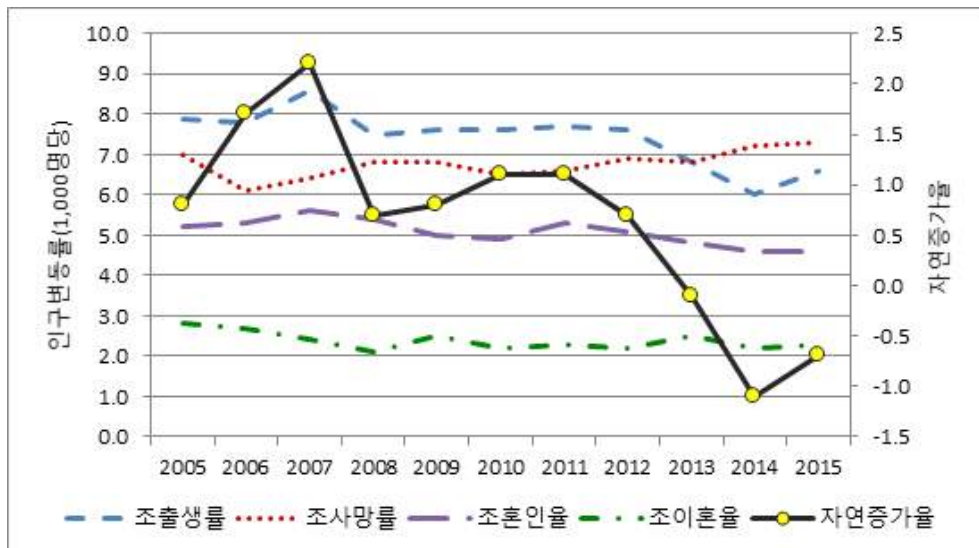
- 강원도 강릉시는 조출생률이 감소하는 반면, 조사망률은 증가하고 있음. 조출생률은 2005년 인구 천 명당 7.9건에서 2015년 6.6건으로 하락하였고, 특히 2014년 이후 감소가 두드러짐. 조사망률은 6.1~7.0건 사이에서 유지되다 2015년 7.3건으로 조금 상승함. 그 결과 2015년 자연증가율이 전국의 인구 천 명당 3.3명에 비해 낮은 -0.7명으로 인구의 자연감소를 기록함
- 조혼인율은 2005년 인구 천 명당 5.2건에서 2016년 4.6건으로 감소하였고, 조이혼율 역시 같은 기간 인구 천 명당 2.8건에서 2.2건으로 감소함

[그림 4-37] 강원도 강릉시 외국인주민 인구변화, 2007-2015



자료: 외국인주민 현황(행정자치부 2017)

[그림 4-38] 강원도 강릉시의 주요 인구동태 변화, 2005~2015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2) 출산 및 혼인 동향

- 강원도 강릉시의 합계출산율은 분석기간 내내 1.3 이하에 머물러 있음. 구체적으로 지난 2005년 1.075였던 합계출산율은 소폭의 등락을 거듭한 후 2015년 현재 1.234를 기록함.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은 전국적인 출산연령의 고령화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 지난 2009년 여성의 주요 출산시기가 25~29세에서 30~34세로 전환됨. 여성 25~29세 출산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30~34세와 35~39세 등 30대 연령별 출산율이 조금씩 동반상승함
- 강원도 강릉시의 다문화 출생 비중은 전국적인 다문화 출생 비중 감소 추세를 반영함. 우선 규모 면에서 다문화 출생은 2008년 32건에서 조금씩 상승하여 2012년 81건으로 정점을 기록하였지만, 대체로 2009~2015년 사이 해마다 50~63건 정도 유지함. 2015년 다문화 출생비중은 3.8%(53건)로 2014년 4.9%에서 하락하였으며 전국의 4.5% 보다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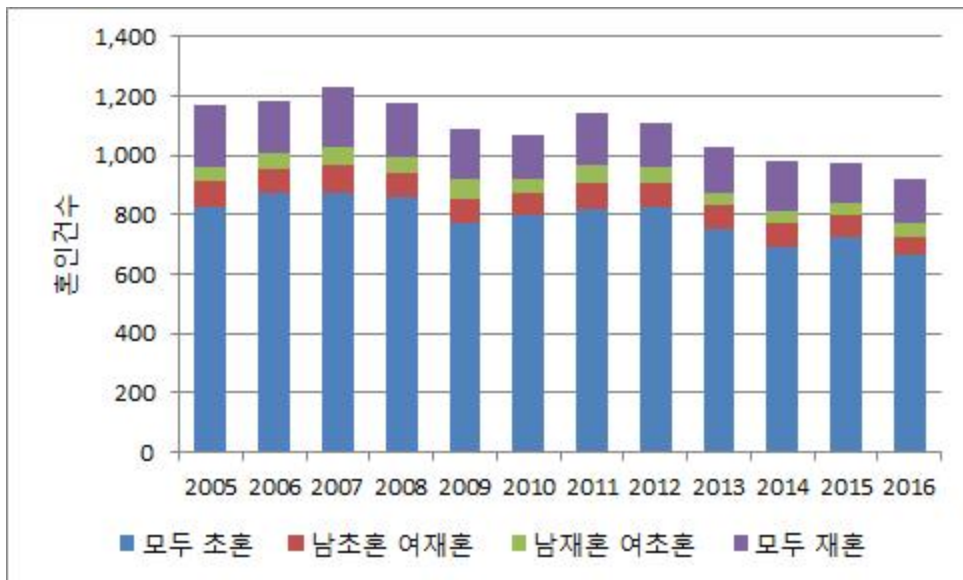
〈표 4-9〉 강원도 강릉시 합계출산율 및 연령별 출산율(천 명당) 변화

연도	합계출산율	연령별 출산율(천 명당)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2005	1.075	2.2	18.6	96.8	74.8	18.2	2.5	0.0
2006	1.086	2.5	16.6	91.2	84.6	18.6	2.2	0.0
2007	1.242	1.5	20.5	101.1	94.2	23.5	4.7	0.3
2008	1.107	1.8	19.8	86.5	83.9	23.5	2.7	0.3
2009	1.155	1.9	18.4	90.7	91.6	25.1	3.0	0.2
2010	1.173	1.3	15.4	84.0	98.5	33.6	2.6	0.2
2011	1.240	2.4	18.1	81.4	107.7	34.5	4.4	0.6
2012	1.273	3.2	17.8	88.6	108.3	32.8	4.2	0.2
2013	1.173	3.1	18.2	69.4	103.6	33.9	4.3	0.1
2014	1.091	2.6	13.7	63.9	95.1	36.1	4.3	0.1
2015	1.234	2.2	13.7	70.1	108.9	43.4	5.9	0.2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 강원도 강릉시의 혼인신고건수는 2005년 1,173건에서 소폭 등락을 거듭하다 2011년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었고 결국 2016년 920건까지 감소함. 혼인유형 별로는 여성이 재혼인 유형과 남녀 모두 재혼인 유형이 상대적으로 더 감소한 반면, 남성 재혼과 여성 초혼인 유형은 분석 기간 비슷한 규모를 유지함. 강릉시의 2015년 현재 평균초혼연령은 남성 32.9세와 여성 30.4세로 전국(남성 32.8세, 여성 30.1세) 비슷한 수준임

[그림 4-39] 강원도 강릉시 혼인상태별 혼인건수, 2005~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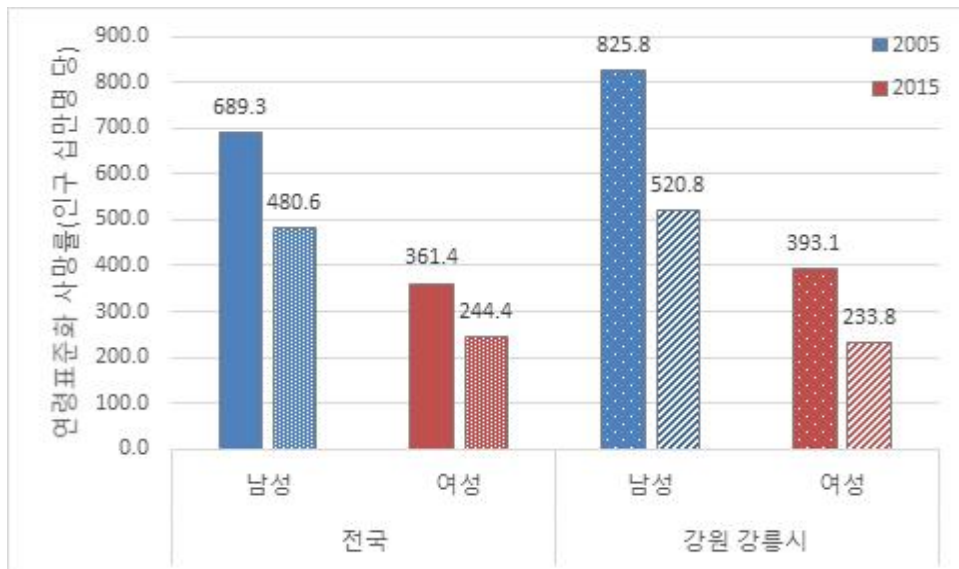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 강원도 강릉시의 다문화 혼인은 2008년 108건으로 전체 혼인 중 9.0%를 차지했었으나 2015년 60건, 6.1%로 감소함. 2015년의 경우 전국 다문화 혼인 비중 7.4% 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며, 전국적인 다문화 혼인 감소 추세를 반영함
- 한편 이혼건수 중 다문화 이혼 비중은 2015년 전국 10.3%에 비해 낮은 6.2%를 기록함. 2010년 이후 전국적으로 전체 이혼 중 다문화 이혼 비중이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 비중에 비해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예외적으로 다문화 이혼 비중이 낮은 것으로 여겨짐

3) 고령화 및 사망력

- 강원도 강릉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05년 11.2%에서 2016년 17.6%로 상승함. 고령화지수 역시 2008년 80.1에서 2016년 149.1로 증가하여 유소년 인구 1인 당 노인 인구가 약 1.5명 정도인 것으로 확인됨. 앞에서 살펴본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유사한 수준의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음
- 강원도 강릉시의 사망력의 경우 지난 2005년에 비해 2015년 상당히 개선된 것이 특징임. 연령표준화 사망률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지난 2005년 인구 십만 명당 825.8명에서 2015년 520.8명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여성 역시 같은 기간 393.1명에서 233.8명으로 역시 감소함. 남성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2015년 전국의 480.6명 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지만, 여성의 경우 전국의 244.4명 보다 오히려 더 낮은 수준임. 분석기간 동안 확인된 사망력 감소는 전국적인 추세와 일치하지만, 강릉시의 경우 그 개선 정도가 좀 더 높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판단됨

[그림 4-40] 강원도 강릉시의 성별 연령표준화 사망률, 2005~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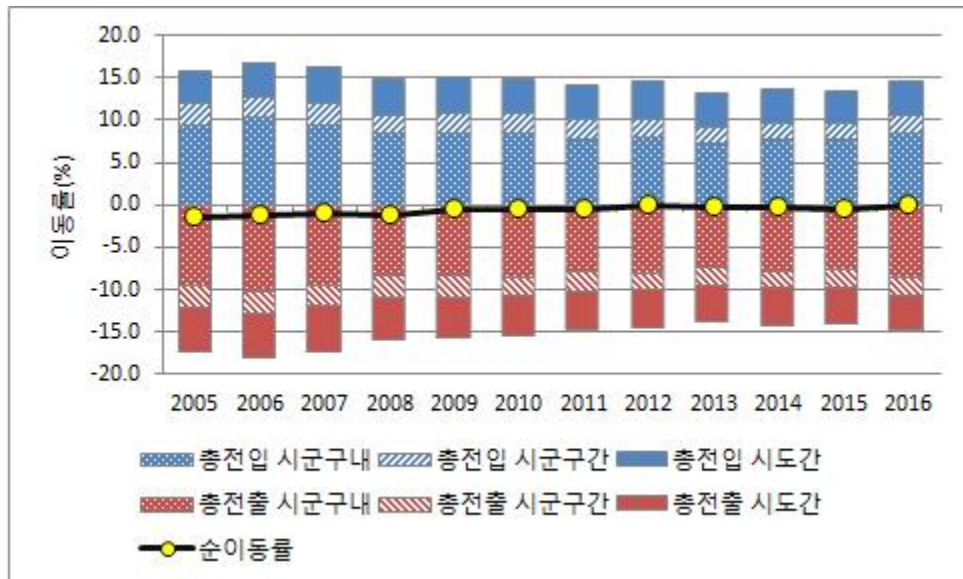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4) 인구이동

○ 강원도 강릉시는 2005년 이후 줄곧 인구 순유출 지역이었으나 그 규모가 크지 않았음. 지난 2005년 총전입률이 15.8%로 총전출률 17.2% 보다 낮아 순이동률이 -1.4%였으나, 2016년 총전입률 14.5%, 총전출률 14.8%로 순이동률 -0.2%를 기록함. 2016년의 경우 전국의 총전입률과 총전출률 14.4%와 유사한 수준임. 2010년 이후에는 순이동률 -0.6~0% 정도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음. 특이한 점은 강릉시의 총전입률과 총전출률의 과반 이상이 강릉시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임. 강릉시 관내 전통 주거지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주거지역으로, 또는 강릉시 주변 농어촌 등 외곽에서 도심으로 활발한 인구이동이 발생했던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그림 4-41] 강원도 강릉시 지역단위별 총전입률, 총전출률, 이동률의 변화, 2005~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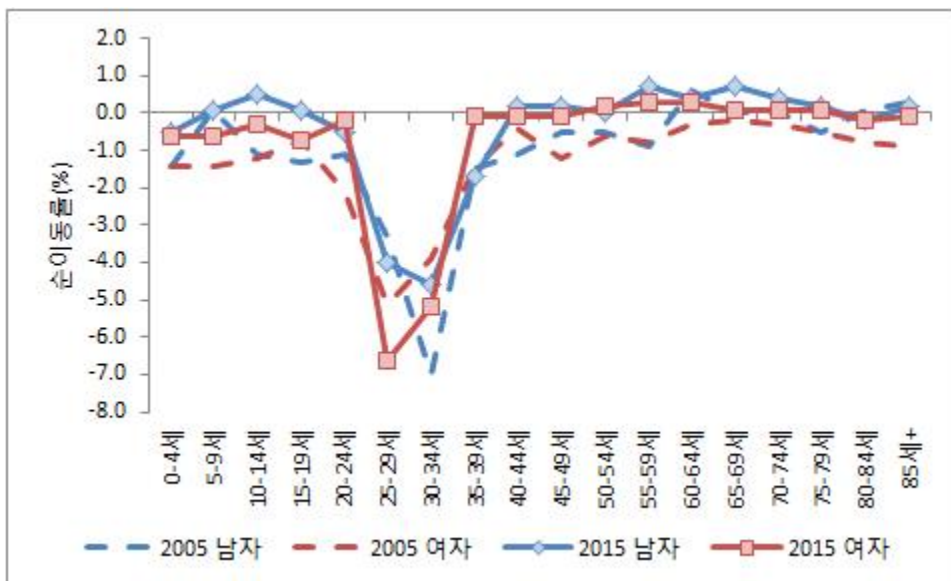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 강원도 강릉시의 성 및 연령별 순이동률 양상은 매우 흥미로운 양상을 보임. 일반적으로 고등교육을 마치고 취업활동과 가족형성이 활발히 진행되는

25~29세와 30~34세 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구유출이 진행되고 있음. 과거 2005년과 비교해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연령별 인구이동 그 자체는 큰 변화가 없음. 다만 유소년기와 청장년층에서 과거 2005년 남녀 모두 2.0% 이내의 인구 순유출이 있었지만, 2015년에는 연령별 순이동을 제로에 가까워지거나 오히려 일부 연령대에서 인구유입으로 전환되기도 함

- 강릉시에 국공립 및 사립대학이 위치한 점을 감안하면, 대학졸업자 또는 지역의 청년들이 취업 또는 기타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례를 추론해 볼 수 있음. 구체적으로 20대 초반의 경우 강릉시 인구의 유출과 유입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었던 반면, 20대 중후반 이후 대학 진학 등을 이유로 유입되었던 인구와 지역 출신 인구의 유출이 유입을 크게 초과하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음
- 지역사회의 산업 및 경제구조가 청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인구가 정착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청년층 인구의 정착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그림 4-42] 강원도 강릉시 성 및 연령별 순이동률, 2005~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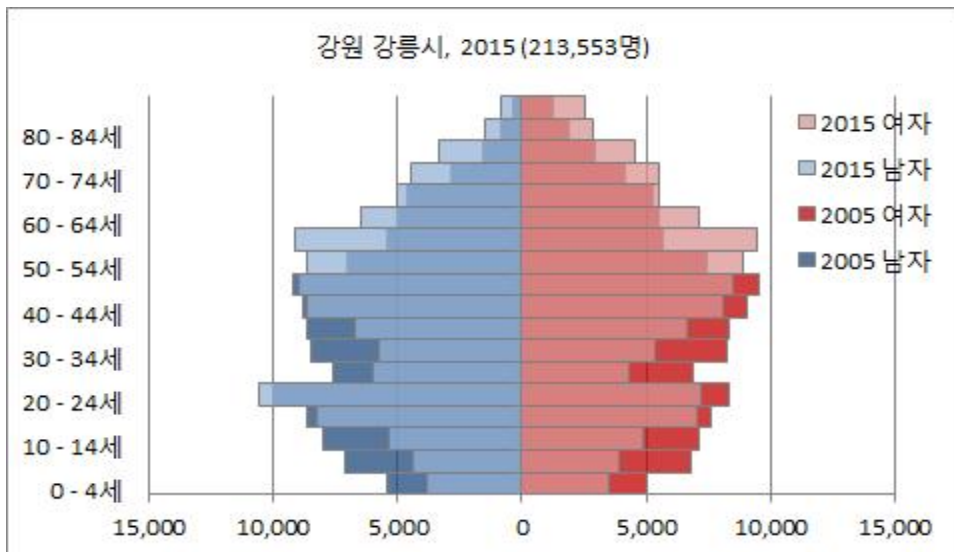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5) 인구변동과 인구구조

○ 강원도 강릉시의 인구구조는 초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20대 후반과 30대의 인구유출로 독특한 형태를 가짐. 구체적으로 2005년의 경우 출생률과 사망률이 낮은 전형적인 방추형 인구피라미드로서 이른바 선진국형 모습을 보인 반면, 2015년에는 허리가 잘록하고 15~19세와 20~24세 연령대가 예외적으로 큰 표주박 형태를 띠. 특히 20~24세의 인구의 확연히 높은 비중은 지역의 대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짐. 해당 연령대에 상대적으로 남성 인구가 많은 점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나, 대학 진학에 수반되는 국내이동과 관련하여 성별과 관련된 제도적·관습적 요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결과적으로 강릉시의 인구피라미드는 베이비붐 세대 이후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청년층 인구는 교육을 매개로 한 지역 특성에 의한 것으로 여겨짐. 향후 강릉시에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지역과 연고를 맺은 청년층 인구의 유출을 막고 장기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그림 4-43] 강원도 강릉시의 성 및 연령별 인구구조, 2005~2015



자료: 주민등록인구(통계청 2017)

다. 초저출산 - 인구유입: 인천광역시 연수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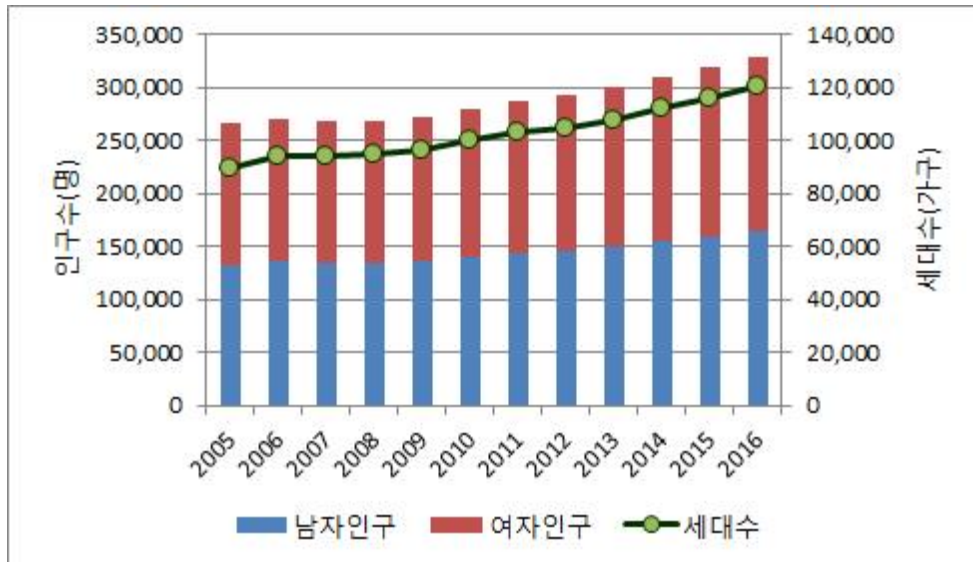
- 초저출산 지역 중 상대적으로 인구유입이 많은 지역들은 주로 수도권 위성도시, 지방의 일부 대도시 지역과 혁신도시 지역이 포함됨. 주로 인구규모가 있는 도시지역이라는 특징을 가짐
- 9개 지역: 강원 원주시, 경기 고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수원시, 경기 의왕시, 경기 하남시, 대구 중구, 인천 남동구, 인천 연수구
-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2002년 합계출산율 1.3이하로 하락한 이후 지속적인 초저출산을 경험함. 하지만 상대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며, 특히 인구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초저출산 인구유입 유형을 대표하는 사례지역으로 선정함

1) 인구, 가구, 인구동태

-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주민등록인구와 주민등록세대수 모두 꾸준히 증가함. 주민등록인구는 2005년 265,658명에서 2016년 328,627명으로 11년 동안 무려 62,969명이 증가함. 해마다 최소 630명(2007년)에서 최대 4,660명(2016년) 정도 증가함. 주민등록세대수 역시 2005년 89,463세대에서 2010년 십만 세대를 넘었고, 2016년 120,580세대까지 증가함
- 연수구의 외국인주민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함.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전체 외국인주민은 2007년 2,416명에서 2015년 7,527명으로 8년 간 무려 세 배 이상 증가하였음. 2015년 현재 외국인근로자 2,484명, 기타외국인 1,882명 외국국적동포 1,813명 등 넓은 의미에서 이주노동자로 분류될 수 있는 외국인주민의 비중이 높은 편임. 아울러 국적을 취득한 혼인귀화자가 425명, 기타사유로 귀화한 자가 230명으로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가 747명을 함께 고려하면 다문화 가정의 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실제 2015년 외국인 주민의 자녀가 996명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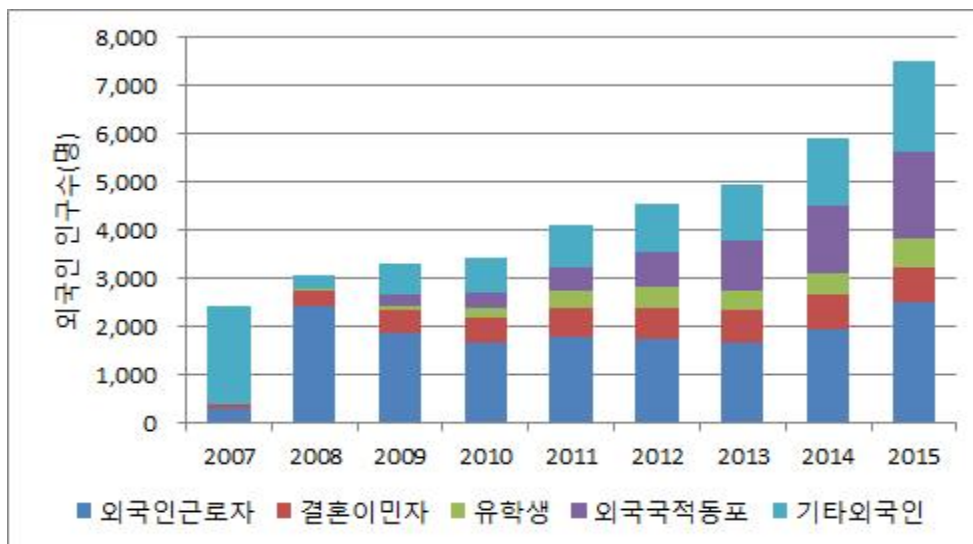
음. 유사한 인구규모의 다른 시군구에 비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정이 많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

[그림 4-4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수 변화, 2005~2016



자료: 주민등록인구통계(통계청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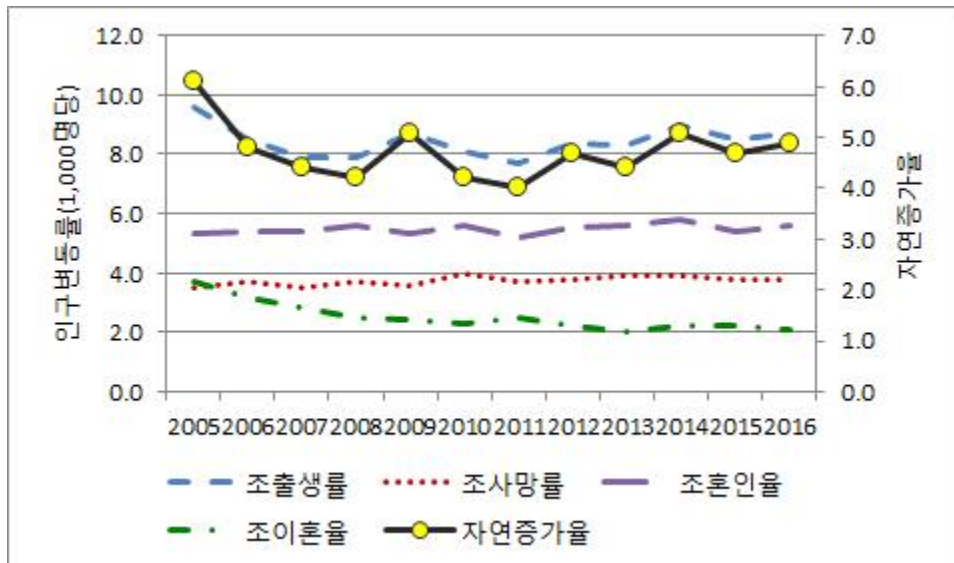
[그림 4-45] 인천광역시 연수구 외국인주민 인구변화, 2007~2015



자료: 외국인주민 현황(행정자치부 2017)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조사망률은 매년 조금씩 오르내림을 보이고 있는 반면 조사망률은 큰 변화 없이 안정되어 있음. 조출생률은 2005년 인구 천 명당 7.9건에서 연간 변화를 거쳐 2016년 8.7건을 기록함. 조사망률은 분석기간 인구 천 명당 3.5~4.0건을 유지하였고 2013~2015년 사이 3.8건으로 2015년 전국 5.4건에 비해 낮은 수준임. 안정적인 조사망률 탓에 연수구의 자연증가율은 조출생률의 변동에 반응해 왔으며, 2016년 인구 천 명당 4.7명으로 전국의 3.2명 보다 조금 높았음. 조혼인율 역시 분석기간 인구 천 명 당 5.2~5.8건 사이를 유지하였고 2015년 5.2건을 기록함. 조혼인율 역시 큰 변화가 없는 편이지만 2015년 1.8건으로 예년에 비해 0.3~0.4건 감소함. 상대적으로 낮은 조사망률과 지속적인 양(+)의 자연증가율 등 연수구의 최근 인구동태는 향후 인구변동에 관해 긍정적인 전망을 갖게 함

[그림 4-46]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요 인구동태 변화, 2005~2015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2) 출산 및 혼인 동향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합계출산율은 분석기간 내내 1.3 이하를 유지해 옴. 지난

2005년 1.063이었던 합계출산율은 일시적인 등락을 반복한 후 2015년 현재 1.215를 기록함. 특히 2010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2 근처에서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은 전국적인 추세와 유사함. 예컨대 25~29세 출산율의 점진적인 하락과 30대, 즉 30~34세와 35~39세 출산율이 동반 상승해 옴. 이로 인해 지난 2007년 25~29세 출산율과 30~34세 출산율 추세선이 교차하였고, 이후 격차가 더욱 벌어짐. 하지만 전국적으로 35~39세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달리, 연수구의 경우 해당 연령대 출산율이 정체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며,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출산변화를 의미하는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경우, 총출생아수가 2005년 2,054명에서 2015년 2,646명으로 증가함. 첫째아 출생아 비중이 48.4%에서 53.1%로 증가한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연수구의 빠른 인구증가에 비해, 다문화 출생건수는 2008년 65건에서 2015년 95건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침. 전체 출생아수 중 다문화 출생 비중 역시 2005년 이후 매년 3.0~4.1% 정도로 유지되었으며, 2015년의 경우 3.6%로 전국의 4.5% 보다 낮은 수준임

〈표 4-10〉 인천광역시 연수구 합계출산율 및 연령별 출산율(천 명당)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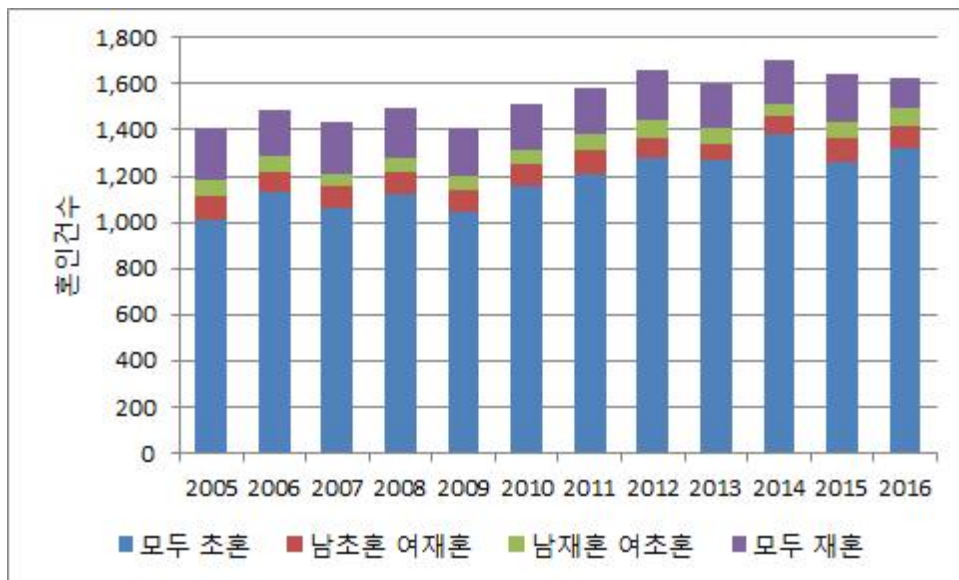
연도	합계출산율	연령별 출산율(천 명당)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2005	1.063	1.9	15.0	93.0	79.1	16.9	2.0	0.1
2006	1.090	1.9	14.4	91.0	82.4	19.0	1.8	0.2
2007	1.230	1.7	15.9	96.8	98.0	22.5	2.0	0.1
2008	1.149	1.4	14.8	81.2	100.7	22.7	2.8	0.2
2009	1.094	2.7	11.9	80.4	90.7	26.8	2.6	0.1
2010	1.207	1.7	11.0	76.3	114.4	32.2	3.7	0.3
2011	1.194	1.5	10.2	75.2	117.6	30.3	3.1	0.2
2012	1.284	1.1	10.7	73.6	128.1	37.2	4.4	0.1
2013	1.210	1.9	10.0	59.3	124.8	39.5	3.3	0.1
2014	1.234	1.0	9.4	61.4	118.6	46.8	5.5	0.0
2015	1.215	1.4	9.3	58.8	123.3	42.6	4.3	0.1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혼인건수는 2005년 1,419건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2016년 1,627건을 기록함. 전체 혼인 중 남녀 모두 초혼인 유형이 2005년 71.2%에서 2016년 81.1%로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임. 반면 남녀 모두 재혼인 경우는 실제 혼인건수 및 그 비중이 모두 감소함

- 장기적으로 혼인건수가 증가해왔음에도 연수구의 남녀 평균초혼연령은 전국과 큰 차이가 없었음. 실제로 2015년 남성 32.5세, 여성 30.0세로 전국의 남성 32.8세와 여성 30.1세와 매우 유사함. 연수구 청년층 사이에서 혼인이 확대되기 보다는 대규모 주거지역의 건설 등 혼인시기에 있는 청년층의 인구 유입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됨

[그림 4-47] 인천광역시 연수구 혼인상태별 혼인건수, 2005~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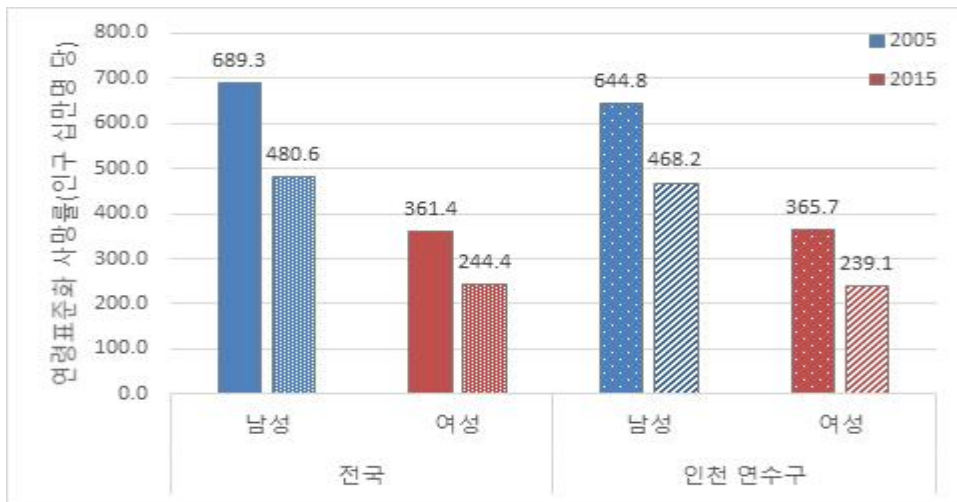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다문화 혼인은 2008년 140건, 전체 혼인 중 9.0%에서 2015년 86건, 5.2%로 감소하였으며, 다문화 이혼 역시 2008년 이후 전체 이혼 중 9.0~11.1%를 유지하다 2016년 8.6%로 하락함. 2015년 전국의 다문화 혼인비중 7.5%, 다문화 이혼 10.3%에 비해 각각 2.0%p 이상 낮은 수준임

3) 고령화 및 사망력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고령인구 비율이 지난 2005년 5.7%에서 2016년 8.2%로 약 2.5%p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전국 13.5%에 비해 무려 5.2%p 낮은 수준임. 마찬가지로 고령화지수 역시 2016년 52.3에 그치고 있어 유소년 인구가 노인 인구보다 오히려 약 두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사망력은 전국과 비슷한 수준임. 2015년 기준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남성이 인구 십만 명당 468.2명, 여성은 239.1명으로 전국의 480.6명과 244.4명보다 조금씩 낮은 수준임

[그림 4-48]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성별 연령표준화사망률, 2005~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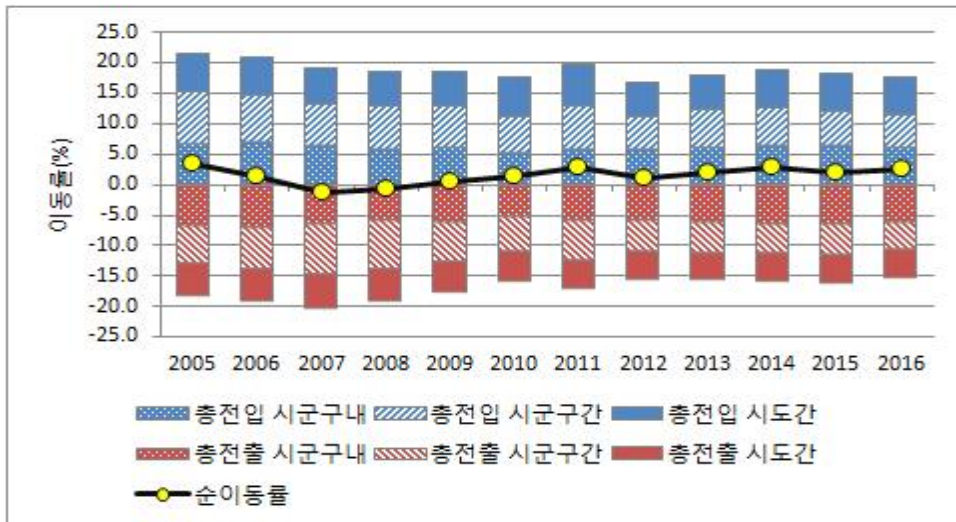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4) 인구이동

○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분석시간 동안 2007~2008년을 제외하고, 매년 인구의 유입이 유출 보다 많은 지역임. 특히 2010년 이후 해마다 최소 1.1%에서 최대 2.9%의 순이동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6년의 경우 총전입률 17.8%, 총전출률 15.3%로 2.5%의 순이동률을 보임. 같은 해 전국 총전입률과 총전출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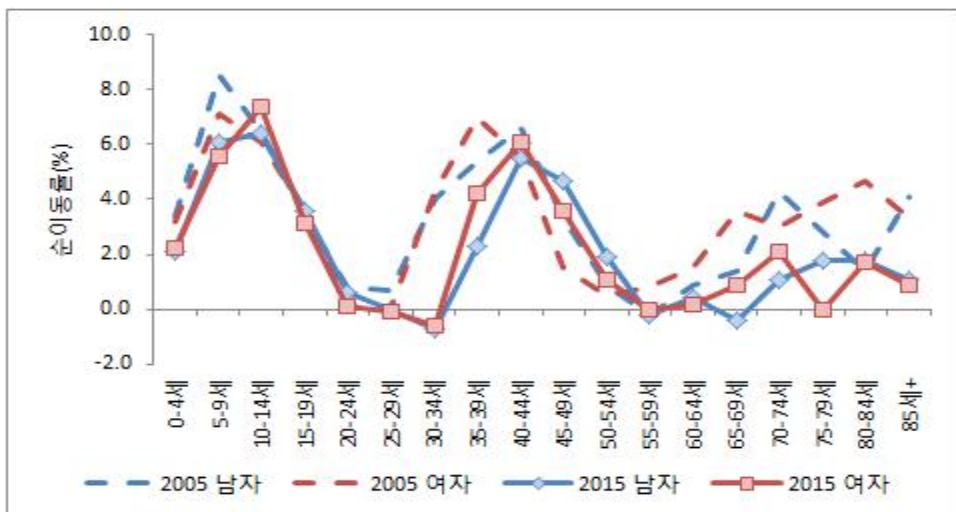
14.4%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활발한 인구이동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총 전입과 총전출 지역이 연수구 내, 인천광역시 내 다른 지역, 다른 시도 지역으로 고루 분포된 점이 특징임

[그림 4-49]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단위별 총전입률, 총전출률, 이동률의 변화, 2005~2016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그림 4-50]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성 및 연령별 순이동률, 2005~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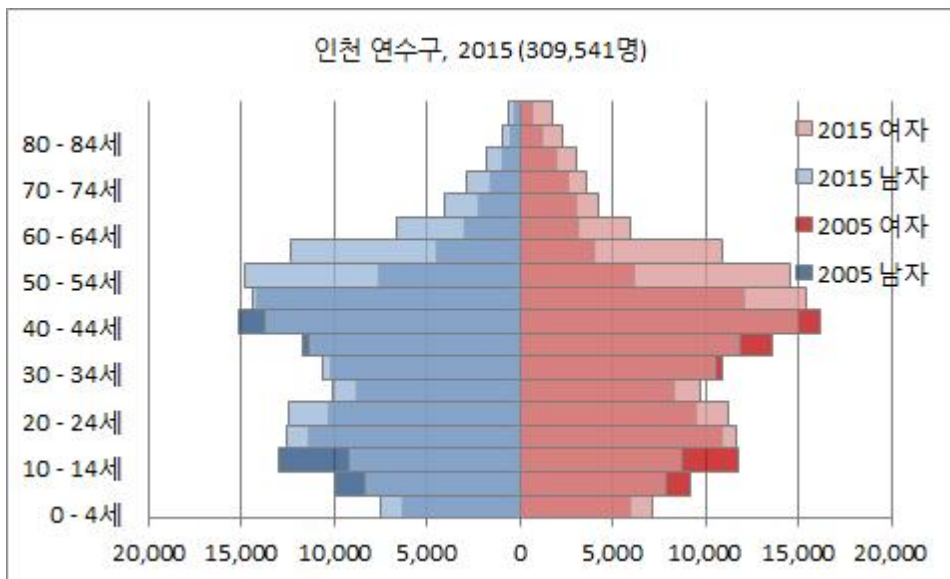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연령에 따라 차별적인 인구이동이 관찰됨. 우선 2015년 연령별 순이동률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30대 후반부터 50대에 이르는 청장년 층과 그 자녀 세대에 해당하는 0~19세 유소년층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인구가 순유입되었음. 아울러 그 부모세대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년층에서도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인구유입이 관찰됨

- 이 같은 낙타봉 형태의 인구유입 유형은 과거 2005년의 연령별 순이동률에서도 확인됨. 다만 2005년과 비교할 때, 2015년에 인구 순이동을 보이는 연령대가 조금 상승했다는 점과 노년층 인구의 유입이 다소 완만해 졌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음
- 이 같은 연령별 인구이동 유형은 연수구의 인구 유입이 교육 또는 일자리 등에 쫓기라기보다는, 신도시 및 주택단지 건설과 연관된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이주에 의한 것으로 해석됨

5) 인구변동과 인구구조

[그림 4-5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성 및 연령별 인구구조, 2005~2015



자료: 주민등록인구(통계청 2017)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인구피라미드는 초저출산과 고령화, 연령 차별적인 인구 유입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짐. 구체적으로 2005년의 경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10~14세와 장년층의 40~49세 인구가 많고 25~29세 인구가 상대적으로 작아 모서리가 분명한 별 모양의 인구피라미드를 가짐. 2015년 역시 별 모양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속되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좀 더 완만한 형태로 변화함
 - 두 인구피라미드의 비교를 통해 전체적인 인구성장과 노년층과 장년층 인구의 증가, 0~4세 유아인구의 증가 등을 확인됨. 연수구의 경우 현재 50대 인구가 노년층으로 진입하는 10년 후부터 고령화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장기적인 초저출산은 향후 인구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특정 연령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던 인구 순유입이 향후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 현재 청소년기에 있는 많은 인구가 곧 성년기로 접어드는 만큼, 해당 연령대의 인구 유출을 막고 청년 인구를 유지하는 방안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3. 초고령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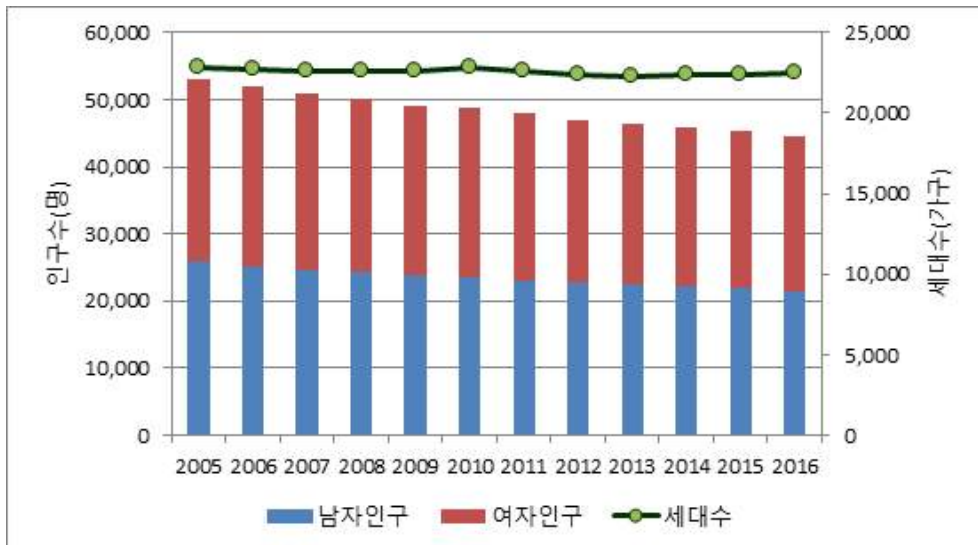
가. 초고령 - 인구유출: 전라남도 보성군

- 초고령 지역으로 분류된 곳 중 상대적으로 인구의 유출 정도가 심한 곳은 모두 전라남도 농어촌지역이라는 공통점을 가짐
- 4개 지역: 전남 강진군, 전남 보성군, 전남 영암군, 전남 화순군
- 전라남도 보성군은 전국에 비해 합계출산율이 높은 곳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대표적인 초고령 사회로 일컬어지고 있음. 또한 해마다 0.6~1.7%의 지역 인구가 순유출 되고 있어 초고령 인구유출 지역의 심층분석 사례지역으로 선정함

1) 인구, 가구, 인구동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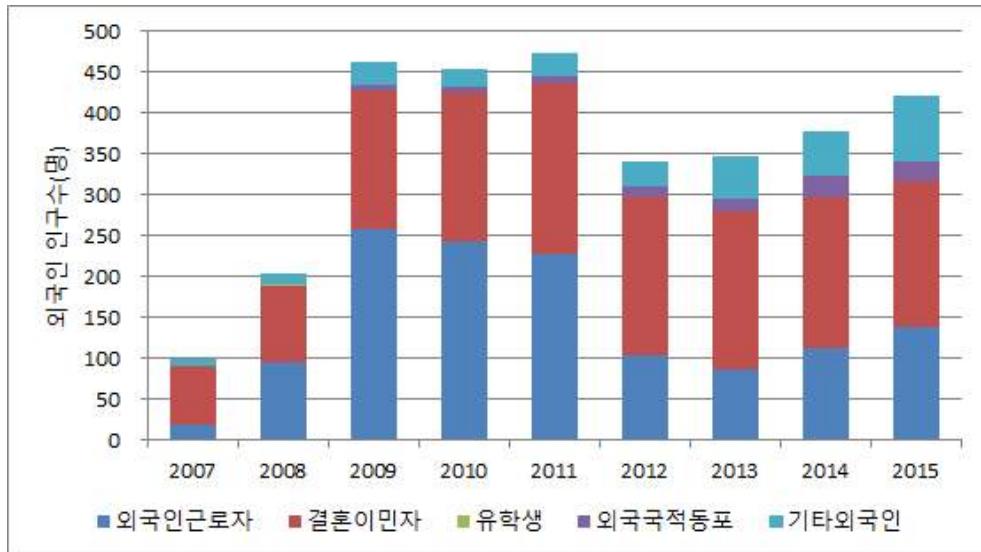
- 전라남도 보성군의 주민등록인구는 꾸준히 감소해 옴. 주민등록인구는 2005년 53,145명에서 2016년 44,469명으로 8,676명이 감소하였으며, 해마다 적게는 256명 많게는 1,197명씩 줄었음
 - 주민등록세대수는 2005년 22,862세대에서 2016년 22,449세대로 조금 감소하였지만, 전국적인 세대수 증가 추세와는 확실히 구별됨
- 보성군의 외국인주민은 2007년 99명에서 빠르게 증가하여 2011년 474명으로 정점을 기록하였고, 2012년 일시적인 감소 후 2015년 431명을 기록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주민 중 결혼이민자 비중이 2015년 42.3%로 높은 것으로 확인됨. 혼인귀화자 역시 2015년 122명이었고, 외국인 주민 자녀 역시 430명(외국인 부모 1명, 외국인-한국인 부모 414명, 한국인 부모 8명)임. 보성군 전체인구를 감안하면 다문화가정의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라고 볼 수 있음

[그림 4-52] 전라남도 보성군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수 변화, 2005~2016



자료: 주민등록인구통계(통계청 2017)

[그림 4-53] 전라남도 보성군 외국인주민 인구변화, 2007-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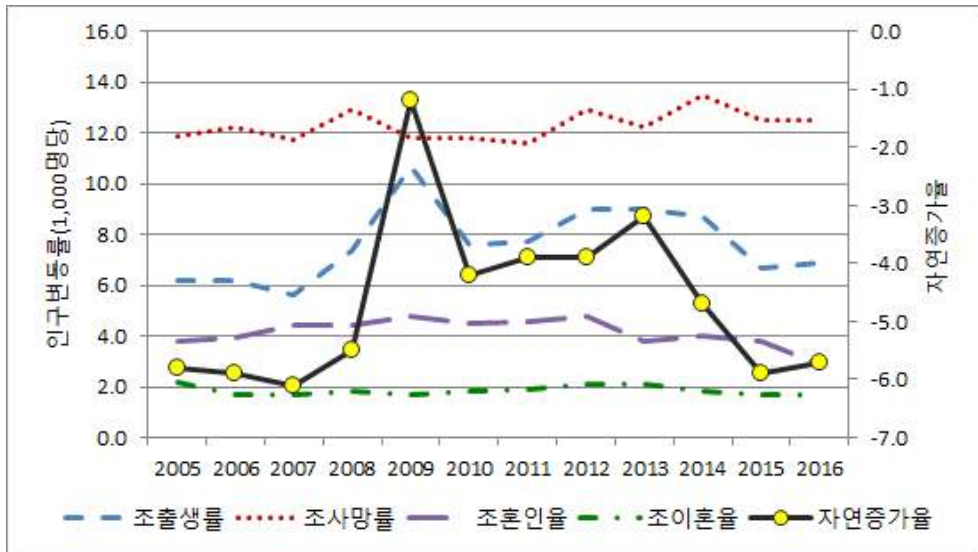


자료: 외국인주민 현황(행정자치부 2017)

○ 전라남도 보성군은 전국에 비해 조출생률이 낮은 반면 상대적으로 조사망률이 높고 조혼인률과 조이혼률이 낮은 것이 특징임

- 조출생률은 2005년 인구 천 명당 5.6명에서 2009년 한때 10.7명에 이르렀지만, 연간 변화를 거쳐 2016년 6.5명을 기록함. 반면 조사망률은 지난 2005년 인구 천 명당 11.7명을 기록한 후 큰 변화 없이 2016년 12.5명을 기록함
- 보성군의 2015년 조출생률은 같은 해 전국의 8.6명에 비해 낮고, 조사망률의 경우 전국의 5.3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임. 한편 2015년 조혼인율은 인구 천 명당 3.8건으로 전국의 5.9건 보다 낮았으며 조이혼율은 2.2건으로 전국 2.1건과 비슷한 수준이었음
- 사실 보성군은 합계출산율이 높은 곳으로 전국에 비해 낮은 조사망률 지표는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의 인구구조를 반영한 탓으로 여겨짐. 보성군의 높은 조사망률과 조혼인률 역시 같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음

[그림 4-54] 전라남도 보성군 주요 인구동태 변화, 2005~2015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2) 출산 및 혼인 동향

- 전라남도 보성군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229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 줄곧 1.6 이상의 높은 수준을 기록해왔음. 특히 지난 2007년과 2010~2012년의 경우 일시적으로 합계출산율이 2.0 이상을 기록하기도 하였지만, 2015년 현재 1.700을 기록하고 있음. 실제로 보성군은 전라남도의 인근 지역들과 함께 대표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지역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음
- 모의 연령별 출산율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전국 보다 높은 출산율을 기록함. 다른 지역과 다르게 2005년부터 2011년 사이 25~29세와 30~34세 출산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에서 유사한 추세를 유지함. 또한 20~24세 출산율이 분석기간 내내 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음. 30~34세 출산율이 높은 수준에서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과 달리 20~24세와 25~29세 출산율은 2012년부터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함. 절대적인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보성군의 인구규모를 감안하면, 결혼이민자 또는 혼인이주자들의 출산이 지역의 높은 합계출산율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됨. 고령인구가 많은

보성군의 연령구조를 감안하면, 꾸준한 인구유입 또는 다문화 혼인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합계출산율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표 4-11〉 전라남도 보성군 합계출산율 및 연령별 출산율(천 명당)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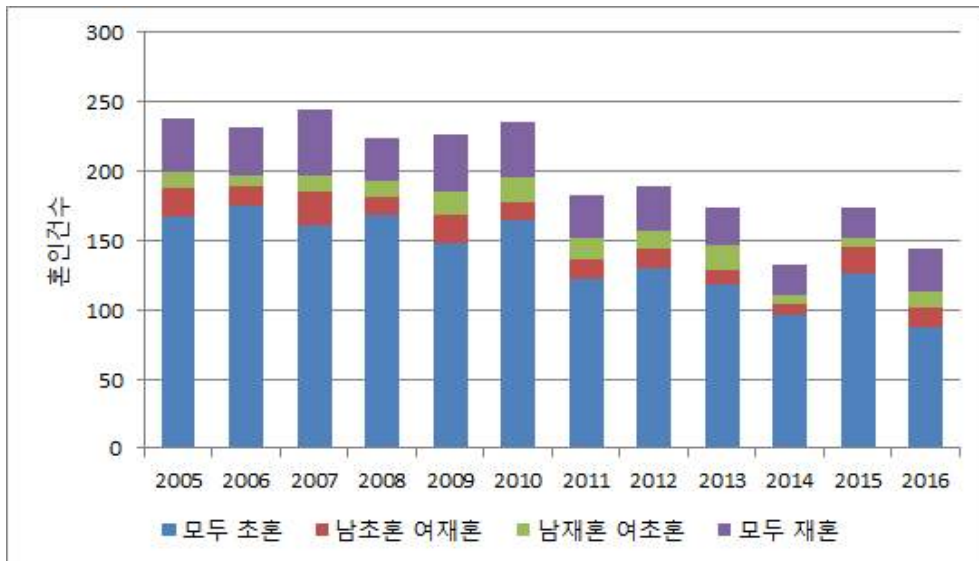
연도	합계출산율	연령별 출산율(천 명당)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2005	1.229	4.1	25.5	100.0	79.4	26.8	3.9	1.1
2006	1.638	7.5	33.1	130.4	103.1	39.4	3.4	1.1
2007	2.332	7.2	29.1	175.2	182.8	56.9	9.3	0.6
2008	1.641	5.0	37.0	123.7	122.3	33.2	5.3	0.0
2009	1.679	3.5	40.8	127.7	130.3	27.6	4.8	1.8
2010	2.003	2.7	38.8	146.7	166.9	43.7	5.7	0.0
2011	2.049	2.7	43.2	159.9	152.5	47.9	5.9	0.0
2012	2.055	2.7	37.6	136.2	170.7	60.6	5.2	0.0
2013	1.615	5.4	23.9	71.3	150.6	65.0	6.4	0.0
2014	1.737	0.9	26.3	101.9	158.1	49.2	10.5	0.0
2015	1.700	1.9	25.0	89.5	149.3	64.0	11.1	0.0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 전라남도 보성군의 총출생아수는 2005년 301명에서 2007년 한 때 549명까지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2015년 295명을 기록함. 출산순위별로 살펴보면 2015년 전체 출생아수 295명 중 셋째아 이상 고순위 출생아가 58명, 19.7%로 전국의 9.7%에 비해 높은 편임. 지역사회에 고순위 출산에 대한 선호가 공유되고 있거나 또는 고순위 출산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보성군의 다문화 출생은 2005년 26건에서 2011년 47건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해마다 조금씩 줄어 2015년 26건을 기록함. 다문화 출생비중이 최근 몇 년간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출생아 중 8.8%로 전국의 4.5%(2015년)보다 높았음
- 보성군의 혼인건수는 2005년 238건을 기록하고 2010년까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였으나 2011년 183건으로 감소한 후 장기적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에 있음. 2016년의 경우 총 144건의 혼인만이 신고되었고, 그 중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는 87건으로 60.4%에 불과함. 혼인의 감소, 특히 초혼의 감소는 남녀 평균초혼연령의 상승을 초래함. 예컨대, 과거 2005년 보성군의 평균초혼 연령은 남성 31.4세와 여성 26.9세로 전국의 평균초혼연령에 비해 남성은 0.5세 높고 여성은 0.5세 낮았지만, 2016년 평균초혼연령은 남성 34.1세, 여성 30.3세로 전국에 비해 각각 1.5세, 0.3세 높은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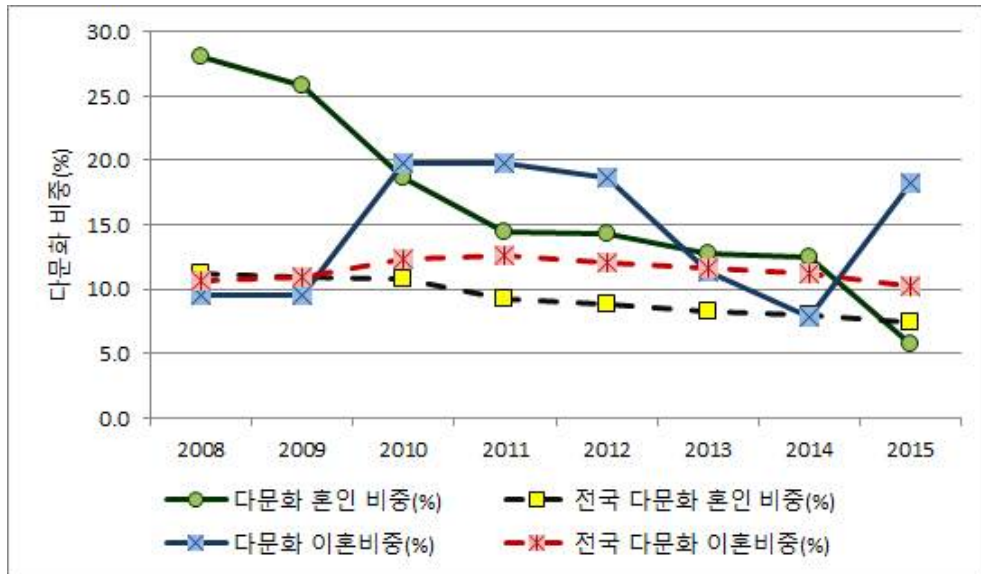
[그림 4-55] 전라남도 보성군 혼인상태별 혼인건수, 2005~2016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 전라남도 보성군의 다문화 혼인은 2008년 64건, 전체 혼인 중 28.0%에서 2015년 10건, 5.8%로 빠르게 감소함. 보성군의 다문화 혼인비중 감소는 전국적인 추세에 비해 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보성군의 인구 규모를 감안하면 혼인시장에 있는 잠재적 혼인대상자 규모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음. 한편 전체 이혼 중 다문화 이혼비중은 2005년 10.0%에서 2011년 19.8%를 기록하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큰 변동 폭을 보여줌. 특히 2015년 다문화 이혼비중이 18.2%로 전국의 10.3%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임

[그림 4-56] 전라남도 보성군 다문화 혼인비중 및 다문화 이혼비중 변화, 2008-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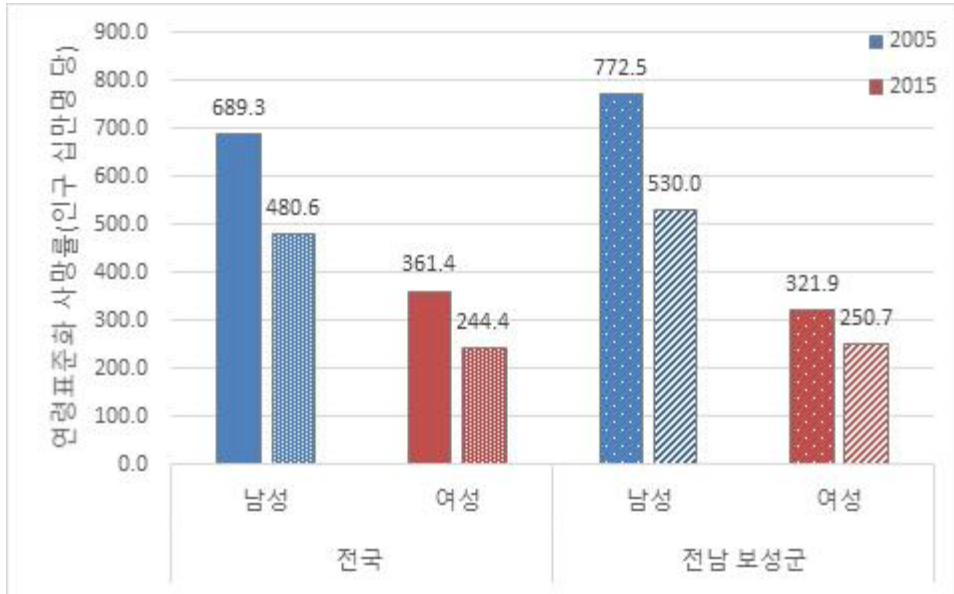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3) 고령화 및 사망력

- 전라남도 보성군은 대표적인 초고령 지역임. 고령인구 비율이 지난 2005년에 이미 25.4%를 기록하여 주민 4명 당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었으며 2016년에는 34.3%까지 상승함. 고령화지수 역시 상당히 높아서 2016년 389.9을 기록하였으며, 유소년 1명 당 노인이 약 3.9명일 정도로 고령자 비율이 높은 지역임
- 전라남도 보성군의 사망력은 전국에 비해 높은 수준임. 2015년 보성군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남성 530.0명으로 전국의 480.6명 보다 높았으며, 여성은 250.7명으로 전국의 244.4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사망원인별로 살펴보면 특이하게도 남녀 모두 소화계통의 질환과 간 질환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전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보성군의 사회경제적 특성 또는 생활 및 식습관이 특정 사망원인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그림 4-57] 전라남도 보성군의 연령표준화 사망률, 2005~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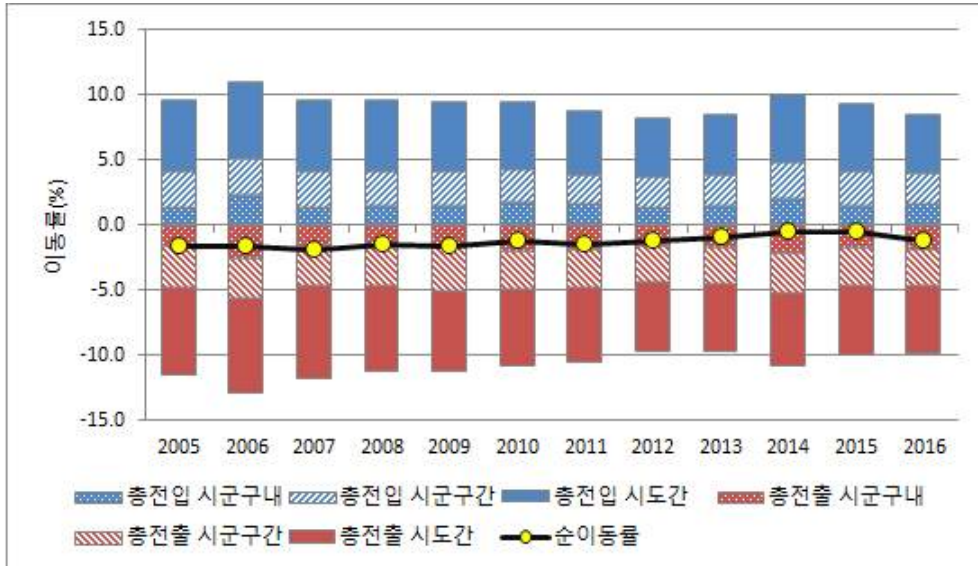


주: 일부 사망원인의 경우 대분류와 세분류를 함께 포함하고 있음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4) 인구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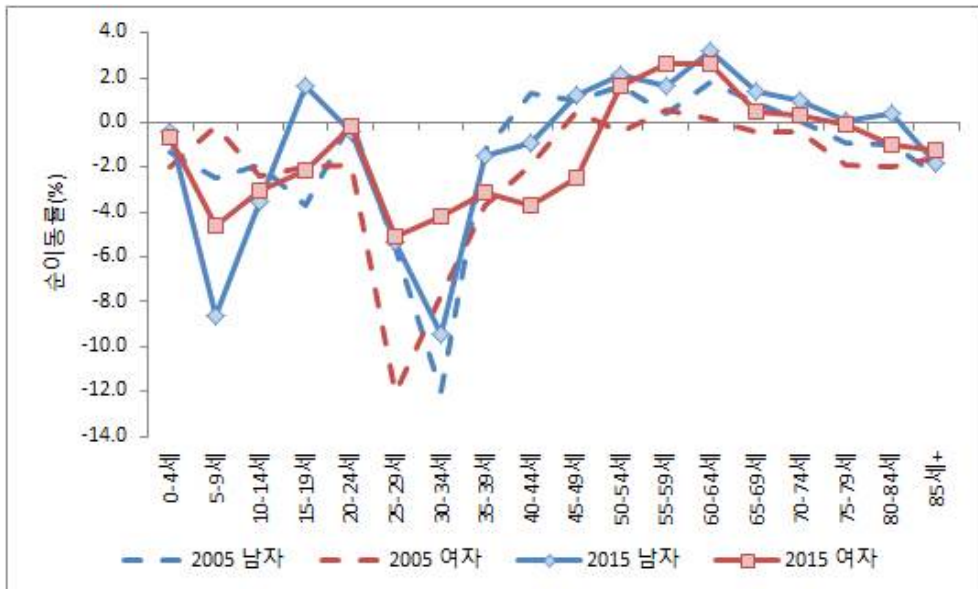
- 전라남도 보성군은 2005년 이후 인구의 유출이 유입 보다 꾸준히 많은 지역으로 해마다 최소 0.6%에서 최대 2.0%의 순인구 유출률을 기록하함
- 가장 최근 2016년의 경우 총전입률은 8.6%, 총전출률은 9.7%로 -1.2%의 순이동률을 기록함. 전국 총전입률과 총전출률이 14.4%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인구이동이 드문 지역으로 간주될 수 있음
- 특히 과반이 넘는 총전입과 총전출이 보성군 관내나 전라남도 내 다른 지역 보다는, 다른 시도 지역과의 인구이동이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 4-58] 전라남도 보성군 지역단위별 총전입률, 총전출률, 이동률의 변화, 2005~2016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그림 4-59] 전라남도 보성군의 성 및 연령별 순이동률, 2005~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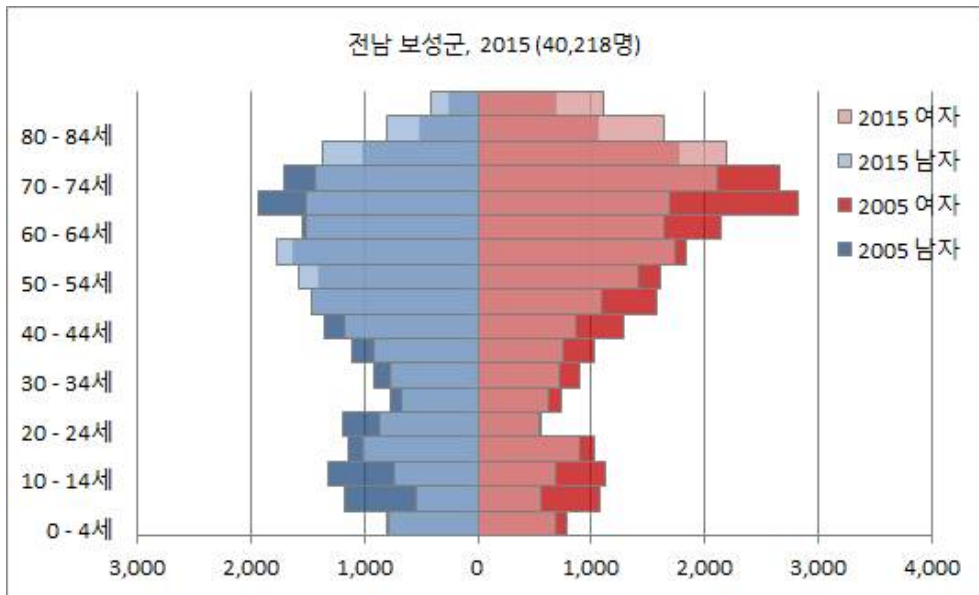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 전라남도 보성군 역시 연령에 따라 차별적인 인구이동 유형을 가짐. 남녀 모두 0~19세 유소년기에 인구 순유출을 경험하고 있고, 성별에 따라 규모가 다르지만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 사이에 인구유출이 집중됨. 주로 취업을 목적으로 한 청년층의 이동이나, 교육 등을 이유로 자녀를 동반한 가족들의 유출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반면 50~60대 중장년층의 경우 귀농 및 귀촌 등의 이유로 인구 순유입이 관찰되는 것으로 여겨짐. 2005년과 2015년 사이의 인구변화에도 불구하고, 순이동률의 연령별 경향 자체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여겨짐. 유소년층을 동반한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은 보성군의 이미 심각한 고령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어 전망을 어둡게 함

5) 인구변동과 인구구조

[그림 4-60] 전라남도 보성군의 성 및 연령별 인구구조, 2005~2015



자료: 주민등록인구(통계청 2017)

○ 전라남도 보성군은 초고령화와 인구의 지속적 유출로 인해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움. 합계출산율은 지표상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15~49세 가임기 여성 인구의 규모가 작아 실제 유소년 인구 규모 역시 작음. 결과적으로 보성군의 인구피라미드는 2005년과 2015년 모두 ‘버섯구름’ 모양을 하고 있음. 특히 2015년의 경우 40대 이하의 연령대는 매우 얇은 반면, 50대 이상 중고령자층은 상대적으로 두껍게 형성됨. 또한 40세 미만 5세 연령집단에서 남녀 각각 1,000명의 인구에 미치지 못함. 청년층 인구의 절대적인 부족현상은 보성군의 높은 합계출산율을 무색케 하고 있으며, 다문화 출생의 도움이 없을 경우 지역의 출산력 수준에 대한 평가 역시 달라졌을지 모름

- 전라남도 보성군의 경우 특히 높은 고령인구 비율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인구 감소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보성군의 인구규모를 감안할 때, 이미 진행 중인 인구감소의 가속화는 지역사회의 역할과 기능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이 될 수 있음. 보성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한 인구고령화를 겪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의 인구변동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에 관한 학술적·정책적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나. 초고령 - 인구이동 평균: 전라남도 함평군

- 초고령 사회로 분류되는 지역 중 인구이동이 평균 수준인 곳들은 주로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으로 구성됨. 경기도 연천군을 제외하고,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물론 대도시 지역이 모두 제외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음
- 48개 지역: 강원 고성군, 강원 삼척시, 강원 홍천군, 경기 연천군, 경남 거창군, 경남 고성군, 경남 의령군, 경남 함양군, 경북 고령군, 경북 군위군, 경북 문경시, 경북 봉화군, 경북 상주시, 경북 성주군, 경북 안동시, 경북 영덕군, 경북 영양군,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예천군, 경북 울진군, 경북 의성군, 경북 청송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담양군, 전남 신안군, 전남 영광군, 전남 완도군, 전남 장성군, 전남 진도군, 전남 함평군, 전남 해남군, 전북 고창군, 전북 김제시, 전북 남원시, 전북 무주군, 전북 부안군, 전북 임실군, 전북 장수군, 전북 정읍시, 전북 진안군, 충남 금산군, 충남 논산시, 충남 보령시, 충남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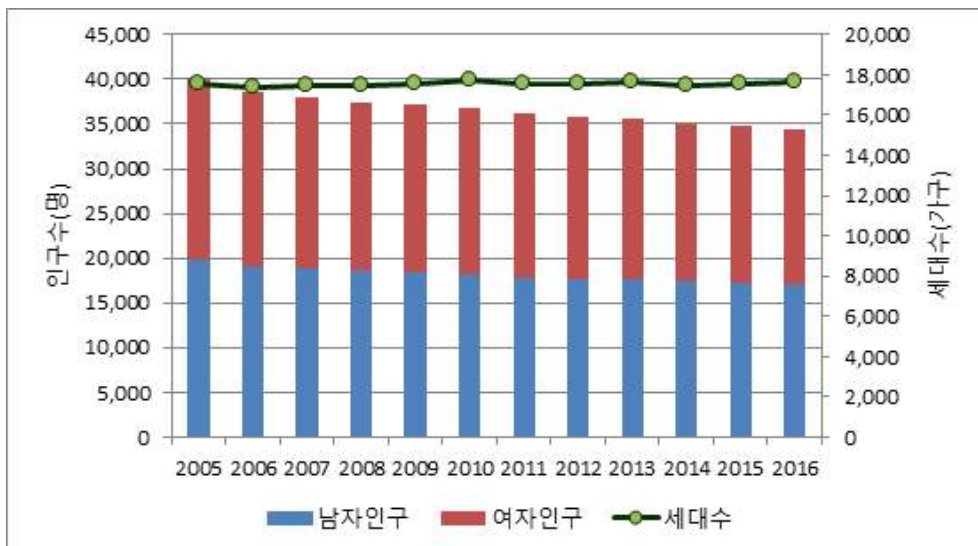
천군, 충남 태안군, 충북 보은군

-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속해 있는 만큼 지역마다 다른 인구변화의 특색을 가짐.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 지역 중 인구이동이 평균 수준인 지역으로 전라남도 함평군을 심층분석 사례지역으로 선정함. 전라남도 함평군은 2005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4 이상을 유지해왔으며,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를 유지하며 해마다 증가해왔음. 인구이동 역시 소폭의 순유입과 순유출을 해마다 반복해 왔음

1) 인구, 가구, 인구동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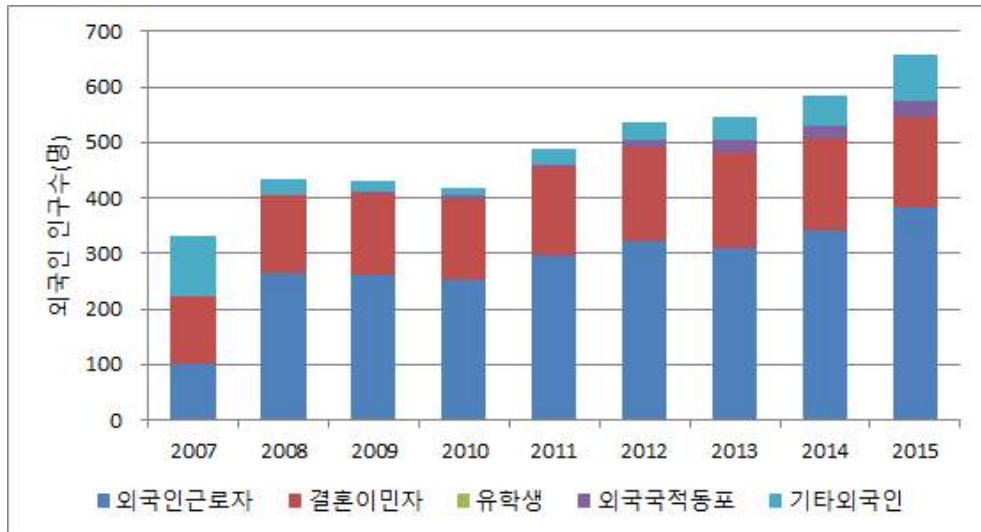
- 전라남도 함평군의 주민등록인구는 해마다 꾸준히 줄어 2005년 40,189명에서 2016년 34,397명으로 감소함. 2005년 인구에 비해 무려 5,792명, 14.4% 감소함. 한편 주민등록세대수의 경우 전국적인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2005년 17,553세대에서 2016년 17,591세대로 큰 변화가 없었음.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1인 가구의 증가가 서로 상쇄된 것으로 여겨짐

[그림 4-61] 전라남도 함평군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수 변화, 2005~2016



자료: 주민등록인구통계(통계청 2017)

[그림 4-62] 전라남도 보성군 외국인주민 인구변화, 2007-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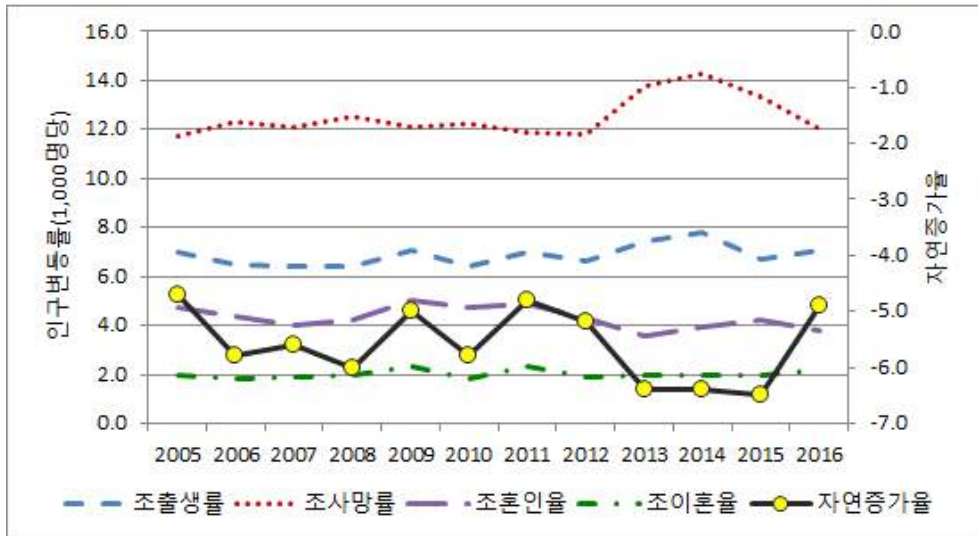


자료: 외국인주민 현황(행정자치부 2017)

○ 전라남도 함평군의 외국인주민은 2007년에 332명에서 2015년 현재 658명으로 증가하였음

- 2015년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주민은 외국인 근로자가 절반을 넘는 384명(58.4%)이며, 결혼이민자 역시 163명으로 24.8%를 차지하고 있음
- 한국 국적을 취득한 주민은 혼인귀화자 121명, 기타 사유 4명으로 확인됨
- 외국인 주민자녀 역시 392명(외국인-한국인 부모 378명, 한국인 부모 14명)으로 함평군의 외국인 주민 또는 다문화가정의 숫자가 작지 않은 편임

[그림 4-63] 전라남도 함평군 주요 인구동태 변화, 2005~2015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 전라남도 함평군의 조출생률은 2015년 5.8건으로 전국 8.6건에 비해 조금 낮았음

- 이는 함평군의 2015년 합계출산율(1.630)이 전국(1.239) 보다 높은 점과 배치됨
- 고령자가 많은 함평군의 인구특성상 전체 인구에 비해 출생아수는 많지 않은데 비해,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의 합으로 계산되는 합계출산율에서는 높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임
- 고령인구가 많은 탓에 조사망률 역시 2015년 인구 천 명당 13.5건으로 전국의 5.4건에 비해 매우 높았음
- 낮은 조출생률과 높은 조사망률로 인해 함평군은 2015년 인구 천 명당 7.7명의 자연감소를 경험함
- 조혼인율의 경우 2015년 천 명당 3.1건으로 전국의 5.9건 보다 낮았던 반면 조이혼율은 2.1건으로 전국과 동일함

2) 출산 및 혼인 동향

- 전라남도 함평군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409에서 조금씩 상승하여 2012년 한 때 2.101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2015년 현재 1.630을 기록함
- 20~30대 모의 연령별 출산율이 전국에 비해 높게 확인되고 있음. 예컨대, 2015년 25~29세와 30~34세 출산율은 여성 천 명당 81.3건과 155.1건으로 각각 전국 63.1건과 116.7건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함평군 역시 출산연령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20~24세 25~29세 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어 20대 출산율의 하락세가 상대적으로 조금 늦는 편임

〈표 4-12〉 전라남도 함평군 합계출산율 및 연령별 출산율(천 명당) 변화

연도	합계출산율	연령별 출산율(천 명당)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2005	1.409	7.0	31.6	123.5	86.6	22.2	4.6	0.8
2006	1.419	7.3	36.9	102.4	100.7	30.0	1.9	0.8
2007	1.602	9.9	33.5	117.7	100.8	45.3	7.0	0.0
2008	1.490	0.0	37.1	110.2	116.9	27.6	4.1	0.0
2009	1.677	4.5	39.3	112.7	126.1	45.9	7.2	0.0
2010	1.653	4.5	46.4	106.0	125.7	42.7	1.1	0.0
2011	1.898	9.2	38.7	115.6	148.4	56.6	10.2	0.0
2012	2.101	3.4	38.1	122.3	187.1	61.3	7.2	0.0
2013	1.786	5.7	36.9	92.3	160.5	45.0	12.4	0.0
2014	1.954	3.6	20.9	114.2	178.3	58.5	11.5	0.0
2015	1.630	2.5	26.1	81.3	155.1	52.5	3.9	1.0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 전라남도 함평군의 총출생아수는 2005년 259명이었으나 2015년 202명까지 줄어들었음. 특히 전체 출생아수 중 셋째아 이상 고순위 출생아의 비중이 높은 편인데, 2007년 최고 26.8%에서 2015년 14.9%까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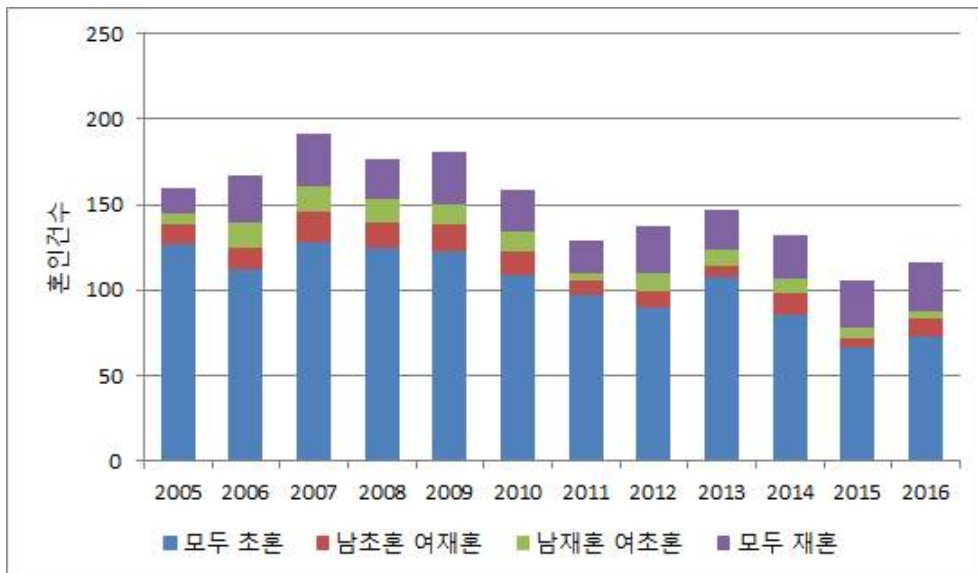
국 9.7% 보다 높은 편임. 출생아수 감소와 함께 고순위 출생아 비중 역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문화 출생은 2013년 한 때 전체 출생아 중 무려 18.6%을 차지할 만큼 함평군의 출생아수 유지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2015년 역시 28건, 13.9%를 기록하여 전국의 4.5% 보다 매우 높게 확인됨

○ 전라남도 함평군의 혼인건수는 2005년 161건에서 2016년 116으로 감소해왔음. 특히 남녀 모두 초혼인 사례가 2005년 127건에서 2016년 73건으로 크게 줄어, 장기적인 혼인건수 감소를 이끌어 왔음. 함평군의 남녀 평균초혼연령의 연간 변화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되는데, 초혼 자체가 많지 않은 것이 그 원인으로 여겨짐

○ 전라남도 함평군의 다문화 혼인은 2008년 44건으로 전체 혼인 중 24.0%를 차지하였으나 2015년 12건, 11.2%로 빠르게 감소함. 마찬가지로 다문화 이혼 역시 2008년 18건, 25.0%에서 2015년 14건, 19.4%로 감소함. 전체 혼인 및 이혼 자체가 많지 않은 탓에 다문화 혼인과 다문화 이혼의 비중이 높게 확인됨

[그림 4-64] 전라남도 함평군 혼인상태별 혼인건수, 2005~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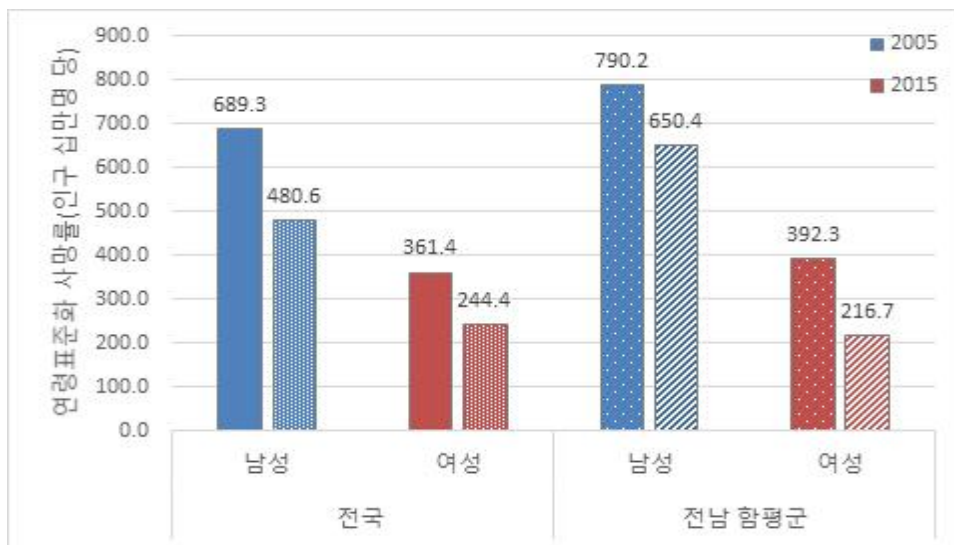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3) 고령화 및 사망력

- 전라남도 함평군은 대표적인 초고령 지역 중 하나임. 2005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이미 24.6%를 기록하였고 2016년은 32.9%까지 증가함. 2016년 고령화지수는 380.3로 전라남도 인근 지역과 함께 심각한 인구고령화를 겪음
- 전라남도 함평군의 사망력은 성별에 따라 확연히 구분됨. 남성의 경우 2015년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인구 십만 명당 650.4명으로 전국의 480.6명 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임. 반면 여성의 경우 인구 십만 명당 216.7명으로 전국의 244.4명 보다 낮았음. 여성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2005년 전국의 361.4명 보다 높은 392.3이었으나, 전국보다 높은 사망력 수준 개선으로 2015년에는 전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감소함. 사망원인별로 살펴볼 때 전국에 비해 남녀 모두 고 의적 자해(자살)를 포함한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또한 남성의 경우 순환계통 질환에 의한 사망이 전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사망원인별 사망률 차이의 원인을 좀 더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임

[그림 4-65] 전라남도 함평군의 성별 연령표준화 사망률, 2005~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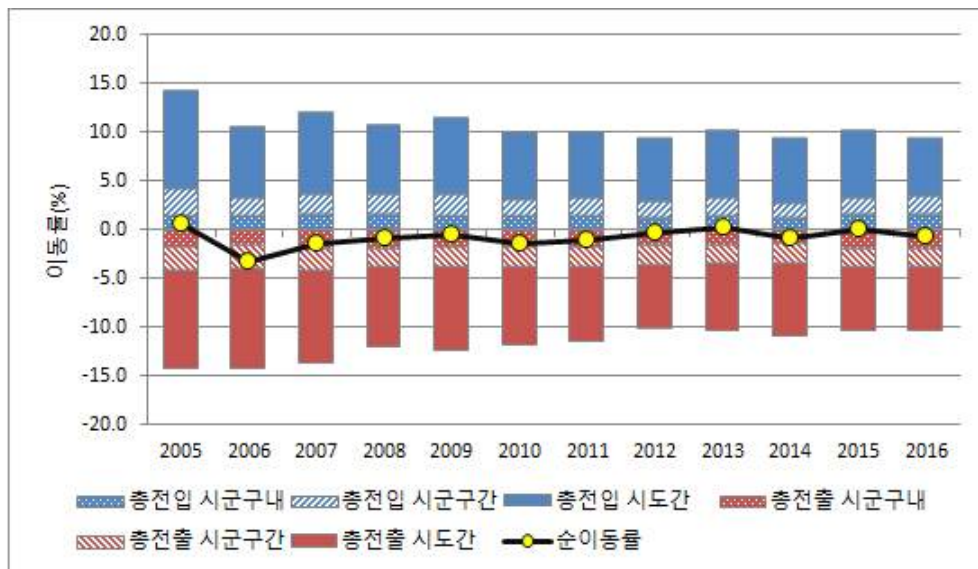
주: 일부 사망원인의 경우 대분류와 세분류를 함께 포함하고 있음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4) 인구이동

○ 전라남도 함평군은 대개 인구의 유출이 유입보다 많으며 간헐적으로 2005, 2013, 2015년에 각 0.5, 0.2, 0.1%의 인구 순유입률을 기록함. 2016년의 경우 총전입률 9.5%, 총전출률 10.2%, 그리고 -0.7%의 순이동률을 기록함. 전국 총전입률·총전출률 14.4%와 비교하면 인구이동이 활발한 지역은 아닌 것으로 파악됨

- 함평군의 경우 총전입의 출발지와 총전출의 목적지의 60% 이상이 다른 시도 지역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인구이동 측면에서 인접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그림 4-66] 전라남도 함평군 지역단위별 총전입률, 총전출률, 이동률의 변화, 2005~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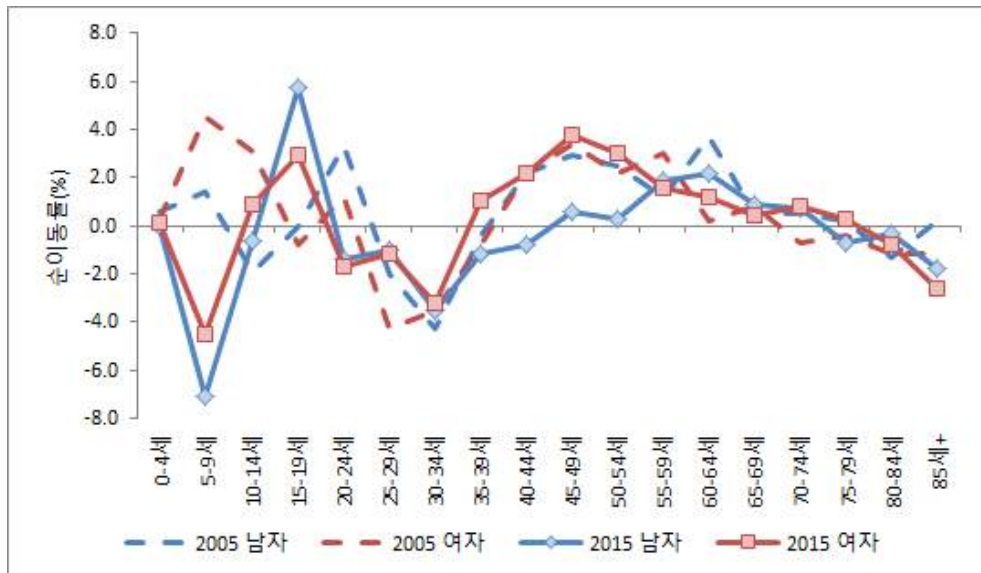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 전라남도 함평군의 연령별 순이동률은 조금 독특한 모습을 갖는다. 40세 미만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남녀 모두 인구 순유출을 보이고 있지만, 15~19세 청소년기의 경우 유독 인구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음. 아울러 30대 중반에서 70대

초반까지 인구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음

- 2005년과 2015년의 연령별 순이동률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5~9세 연령대의 인구 순유입이 2015년 순유출로 전환된 것과 35~54세에서 남성의 순유입이 감소되거나 순유출로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함평군의 전체인구가 작은 만큼 연령별 인구 순이동률의 작은 변화가 큰 규모의 인구이동을 의미하지는 않음
- 15~19세 중고교생에 해당하는 인구와 여성 위주의 35~59세 인구 유입은 관내 일부 특성화 고등학교와 연관된 학부모와 학생의 동반 이주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아울러 중장년층의 인구유입은 광주 등 인근 지역에서 함평군으로의 귀농 및 귀촌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있음. 다만 20~34세 청년층 인구의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소년의 인구유입이 거주 목적의 영구적 이주와는 거리가 있어 보임

[그림 4-67] 전라남도 함평군의 성 및 연령별 순이동률, 2005~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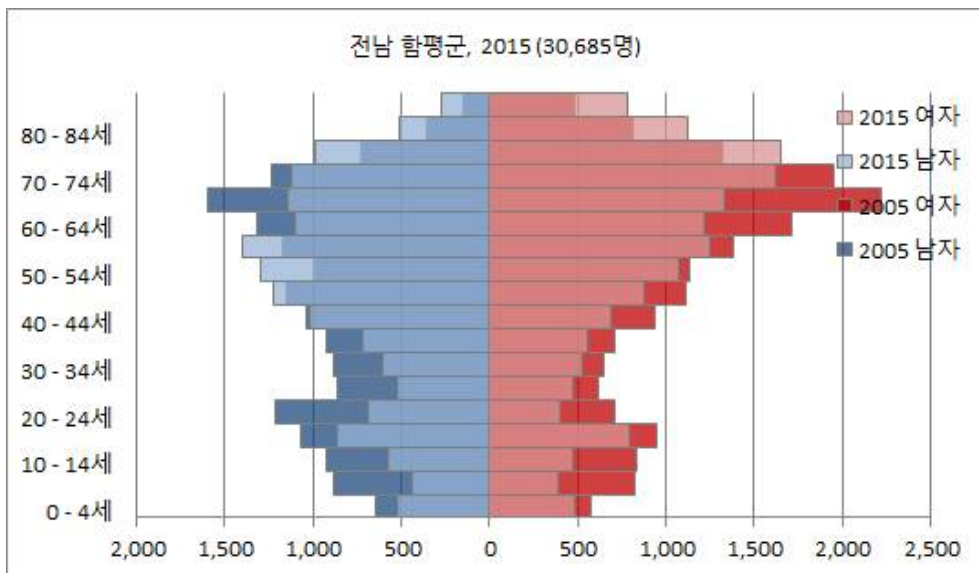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5) 인구변동과 인구구조

○ 함평군은 전라남도 내 다른 농어촌지역에 비해 인구의 순유출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저출산과 심각한 초고령화로 인해 성 및 연령별 인구구조 그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음. 함평군의 인구피라미드는 먼저 살펴보았던 보성군처럼 ‘버섯구름’ 모양을 띠. 40세 미만의 유소년 및 인구는 매우 부족한 가운데, 40세 이상 중장년층과 고령자층의 인구는 두텁게 유지되고 있음. 예컨대 2015년 함평군의 5세 미만(0~4세) 인구는 남녀 모두를 합해도 1,000명에 2명 모자라는 998명임. 당장 15~49세 가임기에 해당하는 여성인구가 많지 않은 탓에 출생아수가 많지 않아도 합계출산율은 높게 집계됨. 고령인구 구성 비율이 높고 특히 여성의 경우 후기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는 앞으로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큼. 결과적으로 함평군의 경우 향후 지역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그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지역사회에 우선과제가 될 것임

[그림 4-68] 전라남도 함평군의 성 및 연령별 인구구조, 2005~2015



자료: 주민등록인구(통계청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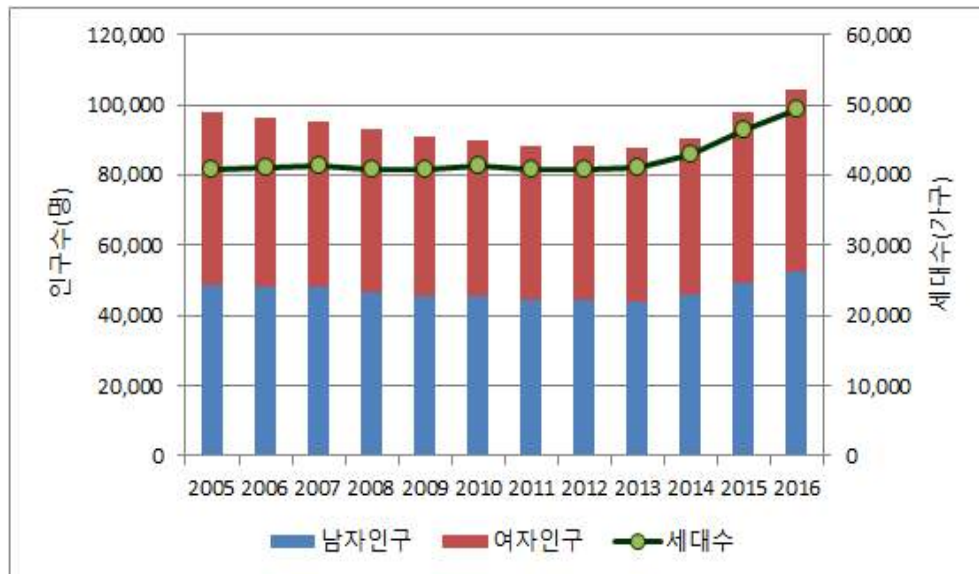
다. 초고령 - 인구유입: 전라남도 나주시

- 초고령 지역으로 분류된 곳 중 상대적으로 인구의 유입이 많은 지역들은 주로 지방의 신도시 건설지역 또는 귀농·귀촌을 지원하는 인구유입정책과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들로 구성됨
- 9개 지역: 경남 산청군, 경남 창녕군, 세종특별자치시, 인천 옹진군, 전남 나주시, 전남 장흥군, 전북 순창군, 충남 청양군, 충남 홍성군
- 전라남도 나주시는 도농복합지역으로 고령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속함. 아울러 합계출산율이 낮지 않게 유지되고 있고, 인구의 유입이 유출보다 많은 지역으로 두드러지고 있어 초고령인구 유입의 심층분석 사례지역으로 선정함

1) 인구, 가구, 인구동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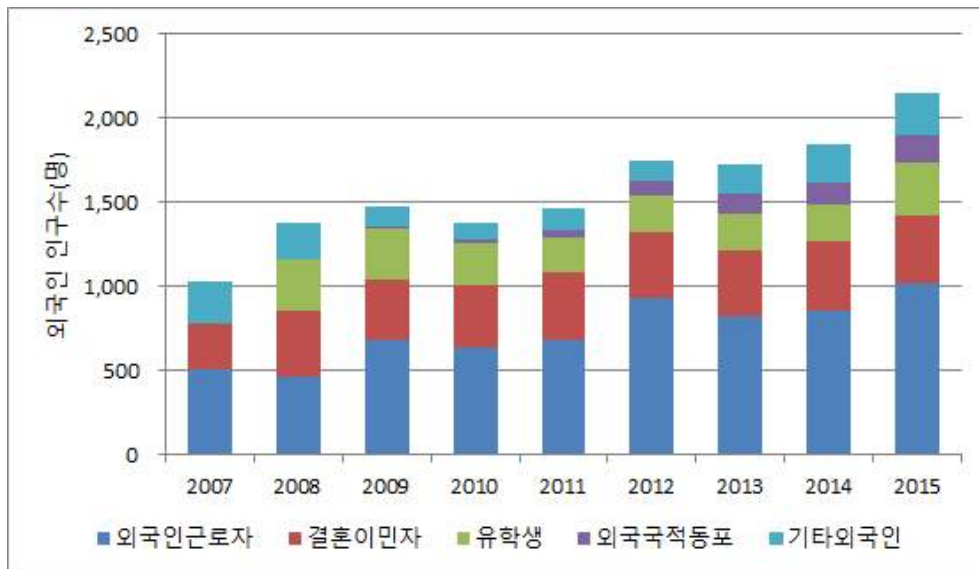
- 전라남도 나주시의 주민등록인구는 2005년 97,980명에서 해마다 줄어들어 지난 2013년까지 87,754명까지 감소함. 하지만 이듬해 상승세로 전환한 뒤 매년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2016년 십만 명을 돌파, 104,376명을 기록함. 과거 2005년과 비교해 6,396명이 증가하였고, 특히 남성 인구의 증가가 두드러진 것이 특징임. 주민등록세대수는 2013년까지 대략 41,000세대 정도를 유지하였으나, 마찬가지로 2014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2016년 49,378세대를 기록함
- 나주시의 외국인주민은 2007년에 1,025명에서 2015년 2,154명으로 증가함. 구성별로는 외국인근로자가 1,071명으로 47.2%를 차지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399명(18.5%), 유학생 316명(14.7%), 기타외국인 258명(12.0%)과 외국국적동포 164명(7.6%) 순임. 국적을 취득한 혼인귀화자 역시 2015년 292명 거주하고 있음. 결혼이민자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주민자녀 역시 917명(외국인 부모 7명, 외국인-한국인 부모 788명, 한국인 부모 122명)에 이르고 있음

[그림 4-69] 전라남도 나주시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수 변화, 2005~2016



자료: 주민등록인구통계(통계청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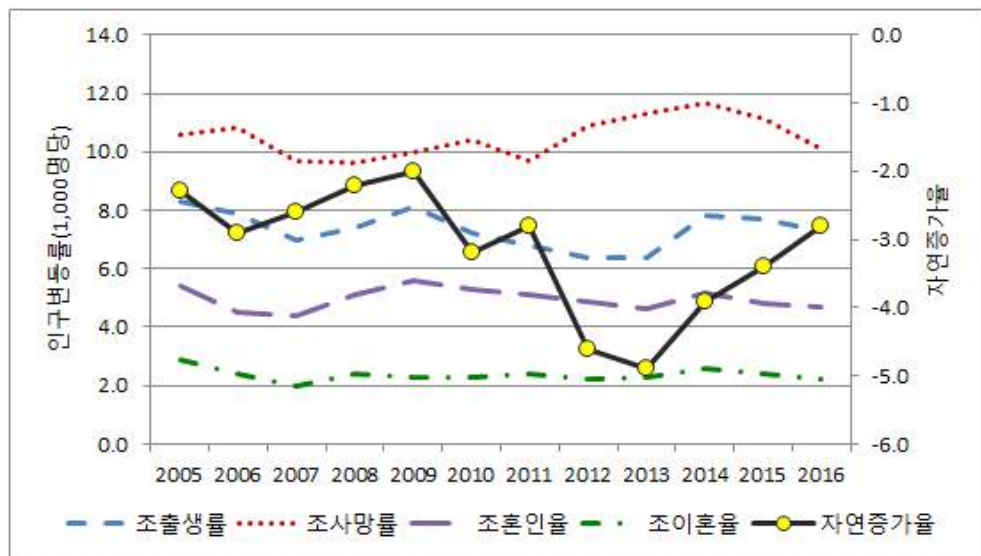
[그림 4-70] 전라남도 나주시 외국인주민 인구변화, 2007~2015



자료: 외국인주민 현황(행정자치부 2017)

- 전라남도 나주시는 조출생률 보다 조사망률이 높아 분석기간 내내 인구의 자연감소를 기록한 곳임. 2015년 조출생률은 인구 천 명당 8.6명으로 전국과 동일하였으며, 조사망률은 천 명당 10.1명으로 전국 5.3명에 비해 높았음. 결과적으로 2015년 나주시의 자연증가율은 인구 천 명당 -1.1명을 기록함. 하지만 이는 분석기간인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보통 해마다 천 명당 -4.9~-2.0명 정도의 자연증가율을 기록해왔음. 조혼인율은 2015년 6.1건으로 전국의 6.0건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2014년 이후 발생한 인구증가로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음. 조이혼율은 연간 변화가 크지 않으며 2015년 2.2건으로 전국의 2.1건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

[그림 4-71] 전라남도 나주시 주요 인구동태 변화, 2005~2015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2) 출산 및 혼인 동향

- 전라남도 나주시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과 2010년 각각 1.248와 1.276의 초저출산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분석기간 내내 1.3 이상의 출산율을 유지함. 특히 2012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조금 반등하였으며 결과적으로 2015년

1.639를 기록함. 모의 연령별 출산율의 경우 20~30대 연령에서 고르게 전국 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해옴. 예컨대, 2015년 25~29세와 30~34세 출산율은 여성 천 명당 81.3건과 155.1건으로 각각 전국 63.1건과 116.7건에 비해 높았던 것으로 확인됨. 또한 여성의 주요 출산연령이 고령대로 전환되는 과정이 전국적인 추세에 비해 조금 느린 경향이 관찰됨

- 주요 출산연령이 25~29세에서 30~34세로 전환되는 시기와 35~39세 출산율이 20~24세 출산율 보다 높아지는 교차점들이 전국 추세에서 각각 2006년과 2005년에 관찰되는 것과 달리 2010년에 이르러서야 확인됨
- 다만 30대 출산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20대 출산율의 감소가 뚜렷하게 진행되지 않아 합계출산율의 상승이 관찰되고 있음. 나주시 지역의 혁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한 인구유입이 그 원인으로 지적됨

〈표 4-13〉 전라남도 나주시의 합계출산율 및 연령별 출산율(천 명당) 변화

연도	합계출산율	연령별 출산율(천 명당)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2005	1.409	7.0	31.6	123.5	86.6	22.2	4.6	0.8
2006	1.419	7.3	36.9	102.4	100.7	30.0	1.9	0.8
2007	1.602	9.9	33.5	117.7	100.8	45.3	7.0	0.0
2008	1.490	0.0	37.1	110.2	116.9	27.6	4.1	0.0
2009	1.677	4.5	39.3	112.7	126.1	45.9	7.2	0.0
2010	1.653	4.5	46.4	106.0	125.7	42.7	1.1	0.0
2011	1.898	9.2	38.7	115.6	148.4	56.6	10.2	0.0
2012	2.101	3.4	38.1	122.3	187.1	61.3	7.2	0.0
2013	1.786	5.7	36.9	92.3	160.5	45.0	12.4	0.0
2014	1.954	3.6	20.9	114.2	178.3	58.5	11.5	0.0
2015	1.630	2.5	26.1	81.3	155.1	52.5	3.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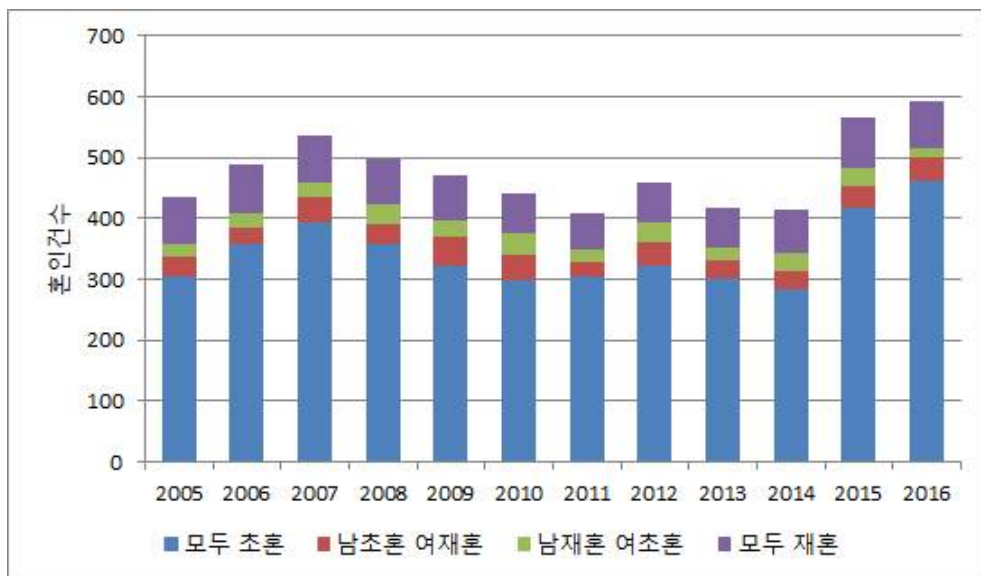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 전라남도 나주시의 총출생아수는 매년 조금씩 증가와 감소를 반복적으로 기록하다 2015년 809명을 기록함. 한해 전 2014년의 총 출생아수가 645명였던 점을 감안하면 무려 한해 만에 164명 증가한 급격한 증가였음. 한편 나주시의

경우 전체 출생아 중 셋째아 이상 고순위 출생아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며, 2015년 역시 14.5%로 전국 9.7% 보다 높았음. 나주시의 다문화 출생은 과거 2012년 한 때 85명까지 기록하였지만, 2015년 현재 65명으로 전체 출생아 중 8.0%로 전국의 4.5% 보다 높았음

- 나주시의 혼인건수는 2007년 538건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대개 407~497건 사이에서 변화해왔음. 하지만 2014년 414건에서 2015년 갑자기 567건으로 증가하였고 2016년에는 593건을 기록함. 남녀 모두 초혼인 유형만 예외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혁신도시 등 신규 주택건설 지역에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인구 유입이 증가한 것으로 여겨짐

[그림 4-72] 전라남도 나주시 혼인상태별 혼인건수, 2005~2016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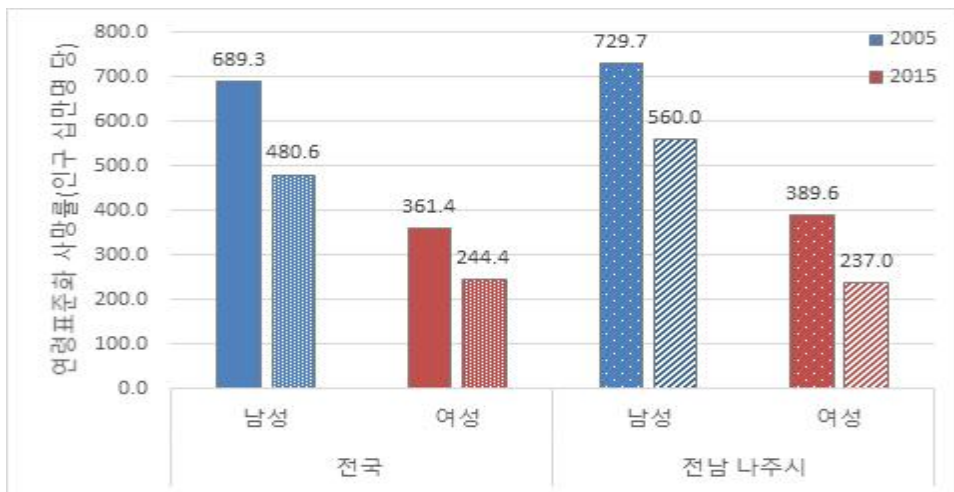
- 나주시의 평균초혼연령은 2016년 남성 32.9세와 여성 29.8세로 전국의 32.8세와 30.1세와 크게 차이나지 않음. 2015년과 2016년 한해 사이 남성 평균초혼연령이 33.3세에서 32.9세로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이는 혼인의 증가 또는 신혼부부 유입에 의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전라남도 나주시의 다문화 혼인은 2008년 97건에서 2015년 42건으로 빠르게 감소하였지만, 전체 혼인 중

비중은 7.4%로 전국적인 수준과 동일함. 다문화 이혼은 2015년 31건으로 전체 이혼의 14.8%로 전국(10.3%)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임

3) 고령화 및 사망률

- 전라남도 나주시는 지난 2006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5%를 기록하며 초고령 사회로 분류됨. 해마다 고령인구 구성비율이 높아지면서 2013년 24.8%까지 상승하였지만, 2014년 이후 인구 유입과 함께 추세가 전환되어 2016년 22.5%로 고령인구 비율이 하락함. 고령화지수 역시 2013년 226.9로 정점을 기록한 후 조금씩 감소하여 2016년 178.6까지 하락하였음. 하지만 여전히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 초고령 사회로 분류됨
- 나주시의 사망률 역시 전국수준의 사망률에 비해 성별로 다른 양상을 보임. 2015년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남성의 경우 인구 십만 명당 560.0명으로 전국의 480.6명 보다 높은 반면, 여성은 237.0명으로 전국의 244.4명 보다 조금 낮았음. 남성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여성보다 월등히 높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망률 수준보다도 높은 것이 특징임

[그림 4-73] 전라남도 나주시의 성별 연령표준화 사망률, 2005~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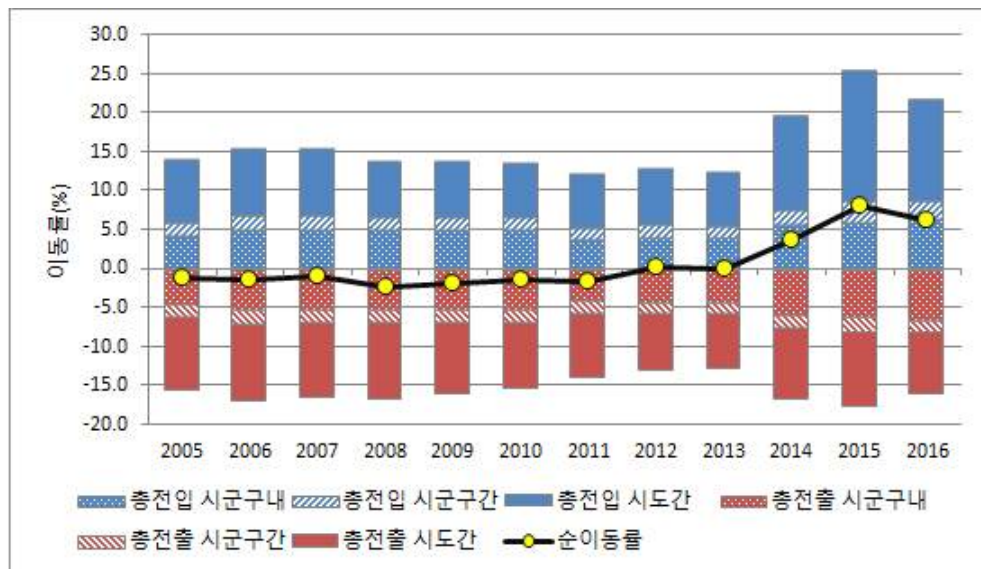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4) 인구이동

○ 전라남도 나주시는 최근까지 주로 인구의 유출이 유입보다 많은 지역이었지만 2014년 이후 그 추세가 전환되어 인구 순유입이 크게 증가하였음. 2016년 총전입률과 총전출률은 21.8%와 15.7% 각각 전국 총전입률·총전출률 14.4%보다 높았음. 최근 3년간 순이동률을 확인하며 2014년 3.5%, 2015년 8.1%, 2016년 6.1%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 특히 2015년 총전입의 59.6%가 다른 시도에서의 이주인 점은 주목할 만함.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의 영향으로 여겨지며, 뿐만 아니라 광주 등 인근지역에서의 인구유입도 배제할 수 없음

[그림 4-74] 전라남도 나주시 지역단위별 총전입률, 총전출률, 이동률의 변화, 2005~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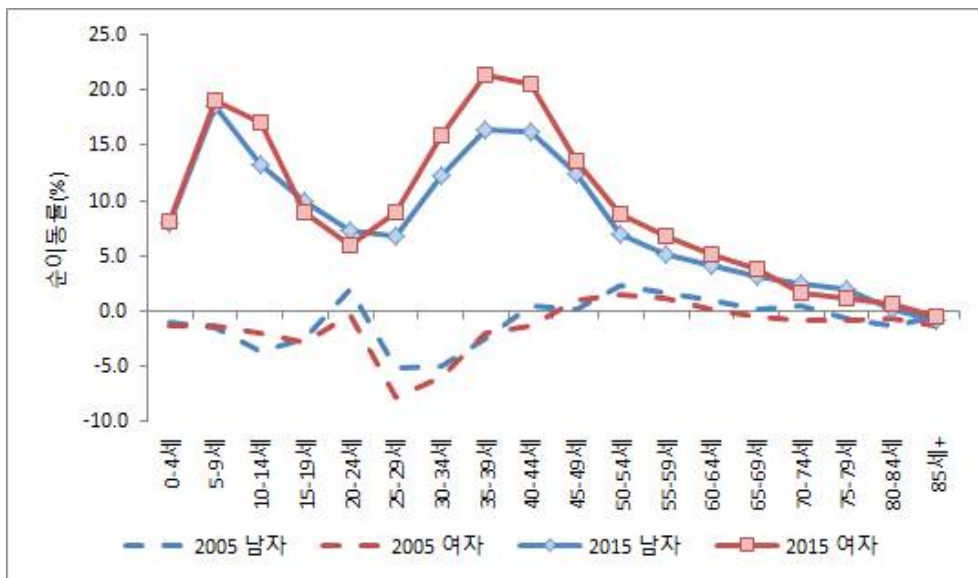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 전라남도 나주시의 2005년과 2015년 연령별 순이동률은 지역의 인구이동이 극적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줌. 예를 들어, 2005년 연령별 순이동률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마이너스 즉 인구 순유출을 보였으며 일부 연령대에서

0~2.2% 정도의 순유입률을 기록함. 하지만 2015년의 경우 85세 이상 연령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인구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으며, 35~39세 여성의 경우 순이동률 21.3%에 이를 정도로 규모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나주시에 강한 인구유입 흐름이 형성된 가운데 청장년층과 유소년층의 유입이 특별히 두드러지고 있음
- 다른 지역과 달리 강한 인구유입의 흐름이 특정 연령대에 한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향후 중등 및 고등교육은 물론 청년층 일자리 문제 등 유입된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4-75] 전라남도 나주시의 성 및 연령별 순이동률, 2005~2015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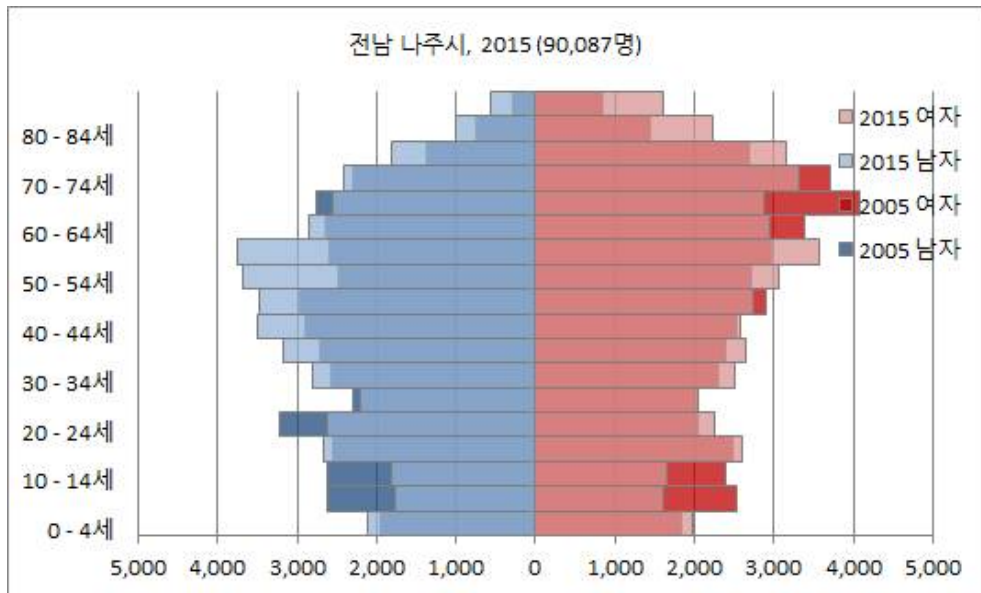
5) 인구변동과 인구구조

- 전라남도 나주시는 2005~2010년 사이 유소년층과 청년층 인구의 빠른 감소를 경험하였지만, 2014년 이후 증가한 인구 순유입으로 인해 2005년 연령별

인구를 상당히 회복하였음. 결과적으로 초고령화 지역으로 분류된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인구구조를 가짐

- 예컨대 2015년 인구피라미드는 5~14세 남녀, 20~24세 남성, 일부 노년층의 남녀 인구를 제외하고, 주요 연령대에서 2005년 인구피라미드 보다 많은 인구를 보여주고 있음
- 무엇보다 30~64세 주요 연령대 남녀 인구의 증가는 과거 2005년 '종형'의 인구피라미드에서 저출산과 인구유출로 하단이 빠르게 얇아지던 변화를 되돌리고 있음. 다만 2005년에 비해 5~14세 연령대의 인구가 부족한 것은 그동안 지속되어 온 저출산의 영향으로 판단됨
- 나주시의 경우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으로 그 동안의 인구변동 추세를 성공적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보이지만, 이 같은 변화가 향후 얼마나 지속가능한지 또 유입된 인구를 유지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있게 지켜보아야 할 것임

[그림 4-76] 전라남도 나주시의 성 및 연령별 인구구조, 2005~2015



자료: 주민등록인구(통계청 2017)

4. 초저출산·초고령 사회

가. 초저출산·초고령 - 인구유출: 부산광역시 동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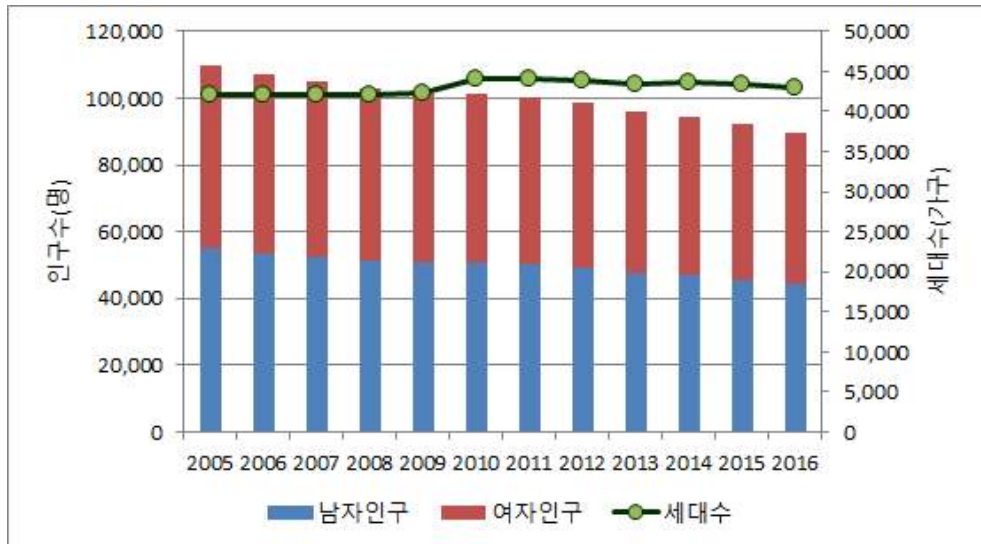
- 초저출산이 지속되면서 동시에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 초고령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들은 앞으로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지역임. 인구의 유입이 유출보다 많아 인구의 사회적 감소까지 가중된다면, 인구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 해당 지역들은 주로 부산의 구도심지역에 해당하는 곳들과 도서지역인 경상북도 울릉군, 그리고 인근에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인해 인구의 유출을 경험하고 있는 충청남도 공주시를 포함함
- 6개 지역: 경남 울릉군, 부산 동구, 부산 서구, 부산 영도구, 부산 중구, 충남 공주시
- 부산광역시 동구는 구도심지역에 위치한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최근 5년간 합계출산율이 1.0 이하로 매우 낮으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분류됨. 또한 분석기간 동안 꾸준히 인구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어 초저출산·초고령 지역 중 인구유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기 때문에 심층분석 사례지역으로 선정함

1) 인구, 가구, 인구동태

- 부산광역시 동구의 주민등록인구는 2005년 109,879명에서 2016년 89,826명으로 무려 20,053명이 감소함. 꾸준한 인구감소에도 주민등록세대수는 오히려 2005년 42,136세대에서 2016년 43,036세대로 900세대 정도 증가함. 부산광역시 동구의 외국인주민은 2007년에 890명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1,772명을 기록함
 - 특이한 점은 2015년 현재 기타외국인이 658명으로 3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가 511명(28.8%), 외국국적동포 320명(18.1%), 결혼이민자 263명(14.8%), 유학생 20명(1.1%) 순으로 이어짐. 국제항만이 있는 대도시 지역인 만큼 외국인과 외국인근로자, 그리고 외국국적동포의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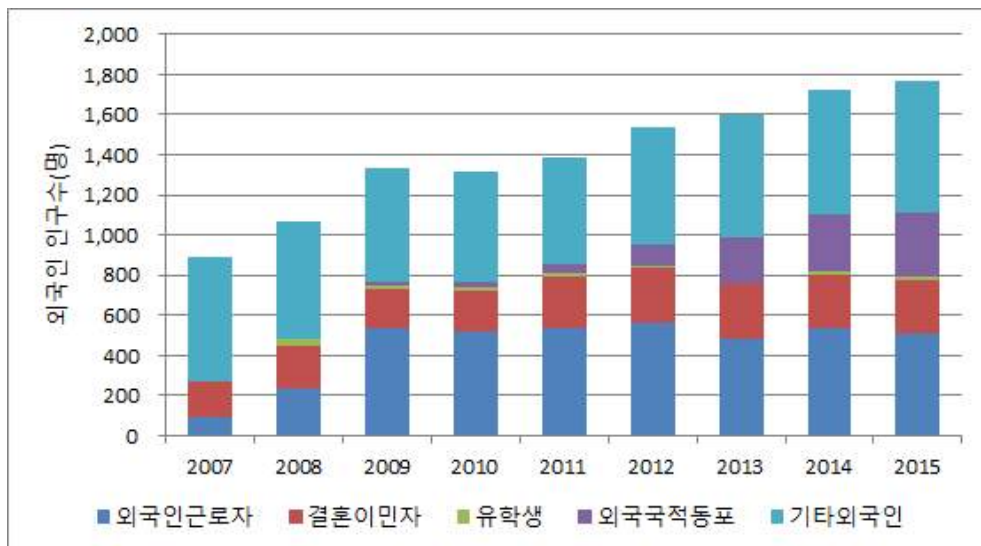
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국적을 취득한 혼인귀화자(166명)나 외국인 주민자녀(317명)는 많지 않았음

[그림 4-77] 부산광역시 동구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수 변화, 2005~2016



자료: 주민등록인구통계(통계청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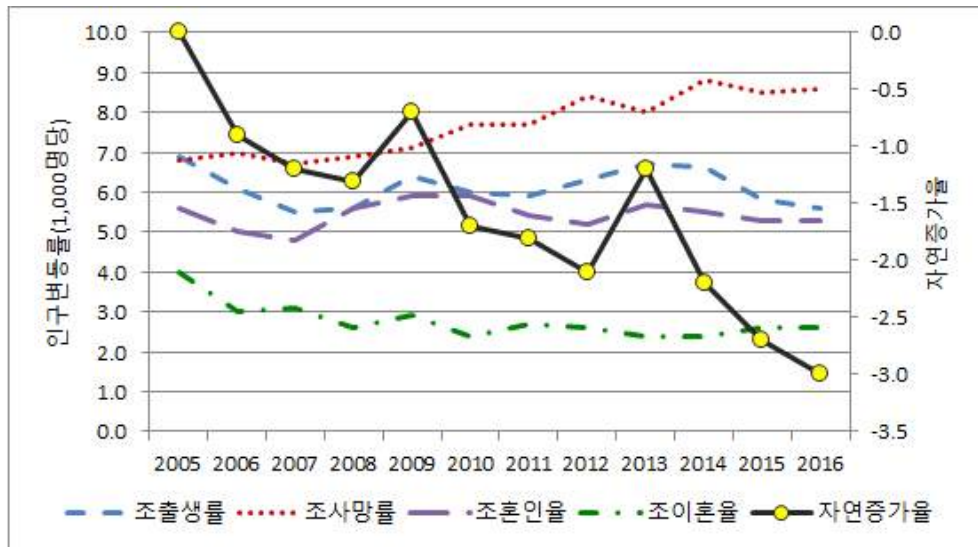
[그림 4-78] 부산광역시 동구 외국인주민 인구변화, 2007~2015



자료: 외국인주민 현황(행정자치부 2017)

- 부산광역시 동구에서는 과거 2005년 조출생률이 인구 천 명당 5.5명으로 조사사망률 6.7명 보다 낮아 자연증가율이 -1.2명을 기록함. 하지만 2015년 조출생률은 인구 천 명당 5.3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고 전국의 8.6건 보다는 낮았던 반면, 조사사망률은 천 명당 9.4명으로 증가해 전국의 5.4명 보다 높았음. 결과적으로 2015년 자연증가율은 인구 천 명당 -4.1명을 기록하며 전국의 3.2명에 비해 높은 수준의 인구 자연감소를 경험함. 조혼인율은 2015년 인구 천 명당 4.6건으로 전국의 5.9건에 비해 조금 낮았고, 반대로 조이혼율은 2.5건으로 전국의 2.1건에 비해 높았음

[그림 4-79] 부산광역시 동구 주요 인구동태 변화, 2005~2015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2) 출산 및 혼인 동향

- 부산광역시 동구는 대표적인 초저출산 지역 중 한 곳으로 알려져 있음. 지난 2005년 합계출산율의 경우 0.731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함. 그 이후 오르내림을 거듭하다 2011~2013년 한때 합계출산율이 1.0을 넘기도 하였으며, 2015년 현재 0.929를 기록하고 있다. 모의 연령별 출산율을 살펴보면, 전체적

으로 여성 천 명당 100명을 넘는 연령대가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예를 들어 2015년 전국 30~34세 여성의 출산율은 116.7명인데 비해, 부산 동구의 동일 연령대 출산율은 무려 42.3명이나 낮은 여성 천 명당 74.4명임. 게다가 이 30~34세 여성의 출산율이 부산 동구의 5세 간격 연령별 출산율 중 가장 낮은 수준임

- 한편 여성의 주요 출산시기의 전환과정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빠른 시기에 진행됨. 30~34세 연령대 출산율이 이미 2005년 또는 그 이전에 다른 연령대 출산율 보다 높은 수준에 있었음. 또한 흥미롭게도 2014년 이후 35~39세 출산율 수준이 25~29세 출산율 보다 높아진 것이 확인됨.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어 온 부산 동구의 주요 출산력 지표변화는 향후 다른 대도시 지역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출산력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표 4-14〉 부산광역시 동구 합계출산율 및 연령별 출산율(천 명당) 변화

연도	합계출산율	연령별 출산율(천 명당)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2005	0.731	1.0	9.5	56.0	62.0	14.1	1.7	0.2
2006	0.769	0.7	10.3	48.9	70.5	19.7	0.5	0.2
2007	0.881	1.9	13.8	61.6	73.6	20.1	3.1	0.0
2008	0.866	2.7	12.3	51.2	79.0	23.8	3.2	0.2
2009	0.866	2.7	10.9	52.3	84.0	20.6	2.9	0.0
2010	0.935	3.8	13.5	55.7	82.7	28.0	4.7	0.3
2011	1.031	2.3	14.1	55.0	97.2	34.0	5.2	0.3
2012	1.033	1.6	20.2	52.5	94.4	36.9	2.3	0.0
2013	0.947	2.1	15.2	50.6	88.0	30.3	3.6	0.0
2014	0.941	1.8	15.1	38.6	89.6	39.1	5.0	0.0
2015	0.929	2.4	13.2	41.0	74.4	47.2	7.6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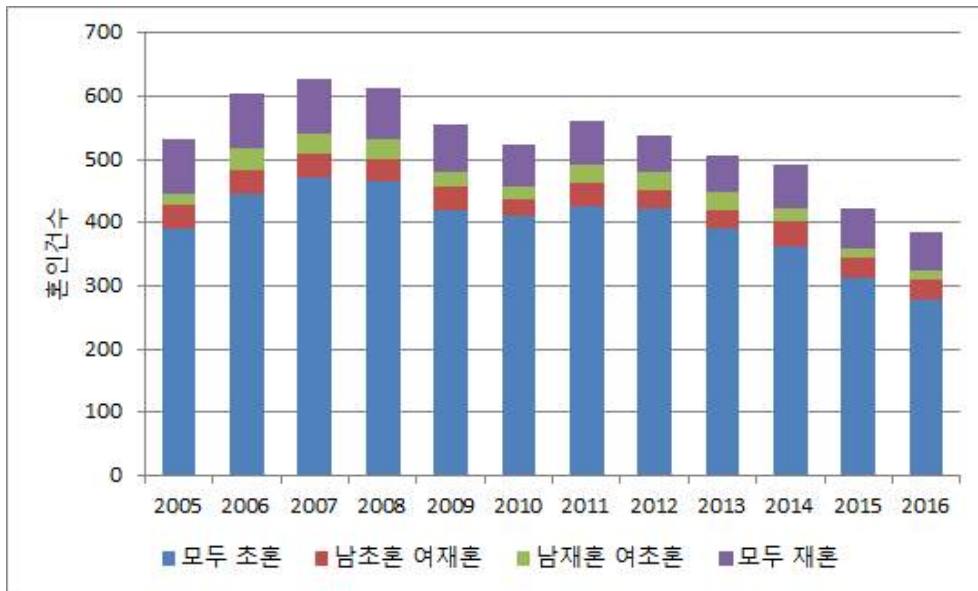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 부산광역시 동구의 총출생아수는 2005년 617명에서 매년 조금씩 변화는 수준이었으나, 2011년 이래로 매년 꾸준히 감소하여 2015년 482명을 기록함.

특히 20~34세 여성의 출생아수 감소가 두드러졌으며, 반대로 35~44세 여성들의 경우 출생아수가 소폭 증가함. 다문화 출생은 2015년 35명으로 전체 출생 중 7.3%를 차지하며 전국 4.5%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남

- 부산광역시 동구의 혼인건수는 2005~2013년 506~629건 사이를 기록하다가, 2014년 500건 이하로 하락하였고 2016년 385건으로 빠르게 감소함. 특히 남녀 모두 초혼인 유형의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어, 혼인을 전후로 청년층들이 인근 신도시 또는 대규모 주택건설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4-80] 부산광역시 동구 혼인상태별 혼인건수, 2005~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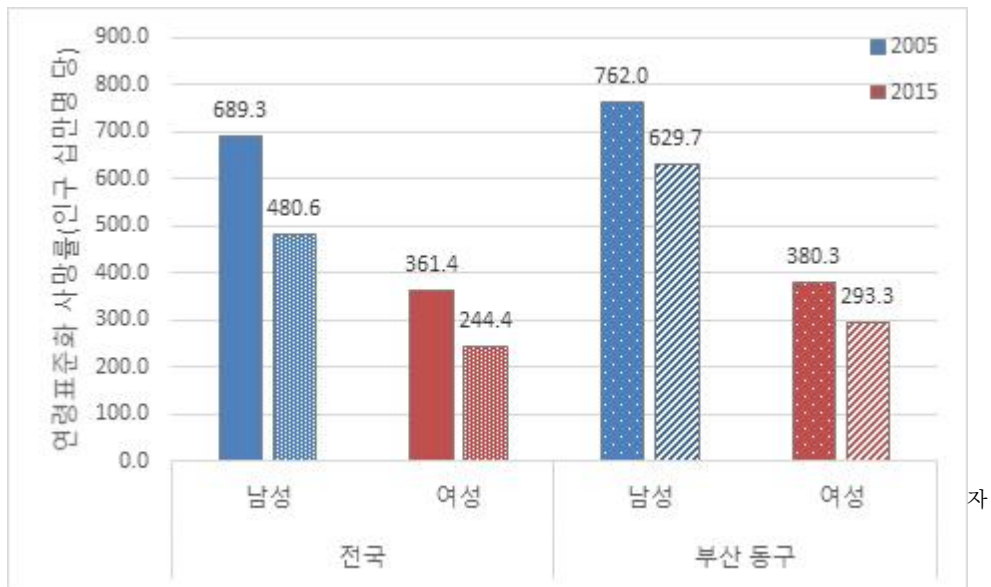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 부산광역시의 평균초혼연령은 2016년에 남성 32.9세와 여성 30.9세로 전국에 비해 각각 0.1세, 0.8세 높았음. 다문화 혼인 역시 2008년 77건에서 2015년 42건으로 감소함
 - 하지만 여전히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 비중이 9.7%로 전국의 7.4%에 비해 높은 수준임. 다문화 이혼의 경우 2015년 23건, 전체 혼인 중 9.9%로 전국 10.3%와 큰 차이가 없는 편임

3) 고령화 및 사망력

- 부산광역시 동구는 2005년 고령인구 비율이 12.3%로 ‘고령화 사회’로 분류되었으나 2007년 14.4%로 ‘고령 사회’로 발전한 후 2014년 마침내 20.6%를 기록하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함. 2016년 현재 고령인구 비율이 22.6%로 확인되며 고령화지수 역시 293.3로 기록됨.
- 대도시 지역은 대형병원 및 각종 의료보건의료시설로 인해 일반적으로 사망력 수준이 양호한 편이지만, 부산광역시 동구의 사망력은 전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됨. 2015년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남성의 경우 인구 십만 명당 629.7명으로 전국의 480.6명 보다 매우 높고, 여성 역시 293.3명으로 전국의 244.4명 보다 높게 나타남. 사망원인별로는 악성신생물(암)과 순환계통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특히 여성의 경우 심장질환과 고의적 자해(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또는 보건의료체계에 취약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그림 4-81] 부산광역시 동구의 연령표준화 사망률, 2005~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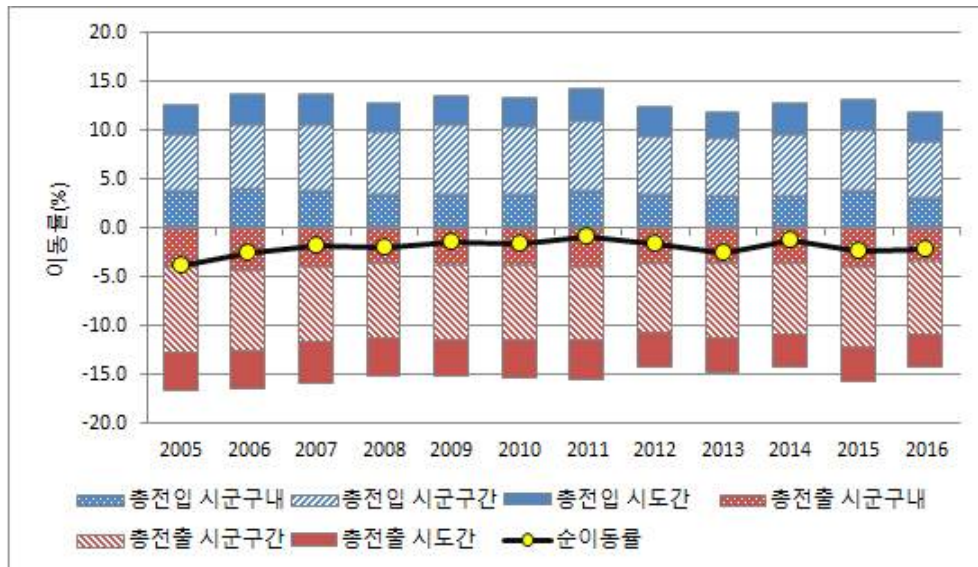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4) 인구이동

○ 부산광역시 동구는 분석기간 내내 꾸준히 인구의 유출이 유입보다 많은 곳임. 총전입률이 2005년 12.6%에서 2016년 11.9%로 소폭의 변동을 거듭하는 동안, 총전입률 역시 16.4%에서 14.1%로 감소함. 결과적으로 인구 순이동률은 2005년 -3.8%에서 연간 변동을 거쳐 2016년 -2.2%를 기록함. 특히 총전출의 주요 목적지가 같은 부산광역시 내 다른 지역인 점이 특징임. 예를 들어 2016년의 경우 총전출 중 부산광역시 내 다른 지역으로 옮긴 비율이 51.8%에 이르고 있음. 인구의 순유출이 주로 부산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부산광역시 동구의 인구 유출이 구도심지역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

[그림 4-82]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단위별 총전입률, 총전출률, 이동률의 변화, 2005~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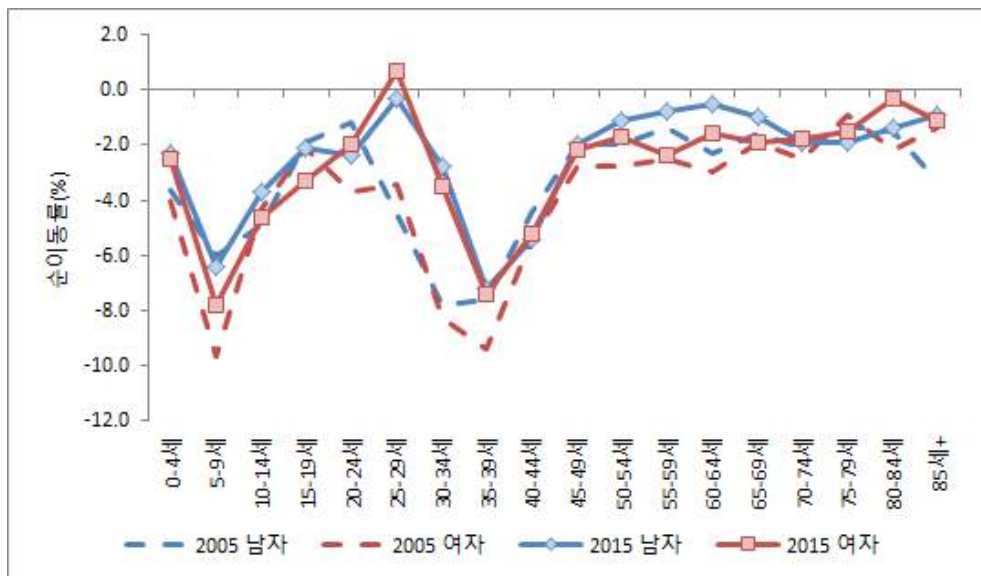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 부산광역시 동구의 연령별 순이동률 역시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함. 2005년과 2015년 연령별 순이동률 유형이 비슷하며, 2015년 여성 25~29세 연령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인구 순유출을 기록함. 특히 5~9세와 35~39

세 연령대 전후로 인구의 순유출 정도가 심각했던 것으로 파악됨. 분석기간 동안 부산 동구에서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꾸준한 인구 유출을 경험하였으며, 특히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전출이 더욱 두드러졌던 것으로 판단됨. 지금까지의 지속적인 인구감소 그 자체도 심각하지만, 향후 인구유출 후 남겨진 오래된 주거 및 사무공간의 유지와 관리, 치안문제 등 부수적인 문제들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됨

[그림 4-83] 부산광역시 동구의 성 및 연령별 순이동률, 2005~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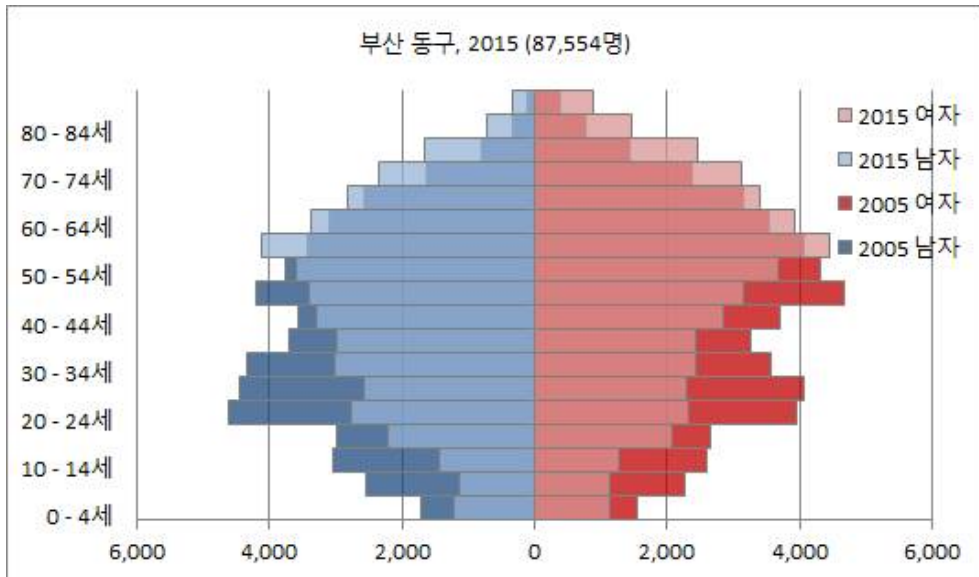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5) 인구변동과 인구구조

- 부산광역시 동구는 지속적인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인구 유출이 동시에 진행되어 왔음. 2005년의 경우 초저출산에도 불구하고, 40대 후반 장년층과 20대 청년층의 인구가 많아 별 형태의 인구피라미드를 확인할 수 있었음. 하지만, 지속적인 초저출산과 인구감소, 특히 심각했던 유소년 및 청장년층의 유출로 2015년에는 50세 미만에서 나이가 어릴수록 인구가 줄어들어 ‘버섯구름’ 또

는 ‘다이아몬드’ 형태로 변모함. 특히 0~4세 인구와 55~59세 인구규모는 약 3.6배에 이를 정도로 차이가 나고 있음. 현 수준의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그리고 인구유출이 지속된다면, 인구감소의 가속화뿐만 아니라 도심공동화 현상을 초래하여 교육·노인·보건·복지·빈곤·주거·치안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하고 어려운 사회문제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부산광역시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된 문제인 만큼 지역사회의 논의를 통해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그림 4-84] 부산광역시 동구의 성 및 연령별 인구구조, 2005~2015



자료: 주민등록인구(통계청 2017)

나. 초저출산·초고령 - 인구이동 평균: 충청북도 단양군

- 초저출산과 초고령화가 함께 나타나는 지역 중 상대적 인구이동 수준이 평균적인 곳들은 주로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대도시 지역 중 울산 남구와 동구가 포함됨
- 14개 지역: 강원 양양군, 강원 영월군, 강원 정선군, 강원 평창군, 경남 남해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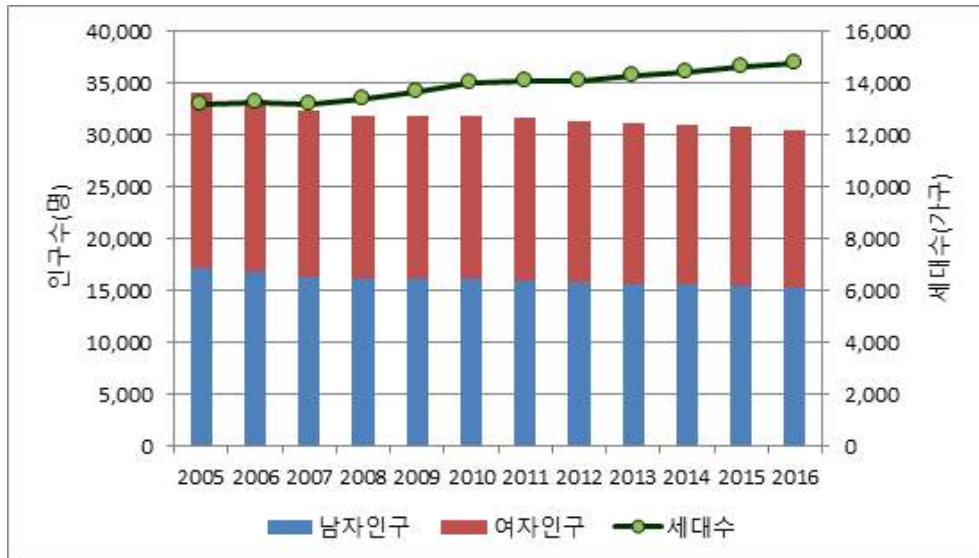
경남 밀양시, 경남 하동군, 경남 합천군, 경북 청도군, 전남 고흥군, 충남 부여군, 충남 예산군, 충북 단양군, 충북 옥천군

- 충청북도 단양군은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현상이 공존하며 최근 5년간 인구 순이동률이 +/-0.5% 이내에서 일관되고 유지되고 있어, 인구가동 평균 유형의 심층분석 사례지역으로 선정함

1) 인구, 가구, 인구동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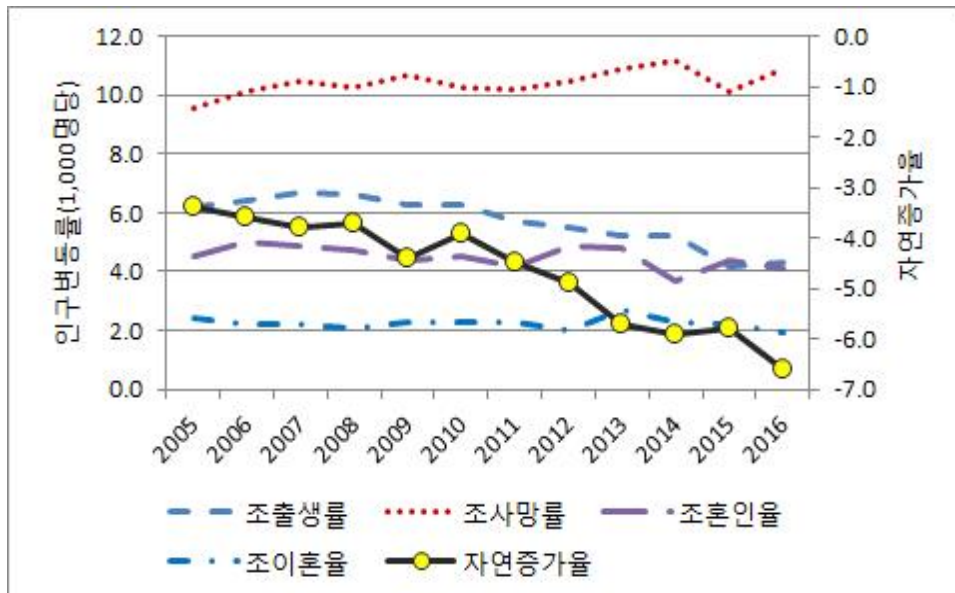
- 충청북도 단양군의 주민등록인구는 지난 2005년 34,122명에서 2016년 30,503명으로 무려 약 4천 명에 가까이 감소하였음. 구체적으로 2007년 한해 947명의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하는 등 2005~2008년 사이에만 총 2,193명이 감소하였음
 -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세대수는 2005년 13,198세대에서 2016년 14,744세대로 증가하여 노인 1인가구 또는 가구평균 구성원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여겨짐
-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외국인주민 인구는 연간 변동을 거쳐 2015년 현재 250명을 기록함. 구체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74명, 결혼이민자 97명, 외국국적동포 23명, 기타외국인이 56명임. 혼인귀화자는 2015년 83명으로 파악됨
- 단양군의 동태통계는 지난 2005년 이후 대체로 일관된 방향을 유지함
 - 조출생률은 2005년 인구 천 명당 6.7명에서 감소하여 2015년 4.7명을 기록함. 하지만 조사망률은 2005년 인구 천 명당 10.5명에서 2015년 11.3명으로 큰 변화가 없었음
 - 따라서 단양군의 자연증가율은 2005년 -3.8명에서 2015년 -6.7명으로 점차적으로 하락해 왔으며, 2015년 전국의 3.2건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분석기간 동안 조혼인율과 조인혼율은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며 2015년에 각각 인구 천 명당 4.1건과 2.5건을 기록함

[그림 4-85] 단양군 인구 및 세대수 변화, 2005~2016



자료: 주민등록인구통계(통계청 2017)

[그림 4-86] 단양군 주요 인구동태 변화, 2005~2015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2) 출산 및 혼인 동향

○ 충청북도 단양군은 분석기간 내내 합계출산율 1.3 이하의 초저출산 수준을 유지해왔으며, 최근 2015년에도 1.226을 기록함

-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 추세에서, 20~24세 출산율이 2005년 여성 천 명당 34.5명에서 2015년 20.2명으로, 25~29세 출산율이 100.1명에서 78.3명으로 감소함. 같은 기간 30~34세 출산율이 74.9명에서 99.5명으로, 35~39세 출산율이 21.9명에서 41.3명으로 각각 증가함
- 단양군의 경우 총출생아 중 셋째아 이상 고순위 출생아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전체 출생아 중 셋째아 이상 고순위 출생아의 비중이 2013년 26%를 차지한 적이 있으며, 2015년에도 18.6%를 차지함. 2015년 전국 총출생아 중 셋째아 이상 고순위 출생아가 겨우 9.7%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단양군 관내 고순위 출생아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

○ 다문화 출생아수는 해마다 11~30건 정도로 그 절대적인 수는 많지 않으나 전체 출생아수에 대한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2015년 다문화 출생아수는 17명, 12.1%를 기록하였고, 전국의 4.5%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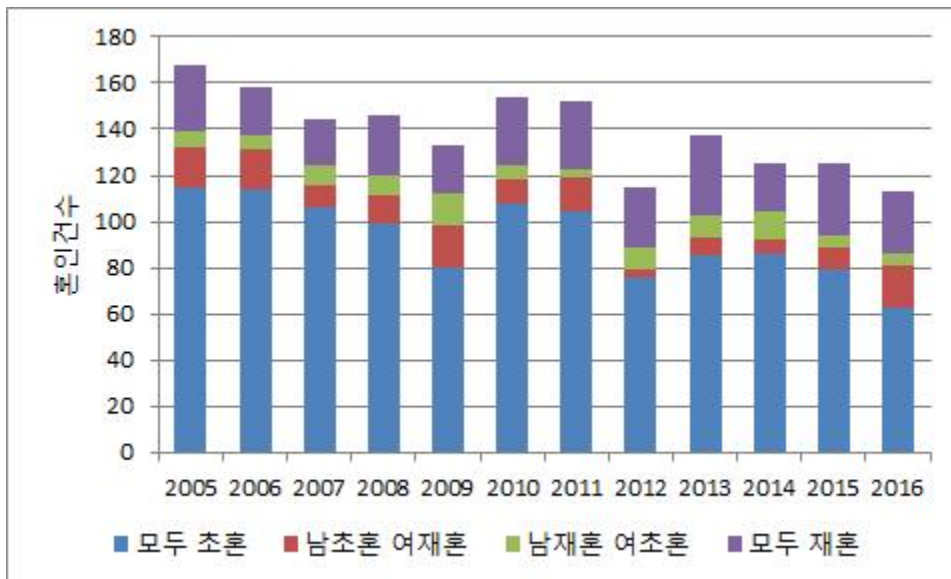
〈표 4-15〉 단양군 합계출산율 및 변화

연도	합계출산율	연령별 출산율(천 명당)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2005	1.249	2.0	34.5	100.1	74.9	21.9	5.8	0.7
2006	1.286	3.4	29.3	101.4	90.5	17.1	3.6	1.4
2007	1.234	2.5	29.7	88.3	84.4	33.1	4.7	0.0
2008	1.286	10.2	35.2	97.7	78.9	27.7	3.8	0.0
2009	1.216	2.6	32.3	83.1	98.1	17.4	5.7	0.0
2010	1.225	2.6	33.8	85.3	94.1	23.7	2.9	0.0
2011	1.182	2.5	17.6	76.5	97.1	34.8	5.0	0.0
2012	1.239	2.5	24.9	82.0	108.7	20.6	7.1	0.0
2013	1.046	1.3	20.7	65.6	76.0	37.9	3.2	0.9
2014	1.073	2.6	14.2	56.6	101.8	30.9	7.8	0.0
2015	1.226	1.4	20.2	78.3	99.5	41.3	2.3	0.0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 단양군의 혼인건수는 많지 않은 편임. 지난 2005년 168건의 혼인이 신고 되었지만 2016년 113건을 감소하였고 그나마 남녀 모두 초혼인 사례가 63건에 불과함. 특히 최근 5년간 초혼의 감소가 두드러짐. 2016년 평균초혼연령의 경우 남성 35.9세, 여성 28.3세로 전국에 비해 각각 3.1세 높고, 1.8세 낮은 것으로 확인됨. 초혼 규모가 작아 평균초혼연령의 연간 변동이 큰 것으로 여겨짐

[그림 4-87] 단양군 혼인상태별 혼인건수, 2005~2016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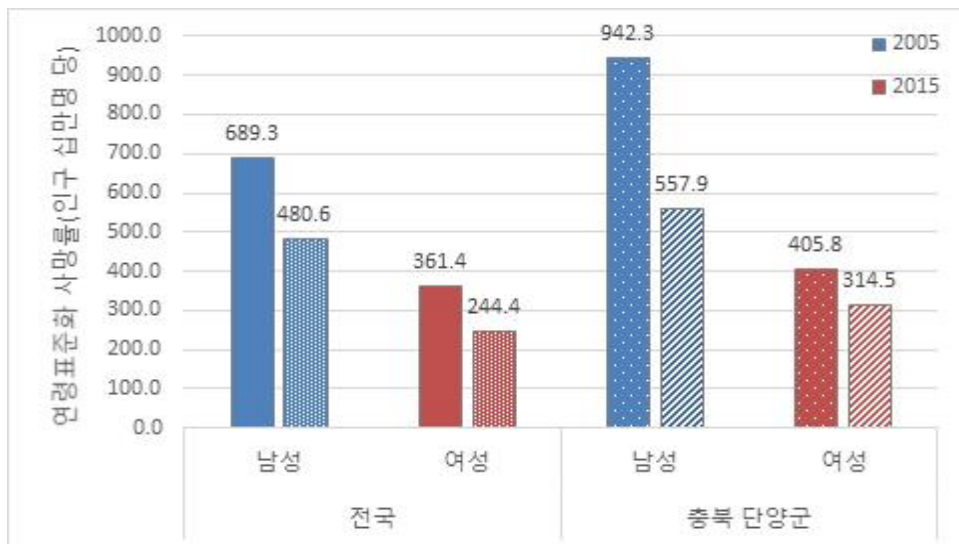
- 단양군에서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비중은 2008년 18.0%(26건)에서 2015년 4.8%(6건)로 크게 하락함. 2015년 4.8%는 같은 해 전국의 다문화 혼인비중 7.4% 보다 낮은 수준임. 전체 이혼 중 다문화 이혼의 비중은 2015년 18.7%로 전국의 10.3% 보다 높은 수준임. 절대적인 다문화 이혼건수가 많지 않아 연간 변동이 큰 편이지만, 2014년을 제외하고 분석기간(다문화 통계는 2008년 이후) 내내 전국 통계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을 기록함
- 단양군의 경우 현재의 초저출산 수준마저도 어렵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무엇보다 전체인구가 3만여 명에 불과하고, 혼인 및 출생의 절대적인 숫

자가 많지 않아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토대가 많이 부족한 실정임. 향후 수년 내 활발한 인구유입이나 혼인 및 출산의 상승 등 획기적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출산력 지표의 추가 하락이 예상됨

3) 고령화 및 사망력

○ 단양군은 2007년 고령인구 비율이 20.3%를 기록하며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되었고, 2016년 현재 고령인구 비율이 25.9%로 확인됨. 고령화지수 역시 297.1로 유소년 인구 1인당 약 3명의 노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단양군의 사망력은 전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15년 연령표준화 사망률의 경우 남성이 인구 십만 명당 557.9명으로, 여성이 314.5명으로 전국의 480.6명과 244.4명 보다 각각 높았음. 특히 여성의 경우 2015년 악성신생물(암)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110.2명으로 전국의 67.2명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됨. 알려지지 않은 지역 특성 또는 의료시설 및 그에 대한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그림 4-88] 충청북도 단양군의 성별 연령표준화 사망률, 2005~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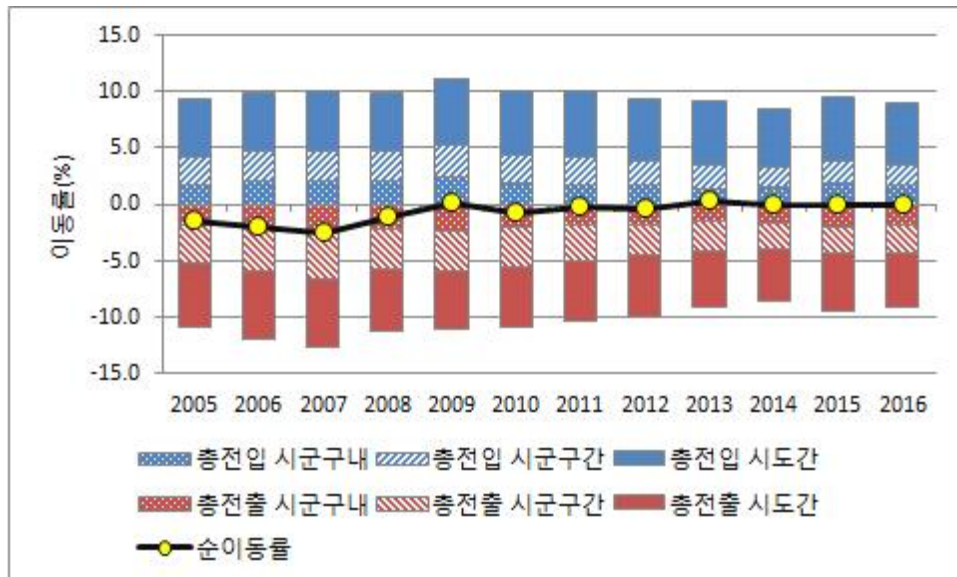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4) 인구이동

○ 단양군은 2005~2010년까지 주로 인구 순유출을 경험하는 곳임. 하지만 2010년을 지나 점진적으로 인구의 유출과 유입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변해왔음. 2016년 총전입률은 9.1%, 총전출률은 9.2%로 순이동률 -0.1%를 기록함. 단양군 관내 또는 충청북도 내 다른 지역 보다는 다른 시도 간 전입과 전출이 높은 것이 특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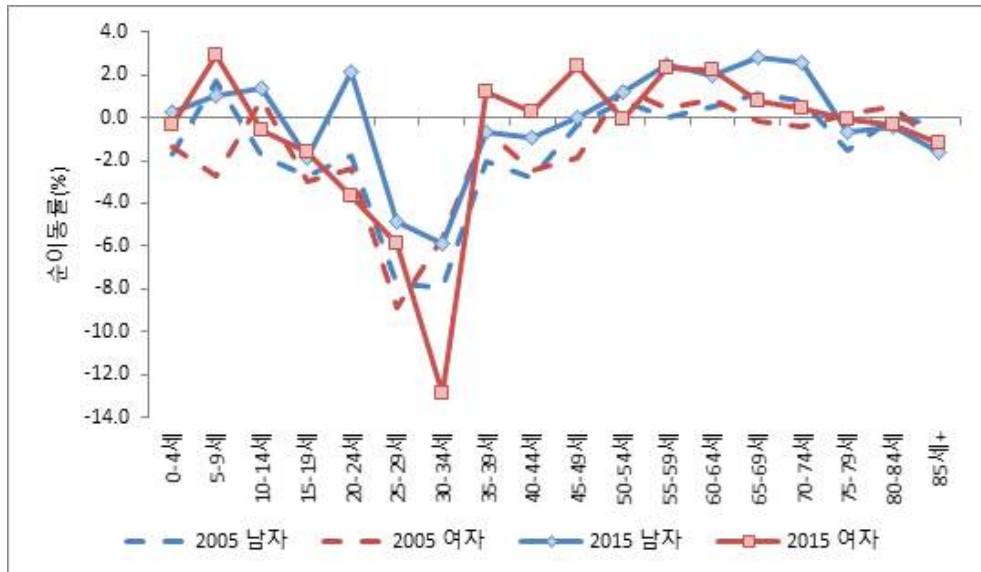
[그림 4-89] 단양군 지역단위별 총전입률, 총전출률, 이동률의 변화, 2005~2016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 단양군의 인구이동은 연령에 따라 구분됨. 무엇보다 진학·취업·혼인 등 사회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20대와 30대 남녀의 경우 매우 높은 수준의 순유출이 진행되어 왔음. 반면 유소년층과 중장년층 인구는 연령별 순이동률 2% 전후로 순유입을 기록함. 단양시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다수의 청년층은 떠나고, 그 외 연령대는 조금씩 인구가 유입되면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그림 4-90] 충청북도 단양군의 연령별 순이동률, 2005~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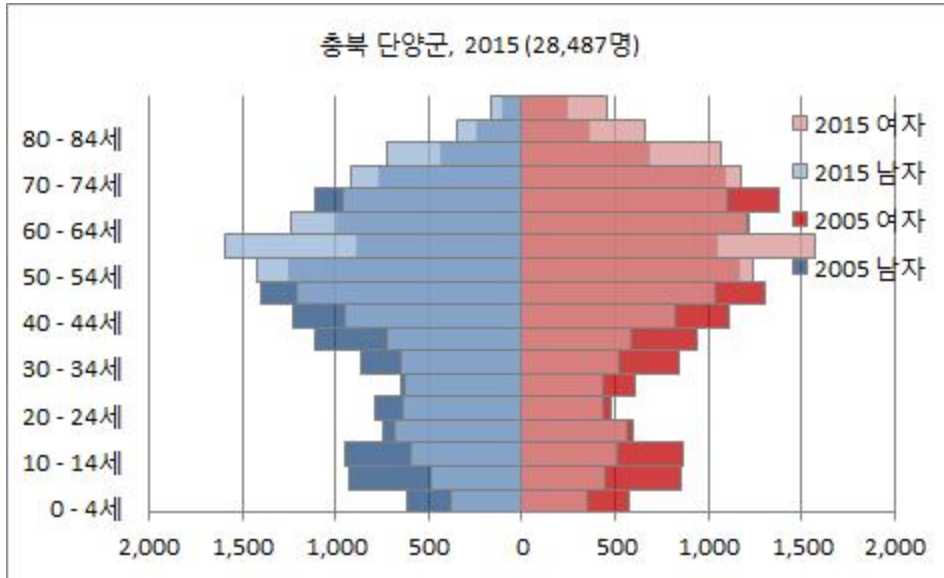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5) 인구변동과 인구구조

○ 단양군은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그리고 청년층의 인구유출로 빠른 인구고조의 변화를 겪고 있음. 단양군은 지난 2005년에 이미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많고, 유소년 인구가 상대적으로 작은 ‘버섯구름’ 형태의 인구피라미드를 갖고 있었음. 하지만 2015년 노년층은 좀 더 증가하고, 유소년 인구는 더욱 감소하여 좀 더 하단이 가늘어진 ‘버섯구름’ 모양을 보임

- 특히 2015년 현재 60~64세와 그 전후 연령집단에서 과거 2005년 동일한 출생코호트에 비해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노년층에서 귀농·귀촌 인구의 유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또한 0~4세와 5~9세 연령집단에서 남녀 인구가 각각 500명에 모자란 점을 감안하면, 향후 수년 내 육아·보육·교육과 관련한 공공기관 및 서비스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결과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인구유출로 초래되는 인구감소는 단양군이 직면한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 것으로 판단됨

[그림 4-91] 단양군 성 및 연령별 인구구조, 2005~2015



자료: 주민등록인구(통계청 2017)

다. 초저출산·초고령 - 인구유입: 충청북도 괴산군

- 초저출산·초고령 지역으로 분류되었음에도 최근 상대적으로 인구의 유입이 유출 보다 많은 지역들이 있음
 - 인구의 순유입 정도가 초저출산이나 초고령화를 극복에 도움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 인구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사회에 사회경제적 활기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됨
 - 이 유형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도권이나 중부지방의 농어촌지역들로 구성되며 주로 귀촌·귀농의 목적지 또는 여가활동 중심으로 선호되는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음
- 6개 지역: 강원 횡성군, 경기 가평군, 경기 양평군, 인천 강화군, 충북 괴산군, 충북 영동군
- 충청북도 괴산군은 2007년을 제외하고 분석기간 내내 합계출산율이 1.3 이하에 머물렀고, 2016년 고령인구 비율이 29.7%로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현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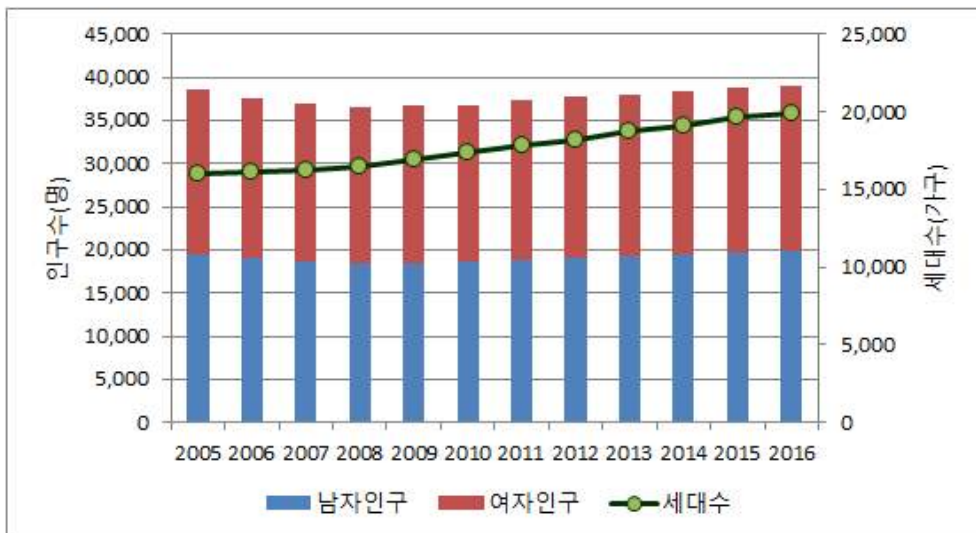
함께 겪고 있음. 2005~2008년 사이 인구 순유출을 경험하였던 곳이었으나 2011년부터 인구 순유입 지역으로 전환됨. 같은 유형의 다른 지역들이 합계출산율이나 순이동률의 변동이 심한 반면 괴산군은 상대적으로 안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심층분석 사례지역으로 선정함

1) 인구, 가구, 인구동태

○ 충청북도 괴산군의 주민등록인구는 2005년 38,595명에서 2008년 36,566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해마다 52~506명 정도 증가하여 2016년 38,973명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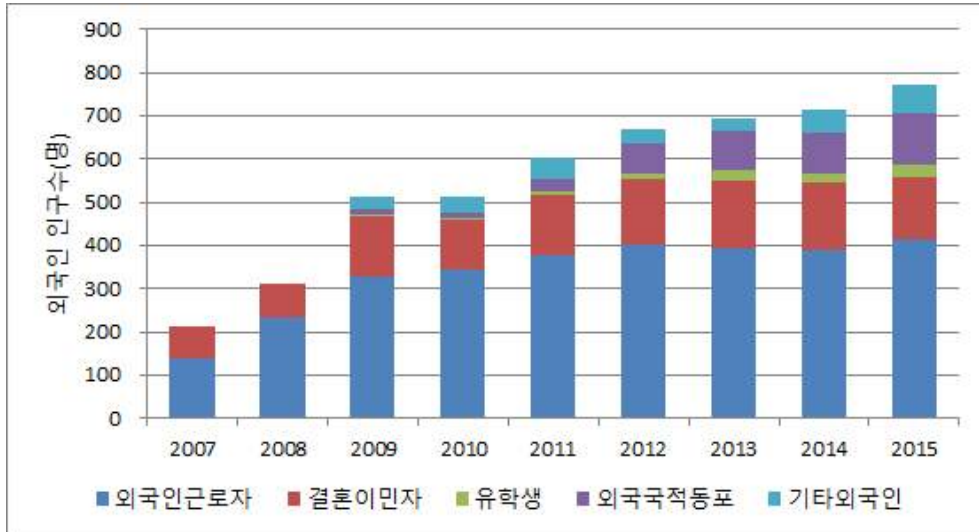
- 같은 기간 주민등록세대수는 2005년 15,976세대에서 2016년 19,620세대로 무려 3,929세대가 증가함. 지역 인구가 4만 명이 되지 않고 분석기간 주민등록인구가 겨우 378명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같은 기간 3,929세대의 증가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판단됨

[그림 4-92] 충청북도 괴산군 주민등록인구 및 세대수 변화, 2005~2016



자료: 주민등록인구통계(통계청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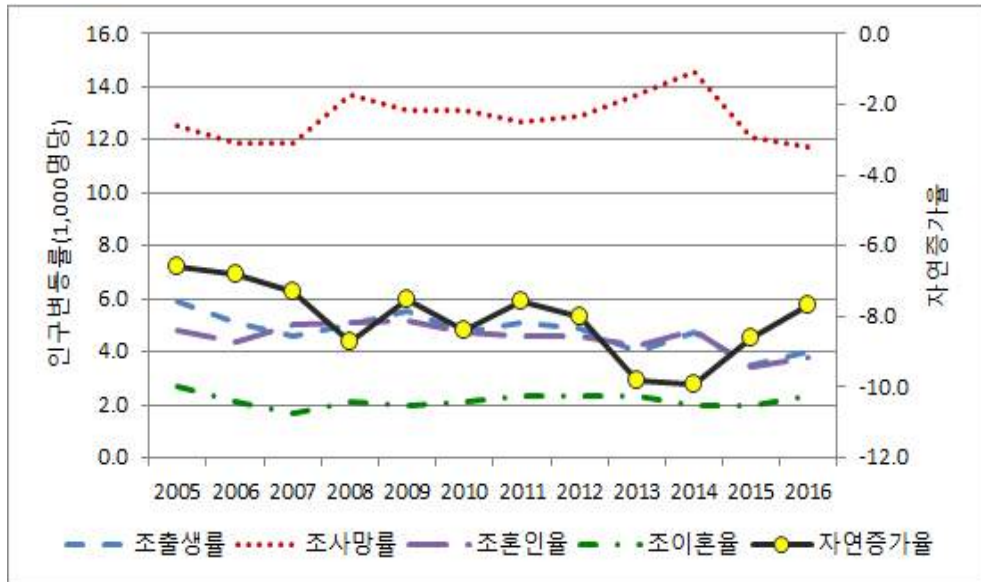
[그림 4-93] 충청북도 괴산군 외국인주민 인구변화, 2007-2015



자료: 외국인주민 현황(행정자치부 2017)

- 괴산군의 외국인주민은 2007년에 213명에서 2015년 770명으로 증가함. 구성별로는 외국인근로자가 412명(53.5%), 결혼이민자가 146명(19.0%), 외국국적동포가 119명(15.5%), 기타외국인 65명(8.4%), 유학생 28명(3.6%) 순임
 - 2015년 국적을 취득한 주민은 혼인귀화자가 101명, 기타사유 4명이었고, 아울러 괴산군에 총 302명의 외국인 주민자녀(외국인 부모 1명, 외국인-한국인 부모 299명, 한국인 부모 2명)가 거주하고 있음
- 괴산군은 다른 초저출산초고령 지역과 마찬가지로 조사망률이 조출생률 높아 인구의 자연감소가 심한 지역임
 - 2015년 조출생률과 조사망률은 각각 인구 천 명당 3.3명과 12.5명을 기록하여 약 -7.7명의 자연증가율을 기록함
 - 같은 해 전국의 인구 천 명당 3.3명의 자연증가율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임. 조혼인율은 2016년 인구 천 명당 4.4건으로 전국의 5.9건에 비해 낮았으며, 조이혼율 역시 1.5건으로 전국의 2.1건 보다 낮았음

[그림 4-94] 부산광역시 동구 주요 인구동태 변화, 2005~2015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2) 출산 및 혼인 동향

- 농어촌지역의 출산력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괴산군은 초저출산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합계출산율의 경우 지난 2005년 1.018에서 2007년 한때 1.334를 기록하였고, 주로 1.3 이하에서 유지되면서 2015년 0.980을 기록함
 -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은 연간 변동이 큰 편이라 일관된 변화를 묘사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출산연령의 고령화 추세를 따르고 있음
- 괴산군의 한 해 총출생아수는 2005년 178명이었으며 2007년 최고 206명까지 기록하였지만, 이후 감소세에 접어들어 2015년 겨우 128명으로 감소함
 - 출산순위별 출생아수를 보면 주로 첫째아와 둘째아 출산이 많이 감소하였으며, 전체 출생아 중 셋째아 이상 고순위 출생아수의 비중이 21.1%로 전국의 9.7%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고순위 출생아수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1.0 이하에 머물러 있는 점이 인상적임
- 괴산군에 혼인 또는 출산을 가로막는 심각한 요인이 존재하거나, 15~49세 가임기 여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4-16〉 충청북도 괴산군의 합계출산율 및 연령별 출산율(천 명당)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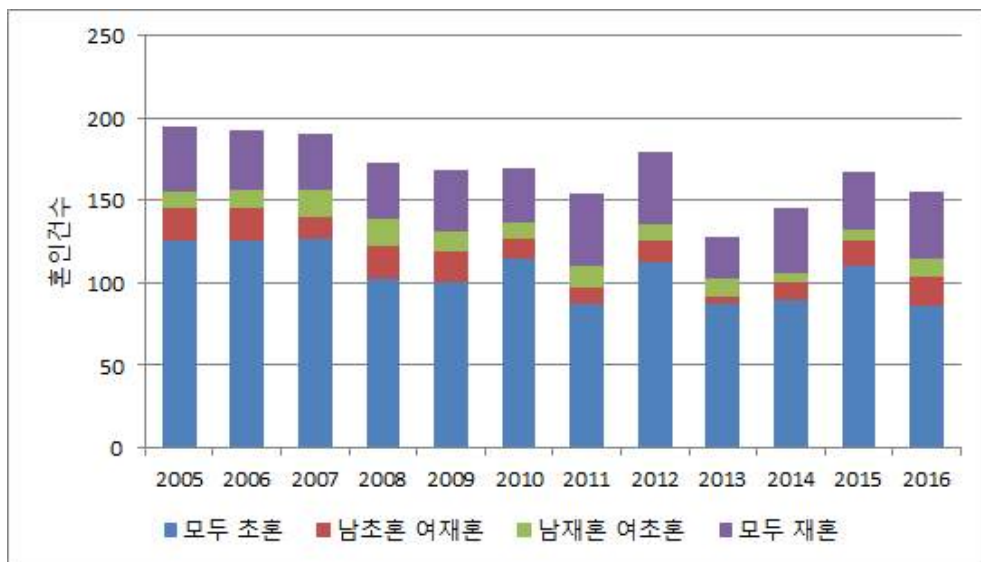
연도	합계출산율	연령별 출산율(천 명당)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2005	1.018	1.0	23.5	76.2	75.9	21.2	2.5	0.0
2006	1.160	4.4	21.6	102.1	70.9	24.6	0.9	0.7
2007	1.334	5.9	29.3	104.0	99.7	16.1	3.9	1.4
2008	1.133	2.5	30.6	88.1	74.4	20.6	4.1	0.0
2009	1.266	5.0	27.2	85.9	104.8	24.1	4.0	0.0
2010	1.242	3.8	17.8	79.3	110.6	25.6	9.1	0.8
2011	1.010	3.8	14.8	65.5	68.6	43.7	5.2	0.0
2012	1.223	2.6	16.3	65.2	113.8	35.6	9.5	0.0
2013	0.921	3.8	28.6	50.6	71.8	21.9	6.6	0.0
2014	1.117	1.3	24.3	46.6	87.5	55.9	3.4	0.8
2015	0.980	2.7	7.8	58.7	77.3	45.5	2.4	0.0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 괴산군의 다문화 출생건수는 2015년 현재 22명으로 확인되며, 전체 출생아수 중 17.2%를 차지함
 - 절대적인 다문화 출생건수가 많지 않더라도 총출생아수가 128명에 불과한 만큼, 다문화 출생비중 자체는 전국 4.5%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 괴산군의 혼인건수 역시 2005년 197건에서 2015년 155건으로 감소하였음
 - 그 중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는 86건에 불과하고 남성만 초혼이거나 여성만 초혼인 경우가 각각 18건과 11건이었음
 - 흥미롭게도 남녀 모두 재혼인 경우가 40건으로 무려 전체 혼인 4건 중 1건이 재혼 커플인 것으로 나타남

- 평균초혼연령은 남성 34.3세, 여성 30.3세로 전국에 비해 각각 1.5세와 0.2세 높은 것으로 확인됨
- 다문화 혼인과 이혼은 2015년 각각 20건과 4건으로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괴산군 한해의 혼인 및 이혼건수가 작아 각각 11.8%와 7.0%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4-95] 충청북도 괴산군 혼인상태별 혼인건수, 2005~2016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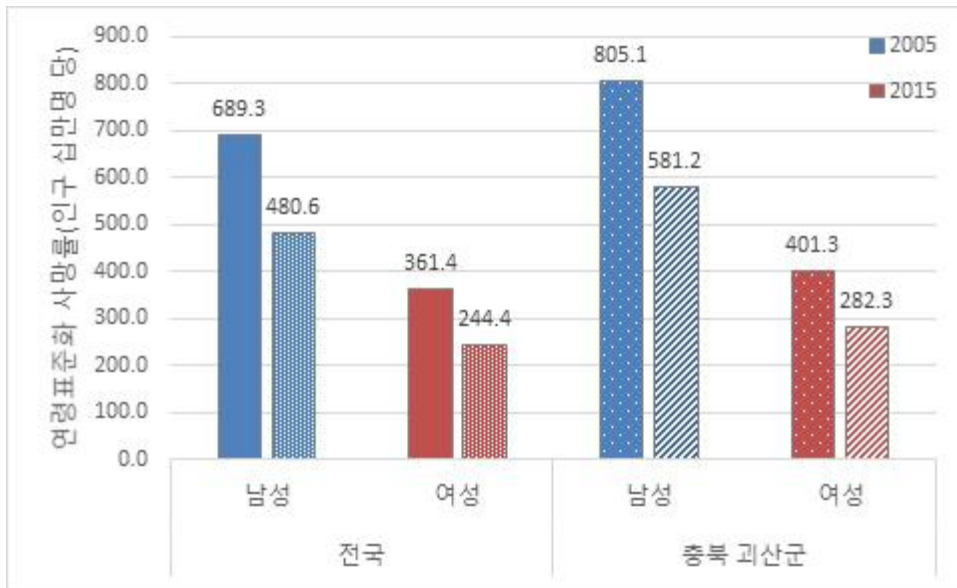
3) 고령화 및 사망력

- 괴산군은 2005년에 이미 고령인구 비율이 24.1%였으며, 2016년 29.7%를 기록하고 있음. 유소년 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고령화지수는 422.9를 나타냄. 유소년 인구 1명당 노인 인구가 4.2명일 정도로 심각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지역임
- 괴산군은 전국에 비해 높은 사망력을 가짐. 2015년 연령표준화 사망률의 경우 남성은 인구 십만 명당 581.2명, 여성은 282.3명으로 전국의 남녀 480.6명과

244.4명 보다 높음

- 사망원인별로 전국 사망률과 비교할 때, 남성의 경우 고의적 자해(자살)를 포함한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사망률이 높았으며, 여성은 폐렴을 포함한 호흡계통의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높은 것이 확인됨
-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또는 의료복지시설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그림 4-96] 충청북도 괴산군 사망원인별 연령표준화 사망률, 2015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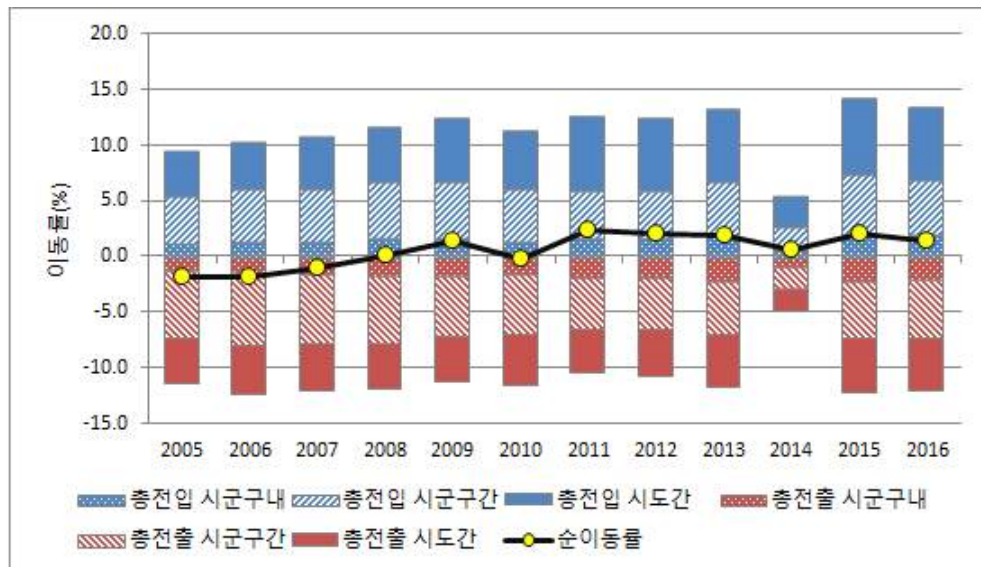
4) 인구이동

○ 괴산군은 2005~2007년 인구의 유출이 유입보다 많은 곳이었으나, 그 이후 상대적으로 인구의 유입이 많은 지역으로 변화함

- 2016년의 경우 총전입률 13.4%, 총전출률 12.0%, 인구 순이동률 1.4%를 기록함. 순이동률이 과거 2005년 -1.9%였던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음

- 2015년 전입지역을 살펴보면 충청북도 내 다른 시군구에서 전체 전입 인구의 36.6%, 다른 시도 지역에서 48.5%가 유입되어 다른 시군구 또는 다른 시도 출신 전입인구가 많은 것이 특징임
- 다만 총전입률과 총전출률 모두 2014년에 갑자기 줄어드는 것이 관찰되는 만큼, 그 원인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를 함께 겪고 있는 괴산군에서 최근 지속된 인구유입은 향후 인구전망에 관해 그나마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 4-97] 충청북도 괴산군 지역단위별 총전입률, 총전출률, 이동률의 변화, 2005~2016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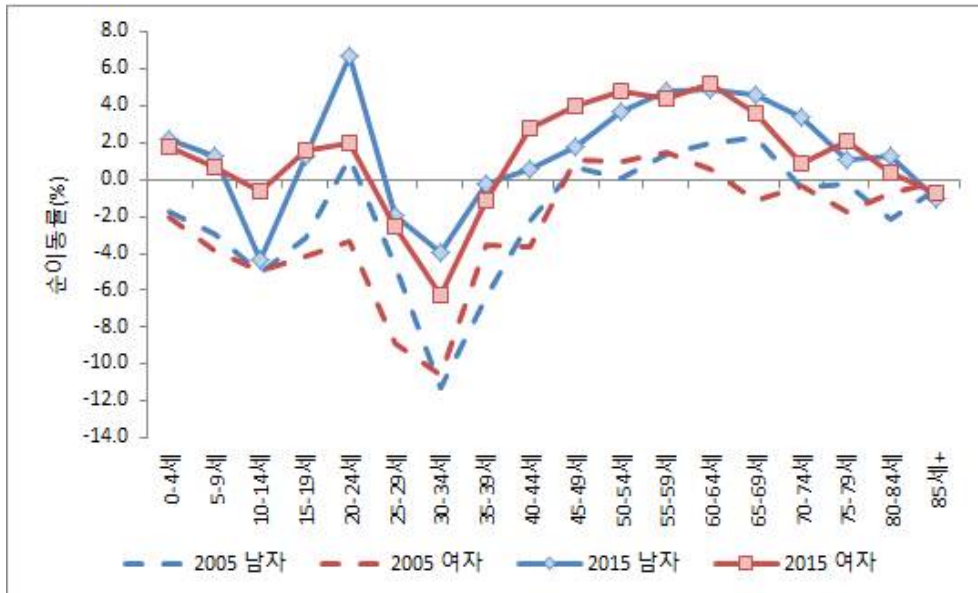
○ 괴산군의 연령별 인구이동률 변화는 인구의 순전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잘 나타내고 있음

- 2005년과 2015년 연령별 인구이동률을 비교해 보면, 85세 이상 등 일부 연령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연령집단에서 연령별 순이동률이 상승함
- 연령별 유형은 유지한 채, 순이동률의 수준이 고르게 상승한 상승하여 위로 이동함. 특히 2015년 15~24세와 40~84세 연령집단의 인구증가가 두드러

지고 있음

- 지역 내 산업단지 건설, 지역 내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진학,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해하고 있는 정책들이 그 원인으로 지적됨
- 다만 25~39세의 주요 청년층 인구가 꾸준히 유출되어 왔음. 괴산군 관내 청년층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주민등록유희기기’ 등 일시적인 인구정책의 효과가 대학 졸업이나 취업 등 개인적 사유로 해소되는 것인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그림 4-98] 충청북도 괴산군의 성 및 연령별 순이동률, 2005~2015



자료: 인구동태통계(통계청 2017)

5) 인구변동과 인구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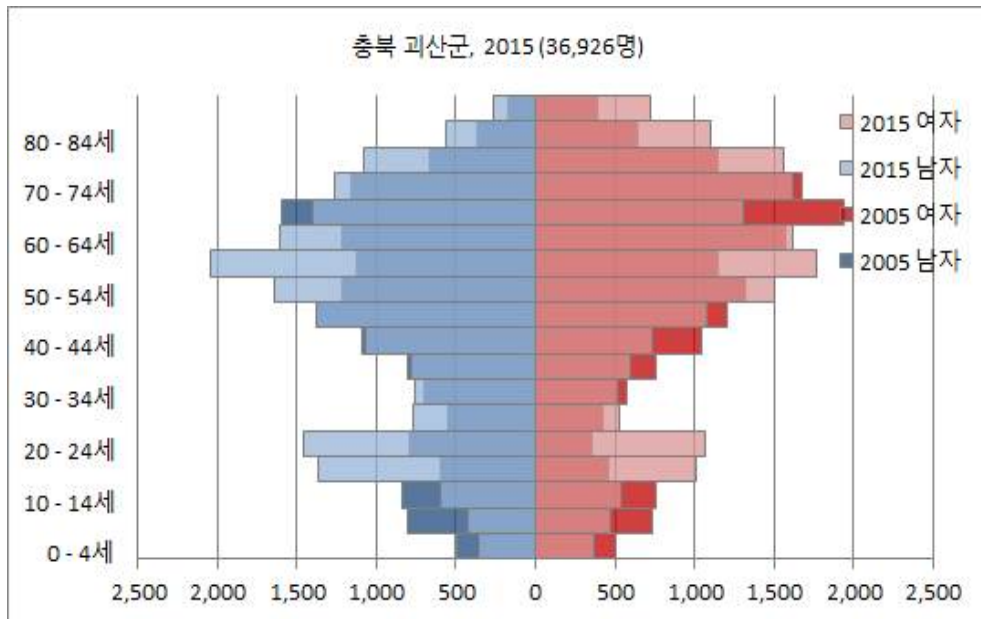
○ 괴산군은 초저출산과 초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인구가 이동 역시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되어 매우 빠른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음

- 초고령화를 겪고 있는 지역에서 많이 관찰되는 것처럼 2005년 괴산군의 인구피라미드는 ‘버섯구름’ 형태를 띠. 하지만 초저출산과 연령에 따라 차별

적인 인구이동 유형에 따라 2015년 15~24세, 50~64세, 그리고 75세 이상 연령집단에서 인구가 증가한 것이 확인됨

- 특히 15~24세의 경우 예외적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함. 괴산군 지역의 대학, 산업단지, 그리고 귀농·귀촌 지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여겨짐
- 다만 주로 대학과 관련된 10대 후반과 20대 초반 청년층 또는 중장년 인구만 증가하였고, 초저출산 및 초고령화 현상은 지속되고 있음
- 아울러 지역사회의 활력이 될 수 있는 25~39세 연령집단의 인구 감소는 괴산군의 인구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함

[그림 4-99] 충청북도 괴산군의 성 및 연령별 인구구조, 2005~2015



자료: 주민등록인구(통계청 2017)

제3절 지역 유형별 정책 환경 분석

1. 전담 조직 환경

-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은 주로 보육, 여성, 가족, 아동, 가족, 노인 등 관련 복지 업무 담당부서에서 담당하였음
 - 기존 담당 부서는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수립 시 체계적인 검토과정을 거치기보다 연관 부서의 사업을 취합하는 실정으로 파악됨
- 다른 한편,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역 인구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기 시작하였음
 - 인구정책과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은 정책 영역의 많은 부분이 중복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인구정책 전담부서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음
- 심층 사례 분석 지역의 인구정책 전담조직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특성이 잘 드러나고 있음
- 다음 표는 12개 자치단체의 인구정책 전담부서 설치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별시와 광역시 소속 기초자치단체(부산 강서구, 서울 종로구, 인천 연수구, 부산 동구)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지 않았지만, 도 지역 소속 기초자치단체(경남 창원시, 경기 이천시, 강원 강릉시, 전남 보성군, 전남 함평군, 전남 나주시, 충북 단양군, 충북 괴산군)는 모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음
 - 전담부서는 대체로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기획, 총무, 자치행정 부서) 산하에 두고 있음
 - 홈페이지에 공개한 담당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전담부서가 있어도 인구정책 업무가 명시되지 않은 자치단체도 있고, 인구정책 이외의 다수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음
 - 인력 구성은 팀장 1명과 팀원 1~3명까지 다양하지만, 대체로 팀장 1명과 팀원 1명 수준으로 구성됨

〈표 4-17〉 심층사례분석 지역의 인구정책 전담 조직 현황(2017. 12월 기준)

지역	부서	업무내용	인력 구성
경남창원	기획공보실-기획담당관 -인구정책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균형발전 종합추진 계획수립, 균형발전위원회 운영 화합 및 소통을 위한 시책 개발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관련 업무(상생발전 특별회계) 청년정책, 지역발전사업 	담당 1명 팀원 2명
경기이천	기획감사담당관-인구정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정책팀 업무 총괄 	팀장 1명
부산강서	미 설치		
서울종로	미 설치		
강원강릉	행정국-기획예산과-인구정책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정책 및 평가 관리 업무 총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운영 시행계획지역 행복생활권사업(연계협력사업) 공약사항관리, 정부합동평가, 주요업무평가, 상생발전협의회 인구늘리기 시책 각종 위원회 조정관리, 시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지역발전사업(포괄보조사업) 평가, 시정백서 발간 	담당 1명 팀원 2명
인천연수	미 설치		
전남보성	기획예산실-인구정책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정책계 업무 전반 인구정책 	팀장 1명 팀원 1명
전남함평	총무과-인구정책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교육진흥지원에 관한 업무, 교육자치제에 관한 사항 외국어 원어민 강사, 외국어타운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 업무,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남북교류협력, 북한 이탈주민에 관한 사항 국내외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군민 자치의식 함양, 지방행정혁신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지방분권업무, 자치경찰에 관한 사항 국민운동 관련 단체 지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팀장 1명 팀원 3명
전남나주	기획예산실-인구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주시 인구정책업무 총괄 경제안전건설국(민방위,쓰레기봉투 제외) 일자리정책실 	팀장 1명 팀원 1명
부산동구	미 설치		
충북단양	자치행정과-지역인구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인구정책팀 업무 총괄 인구대책, 저출산, 다목적회관 	팀장 1명 팀원 1명
충북괴산	기획감사실-지역인구정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증가시책, 지자체 내 관련부서 사업연계, 기획 인구정책 인식개선교육 및 홍보, 지자체 평가 대응 	팀장 1명 팀원 1명

출처: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2. 산업 및 종사자 환경

□ 지역의 인구 변동은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의 산업구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의 근로자 특성 또한 인구 변동 현황을 반영하고 있음

- 특히 산업과 일자리 현황은 인구의 이동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주 여건에 따라 기존 거주자의 출생, 혼인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여기서는 심층 사례분석 지역 12 지방자치단체의 산업과 근로자 특성을 살펴보고자 함

□ 우선 산업별 사업체 수를 살펴보면, 창원시가 83,204개소로 가장 많은 사업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종로구 40,923개소로 두 번째로 많은 사업체가 있었고, 강릉시가 19,797개소 순임. 사업체가 적은 지역으로는 함평군이 2,532개소, 괴산군 2,809개소, 단양군이 2,970개소 순임

〈표 4-18〉 산업별 사업체수

(단위: 개소)

지역	년도	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	금융및 보험업	공공/ 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	기타
창원시	2015년	83,204	35	9,929	3,050	20,688	6,821	17,087	981	4,318	2,697	17,598
이천시	2015년	15,330	36	1,692	557	3,594	1,653	2,960	133	816	473	3,416
강서구	2015년	14,766	13	6,085	345	3,808	865	1,448	82	257	151	1,712
종로구	2014년	40,923	3	4,163	370	17,708	1,452	6,544	546	974	676	8,487
강릉시	2014년	19,797	71	1,167	832	4,975	1,517	5,271	249	1,048	581	4,086
연수구	2015년	16,316	1	780	447	3,954	2,082	3,257	117	1,116	667	3,895
보성군	2014년	3,691	28	334	225	1,168	224	674	46	179	120	693
함평군	2014년	2,532	32	301	141	748	170	388	27	111	119	495
나주시	2015년	7,152	49	772	401	1,968	584	1,212	81	282	296	1,507
부산동구	2015년	13,957	5	1,157	385	4,957	1,226	2,205	373	305	329	3,015
단양군	2015년	2,970	21	200	202	689	193	835	28	114	89	599
괴산군	2015년	2,809	24	316	119	557	207	794	32	119	108	533

주: 1) 공공/교육: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교육 서비스 2) 기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자료: Kosis, 각 지역별 「기본통계」, 2017.12.3. 검색(창원시, 이천시, 강서구, 강릉시, 연수구, 보성군, 함평군, 나주
시, 부산동구, 괴산군). 종로구청, 「제 31회 2016종로통계연보」, 단양군청, 「충청북도단양군 통계연보」.

○ 지역별 산업별 사업체 비율을 살펴보면, 창원시, 이천시, 보성군, 부산 동구에
서 가장 높은 산업으로는 도소매업(창원: 24.9%, 이천: 23.4%, 보성: 31.6%,
부산 동구: 35.3%)로 나타남. 강서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제조업이 41.2%로
매우 높았고,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주를 이룸. 종로구는 타 지역에 비해 도소
매업이 매우 높아, 43.3%를 차지함. 강릉시, 단양군, 괴산군은 숙박 및 음식점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연수구는 기타 산업이 발달하였고, 함평군은 다
른 도시에 비해 농어업이 1.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다음 표는 산업별 종사자수를 나타냄. 산업별 종사자수는 지역의 산업별 사업체
수와 그 특성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이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사업체 수와 근로자 수의 분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며, 다음 표는 이런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음

□ 우선 산업별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창원시가 436,731명으로 가장 많은 근로자
가 근무하였고, 그 다음이 종로구 245,698명, 강서구가 113,911명 순인 것으로
나타남. 종사자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는 함평군이 10,425명이었고, 그다음이 보
성군 12,519명, 괴산군이 13,204명 순인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산업별 종사자 비율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산업별 사업체 수와 달리
대체로 제조업 근로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강서구의 경우는 전체 종사자수 대비 63.3%가 제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천시가 33.5%, 창원시가 30.1%, 괴산군이 26.7%로 나타남
- 이천시와 창원시 괴산군의 경우 사업체 수는 도소매업의 비중이 더 높았지
만, 근로자 수는 도소매업보다 제조업의 비중이 더 높았음
- 그 다음으로 기타 산업 강세를 보였는데, 종로구가 29.7%로 기타산업 종사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부산 동구로 28.2%, 연수구가 23.1%로 나
타남

〈표 4-19〉 산업별 종사자수

(단위: 명)

지역	년도	계	농림어업/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	금융및 보험업	공공/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	기타
창원시	2015	436,731	373	131,534	21,013	55,800	19,709	44,477	15,763	42,288	29,766	76,008
이천시	2015	100,573	488	33,682	4,034	11,396	7,163	9,244	1,885	7,918	5,379	19,384
강서구	2015	113,911	102	72,160	2,254	12,286	7,758	4,166	676	4,535	1,363	8,611
종로구	2014	245,698	9	12,624	22,434	43,205	6,592	26,389	18,560	29,159	13,646	73,080
강릉시	2014	81,359	780	6,377	7,289	13,389	4,029	12,958	3,418	11,700	6,705	14,714
연수구	2015	94,336	6	10,115	9,296	13,509	4,712	13,214	1,263	13,938	6,457	21,826
보성군	2014	12,519	263	1,138	1,148	2,260	576	1,490	364	2,163	1,274	1,843
함평군	2014	10,425	332	1,985	796	1,656	568	867	200	1,650	1,160	1,211
나주시	2015	42,018	1,264	6,017	5,501	4,847	1,282	3,251	1,246	5,854	4,299	8,457
부산동구	2015	76,759	90	2,834	4,773	12,995	8,836	6,003	9,845	4,593	5,130	21,660
단양군	2015	14,009	292	2,128	1,744	1,318	835	2,046	208	1,598	781	3,059
괴산군	2015	13,204	203	3,526	756	1,464	338	1,741	263	2,433	1,032	1,448

주: 1) 공공/교육: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교육 서비스 2) 기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자료: Kosis, 각 지역별 「기본통계」, 2017.12.3. 검색(창원시, 이천시, 강서구, 강릉시, 연수구, 보성군, 함평군, 나주시, 부산동구, 괴산군). 종로구청, 「제 31회 2016종로통계연보」, 단양군청, 「충청북도단양군 통계연보」.

□ 사업장 규모별 사업체 비율을 살펴보면, 이천시와 강서구를 제외한 10개 지역에서 1~4명 소규모 사업체 비율이 80%를 넘고 있음

○ 사업장 규모별 사업체 비율을 살펴보면, 1~4명의 사업체가 많은 지역으로는 보성군(87.4%), 괴산군(84.8%), 강릉시(84.5%) 순인 것으로 나타남. 5~9명의 사업체를 가진 지역으로는 강서구(17.2%)와 연수구(12.5%)가 우세함. 10~99명의 사업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 또한 강서구(14.2%) 이천시(9.4%)인 것으로 나타남. 100명 이상의 사업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은 강서구(0.7%)와 부산 동구(0.7%)로 나타남

○ 일반적으로 1~4명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비율이 낮고, 제반 근로 여건이 취약할 수 있음

- 근로여건이 취약한 경우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병행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근로시간과 소득 수준이 취약하면 여가생활 등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음

〈표 4-20〉 사업장 규모별 사업체 수

(단위: 개소)

지역	년도	계	1~4명	5~9명	10~19명	20~49명	5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
창원시	2014년	82,240	68,191	7,932	3,090	1,976	686	283	82
이천시	2015년	15,330	12,066	1,746	765	526	153	61	13
강서구	2014년	12,852	8,714	2,214	971	659	195	80	19
종로구	2014년	40,923	34,022	4,303	1,463	698	210	135	92
강릉시	2014년	19,797	16,735	1,825	669	409	113	40	6
연수구	2014년	15,641	12,540	1,948	662	292	121	60	18
보성군	2015년	3,896	3,404	266	127	76	20	2	1
함평군	2014년	2,552	2,105	241	112	77	14	2	1
나주시	2015년	7,152	5,738	770	344	208	53	28	11
부산동구	2015년	13,957	11,633	1,208	524	368	135	68	21
단양군	2014년	3,045	2,516	280	127	95	19	6	2
괴산군	2014년	2,830	2,400	200	110	97	16	5	2

자료: Kosis, 각 지역별 「기본통계」, 2017.12.3. 검색(창원시, 이천시, 강서구, 강릉시, 연수구, 보성군, 함평군, 나주시, 부산동구, 괴산군). 종로구청, 「제 31회 2016종로통계연보」, 단양군청, 「충청북도단양군 통계연보」.

□ 다음 표는 사업장 규모별 종사자 수를 나타냄

□ 사업장 규모별로 종사자 비율을 살펴보면, 강서구를 제외한 11개 지역에서 1~4명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비율이 가장 많았음. 강서구는 20~49명의 사업체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았음

○ 1~4명 사업체의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보성군으로, 42.0%를 나타내고 있음. 그 다음 강릉시(36.8%) 함평군(35.6%)순이었음

○ 100명 이상 사업체 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종로구로 나타났음. 종로구는 41.9%, 이천시는 30.6%, 나주시는 29.5% 순으로 나타남

□ 일반적으로 1~4명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비율이 낮고, 제반 근로 여건이 취약할 수 있음

○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 비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이런 특성이 정책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표 4-21〉 사업장규모별 종사자 수

(단위: 명)

지역	년도	계	1~4명	5~9명	10~19명	20~49명	5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
창원시	2014년	429,155	120,945	50,240	40,821	60,208	47,180	44,552	65,209
이천시	2015년	100,573	22,170	11,214	10,175	15,749	10,449	9,199	21,617
강서구	2014년	107,978	18,086	14,268	12,947	19,830	13,573	11,926	17,348
종로구	2014년	245,698	61,492	27,011	19,253	20,533	14,501	21,352	81,556
강릉시	2014년	81,359	29,978	11,491	8,874	12,109	8,041	6,151	4,715
연수구	2014년	82,275	22,470	12,386	8,602	8,784	8,433	9,154	12,446
보성군	2015년	13,384	5,623	1,727	1,763	2,291	1,331	273	376
함평군	2014년	10,535	3,750	1,562	1,558	2,197	868	266	334
나주시	2015년	42,018	10,000	4,926	4,722	6,425	3,556	4,913	7,476
부산동구	2015년	75,330	19,768	7,752	6,968	11,333	9,046	10,991	9,472
단양군	2014년	13,837	4,532	1,798	1,702	2,822	1,251	977	755
괴산군	2014년	12,363	4,242	1,287	1,516	2,748	1,071	707	792

자료: Kosis, 각 지역별 「기본통계」, 2017.12.3. 검색(창원시, 이천시, 강서구, 강릉시, 연수구, 보성군, 함평군, 나주시, 부산동구, 괴산군). 종로구청, 「제 31회 2016종로통계연보」, 단양군청, 「충청북도단양군 통계연보」.

□ 다음 표는 농가 및 농가인구의 현황을 나타냄

□ 농가가 가장 많은 지역은 창원시로 11,180가구를 나타냄

○ 나주시는 10,124가구, 강릉시는 7,460가구 순인 것으로 나타남

○ 농가가 가장 적은 지역은 연수구로써, 77가구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종로구와 부산 동구는 농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농가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창원시로 27,929명이었고, 그 다음 이천시가 22,409명 순으로 나타남. 농가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은 연수구이며 293명으로 나타남

○ 전업농가 대비 겸업농가를 살펴보면, 전업농가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나주시(66.1%)였으며, 다음 순은 괴산군(64.9%), 보성군(64.1%)이었음. 겸업농가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이천시, 창원시, 강릉시 순이었음

〈표 4-22〉 농가 수 및 농가인구

(단위: 가구, 명)

지역	년도	농가수	전업	1종겸업	2종겸업	농가인구
창원시	2015년	11,180	5,293	1,003	4,884	27,929
이천시	2015년	8,183	3,517	4,666		22,409
강서구	2015년	5,877	3,191	2,686		18,059
종로구	-	-	-	-	-	-
강릉시	2015년	7,460	3,658	872	2,930	18,036
연수구	2015년	77	77			293
보성군	2015년	7,819	5,009	1,328	1,482	17,634
함평군	2015년	5,642	3,422	2,220		12,158
나주시	2015년	10,124	6,705	3,419		21,663
부산동구	-	-	-	-	-	-
단양군	2015년	3,471	2,191	429	851	7,434
괴산군	2015년	5,644	3,661	1,077	906	12,417

자료: Kosis, 각 지역별 「기본통계」, 2017.12.3. 검색(창원시, 이천시, 강서구, 강릉시, 연수구, 보성군, 함평군, 나주시, 부산동구, 괴산군). 종로구청, 「제 31회 2016종로통계연보」, 단양군청, 「충청북도단양군 통계연보」.

□ 지역별로 사업체 수와 근로자 수가 어떤 특성으로 분포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경제활동 특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임

□ 여기서는 크게 산업에 따른 분류와 사업장 규모에 따른 분류, 그리고 농가 특성을 살펴보았음

○ 산업에 따른 사업체 수와 근로자 수를 살펴보면, 지역의 중심 산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며, 고용형태와 근로여건을 짐작할 수 있음

- 지역 산업이 제조업과 도소매업 중심일 경우 근로자는 임금근로자 특성을 반영하고 있을 것이며, 음식 숙박업과 같은 서비스업 중심일 경우는 자영업자 특성을 반영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장 규모에 따른 특성에서 1~4명 소규모 사업체 및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가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경우, 근로시간, 임금수준 등의 근로여건이 취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점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3. 보건의료 환경

□ 지역의 고령화 진전과 임신 및 자녀출산 현상과 관련하여 보건의료 인프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지역의 보건의료 인프라는 인구의 양적 질적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여기서는 정책적 환경 요인으로 지역의 보건의료 인프라 현황을 고찰함

□ 우선 의료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은 창원시로써 전체 1,199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은 종로구 473개소, 연수구가 298개소 순으로 나타남. 의료시설이 가장 적은 지역은 단양군으로 전체 18개소 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고, 괴산군 23개소, 함평군 32개소 시설이 운영 중임

〈표 4-23〉 의료시설 수

(단위: 개소)

지역	년도	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특수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조산소	부속병원
창원시	2015년	1,199	10	42	518	1	34	309	1	276	1	7
이천시	2015년	201	1	4	96	2	3	53	0	41	0	1
강서구	2015년	55	0	1	20	0	1	18	0	10	0	5
종로구	2015년	473	4	2	167	0	0	164	1	129	0	6
강릉시	2015년	224	4	5	104	0	4	52	0	53	0	2
연수구	2015년	298	2	4	143	0	3	84	1	61	0	0
보성군	2015년	45	0	2	21	0	4	8	0	10	0	0
함평군	2015년	32	0	1	16	0	1	7	7	0	0	0
나주시	2015년	106	1	3	51	3	6	22	1	19	0	0
부산동구	2015년	184	3	6	78	0	5	40	1	51	0	0
단양군	2015년	18	0	1	7	0	1	5	0	4	0	0
괴산군	2015년	23	0	2	10	1	0	5	0	5	0	0

자료: Kosis, 각 지역별 「기본통계」, 2017.12.3. 검색(창원시, 이천시, 강서구, 강릉시, 연수구, 보성군, 함평군, 나주시, 부산동구, 괴산군). 종로구청, 「제 31회 2016종로통계연보」, 단양군청, 「충청북도단양군 통계연보」.

○ 의료시설 유형비율로 살펴보면 12개 모든 지역에서 의원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창원시, 이천시, 강서구, 종로구, 연수구, 나주시, 단양군, 괴산군

지역은 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냄. 강릉시, 보성군, 부산동구는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 병상 수를 살펴보면, 병상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창원시로 18,322배드로 나타났고, 다음은 나주시 3,999배드, 종로구 3,315배드 순으로 나타남. 병상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단양군으로 211배드, 함평군 269배드, 강서구 317배드 순임

○ 의료시설 유형별로 병상 비율을 살펴보면, 요양병원의 병상비율이 높은 지역은 창원시, 보성군, 함평군, 나주시, 부산 동구인 것으로 나타났고, 종합병원의 병상 비율이 높은 지역은 종로구, 강릉시, 연수구 순이었음. 병원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서구, 단양군, 괴산군이었고, 이천시는 특수병원의 병상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24〉 병상 수

(단위: 배드)

		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특수 병원	요양 병원	치과 병의원	한방 병원	한의원	조산소	부속 병원
창원시	2015년	18,322	3,531	5,881	1,144	202	7,514	0	50	0	0	0
이천시	2015년	1,863	125	324	339	598	477	0	0	0	0	
강서구	2015년	317	0	200	25	0	79	0	0	0	0	13
종로구	2015년	3,315	2,949	121	174	0	0	40	31	0	0	0
강릉시	2015년	3,027	1,613	759	172	0	460	15	0	8	0	0
연수구	2015년	1,772	526	351	385	0	461	3	46	0	0	0
보성군	2015년	1,407	0	520	110	0	777	0	0	0	0	0
함평군	2015년	269	0	42	53	0	174	0	0	0	0	0
나주시	2015년	3,999	200	507	37	1,055	2,156	0	44	0	0	0
부산동구	2015년	3,085	906	627	94	0	1,379	0	79	0	0	0
단양군	2015년	211	0	74	65	0	72	0	0	0	0	0
괴산군	2015년	365	0	209	23	133	0	0	0	0	0	0

자료: Kosis, 각 지역별 「기본통계」, 2017.12.3. 검색(창원시, 이천시, 강서구, 강릉시, 연수구, 보성군, 함평군, 나주시, 부산동구, 괴산군). 종로구청, 「제 31회 2016종로통계연보」, 단양군청, 「충청북도단양군 통계연보」.

□ 보건의료원 수를 살펴보면, 보건의료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괴산군으로 총 30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나주시로 29개소, 함평군, 보성군이 25개소 순인 것으로 나타남. 보건의료원수가 적은 지역으로는 부산동구가 1개소,

종로구, 연수구가 2개소인 것으로 나타남

- 창원시는 창원통합시로 변경되면서 3개의 보건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보건지소가 많은 지역으로는 나주시가 13개소, 괴산군이 12개소, 보성군, 창원시가 각각 10개소인 것으로 나타남. 보건진료소가 10개소 이상인 지역은 이천시, 보성군, 함평군, 나주시, 단양군, 괴산군이었음

〈표 4-25〉 보건의료원 수

(단위: 개소)

지역	년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창원시	2015년	3	10	7
이천시	2015년	1	7	15
강서구	2015년	1	4	3
종로구	2015년	1	1	0
강릉시	2015년	1	8	9
연수구	2015년	1	1	0
보성군	2015년	1	10	14
함평군	2015년	1	8	16
나주시	2015년	1	13	15
부산동구	2015년	1	0	0
단양군	2015년	1	7	15
괴산군	2015년	1	12	17

자료: Kosis, 각 지역별 「기본통계」, 2017.12.3. 검색(창원시, 이천시, 강서구, 강릉시, 연수구, 보성군, 함평군, 나주시, 부산동구, 괴산군). 종로구청, 「제 31회 2016종로통계연보」, 단양군청, 「충청북도단양군 통계연보」.

□ 대도시 지역에서 보건의료 인프라와 관련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경계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음

- 부산광역시 전체의 보건의료 인프라 접근성을 고려하면, 부산광역시 강서구나 동구 지역의 관내 보건의료 인프라 현황은 서로 차별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임. 보건의료 인프라는 인접 지역의 시설 접근성도 고려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그러나, 보건의료 인프라에서 12개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 소도시의 경우 보건의료 시설 접근성과 양적 질적 측면에서 주민의 미 충족 욕구가 있다면,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관점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임

4. 보육 환경

-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서 보육 환경은 특히 저출산 현상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음. 여기서는 12개 지역의 보육시설 수와 보육 아동 규모를 살펴봄
- 그러나 지역의 보육시설 수가 자녀의 출산이나 인구 이동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보육시설 수는 출산과 인구 이동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임
- 보육시설수를 살펴보면, 보육시설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창원시로 1,044개소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연수구(247개소), 이천시(171개소) 순임. 보육시설수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는 함평군, 괴산군이 각각 13개소, 단양군이 14개소로 나타남
- 보육시설 유형에 따른 비율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종로구, 부산동구, 단양군이고, 사회복지법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함평군, 괴산군이고, 민간 어린이집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이천시, 강릉시, 보성군이고, 가정어린이집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창원시, 강서구, 연수구임

〈표 4-26〉 보육시설 수

(단위: 개소)

지역	년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민간	법인단체 등	부모협동	직장	가정
창원시	2015년	1,044	35	30	330	10	0	18	621
이천시	2015년	171	12	0	97	0	1	4	57
강서구	2015년	80	6	6	17	0	1	2	48
종로구	2015년	79	28	2	17	3	0	21	8
강릉시	2015년	163	4	20	74	3	1	2	59
연수구	2015년	247	13	0	64	1	0	7	162
보성군	2014년	15	4	3	6	1	0	0	1
함평군	2015년	13	1	9	1	1	0	0	1
나주시	2015년	52	7	9	18	0	0	6	12
부산동구	2015년	26	9	2	0	2	0	5	8
단양군	2015년	14	5	6	0	3	0	0	0
괴산군	2015년	13	2	5	0	2	0	2	2

자료: Kosis, 각 지역별 「기본통계」, 2017.12.3. 검색(창원시, 이천시, 강서구, 강릉시, 연수구, 보성군, 함평군, 나주시, 부산동구, 괴산군). 종로구청, 「제 31회 2016종로통계연보」, 단양군청, 「충청북도단양군 통계연보」.

□ 보육아동 수를 살펴보면, 보육아동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창원시로 31,705명 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연수구(8,181명), 이천시(7,828명) 순임. 보육아동 수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는 함평군이 586명, 괴산군이 623명, 단양군이 642명으로 나타남

○ 보육시설 유형에 따른 아동비율을 살펴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종로구이고, 사회복지법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보성군, 함평군, 단양군, 괴산군이고, 민간 어린이집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창원시, 이천시, 강서구, 강릉시, 연수구, 나주시, 부산동구임.

〈표 4-27〉 보육 아동

(단위: 명)

지역	년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민간	법인단체 등	부모협동	직장	가정
창원시	2015년	31,705	2,707	1,986	15,629	843	0	963	9,577
이천시	2015년	7,828	732	0	5,995	0	19	221	861
강서구	2015년	2,991	309	482	1,076	0	24	219	881
종로구	2015년	4,070	1,741	92	787	144	0	1,181	125
강릉시	2015년	5,895	217	1,066	3,560	111	23	113	805
연수구	2015년	8,181	972	0	4,205	43	0	291	2,670
보성군	2014년	775	270	285	155	60	0	0	5
함평군	2015년	586	56	503	12	0	0	0	15
나주시	2015년	2,476	422	485	1,072	0	0	330	167
부산동구	2015년	1,721	511	304	686	0	0	96	124
단양군	2015년	642	228	258	0	156	0	0	0
괴산군	2015년	623	110	272	0	161	0	49	31

자료: Kosis, 각 지역별 「기본통계」, 2017.12.3. 검색(창원시, 이천시, 강서구, 강릉시, 연수구, 보성군, 함평군, 나주시, 부산동구, 괴산군). 종로구청, 「제 31회 2016종로통계연보」, 단양군청, 「충청북도단양군 통계연보」.

□ 보육시설이나 보육 아동수는 지역의 연령별 인구 규모에 따라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시설 유형에 따른 비중은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검토 될 수 있음

○ 시설 유형별로 공급자 측면과 수요자 측면 모두에게 정책적 요구가 다를 수 있

기 때문에, 시설 유형별 분포는 정책적으로 중요한 검토사항이 될 수 있음

- 특히 국공립 시설과 직장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점,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 욕구가 높은 점 등은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주택 환경

- 주거 환경은 삶의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에, 저출산 대책과 고령사회 정책 양 측면에서 모두 중요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주거 환경에 따라서 혼인, 임신, 출산, 자녀 양육, 노후 생활 등이 중요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 여기서는 12개 지역의 주택 유형에 따른 공급 규모, 주택 보급률을 검토함
- 우선 주택보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나주시로 116.0%였고, 그 다음이 단양군(109.6%), 보성군(109.4%)순으로 나타남. 주택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종로구(91.1%), 강서구(97.0%)순임
 - 주택유형별로 비중을 살펴보면, 단독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은 나주시, 단양군, 보성군, 함평군, 괴산군으로 나타남
 - 특히 함평군의 단독주택 비율은 90.5%, 보성군은 88.8%, 괴산군은 82.3%인 것으로 나타나, 단독주택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남
 - 다가구주택비율이 높은 지역은 부산동구, 종로구인 것으로 나타남. 아파트 비율이 높은 지역은 이천시, 연수구, 창원시, 강릉시, 강서구임. 연수구의 아파트 비율은 73.8%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단독주택 비중이 높은 지역은 농촌 또는 지방 중소도시에 해당하며, 반면 다가구주택이나 아파트 비율이 높은 지역은 도시 지역에 해당함

〈표 4-28〉 주택 현황

(단위: 가구, %)

지역	년도	일반 가구수	총 주택수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주택 보급률 (%)
창원시	2015년	396,957	417,626	50,536	125,184	221,069	11,262	6,461	3,114	105.2
이천시	2015년	71,691	76,555	21,271	12,350	33,624	3,228	6,082	0	106.8
강서구	2015년	32,797	31,868	9,268	5,157	16,922	130	99	292	97
종로구	2014년	60,684	55,275	9,701	17,654	12,113	5,592	9,486	729	91.1
강릉시	2015년	86,937	93,041	26,346	19,807	41,983	2,665	608	1,632	105.1
연수구	2015년	107,382	114,283	2,626	20,562	84,360	912	5,823	0	106.4
보성군	2014년	22,345	24,455	21,717	122	1,912	364	116	224	109.4
함평군	2015년	17,547	18,380	16,637	139	782	181	103	538	104.7
나주시	2015년	46,444	54,090	32,958	4,060	14,906	890	1,276	0	116
부산동구	2015년	37,552	38,830	10,169	15,191	8,104	735	3,879	752	103.4
단양군	2015년	12,208	13,381	8,832	648	2,295	1,020	258	328	109.6
괴산군	2015년	15,611	15,869	13,064	851	961	263	439	291	101.7

자료: Kosis, 각 지역별 「기본통계」, 2017.12.3. 검색(창원시, 이천시, 강서구, 강릉시, 연수구, 보성군, 함평군, 나주시, 부산동구, 괴산군). 종로구청, 「제 31회 2016종로통계연보」, 단양군청, 「충청북도단양군 통계연보」.

□ 12개 지역 중에서 최근 주택 환경이 급격히 변화한 지역이 특징적으로 나타남

- 창원시의 경우 총 주택 수가 2013년에 394,607가구에서 2015년에 417,626가구로 23,019가구 증가하였고, 이중에서 아파트가 16,087가구 증가함
- 부산 강서구의 경우 총 주택수가 2013년에 22,343가구에서 2015년에 31,868가구로 총 9,525가구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 아파트는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함
- 나주시의 경우 총 주택수가 2013년에 39,748가구에서 2015년에 54,090가구로 14,342가구 증가했으며, 이 중에서 아파트는 6,221가구 증가하였고, 나머지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차지함
- 단양군의 경우는 총 주택수가 2013년 대비 2015년에 1,803가구 감소하였고, 괴산군은 같은 기간 총 주택수가 1,323가구 감소하였음

제4절 지역 유형별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 내용 분석

- 지방자치단체 심층 사례 분석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내용 검토가 필요함
 - 여기에서는 사례 분석 지역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을 검토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2016년도에 수립하여 제출한 시행계획의 내용을 기술적 차원에서 검토 함
- 분석 대상 지자체
 - 앞서 전체 기초 지자체를 12개 유형으로 분류하였음. 12개 지역 유형에서 유형별 대표 지자체로 12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였고, 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6년도 시행계획 내용을 분석함
- 분석 시행계획 범위
 - 12개 기초자치단체가 2016년도 제출한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의 내용을 대상으로 분석함
 - 다만, 2016년도 지자체 시행계획에서 경기도의 경우 각 사업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목록만 제출하였음. 따라서 12개 지자체 중 경기도 이천시의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목록만을 살펴보았음
 - 또한, 2016년도 지자체 시행계획에서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기초 자치단체의 시행계획 내용 자체가 포함되지 않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사업 내용은 검토하지 못하였음
 - 저출산 대책과 고령사회 대책을 구분하고, 사업 내용의 구성적 특성, 전달체계,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1. 경상남도 창원시

- 창원시의 저출산 분야 시행계획은 총 16개 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 공무원 대상 사업 2개, 아동 청소년 대상 사업이 10개, 임산부 대상 사업 2개, 어린이집 대상 사업 1개, 장애인 가정 대상 사업 1개로 구성됨
- 사업의 주요 정책대상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이 중심을 차지함
 - 사업 대상에서 아동 청소년 대상 사업이 10개로 가장 많이 포함되었음
 -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은 모자보건사업에 해당하는 많은 사업이 1개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임
 - 공무원 대상 2개 사업은 대상 규모가 명확하지 않아 시행계획에 적시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적인 공무원 대상 제도이지만 일가정양립의 중요성 차원에서 시행계획에 포함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1회적 행사성 사업도 2개 포함되어있음
 - ‘청소년 문화제’, ‘Korea! 창원 친친 페스티벌’ 사업의 경우 1회적 행사성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전달체계의 특성
 - 창원시의 경우 저출산 대책은 시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의 경우만 보건소 전달체계를 적용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은 모두 시청에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임
- 창원시의 2016년 시행계획은 전반적으로 저출산 대책으로 특별히 개발된 사업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상시 추진 사업 중 선별하여 시행계획에 포함한 것으로 판단됨
 - 예산규모가 특히 큰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장난감 도서관 운영’,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의 경우 이런 특성이 잘 드러남

〈표 4-29〉 창원시 저출산 분야 정책 내용

명칭	대상	대상규모	주요내용	예산 (백만원)	전달체계
공무원 유연근무제	공무원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2016년 성과관리공통지표 선정, 다양한 유연근무제 시행	비예산	시청
육아휴직제도 개선	공무원		육아휴직제도 참여 활성화 안내/대체인력/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채용	228	시청
저소득층자녀 학원비 매칭사업	저소득 한부모 가정	260명	학원비 시 30,000원 지원, 학원 30,000원 이내 감면	94	시청, 학원 연합회
저소득층 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사업	최저생계비 150%이하 대학신입생	10명	대학 첫학기 입학등록금 1인 3,000천원 이하	30	시청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교통비 지원	기초보장수급자	2,400명	중·고등학생 교통비 분기 30천원	288	시청
청소년문화제 “열아홉을 위하여	고 3수험생	1,000명	청소년동아리 및 연예인 초청 공연	30	경남도민일보
Korea! 창원 토티 페스티벌	청소년	10,000명	댄스&밴드 경연대회/ 연예인 축하공연 및 청소년동아리 한마당	100	시청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9개기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수련원 운영	6,444	시청
아동 안전지도 제작	초등학교	22개소	아동 여성 안전지도 제작 및성교육버스 유튜브지원	13	시청
저소득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 교과서대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고등학생	1,200명	교과서대 1인 36,000원	43	시청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학교 신입생 자녀 교복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학생	300명	교복비 1인당 70,000원	21	시청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	주차면 50면이상인 다중이용 시설		주차면 50면이상인 다중이용 시설(공공기관 의무적 설치, 민간 권장 설치)	비예산	시청
장난감도서관 운영	도서관	2개소	장난감 및 영유아 도서 대여, 영유아프로그램 및 부모 참여 프로그램 운영(도서관 2개소)	280	시청
민간어린이집 특화 프로그램 운영	평가인증 민간, 가정어린이집	406개소	영어, 피아노, 미술, 태권도 등 특화프로그램 운영	146	시청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기혼여성, 임신12주 미만 임산부	11,000명	산전검사/엽산제 지원/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철분제 지원/임산부 건강교실 등	351	보건소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장애인가정	40명	장애등급에따라 최대 100만원 이내 출산지원금 지급	40	시청

□ 창원시 고령사회 분야 정책의 구성

- 고령사회 분야 사업은 총 6개로 절대적 규모에서 많지 않은 실정
- 총 6개의 고령사회 분야 정책으로 1개 사업이 90세 이상 장수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1개 사업은 관내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며, 1개 사업이 독거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나머지 2개 사업은 일반적 노인을 대상으로 함

□ 예산 운영의 특성

- 고령자 문화 여가 인프라 개선 사업의 경우 1,475백만원으로 매우 큰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관내 경로당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인프라 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보임
- 반면 ‘요리교실’이나 ‘농심대학’ 사업은 대상 및 예산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

□ 전달체계 측면에서 고령사회분야 모든 사업이 시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표 4-30〉 창원시 고령사회 분야 정책 내용

명칭	대상	대상규모	주요내용	예산 (백만원)	전달체계
노후 소득보장	90세이상 장수노인	2,100명	장수수당 1인 월 35,000원 지원	73	시청
고령자 문화 여가 인프라 개선	경로당 등	984단체	노인지회 문화체육 육성/노인 게이트볼대회/경로당 활동비/ 노인대학 운영/노인지지회 운 영/노인 지역봉사지도원활동 비	1,475	시청
재해 등 노인 안전보장	독거노인	1,250세대 650세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미 안전확인서비스 지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통한 안전확인 및 서비스 지원	300	시청
6070 남성요 리교실 운영	노인	25명	남성요리교실 운영(8회 25명)	4	시청
창원농심대학 운영	노인	200명	교양강좌 및 생활속 접목 강 좌(15회)	20	시청

2. 경기도 이천시

□ 정책의 구성

○ 이천시 저출산 분야 정책은 총 9개로써, 출산 및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4개, 고용지원 사업 1개, 다문화가족 대상 사업 3개, 모자보건 사업 1개로 구성

○ 대체로 출산 및 다자녀 가정을 지원 사업이 중심을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됨

□ 2016년 예산 비중을 살펴보면, ‘출산축하금지원사업’,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의 경우 각각 300백만원, 900백만원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 투입 예산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출산축하용품 및 축하카드 지원사업은 62백만원, 출생기념 축하통장 지원 사업은 12백만원, 대규모 채용박람회 사업은 20백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중간 수준의 비중을 차지함

○ 나머지 사업의 예산 비중은 대체로 백만원대 수준으로 예산 비중이 매우 작은 실정

〈표 4-31〉 이천시 저출산 분야 정책 내용

사업명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증감	비율(%)
출산 축하금 지원 사업	300	300	0	-
다자녀가정 양육비지원	810	900	90	11
대규모 채용박람회	20	20	0	-
다문화가족 한국문화체험	4	5	1	25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	7	8	1	14
세계인의날 무지개 축제	5	8	3	60
모유수유 지원 사업	2	3	1	56
출산 축하 용품 및 축하카드 지원 사업	62	62	0	1
출생 기념 축하 통장 지원 사업	18	12	△6	△33

□ 이천시의 고령사회 분야 정책은 총 7개 사업으로 구성됨

- 경로당 인프라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 2개로 '경로당 시비 운영 지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여기에 해당함
- 나머지 5개 사업은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노인의 사회참여 분야 4개, 노인의 소득 보장 차원의 장수수당 지원 사업이 1개 포함되어 있음
- 2016년 156백만원을 투입한 '이천 시민 자치 평생 학습 축제 사업은 2015년에 없던 신규사업으로 판단됨

□ 2016년도 예산 비중에서 '경로당 시비 운영 지원 사업'의 예산이 233백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역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218백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2016년 신규 사업인 '이천 시민 자치 평생 학습 축제'사업도 156백만원으로 대체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4-32〉 이천시 고령사회 분야 정책 내용

사업명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증감	비율(%)
노인교실 지원	10	8	△2	△20.0
경로당 시비 운영 지원	234	233	△1	△0.5
경로당 활성화 사업	144	218	74	51.7
학점은행제 자격과정 운영	22	28	6	27.3
이천 시민 자치 평생 학습 축제	-	156	156	100.0
이천시 장수수당	24	24	-	0.0
어버이날 · 노인의 날 행사	40	40	-	0.0

3. 부산광역시 강서구

□ 정책의 구성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저출산 분야 정책은 전체 11개 사업으로 구성됨
- 출산 가정 대상 사업 2개, 임신부 대상 사업 3개, 공무원 대상 사업 2개, 어린이집 대상 사업 2개, 아동 청소년 대상 사업 2개로써, 사업의 영역 별 구성은 대체로 다양성을 갖추고 있음

□ 예산 규모로 볼 때 출산 축하금 지원 사업의 비중이 가장 크고, 다음은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 사업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과 출산 축하금 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규모가 매우 큰 편이며, 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 사업의 경우는 주민이 직접 수혜대상은 아니지만, 어린이집 시설지원을 통한 서비스 질 개선에 간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모자 보건사업 홍보물 제작 사업과 임신부 출산 준비 교실 사업은 예산 규모가 1백만원으로 너무 작게 편성되어 있음
- 공무원 대상 사업은 각각 1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사업 대상 규모가 작아 큰 의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전달체계는 구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모자보건사업의 경우 보건소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소 추진 사업도 시행계획에 적절히 포괄하고 있음
- 성년의 날 행사의 경우는 민간단체 위탁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함

〈표 4-33〉 부산 강서구 저출산 분야 정책 내용

명칭	대상	대상규모	주요내용	예산 (백만원)	전달체계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비 지원	셋째이후 출생아	230명	건강보험료 1인당 월25천원 내외 5년간 납입 지원	69	구청
출산 축하금 지원	둘째이후 출생아	480명	○ 둘째 500천원 ○ 셋째이후 1,200천원	296	구청
모자보건사업 홍보물제작배부	보건소 등록 관내 임신부	1,000부	임산부 등록 시 모자보건사업 홍보물 배부	1	보건소
임산부 출산준비 교실	임산부	4회	분만기전과 출산시 호흡법, 산전·산후 우울관리, 모유수유 의 이해와 관리, 이유식 조리 실습	1	보건소
임산부 철분제 · 엽산제 지원	보건소 등록된 임신부	철분제 2,000통 엽산제 300통	○ 20주 이상 임산부 철분제 지급(최대 5통) ○ 12주 미만 임산부에게 엽 산제 지급 - 최대 1통	17.8	강서구 보건소
출산장려시책(출산축하 포인트)	공무원 또는 배우자	30	○ 출산 또는 배우자가 출산 한 공무원에게 자녀 출산 횟수에 따라 출산 축하 복 지포인트를 지급 - 첫째 자녀 250P, 둘째 자녀 250P, 셋째 자녀 이상 1,000P	15	구청
출산휴가·육아휴직자 업무대행	공무원	2명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발생 시 수시 업무대행 기간제 근 로자 채용	15	구청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	관내 평가인증 어린이집	45개소	난방비 28천원 지원	60	구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20	관내 차량운행중인 평가인증 어린이집 차량운영비(50만원) 지원	120	구청
저소득 가정 자녀 교복비 지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80명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 녀 중고교 신입생 1인 25만 원 지급	20	구청
성년의 날 행사	저소득 주민	20명	성례식, 성인역할 교육 실시, 선물증정	5	민간 위탁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고령사회 분야 정책은 총 6개 사업으로 구성됨

- 노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사업은 독거노인 안전망 구축사업 1개이며, 노인돌봄 서비스 운영 활동경비 지원 사업은 서비스 제공 기관을 지원하는 사업
- 관내 노인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1회적 사업으로 체육대회와 장기바둑대회 2개 사업이 해당
- 지속사업으로 볼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 1개가 있으며, 특징적인 것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시행계획에 포함된 점

□ 사업 내용적 특성

- 전체 6개 고령사회분야 사업 중에서 노인 체육대회 지원사업과 노인 민속 장기 바둑대회 2개 사업이 일회적 행사성 사업임
- 외국인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노동문제 등 상담, 내국인 대상 언어 티칭 교육,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1개 사업으로 묶어서 시행계획에 포함한 부분이 특징적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외국인 정책을 포함하고 있지만, 기초 자치단체에서 외국인 대상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는 이례적으로 평가됨
- 노인일자리 확충 사업은 유사 중복 지적으로 향후 폐지할 예정에 있다고 명시하였음

□ 전달체계는 대체로 위탁사업 중심

- 전체 고령사회 분야 사업 중에서 구청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독거노인 안전망 구축사업 1개 뿐
- 나머지 모든 사업은 사업 수행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음

〈표 4-34〉 부산 강서구 고령사회 분야 정책 내용

명칭	대상	대상규모	주요내용	예산 (백만원)	전달체계
노인돌봄서비스운영 활동경비지원	노인돌보미(생활관리사)	13명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노인돌보미에게 활동경비 지원	15.6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기관 1개소
독거노인 안전망 구축사업	독거노인 205명	독거노인 205명	우유(요쿠르트)배달원을 통한 독거노인 근황 파악, 이상 발견 시, 동 주민센터·구청에 즉시 보고	49	구청, 우유배달원
노인체육대회 지원	관내 노인	3,000여명	운동경기 및 경로잔치(축하공연, 노래자랑 등)	25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지회
노인 민속 장기바둑대회	관내 노인	300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속 장기·바둑대회 - 1부 : 개회식(대강당) - 2부 : 경기 및 시상식(경로식당) 	2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지회
노인일자리 확충	관내 노인	3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활동: 52백만원(20명) 시장형: 20백만원(10명) 전담인력: 14백만원(1명) 	86	수행기관 및 동 주민센터(유사증복 폐지예정)
거주 외국인 지원사업	관내 거주 외국인	3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교육, 문화여가, 한국문화적응교육 등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문제 및 기타 생활상담 등 외국문화 체험, 내국인 대상 고국언어터칭교육, 내국인 대상 다문화인식개선교육 등 	20	사업 공모하여 수행기관(3개소, 예산 차등지원)선정

4. 강원도 강릉시

□ 강릉시 저출산 분야 사업은 총 7개로 구성

- 출산 가정 대상 1개 사업, 일반 시민 대상 1개 사업, 저소득 동거부부와 다문화 가정 대상 사업 각각 1개 사업, 어린이집 대상 사업 2개와 지역 아동센터 대상 사업 1개

□ 사업의 내용적 특징

-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출산장려 지원 사업 1개뿐이며, 예산 비중도 444백만원으로 절대적 규모를 차지하고 있음
 - 출산 장려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으로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이 있는 점이 특이할 점. 다만 이 사업 지원 대상은 1명으로 계획되어 있는 점을 보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과거 출산억제기 사업 방법을
 - 엽산제와 철분제 등 임신부 영양제 지원 사업은 모자보건 분야의 고유한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가족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있으나, 인식개선 사업의 성격으로 주민 직접 지원 사업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개의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대체로 많은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내용이라 할 수 있음
- 동거부부 행복 혼인식 사업은 사업대상 규모가 8쌍으로 크지 않아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동부부 지원을 통하여 가족의 다양성을 확산하는 상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취약계층 아동 과일지원 사업은 아동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의미 있게 평가할 수 있음

□ 전달체계의 특성

- 시청과 보건소가 사업 영역을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음

〈표 4-35〉 강릉시 저출산 분야 정책 내용

명칭	대상	대상규모	주요내용	예산 (백만원)	전달체계
출산 장려 지원 사업	출산 가정	6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장려금 지원: 1,450명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1명 임산부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3,200명 난임부부 영양제(엽산제) 지원: 220명 출산용품 지원: 1,000명 출산준비교실 운영: 700명 	444	보건소
가족문화 프로그램 운영	강릉시민(가족, 이웃, 기관, 단체 등)	2,0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기능강화, 가정생활문화 발전에 관한 교육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및 체험, 특별기획프로그램, 다수 집합교육, 상담 등 	10	시청
동거부부 행복 혼인식	저소득 동거부부	8쌍	저소득 동거부부 및 다문화 가정 부부 혼인식 비용 지원	6.4	시청
다문화가정 사회 적응 및 정착 지원	다문화가정	10개 사업	다문화가정의 사회 적응 및 정착 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92	시청
휴일 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	3개소(영광, 사임당, 옥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교사 및 취사부 휴일특별근무수당 : 5만원/일 휴일어린이집 운영비 : 20만원/월 	20	시청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냉·난방비)	평가인증유지 어린이집	162개소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1회)	73	시청
취약계층 아동 과일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20개소	과일제공 및 영양교육	81	보건소

□ 고령사회분야 사업은 총 8개로 구성됨

-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총 4개, 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 4개로 구성됨
 - 저소득 또는 결식 우려 노인을 대상으로 2개 사업이 추진 중이며,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사업이 1개 포함됨

□ 사업 내용적 특징

- 의료급여 수급 노인 중 건강진단 희망자에게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두드러짐
- 노인일자리 확대 사업은 중앙정부 노인일자리 사업과 중복 우려가 있을 것으로 평가됨
- 기관 및 단체 지원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 보조사업과 구분되는 자체사업인지 검토 필요함
 - 지역사회 시니어 클럽 운영 사업, 경로당 활성화 사업, 노인종합복지관 2개소 운영 사업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업의 경우 예산이 1,279백 만원으로 그 규모가 매우 큰 것이 특징

□ 전달체계 특징

- 고령사회분야 정책들은 일부 시청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고, 일부는 기관 및 단체를 통하여 수행하고 있음
- 노인일자리 확대 사업과 지역 사회 시니어 클럽 운영은 사업 성격이 같은 것이지만 전달체계는 시청 직접 수행과 시니어클럽을 통한 사업 수행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특징임

〈표 4-36〉 강릉시 고령사회 분야 정책 내용

명칭	대상	대상규모	주요내용	예산 (백만원)	전달체계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	결식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260명	저소득 노인에게 식사를 제공	195	민간기관 위탁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265명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저소득 노인에게 식사를 제공	239	급식수행 기관 : 4개소
노인 건강진단	만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100명	중 건강진단 희망자에게 검진비 지원	7	시청
노인일자리 확대		410명	시가지 중심지역에 토.일요일 환경미화원 공백 기간동안 난립하는 불법광고물(명함형, 벽보형 등) 및 도심환경 정비	119	시청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2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교육프로그램 확대 (4개분야 115개 과목) - 노인종합복지관 서예반 및 당구장 자율이용 확대 추진 	1279	시청
경로당 활성화	관내 경로당	110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지원 110개소 및 운동기구 지원 20개소 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의 체계 구성 경로당 안전용품 지원(292개소) 경로당 기능보강, 흡서기 대비 가전제품 등 지원 (30개소) 	232	시청
노인대학 운영강화 및 기능보강	노인대학	1개소	노후화된 노인대학의 시설 보강	10	시청
지역사회 시니어 클럽 운영		1개소 88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시니어클럽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237	시니어클럽

5. 인천광역시 연수구

□ 연수구의 저출산 분야 정책은 총 15개로 구성

- 출산가정 대상 사업은 1개, 산모 대상 사업 2개, 아동 대상사업 1개,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교사 대상사업 8개 사업, 도서관 대상 사업 2개, 여성대상 정책 1개로 구성
- 사례분석 대상 12개 지자체 중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린이집관련 사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특징이 나타남

□ 정책 내용적 특성

- 셋째아 이후 출생아 아동 양육비지원 사업은 현금 직접 지원 사업으로 출산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 초등학생 방과후 교실 운영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 160명을 대상으로 하여 수혜대상 규모가 크지 않지만, 예산은 468백만원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규모
- 어린이집 관련 사업 8개 중에서 보육교사 지원 사업이 총 5개이고, 나머지 3개 사업이 어린이집 기관 지원 사업
 - 특히 어린이집 교사 연구활동비 지원 사업은 월 10만원의 연구활동비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1,202백만 원 투입되어 전체 사업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 사회참여 지원 및 권익 증진 사업은 사례분석 대상 지자체 중 다른 지자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사업으로, 시행계획에 포함된 것이 두드러짐

□ 전달체계의 특성

- 전체적으로 구청이 시행계획 사업의 중심이 되며, 보건소 추진 사업을 포함하고, 사회복지 법인이나 도서관을 추진 체계로 이용하고 있음

〈표 4-37〉 인천 연수구 저출산 분야 정책 내용

명칭	대상	대상규모	주요내용	예산 (백만원)	전달체계
셋째아 이후 출생아 아동양육비 지원	셋째아 이상 출산가구	연3,600명	셋째아 이후 출생아 아동양육비 지원(월 20만원씩 12개월간 총 240만원)	720	구청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확대	중위소득 120%이하 출산가정	400명	출산후 산모 및 신생아 돌봄서비스 이용권(2주간) 지원	220	보건소
모자건강지원 프로그램 운영	임산부 및 임신준비 여성	200명 80회	영유아 오감발달 놀이교실 운영/임산부 요가교실 운영/예비모 건강검진 지원	20	보건소
초등학생 방과후 교실 운영 지원	저소득층 아동	초등학교 4개소, 아동 160명	안전(생활)교육, 학습지도, 중식 간식 제공, 개별상담, 특기적성, 체험프로그램 등 제공	468	사회복지법인 위탁
어린이집 교구보강비 지원	전체 어린이집	252개소	아동교육용 교구 및 외부 활동을 위한 품목 등의 보강비 지원 (연1회)	121	구청
어린이집 보육장비 개선비 지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151개소	어린이집의 위생장비 또는 교육장비비 지원 (연1회)	189	구청
어린이집 정기 살균소독비 지원	전체 어린이집	257개소	업체선정 후 시설 및 교재, 교구에 대한 살균소독 직접 지원	170	구청
어린이집 교사 연구활동비 지원	어린이집 재직 보육교사	연인원 12,020명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연구활동비(월 10만원) 지원	1,202	구청
어린이집 격려수당 지원	어린이집 재직교사	연인원 3,600명	명절과 스승의 날 격려금 지원 (1회당 50,000원)	180	구청
평가인증 준비 어린이집 교사 초과근무수당 지원	미인증시설 재직 보육교사	400명	평가인증 준비로 인해 월 10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하는 보육교사	60	구청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교사수당 지원	인증 통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450명	평가인증 통과어린이집 교사수당 1인 월 5만원씩 재직기간 중 지급	270	구청
어린이집 교사 근속장려수당 지원	만3년 이상 근속한 보육교사	200명	만3년 근속 보육교사 장기근속 장려수당지급(월40,000원)	96	구청
독서문화진흥행사 운영	도서관 이용자 및 지역주민	4개소	도서관주간행사(4월), 가정의 달 행사(5월), 독서의 달 행사(9월), 작가초대전 등	66	도서관
독서진흥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3개소	독서진흥 교육 프로그램 운영	97	도서관
여성 사회참여 지원 및 권익증진	경력단절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능력개발교육 운영 ○ 여성주간기념행사 운영 	15	구청

□ 연수구 고령사회 분야 정책은 총 4개로 구성

- 전체적으로 고령사회 분야 대표 사업이 드러나지 않고 있음
-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사업은 예산이 4,000백만원으로 매우 규모가 크지만, 1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해야 함
-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으로 관내 138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기능 보강 및 개보수를 추진하는 사업임
- 효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은 어버이날 기념행사로써 1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 행복나눔 연수구 아카데미 사업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주민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전체적으로 시설지원 사업 2개 이외에 고령사회 대응에 적합한 사업이 적절히 포함되어 있지 않음

〈표 4-38〉 인천 연수구 고령사회 분야 정책 내용

명칭	대상	대상규모	주요내용	예산 (백만원)	전달체계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사업		1개소	청학경로당 신축 및 송도국제 도시 노인복지관 건립	4,000	구청
경로당 기능보강 및 개보수 지원 사업	경로당	138개소	경로당 기능보강 및 개보수 사 업	230	구청
효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추진	65세 이상 어르신	1500명	어르신전통한마당축제, 어버이 날 효섬김문화공연, 어버이날 기념행사, 청소년경로효친예절 교실운영, 노인의 날 기념식 등	50	구청
행복나눔 연수구 아카데미 개최	주민		인문교양, 교육, 경제 등 전문 가 특강 및 토크콘서트	24	구청

6. 전라남도 보성군

□ 보성군 저출산 분야 정책은 총 12개로 구성

- 출산가정 대상 사업 1개, 임신부 대상 사업 2개, 아동 청소년 대상사업 7개, 여성공무원 대상 사업 1개, 전 주민 대상 사업 1개로 구성
- 심층사례 연구 12개 지자체 중 다른 지자체에 비해 아동 청소년 대상사업이 시행계획에 많이 포함되어 있음

□ 정책 내용적 특성

-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이 1,002백만원 투입되면서 전체 사업에서 가장 큰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실제로 출산가정에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 가정의 자녀 양육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보성군 인구 5만 회복운동 사업은 심층 사례 연구 12개 지자체 중 다른 지자체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업으로, 지방 인구 감소 위기를 반영하는 사업으로 평가됨
- 예방접종, 임신부 영유아 건강관리 및 아이사랑 마더 박스와 같은 사업은 보건소 중심의 모자보건사업으로 일반적 내용으로 볼 수 있음
- 여성공무원 대상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사업은 대상자 6명으로 규모가 작고, 기본적 인력운영 방침으로 보면 시행계획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움

□ 전달체계의 특성

- 대체로 군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소 추진 사업도 적절히 포함되어 있음
- 교과목 학력 신장 사업에서 교육전문 업체 위탁 사업이 특징적임

〈표 4-39〉 보성군 저출산 분야 정책 내용

명칭	대상	대상규모	주요내용	예산 (백만원)	전달체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원	자녀를 출산한 가정	720명	전체 출생아 240~900만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원	1,002	보건소
보성군 인구 5만 회복운동			읍면 평가 및 시상/ 전직원 및 가족주민등록 현황 조사/ 5개 분야 역점시책 지속 추진//기관단체, 기업체 「내 직장·내고향 주소 갖기」홍보/공무원 1:3 전입운동 지속 실시	116	군청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	만12세 이하 어린이	2,590건	영유아 예방접종 15종	128	보건소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모든 임산부 및 영유아	650명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 관리/어린이 유산균정장제 지원/임신육아교실 운영/임산부 배려문화 조성 및 출산장려 캠페인	4	보건소
아이사랑 마더박스	임산부 및 영유아	200명	유아용 식기세트, 신생아 내의, 체온계, 아기 목욕용품 등 신생아 용품으로 구성된 마더박스 지원	7	보건소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아동학대예방 교육/담당자 간담회/조기 발견 및 연계/학령기 미취학 아동 전수조사	17	군청
여성공무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여성공무원	6명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의 사유 발생시 대체인력을 지원	99	군청
교과목 학력 신장 사업	고교생	180명	○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우수학생 선발 교육 ○ 국어, 영어, 수학 교과목 및 진학지도 등 방과 후 수업	300	교육전문업체 위탁
방과 후 학교 등 지원	방과후학교 지원 교육기관	36개소	방과 후 학교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지원	449	군청
직업체험활동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확	중·고등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	500명	직업박람회 안내(1부스), 진로 탐색활동(4부스)	7	군청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료강화	관내 학교 및 학생	학생 80명	- 내 용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과 올바른 사용에 대한 교육	0.2	군청
아동·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동아리 활성화	아동 청소년 동아리	9개 동아리	동아리 육성 및 동아리활동지원	3	군청

□ 보성군 고령사회 분야 정책은 총 10개 사업으로 구성

- 경로당 대상 사업 3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4개, 노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대상 사업 3개로 구성

□ 정책 내용적 특성

- 경로당 대상 사업은 지자체에서 대체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해당함
- 특징적인 점은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노인관련 사업이 포함된 점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찾아보기 힘든 내용임
 - 치매예방 및 인지 재활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경우 2개의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역 보건소가 치매예방 대책을 자체적으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표 4-40〉 보성군 고령사회 분야 정책 내용

명칭	대상	대상규모	주요내용	예산 (백만원)	전달체계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사업	등록경로당	50개소	안마의자, 안마베드 지원을 통한 건강증진 기여	75	군청
경로당 소규모 개보수사업	등록경로당	50개소	화장실개조, 도배·장판교체, 지붕개량, 방수공사 등	150	군청
경로당 힐링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24개소	로당에서 희망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당 20회)	55	노인복지관 등 운영위탁
노인의날 기념식 및 노인위안행사	노인	5,500	제20회 노인의 날 기념 식 및 위안행사 추진	72	군청
치매예방 및 인지 재활프로그램 운영	65세 이상 노인	보건소 2개소	치매예방운동, 요가, 웃음 치료, 손을 이용한 만들기 프로그램 등 주1회 운영	11	보건소
건강행복마을 만들기	만65세이상 어르신	37개소	건강체조, 만들기체험, 영양교육 및 실습, 보건교육 등	39	보건소
노인회 운영 지원	노인회	1단체	노인회 운영/노인대학 운영/노인 문화유적탐방/노인 문화체육행사 추진	57	군청
보성시니어클럽 운영		1개 클럽	생산적인 노인일자리 창출 (10개 사업단 100명 이상)	300	법인 위탁
노인공동생활가정 “다솜누리” 운영	노인공동생활가정	5개소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체 생활 지원	7.5	군청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장 시설 이용자	150건	화장 1건 당 화장장려금 200천원 지원	30	군청

7. 전라남도 함평군

□ 함평군 저출산 분야 정책은 총 5개로 구성

○ 5개 사업 중 4개 사업이 임신 출산 가정에 대한 것이며, 나머지 1개 사업은 아동 돌보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임신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시행계획을 구성함

□ 정책내용으로 양육비 지원 사업이 상대적으로 예산 비중이 높고, 직접 현금 지원 사업으로 자녀 양육 가정의 부담완화를 기대할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전달체계에서 시행계획에 포함된 모든 사업이 보건소 추진 사업으로 구성

○ 시행계획 수립을 보건소 중심으로 추진하였으며, 군청 추진 사업에서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이 없는 점이 특징임

〈표 4-41〉 함평군 저출산 분야 정책 내용

명칭	대상	대상규모	주요내용	예산 (백만원)	전달체계
임산부 등록 및 산모 건강 관리	관내 임산부	160명	임산부 등록, 관리/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급/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 모유수유클리닉운영	4	보건소
나비고을 양육비 지원	출생신고를 한 가정	5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생아 양육지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출생아 70~270만원 - 셋째아 이상 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 임양시 100만원 지원 넷째아 이상 승용차기준 300만원 지원 	298	보건소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출생아 중 우리아이미래보장보험 가입자	10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보장 : 질병입원비, 골절치료비, 암치료비, 화상치료비 등 만기환급금전달 : 대상자(전출자 제외)에게 장학금으로 전달 	160	보건소
아기맞이 출산준비교실	임산부, 예비임산부	20명	행복한 출산과 건강한 아기를 위한 준비(전문강의 및 공예 6회기)	6	보건소
내 손주가 최고여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20명		육아교육과 아이와 함께하는 오감놀이를 접목 4회	2	보건소

□ 함평군 고령사회 분야 정책은 총 5개로 구성

- 경로당 대상 사업이 3개, 단체 지원 사업 1개, 일반 주민 대상 사업 1개로 구성
되어, 경로당 대상 사업의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음

□ 정책 내용적 특성

- 지역의 보건복지 인프라 접근성을 고려한 사업들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 경로 건강대학 운영 사업, 이동 진료 차량 운영 사업의 경우 이런 특성을 잘 반
영하고 있음
-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의 경우 지자체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평
가됨

□ 전달체계 측면에서, 군청이 중심되고, 보건소와 민간위탁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표 4-42〉 함평군 고령사회 분야 정책 내용

명칭	대상	대상규모	주요내용	예산 (백만원)	전달체계
경로 건강대학 운영	단체	6개소 (보건소 1, 읍면 종교단체 5)	건강 및 교양강좌, 취미학습교 실, 자치회 구성 운영 등	80	민간위탁
화장장려금 및 장례용품 지원 사업	사망 후 화장한자로 신청자	110명	화장장려금 1인 100천원, 장례 용품으로 수의, 향, 장갑, 초 지원	17	군청
경로당 기능보 강 및 건강관리 기구 지원	경로당	90개소	경로당 개보수 지원사업/ 경로 당 고효율제품 비품 보급사업/ 폭염대비 에어컨 보급 지원/ 건 강관리기구 지원 및 고장수리	276	군청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93개소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강사 및 재료비등 운영 지원	39	군청
풍요와 행복을 드리는 이동진 료차량 운영	취약지역 132개마을	165회	○ 마을별 경로당 순회 방문 서 비스(주4회)	109	보건소

8. 전라남도 나주시

□ 나주시 저출산 분야 정책은 총 7개로 구성됨

○ 공무원 대상 사업 1개, 다문화 가정 대상 사업 1개, 출산 가정 대상 사업 2개, 임신부 대상 사업 2개, 아동 대상 사업 1개로 구성

○ 시행계획 내용이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

□ 정책내용에서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의 예산이 1,770백만원으로 비중이 크고,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전달체계 측면에서, 시행계획 사업이 대체로 보건소 추진 사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4-43〉 나주시 저출산 분야 정책 내용

명칭	대상	대상규모	주요내용	예산 (백만원)	전달체계
육아를 위한 휴가 휴직제도 확대·개 선	나주시 공무원	30명	○육아휴직 급여 정률제 운영 ○육아휴직제도 대체인력 지원체 제 구축 ○산전후 휴가 등 제도 운영	294	시청
다문화 가정 출산 축하용품 지원	다문화 가정	50가구	다문화 가정 출산축하용품(내의) 지원	1	보건소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가정	350명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1770	보건소
탄생축하기념 기 저귀 지급	출생아 가정	700명	출생아 1인당 기저귀 2팩 지급	21	보건소
모성 건강관리	관내 가임기 여성 및 보건소 등록 임산부	1,540건	○가임기 여성(15세~49세) 및 임산부 산전검사 실시 ○임신부 엽산제·철분제 지원 ○임신부 출산·육아 교실 운영	20	보건소
빛가람 출산·육아 교실 운영	임신 12주~ 32주 임산부 및 부부	32회	○예비맘 출산·육아교실 운영 14 회 ○임산부 순산체조교실 운영 16 회 ○아기사랑 인형 만들기 교실 2 회	7	보건소
셋째아 이상 자녀 학비 지원	어린이집 재원 셋째아 이후 자녀	250여명	만 4세가 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말까지 (3년이 내) 지원, 1인당 월 50,000원	180	시청

□ 나주시 고령사회 분야 정책은 총 5개로 구성

○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4개, 경로당 대상 사업 1개로 구성

○ 대체로 노인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중심이 되고 있음

□ 정책 내용 측면에서 이동 목욕 통합 서비스 사업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두드러짐

○ 이동 목욕 서비스는 거동불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추가로 대상 특성별 서비스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 독거 노인 등 취약 계층 노인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적용 대상이 소규모인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교실, 노인대학 등의 사업은 적용 대상이 보편성을 띠고 있지만 사업 내용은 문화적 측면에 맞추어져 있는 특징이 있음

□ 전달체계 측면에서 시행계획에 포함된 고령사회 분야 모든 정책이 시청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특징임

〈표 4-44〉 나주시 고령사회 분야 정책 내용

명칭	대상	대상규모	주요내용	예산 (백만원)	전달체계
독거노인 지원사업	독거노인	40명	사회관계가 없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특성별 서비스 지원하여 사회관계 활성화	20	시청
이동목욕 통합서비스 사업	거동불편 독거노인	370명	이동목욕 통합서비스(목욕 및 가사지원등)사업	68	시청
늦깎이 한글교실 운영	노인	120명	비문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학력 인정제도에 맞춰 학습을 진행	52	시청
노인대학 운영	노인	1868명	○노인대학/ 경로당 노인대학 (이동 경로대학)/ 찾아가는 노인교실	38	시청
경로당 활성화 및 이동노인복지관 사업	경로당	64개소	○동단위 경로당 방문 취미 여가프로그램 제공 ○면단위 이동노인복지관으로 프로그램 제공	114	시청

9. 부산광역시 동구

□ 부산광역시 동구 저출산 분야 정책은 모두 13개 사업으로 구성

-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3개, 다자녀 가정 대상 사업 1개, 다문화 가정 대상 사업 3개, 청소년 대상 사업 2개, 임산부 대상 사업 1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3개
- 저출산 분야 정책은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고, 영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특징을 나타냄

□ 정책 내용적 특성

- 심층 사례 분석 12개 지자체 중 다른 지자체와 달리 전체 13개 사업 중에서 비예산 사업이 4개로 많이 포함되었으며, 전체 예산 총액도 크지 않은 편임
- 출산지원금 사업이 144백만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사업이며, 대상 아동 규모도 작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됨
- 출산 및 다자녀 가정 대상 사업에서 비예산 사업이 많고, 민간 단체 자원을 활용한 점이 주요한 특징으로 파악됨
- 심층 사례 분석 12개 지자체 중에서 다른 지자체와 달리 여성 대상 사업이 3개나 포함하여 비중을 높인 점이 특징적임
- 보건소 추진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점이 특징적임

□ 전달체계 특성

- 전달체계 측면에서, 지자체 중 민간 자원을 가장 활용한 사례로 볼 수 있음. 특히 여성단체 기금 활용 사업은 모범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 농협, 보육시설 연합회 등 다양한 지역의 민간 단체가 사업 추진에 참여하고 있음
- 반면 보건소 추진 사업이 포함하지 않아, 보건소 자원의 활용 성과는 드러나지 않고 있음

〈표 4-45〉 부산광역시 동구 저출산 분야 정책 내용

명칭	대상	대상규모	주요내용	예산 (백만원)	전달체계
출산지원금 지원	아동	270명	둘째 출산지원금 200천원 셋째 출산지원금 2,000천원	144	구청
출산가정 가사서비스지원 사업단 운영	출생 가정 중 평균소득 100%이하	50세대	○ 자활근로자(가정파견인력) - 가정 방문 청소, 빨래 등 가사서비스 지원 - 신생아 예방접종 등 병원, 보건소 동행 건강관리 지 원 등	비예산	구청
출산가정 축하선물 지원	셋째 이상 자녀 출생 가정	50세대	미역, 기저귀 등 4만원 상당 출산축하선물 지원	비예산	동구여성단체 협의회 기금
민·관 협력 다자녀 가정 우대 지원사 업	저소득 다자녀가정	36세대	○ 동구여성자원봉사후원회 : 2세대 월 5만원 지원 ○ 농협수정동지점 : 상반기 2세대, 하반기 2세대 각 5 만원 농협상품권 ○ 동구보육시설연합회 : 셋 째 출생아 보육시설 입학 시 입학료 면제	비예산	동구여성자원 봉사후원회 농협수정동지 점 동구보육시설 연합회
결혼이주 여성 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의 여성	150명	문화체험 운영/가족프로그램 운영/다문화 해설사 운영	3.5	여성단체협의 회와 연계
건강가정 조성을 위한 가족프로그 램운영	일반 및 다자녀 다문화가정	100세대 400여명	가족 케익 만들기 교실, 가족 어울림한마당	3.5	구청
다문화가정 결혼 식 하객 도우미 지원사업	외국인과 결혼하는 주민	10쌍	결혼 축하 하객 도우미(바르 게살기 회원) 등 봉사활동	비예산	바르게살기운 동 동구협의회
건전한 청소년의 성장 환경 조성사 업	초·중·고교 학생	160명(2 0개팀 100명)	여름방학맞이 청소년 체험교 실 운영/청소년 끼 발산 경연 대회 개최	5	구청
중·고등학생 교육 멘토링사업	해양대학교 학생 및 관내 중·고등학생	80명	관내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에 대한 생활·학습지도, 고충·진 로 상담	20	부산광역시 동구, 한국해양대학 교
임산부 출산준비 교실 운영	임산부	40명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정보제 공과 자연분만 및 모유수유, 신생아 관리 등 교육	0.9	구청
동구 여성대학 운 영	동구민 여성	100명	교양, 경제, 가정, 의식, 문화, 역사, 문학, 교육 등 강좌개최	7.5	구청
여성 취미교실 운 영	동구민 여성	2회	교양, 경제, 가정, 의식, 문화, 역사, 문학, 교육 등 강좌 개 최(연 2회, 총 60명)	3	구청
여성 기술교육 운 영	동구민 여성	2회	교양, 경제, 가정, 의식, 문화, 역사, 문학, 교육 등 강좌 개 최(연 2회, 총 60명)	2.5	구청

□ 부산광역시 동구 고령사회 분야 정책은 총 3개로 구성

- 전체적으로 심층 사례 분석 12개 지자체 중에서 고령사회 분야 정책이 가장 적은 수준임

□ 정책 내용 특성

- 3개 중에서도 실제 노인 대상 사업은 1개뿐이며, 나머지 2개 사업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함
 -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1개는 경로의 달 기념 행사로 1회적 사업에 해당함
 - 노래 교실 운영 사업과 씽씽 동구 아카데미 강좌 사업은 노인뿐만 아니라 일반주민까지 참여하는 사업으로 고령사회 분야 정책으로 포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전체적으로 시행계획의 고령사회 분야 예산 규모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매우 적은 수준으로 평가됨

□ 전달체계 측면에서, 모든 사업이 구청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표 4-46〉 부산광역시 동구 고령사회 분야 정책 내용

명칭	대상	대상규모	주요내용	예산 (백만원)	전달체계
경로의 달 기념행사 및 노인축제한 마당	동구 어르신	2,000명 내외	경로의 달 기념식 및 어르신 가을운동회 개최	30	구청
가수 장진과 함께 하는 노래교실 운영	주민	매주 400여명	매주 금요일(총 52주) 신바람 나는 동구사랑 무료 노래교실	13	구청
씽씽동구 아카데미 강좌	동구민 전체	4회	교양, 경제, 가정, 의식, 문화, 역사, 문학, 교육 등 강좌개최 (총 4회, 회당 400명)	14	구청

10. 충청북도 단양군

□ 충청북도 단양군 저출산 분야 정책은 모두 11개로 구성

- 일반 부부 대상 사업 1개, 출산 가정 대상 사업 3개, 조손 가정 대상 사업 1개, 보육시설 관련 사업 2개, 청소년 관련 사업 3개, 여성 대상 사업 1개로 구성
-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특징을 나타냄

□ 정책 내용적 특성

- 단양군은 시행계획을 통하여 셋째자녀 보육양육 교육비 지급 사업에 577백만원의 높은 비중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 출산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여성 장애인의 출산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출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3개의 청소년 대상 사업을 시행하여, 녹색인재 양성 프로그램, 학습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진로 및 생활 상담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고 있어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여성 대상 정책을 통하여 여성의 능력 개발 지원 및 취(창)업 지원 사업을 통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전달체계의 특성

- 전체적으로 가용한 적정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보건소와 군청이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사업 특성에 따라서 청소년 단체, 여성단체 등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음

〈표 4-47〉 단양군 저출산 분야 정책 내용

명칭	대상	대상규모	주요내용	예산 (백만원)	전달체계
부부간 출산, 양육 인식변화 사업	관내 부부가정	20쌍	20쌍 내외 3회이상 심3리상담 지원(3회 초과분 자부담)	3	보건소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 가입 지원	출생아 출산가정	장려금 50명 보험 3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장려금 지원 20만원 (단양사랑 상품권) 1회 아이사랑 자녀 건강보험 : 매월 2만원 이내 	82	군청
셋째자녀 보육양육 교육비 지급	셋째 자녀를 둔 가정	2,400명	셋째이후 자녀에게 만5세까지 양육비 차등 지원 (158~350천원)	577	군청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관내 여성 장애인	3명	관내 여성 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70~100만원)	3	군청
조손가정 지원	조손가정	30명	조손가정으로 책정된 아동에게 개인당 월 7만원씩 지원	25	군청
보육시설 이용아동 간식비 및 안전공제회 가입비 지원	아동	영유아650명 종사자15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비지원 영유아 및 보육종사자 어린이집 안전 공제료 지원 	195	군청
보육시설 이용아동 특기활동비 지원	보육시설	14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시설 입소아동 특기활동비 지원: 개소당 년 360만원 지원 	50	군청
청소년 녹색 체험 사업	관내 청소년		청소년 녹색인재 양성을 위한 녹색공간조성 및 프로그램	15	청소년 단체 민간위탁
다양한 청소년 활동 지원	관내 청소년	3개 기관	학습 및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	27	매포 청소년공부방 등 3개소
청소년 상담사업 운영	관내 청소년	1개 기관	진로 및 생활지도 상담	70	단양청소년지원센터
여성 능력개발 지원사업	관내 여성	2개 기관 65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능력개발 지원사업 여성 취,창업 지원사업 	110	여성단체협의회, 매포여성단체협의회

□ 단양군 고령사회 분야 정책은 총 7개로 구성

○ 노인 대상 사업이 3개, 경로당 대상 사업이 3개, 공동생활보급자리 대상 사업 1개로 구성됨

□ 정책 내용적 특성

○ 장수수당 지원 사업이나 독거노인 지원 사업은 대체로 많은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 내용임

- 장수수당 지급 사업에 34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비중 있게 시행하고 있음

○ 3개의 경로당 대상 사업은 일반적으로 많은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해당함

- 이 중에서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77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전체 사업 중 예산 비중이 가장 높은 특성을 나타냄

□ 전달체계 측면에서 모든 사업을 군청 중심으로 추진하는 특징을 나타냄

〈표 4-48〉 단양군 고령사회 분야 정책 내용

명칭	대상	대상규모	주요내용	예산 (백만원)	전달체계
장수수당 지급	만83세 이상 장수노인	930명	장수수당 지급(100세 미만 30천원, 100세 이상 100천원)	348	군청
독거노인 결연 사업	독거노인	독거노인141명 공무원 141명	명절 또는 어버이날 선물 전달 및 수시 방문하여 안부확인	21	군청
노인의 날 행사 개최	관내 노인	600명	기념식, 표창장 수여, 어울림 한마당, 노래자랑	20	군청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경로당	신축 4개소 개보수 60개소	노후 경로당 신축 4개소, 경로당 개보수 약 60개소	774	군청
경로당 식사도우미 사업	경로당	152개소	경로당 식사도우미 운영	91	군청
경로당 가꾸미 사업	경로당	160개소	마을 경로당을 가꾸미 인력 배치로 쾌적한 쉼터 조성	96	군청
노인공동생활보급자리 사업	공동생활보급자리	10개소	독거노인 4명이하 3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공간 제공 및 운영비(난방비) 지원	14	군청

11. 충청북도 괴산군

□ 괴산군 저출산 분야 정책은 총 8개 사업으로 구성

- 출산가정 대상 사업 2개, 아동 청소년 대상 사업 4개, 보육시설 종사자 대상 사업 1개, 결혼하는 부부 대상 사업 1개로 구성
- 아동 청소년 대상 사업이 다소 많은 구성을 나타냄

□ 정책 내용적 특성

- 전체적으로 사업별 지원 규모는 크지 않은 상황으로, 사업 내용 상 수혜대상자가 많지 않은 특성을 나타냄
- 둘째아 이상 출생 가정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5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상대적으로 예산 비중이 높은 수준임
- 아동 청소년 대상 사업에서 한부모 가족 자녀와 같이 취약 계층에 집중하거나, 셋째아 이상 자녀에 한정하여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특성을 나타냄
- 보편적 지원 원칙에서 볼 때 다소 아쉬운 점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첫째아 출산 용품 지원 사업과 같이 보건소 추진 사업이 포함되었지만, 일반적인 모자보건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음

□ 전달체계의 특성

- 군청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특성이 나타나며, 보건소와 보육시설 연합회와 같은 민간단체도 사업 추진에 참여하고 있음

〈표 4-49〉 괴산군 저출산 분야 정책 내용

명칭	대상	대상규모	주요내용	예산 (백만원)	전달체계
첫째아 출산용품 지원	출산 가정	60명	첫째아 1회 50만원 지급(괴산 사랑상품권) 일시금	30	보건소
둘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	연170명	건강보험료 월 25천원씩 5년 지원	51	군청
어린이날 기념행사	관내 어린이	500명	기념식 및 운동회, 체험행사	14	보육시설연합회
한부모가족 자녀 학용품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50명	초등학생 학용품비 50,000원 지원	2.5	군청
셋째아 이상 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초등학교 입학예정인 셋째아 아동	50명	입학축하금 300천원 지원	15	군청
청소년 한마음 축제 지원	중·고등학생		과학, 국악, 무용, 문학, 미술, 연극, 연예, 음악 등 8개 분야	5	군청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보육시설 종사자	80명	관내 보육시설 전체 시설장 및 보육교사 대상 수 파악 및 연수 실시	1.5	보육시설연합회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결혼 당사자 또는 혼주	70명	남, 녀에게 각각 1,000,000원 지급	70	군청

□ 괴산군 고령사회 분야 정책은 모두 6개로 구성

- 중증질환 노인 대상 사업 1개, 일반 노인 대상 사업 3개, 시설 지원 사업 1개, 일반 주민 대상 사업 1개로 구성됨

□ 정책 내용적 특성

- 중증질환 노인 대상 위생용품 지원 사업은 부양 부담완화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노인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노인의 날 기념 행사, 노인대학 운영, 할머니 경로당 운영 지원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은 노후 여가 문화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 전달체계의 특성

- 모든 사업을 군청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추진체계 상의 자원을 활용하지는 않고 있음

〈표 4-50〉 과산군 고령사회 분야 정책 내용

명칭	대상	대상규모	주요내용	예산 (백만원)	전달체계
노인위생용품 지원	중증질환 노인	100명	치매·중풍 등 중증 질환(와상) 노인에게 성인용 기저귀 지원	20	군청
노인의 날 기념 한 마당 큰잔치	노인	1,500명	○노인의 날 기념식 ○모범 노인 및 노인복지기여자 시상 ○축하공연 및 어르신 참여 이벤트 실시	23	군청
노인대학 운영 지원	노인	50명	노인의 역할, 교양과목, 건강관리, 국내정세 등의 과목 운영, 현장학습, 수학여행 등	14	군청
할머니경로당 운영 지원	노인	40명	○1월 ~ 12월 동안 매월 2회 할머니경로당 운영 ○자수 및 뜨개질습 취미생활, 건강체조, 봉사활동	9	군청
노인여가활동을 위한 인프라 마련	게이트볼장	4개소	게이트볼장 신축 및 시설 보수	12	군청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주민	120건	장례 건당 1,000,00원 지원	120	군청

제 5 장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내용분석

제1절 분석 방법

제2절 공통사업 분석

제3절 자체사업 분석

제4절 소결

5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내용분석 <<

제1절 분석 방법

-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사업
 -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정책과제는 중앙정부와 공통으로 추진되는 공통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자체사업으로 구분됨
 - 공통사업과 자체사업은 저출산 대책과 고령사회대책, 대응기반 강화의 세 가지 정책 분야로 구분됨
 - 각 정책 분야의 9개 세부 정책 영역은 다음과 같음(<표 5-1> 참조)

<표 5-1>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분야별 정책 영역

정책분야	정책 영역
저출산 대책	①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②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③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④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고령사회 대책	⑤노후소득보장 강화 ⑥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⑦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⑧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대응기반 강화	⑨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공통사업 분석 대상
 -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내용 분석을 위하여, 2017년 5월~10월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시행계획 사업별 성과 자료를 취합하였음
 -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정책과제

는 중앙정부와 공통으로 추진되는 공통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자체사업으로 구분됨

○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공통사업은 총 949개(저출산 685, 고령사회 223, 대응기반 강화 302개)로 집계됨

- 여기서 사업 수는 시행계획 수립시점에 시도가 취합하여 제출한 공통사업 수를 의미함

○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시행계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구별 사업단위를 기준으로 제출한 사업 수는 총 10,343개(저출산 7,876, 고령사회 2,333, 대응기반 강화 75개, 사업 분류가 불분명한 경우 59개)로 집계됨

- 여기서 사업 수는 성과분석을 위해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제출한 공통사업 수를 의미함

- 이 중 본청 단위의 사업, 교육청 단위 사업, 사업 분류가 불분명한 사업을 제외하고 본 분석의 대상이 되는 사업 수는 총 8,786개로 다음 표와 같음

〈표 5-2〉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공통사업 분석 대상

구분	시행계획 사업 수 (수립 시점)	지자체 성과 제출 사업 수 (성과 제출 시점)	최종 분석 사업 수
전체	949	10,343	8,786
저출산 분야	685	7,876	6,770
고령사회 분야	223	2,333	1,964
대응기반 강화 분야	302	59	52

□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분석 대상 자체사업

○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자체사업은 총 3,724개(저출산 2,224, 고령사회 1,198, 대응기반 강화 302개)로 집계되었음

- 여기서 사업 수는 시행계획 수립시점에 시도가 취합하여 제출한 자체 사업 수를 의미함

○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시행계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구별 사업단위를 기준으로 제출한 사업 수는 총 7,539개(저출산 4,182, 고령사회 3,097, 대응기반 강화 260개)로 집계됨

- 여기서 사업 수는 성과분석을 위해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제출한 자체사업 수를 의미함

제출한 사업 중 본청 단위의 사업, 교육청 단위 사업, 사업 분류가 불분명한 사업을 제외한 본 분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총 6,292개임(<표 5-3>)

<표 5-3>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자체사업 분석 대상

구분	시행계획 사업 수 (수립 시점)	지자체 성과 제출 사업 수 (성과 제출 시점)	최종 분석 사업 수
전체	3,724	7,539	6,292
저출산 분야	2,224	4,182	3,413
고령사회 분야	1,198	3,097	2,696
대응기반 강화 분야	302	260	183

□ 분석 내용

○ 지방자치단체(228개 시·군·구)의 사업을 17개 시도별, 시·군·구 지역별, 인구 유형화에 따른 지역 유형별 및 정책 영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함

- 인구유형화에 따른 지역 유형은 제4장 제1절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인구 특성에 따라 12개 지역으로 유형화 한 분류를 이용함
- 공통사업과 자체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사업 수), 예산 집행(예산 및 예산 달성률)을 중심으로 분석
- 자체사업의 경우는 급여 특성(급여 기준 및 급여 유형)에 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분석

제2절 공통사업 분석

1. 공통사업 규모

□ 여기서 분석한 전체 공통사업 관련 내용은 2016년 시행계획 추진성과 취합 자료(2017. 5~10)를 기초로 분석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영역별 공통사업은 다음 표와 같음

-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사업을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면, 저출산 정책에 많은 사업이 편중되어 있음
 - 저출산 정책의 사업 수가 전체 사업의 77.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사회 정책은 22.3%로 1/3수준이며, 대응기반 강화 정책은 0.6%

〈표 5-4〉 2016년도 전체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공통사업규모

정책 분야	정책 영역	지자체 공통사업 수(비율)		중앙정부 사업 수(비율)	
	총계	8786(100.0%)		189(100.0%)	
저출산	청년일자리·주거대책강화	46 (0.7%)	6770 (77.1%)	20 (24.7%)	81 (42.8%)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4457 (65.8%)		32 (39.5%)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2264 (33.4%)		17 (21.0%)	
	일·가정양립사각지대 해소	3 (0.0%)		12 (14.8%)	
	소계	6770 (100.0%)		81 (100.0%)	
고령사회	노후소득보장 강화	195 (9.9%)	1964 (22.3%)	10 (10.2%)	98 (51.9%)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1266 (64.5%)		33 (33.7%)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348 (17.7%)		29 (29.6%)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155 (7.9%)		26 (26.5%)	
	소계	1964 (100.0%)		98 (100.0%)	
대응기반 강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52 (100.0%)	52 (0.6%)	10 (100.0%)	10 (5.3%)

자료: 대한민국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 분야별 영역에 있어서의 사업 수에 대한 비율을 살펴보면, 한 영역에 많은 사업이 편중되어 있는 특징을 보임
 - 저출산 분야에서는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의 사업 수가 4457개(65.8%)로 가장 많았으며, 고령사회 분야에서는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의 사업수가 1266개(64.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써 중앙정부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구성비의 불균형은 불가피한 면이 있음

□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영역별 공통사업의 수와 비율을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 2016년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구성비가 저출산 정책 42.8%, 고령사회 정책 51.9%, 대응기반 강화 정책 5.3%으로 저출산 분야와 고령사회 분야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지방자치단체 공통사업의 경우 고령사회 정책과 대응기반 강화 정책의 비중이 낮은 수준임
- 2016년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비교하여 각 분야별 영역에 있어서의 사업 수를 살펴보면, 저출산 정책 분야에서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의 사업 수가 가장 많았으며, 고령사회 분야에서는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의 사업수가 가장 많아, 지자체 공통사업의 경우와 유사한 특성을 나타냄
 - 반면,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은 분야의 각 영역에 비교적 고르게 사업이 분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임
 - 앞서 설명한 바처럼,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써 중앙정부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구성비의 불균형은 불가피한 면이 있음

가. 시도별 공통사업

1) 저출산

□ 저출산 정책의 영역별 공통사업 수를 17개 시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5-5〉 참조)

-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의 사업이 가장 많고, 청년일자리·주거대책강화 영역과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영역의 사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예외적으로 청년일자리·주거대책강화 영역에 있어서는 광주광역시와 경상남도 지역에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가정양립사각지대 해소 영역에 있어서는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각 각 1개의 사업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5〉 시도에 따른 영역별 저출산 사업

(단위: 개)

구분	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계
서울	0	201	160	0	361
부산	0	496	272	0	768
대구	0	171	24	0	195
인천	0	213	7	0	220
광주	10	130	70	0	210
대전	0	70	48	0	118
울산	0	116	53	0	169
세종	0	31	18	0	49
경기	0	427	256	1	684
강원	0	300	139	0	439
충북	0	341	231	0	572
충남	0	169	147	1	317
전북	0	518	364	0	882
전남	0	327	122	0	449
경북	0	370	69	0	439
경남	36	558	270	0	864
제주	0	19	14	1	34

주: 제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사업단위 개수가 달라질 수 있음.

2) 고령사회 및 대응기반

□ 고령사회 정책 및 대응 기반 강화 정책 의 영역별 공통사업 수를 17개 시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5-6〉 참조)

- 고령사회 정책에 있어서는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의 사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대구광역시의 경우는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의 사업만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예외적으로,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영역의 사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66.7%) 나타남
- 대응기반 강화 정책에 있어서는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되었음
- 17개 광역시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의 사업이 전체 고령사회 정책 중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다른 시도와 차이를 보임

〈표 5-6〉 시도에 따른 영역별 고령사회 및 대응기반사업

(단위: 개)

구분	노후소득보장	노인여가안전	일자리확대	고령친화	대응기반	계
서울	0	0	0	0	0	0
부산	16	144	48	16	16	240
대구	0	16	0	0	0	16
인천	10	53	10	0	0	73
광주	5	32	0	0	0	37
대전	5	32	18	0	5	60
울산	5	19	5	2	0	31
세종	1	10	2	8	1	22
경기	31	101	51	14	11	208
강원	18	96	8	17	0	139
충북	11	33	88	0	0	132

충남	15	45	3	0	0	63
전북	14	154	28	14	0	210
전남	22	66	0	0	0	88
경북	23	207	31	12	0	273
경남	18	252	54	72	18	414
제주	1	6	2	0	1	10

주: 제출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사업단위 개수가 달라질 수 있음.

나. 시지역 · 군지역 · 구지역별 공통사업

1) 저출산

□ 저출산 정책의 영역별 공통사업 수를 시지역, 군지역, 구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5-7〉 참조)

-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의 사업이 가장 많고, 청년일자리·주거대책강화 영역과 일·가정양립사각지대 해소 영역의 사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군지역과 구지역 단위에서는 일·가정양립사각지대 해소 영역의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5-7〉 시지역 · 군지역 · 구지역에 따른 영역별 저출산 사업

(단위: 개)					
구분	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계
시	16	1468	798	3	2,285
군	20	1705	863	0	2,588
구	10	1284	603	0	1,897

2) 고령사회 및 대응기반

□ 고령사회 정책 및 대응기반 강화 정책의 영역별 공통사업 수를 시지역, 군지역, 구지역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5-8〉 참조)

- 고령사회 정책에 있어서는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활기차고 안전

한 노후 실현 영역의 사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의 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시지역과 군지역, 구지역에 있어서 고령사회 정책 및 대응기반 강화 정책의 영역별 사업 수의 전체 사업 수 대비 비율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남

〈표 5-8〉 시지역·군지역·구지역에 따른 영역별 고령사회 및 대응기반 사업

(단위: 개)

구분	노후소득보장	노인여가안전	일자리확대	고령친화	대응기반	계
시	77	473	135	72	20	777
군	81	524	138	67	12	822
구	37	269	75	16	20	417

다. 지역유형별 공통사업

1) 저출산

□ 저출산 정책의 영역별 공통사업 수를 12개의 인구지표에 따른 지역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5-9〉 참조)

- 지역유형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의 사업 비중이 6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일·가정양립사각지대 해소 영역의 경우는 “일반-인구유입” 유형과 “초저출산-평균” 유형 지역에서만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남
- 청년일자리·주거대책강화 영역에 있어서는 “초저출산-인구유입”, “초고령-인구유출”, “초저출산·초고령-인구유출”, “초저출산·초고령-인구유입” 유형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초저출산”과 “순인구 유출”의 문제가 나타나는 지역은 저출산 분야에 정책적 우선순위가 부여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저출산 분야 정책이 필요한 “초저출산-인구유출” 유형 지역에는 청년일자리·주거대책강화 영역의 사업은 4개(0.4%)이고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영역에 해당되는 사업

이 부재하다는 점, 그리고 “초저출산·초고령-인구유출”유형 지역에는 청년 일자리·주거대책강화 영역과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영역에 해당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표 5-9〉 지역유형에 따른 영역별 저출산 사업

(단위: 개)

구분	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계
일반-인구유출	2	97	58	0	157
일반-평균	4	553	268	0	825
일반-인구유입	10	689	361	2	1,062
초저출산-인구유출	4	638	313	0	955
초저출산-평균	6	558	295	1	860
초저출산-인구유입	0	111	43	0	154
초고령-인구유출	0	62	22	0	84
초고령-평균	8	964	482	0	1,454
초고령-인구유입	4	198	105	0	307
초저고-인구유출	0	148	81	0	229
초저고-평균	8	301	159	0	468
초저고-인구유입	0	138	77	0	215

2) 고령사회 및 대응기반

□ 고령사회 정책 및 대응기반 강화 정책의 영역별 공통사업 수를 12개의 인구 지표에 따른 지역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 지역유형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의 사업 비중이 46.2~75.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대응기반 강화 정책의 사업이 부재한 지역의 유형은 “초저출산-인구유입”과 “초고령-인구유입”유형임
- “초고령사회”, “순인구 유출” 등의 문제가 나타나는 지역은 고령사회 분야에 정책적 우선순위가 부여될 필요가 있으나, 실제 “초고령-인구유출”유형 지역은 고령사회 분야 정책 중 노후소득 보장 강화 영역,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의 사업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영역과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의 사업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남

〈표 5-10〉 지역유형에 따른 영역별 고령사회 및 대응기반 사업

(단위: 개)

구분	노후소득보장	노인여가안전	일자리확대	고령친화	대응기반	계
일반-인구유출	6	30	6	5	1	48
일반-평균	25	152	44	26	11	258
일반-인구유입	32	198	73	27	9	339
초저출산-인구유출	20	118	42	5	9	194
초저출산-평균	17	135	39	12	6	209
초저출산-인구유입	8	30	10	1	0	49
초고령-인구유출	4	12	0	0	0	16
초고령-평균	48	354	57	37	4	500
초고령-인구유입	9	67	12	17	3	108
초저고-인구유출	6	47	13	4	4	74
초저고-평균	14	99	32	20	4	169
초저고-인구유입	6	24	20	1	1	52

2. 공통사업 예산규모

가. 시도별 공통사업

1) 저출산 정책 예산분석

□ 저출산 정책의 예산의 규모와 관련하여 17개 시도에 따른 저출산 정책의 영역별 예산, 결산, 예산 대비 결산으로 산출되는 예산 집행률을 분석 함

□ 서울특별시(표 5-11)

- 서울시의 경우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과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의 예산 투입 비중은 23.3:76.7로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중심으로 투입됨
-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113.5%로 나타났고,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65.1%

로 나타남

〈표 5-11〉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서울시)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출산	692.2	546.2	620.0	113.5	23.3
돌봄	1656.1	1799.0	1171.1	65.1	76.7

주: 1)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부산광역시(표 5-12)

- 부산시의 경우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의 예산 투입 비중은 6.0%로 매우 낮게 나타남
-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63.7%로 나타났고,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100.1%로 나타남

〈표 5-12〉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부산시)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출산	228.7	207.0	131.8	63.7	6.0
돌봄	3258.5	3258.5	3260.7	100.1	94.0

주: 1)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대구광역시(표 5-13)

- 대구광역시의 경우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의 예산 투입 비중은 15.3%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92.3%로 나타났고,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98.7%로 나타남

〈표 5-13〉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대구시)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출산	127.2	135.0	124.7	92.3	15.3
돌봄	745.1	745.1	735.1	98.7	84.7

주: 1)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인천광역시(표 5-14)

- 인천광역시의 경우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의 예산 투입 비중은 전체 저출산 정책 중 30.2%인 것으로 나타남
-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98.1%로 나타났고,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100.0%로 나타남

〈표 5-14〉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인천시)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출산	363.4	295.9	290.2	98.1	30.2
돌봄	720.7	685.1	685.1	100.0	69.8

주: 1)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광주광역시(표 5-15)

- 광주광역시의 경우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영역,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영역의 예산 투입 비중이 각 7.3%, 7.7%, 85.0%로 구성됨
-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영역의 예산 집행률은 96.3%,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92.8%,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98.9%로 나타남

〈표 5-15〉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광주시)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청년	368.5	368.5	355.0	96.3	7.3
출산	397.7	385.4	357.6	92.8	7.7
돌봄	4270.1	4268.1	4219.8	98.9	85.0

주: 1)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대전광역시(표 5-16)

- 대전광역시의 경우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영역이 91.5% 큰 비중을 차지함
-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92.8%,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99.5%로 나타남

〈표 5-16〉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대전시)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출산	469.0	480.5	445.8	92.8	8.5
돌봄	5384.0	5178.4	5154.0	99.5	91.5

주: 1)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울산광역시(표 5-17)

- 울산광역시의 경우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영역의 예산 투입 비중이 각 5.8%, 94.2%로 대부분의 예산은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영역에 편중되어 있음
-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95.3%,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100.6%로 나타남

〈표 5-17〉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울산시)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출산	294.8	282.4	269.1	95.3	5.8
돌봄	4597.0	4597.0	4623.4	100.6	94.2

주: 1)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세종특별자치시(표 5-18)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과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영역의 예산 투입 비중이 각 8.3%, 91.7%로 대부분의 예산은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영역에 편중되어 있음
-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93.9%,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98.5%로 나타남

〈표 5-18〉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세종시)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출산	194.4	310.9	291.9	93.9	8.3
돌봄	553.0	3453.9	3401.9	98.5	91.7

주: 1)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경기도(표 5-19)

- 경기도의 경우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과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영역,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영역의 예산 투입 비중이 각 17.0%, 79.0%, 3.9%로 대부분의 예산은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영역에 편중되어 있음
-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85.1%,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91.4%,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영역의 예산 집행률은 99.6%로 나타남

〈표 5-19〉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경기도)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출산	1386.5	1139.2	969.9	85.1	17.0
돌봄	4202.3	5282.4	4830.4	91.4	79.0
일가정양립	264.0	264.0	263.0	99.6	3.9

주: 1)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강원도(표 5-20)

- 강원도의 경우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과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영역의 예산 투입 비중이 각 3.8%, 96.2%로 대부분의 예산은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영역에 편중되어 있음
 -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99.1%,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100.2%로 나타남

〈표 5-20〉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강원도)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출산	73.2	73.1	72.4	99.1	3.6
돌봄	1953.5	1953.3	1956.9	100.2	96.4

주: 1)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충청북도(표 5-21)

- 충청북도의 경우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영역의 예산 투입 비중이 각 7.6%, 92.4%로 나타남
 -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92.9%,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100.0%로 나타남

〈표 5-21〉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충청북도)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출산	136.2	143.5	133.3	92.9	7.6
돌봄	1721.1	1744.0	1743.2	100.0	92.4

주: 1)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충청남도(표 5-22)

- 충청남도의 경우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영역,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영역의 예산 투입 비중이 각 4.8%, 87.5%, 7.7%로 대부분의 저출산 정책의 예산은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영역에 투입됨
-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100.4%,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100.0%,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영역의 예산 집행률은 100.0로 모든 영역에서 100% 이상 예산 집행을 한 것으로 나타남

〈표 5-22〉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충청남도)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출산	102.5	128.6	129.0	100.4	4.8
돌봄	3975.0	2354.2	2354.2	100.0	87.5
일가정양립	208.0	208.0	208.0	100.0	7.7

주: 1)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전라북도(표 5-23)

- 전라북도의 경우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과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영역의 예산 투입 비중이 각 9.2%, 90.8%로 나타남
-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86.7%,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85.1%로 나타남. 다른 시도에 비해 예산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보임

〈표 5-23〉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전라북도)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출산	200.0	200.6	173.9	86.7	9.2
돌봄	1916.2	1973.4	1679.4	85.1	90.8

주: 1)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전라남도(표 5-24)

- 전라남도의 경우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과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영역의 예산 투입 비중이 각 4.4%, 95.6%로 대부분의 예산이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에 투입됨
-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83.3%,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99.2%로 나타남

〈표 5-24〉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전라남도)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출산	90.4	92.1	76.7	83.3	4.4
돌봄	2021.4	2021.4	2004.8	99.2	95.6

주: 1)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경상북도(표 5-25)

- 경상북도의 경우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과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영역의 예산 투입 비중이 각 8.0%, 92.0%로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에 투입됨
-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97.8%,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96.9%로 나타남

〈표 5-25〉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경상북도)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출산	148.8	147.8	144.5	97.8	8.0
돌봄	1694.3	1698.4	1646.4	96.9	92.0

주: 1)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경상남도(표 5-26)

- 경상남도의 경우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맞춤형 돌봄 확대 · 교육 개혁 영역의 예산 투입 비중이 각 5.0%, 95.0%로 나타남
-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95.0%,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99.6%로 나타남

〈표 5-26〉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경상남도)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출산	86.4	195.4	185.6	95.0	5.0
돌봄	5346.3	3685.4	3669.5	99.6	95.0

주: 1)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제주특별자치도(표 5-27)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맞춤형 돌봄 확대 · 교육 개혁 영역, 일 · 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영역의 예산 투입 비중이 각 5.3%, 61.5%, 33.2%로 다른 시도와 다르게 일 · 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영역의 예산 투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99.4%,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100.0%, 일 · 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영역의 예산 집행률은 100.0%, 로 나타남

〈표 5-27〉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제주도)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출산	1182.4	1182.4	1174.8	99.4	5.3
돌봄	13684.9	13684.9	13683.7	100.0	61.5
일가정양립	7400.0	7400.0	7400.0	100.0	33.2

주: 1)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저출산 영역 개별 사업의 집행률을 17개 시도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대부분의 개별 사업의 예산은 100% 집행됨

○ 시·도별 저출산 전체 사업 중 예산이 100% 집행되지 않은 사업의 비중은 서울특별시 10.5%(26개 사업)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충청남도 (3.5%, 11개 사업), 경상북도 (3.3%, 14개)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5-28〉 시도별 예산집행정도

(단위: 개, %)

구분	0 ~ 100%미만	100%	100% 초과	계
서울	26 (10.5)	176 (71.3)	45 (18.2)	247
부산	2 0.4%	330 (72.8%)	121 (26.7)	453
대구	0 (0.0)	116 (62.7)	69 (37.3)	185
인천	0 (0.0)	103 (56.3)	80 (43.7)	183
광주	2 (1.2)	103 (62.4)	60 (36.4)	165
대전	0 (0.0)	61 (54.0)	52 (46.0)	113
울산	0 (0.0)	88 (57.1)	66 (42.9)	154
세종	1 (2.7)	10 (27.0)	26 (70.3)	37
경기도	10 (1.6)	246 (40.0)	359 (58.4)	615
강원도	1 (0.2)	350 (83.9)	66 (15.8)	417
충북	9 (2.3)	301 (76.2)	85 (21.5)	395
충남	11	297	4	312

	(3.5)	(95.2)	(1.3)	
전북	6	324	214	544
	(1.1)	(59.6)	(39.3)	
전남	9	160	259	428
	(2.1)	(37.4)	(60.5)	
경북	14	191	215	420
	(3.3)	(45.5)	(51.2)	
경남	10	240	324	574
	(1.7)	(41.8)	(56.4)	
제주	0	28	6	34
	(0.0)	(82.4)	(17.6)	

2) 고령사회 대책 · 대응기반 예산분석

□ 고령사회 대책,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의 영역별 예산의 규모와 관련하여 17개 시도별 영역별 예산, 결산, 예산 대비 결산으로 산출되는 예산 집행률을 살펴보고자 함

□ 부산광역시(표 5-29)

- 부산광역시의 경우 고령사회 관련한 예산 투입비중은 주로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노후소득보장 강화,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순으로 94.1 : 5.1 : 0.8의 순서로 나타남
- 노후소득보장 강화의 예산집행률은 99.0%로 나타났고,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의 예산 집행률은 79.1%,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는 98.4%로 나타남

〈표 5-29〉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부산시)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노후소득보장	51424.3	50085.7	49572.3	99.0	94.1
노인여가안전	500.9	451.7	357.4	79.1	0.8
인력활용확대	2689.9	2689.9	2646.8	98.4	5.1

주: 1)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의 영역별(소득보장, 여가안전, 일자리확대, 고령친화, 대응기반)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대구광역시(표 5-30)

- 대구광역시의 경우 고령사회 정책 관련 예산 투입은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에서만 나타남
-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의 예산 집행률은 100.0%임

〈표 5-30〉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대구시)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노인여가안전	294.4	294.4	294.4	100.0	100.0

주: 1)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의 영역별(소득보장, 여가안전, 일자리확대, 고령친화, 대응기반)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인천광역시(표 5-31)

- 인천광역시의 경우 고령사회 정책 관련한 예산 투입비중은 주로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 여성, 중고령자 영역,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 순으로 95.7 : 2.5 : 1.8의 순서로 나타남
-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의 예산집행률은 98.9%로 나타났고,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의 예산 집행률은 98.7%,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은 96.4%로 나타남

〈표 5-31〉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인천시)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노후소득보장	49493.5	49493.5	48929.1	98.9	95.7
노인여가안전	952.0	952.0	940.0	98.7	1.8
인력활용확대	1287.6	1287.6	1241.1	96.4	2.5

주: 1)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의 영역별(소득보장, 여가안전, 일자리확대, 고령친화, 대응기반)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광주광역시(표 5-32)

- 광주광역시의 경우 고령사회 정책 관련한 예산 투입비중은 주로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 순으로 99.1 : 0.9의 비율로 나타남
-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의 예산집행률은 97.3%로 나타났고,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의 예산 집행률은 92.8%로 나타남

〈표 5-32〉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광주시)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노후소득보장	49957.0	49957.0	48614.4	97.3	99.1
노인여가안전	439.7	457.2	424.1	92.8	0.9

주: 1)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의 영역별(소득보장, 여가안전, 일자리확대, 고령친화, 대응기반)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대전광역시(표 5-33)

- 대전시의 경우 고령사회 정책 관련한 예산 투입비중은 주로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 순으로 95.9 : 3.5 : 0.6의 비율로 나타남
-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의 예산집행률은 98.5%로 나타났고,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의 예산 집행률은 92.8%,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의 예산 집행률은 92.6%로 나타남

〈표 5-33〉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대전시)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노후소득보장	48014.0	48014.0	47278.4	98.5	95.9
노인여가안전	289.3	289.3	268.5	92.8	0.6
인력활용확대	1705.8	1757.9	1628.3	92.6	3.5
대응기반	5.6	0.0	0.0	0.0	0.0

주: 1)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의 영역별(소득보장, 여가안전, 일자리확대, 고령친화, 대응기반)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울산광역시(표 5-34)

○ 울산시의 경우 고령사회 대책 관련한 예산 투입비중은 주로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에 집중되어 있고, 고령사회 대책 관련 모든 영역에서 예산이 집행됨. 영역별 예산 투입 비중을 살펴보면,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 순으로 나타남

-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의 예산집행률은 100.0%로 나타났고,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의 예산 집행률은 86.0%,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 100.0%,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 100.0%인 것으로 나타남

〈표 5-34〉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울산시)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노후소득보장	29518.0	29518.0	29518.0	100.0	90.2
노인여가안전	260.0	260.0	223.5	86.0	0.8
인력활용확대	2893.6	2893.6	2893.6	100.0	8.8
고령친화	54.0	54.0	54.0	100.0	0.2

주: 1)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의 영역별(소득보장, 여가안전, 일자리확대, 고령친화, 대응기반)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세종특별자치시(표 5-35)

○ 세종시의 경우 고령사회 대책 관련한 예산 투입비중은 주로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집중되어 있음. 영역별 예산 투입 비중을 살펴보면,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영역 순으로 92.4 : 6.1 : 1.4 : 0.1로 나타남

- 노후소득보장 강화의 예산집행률은 94.1%로 나타났고,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의 예산 집행률은 93.4%,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91.9%,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강화는 100.0%인 것으로 나타남

〈표 5-35〉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세종시)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노후소득보장	31303.0	32692.0	30759.0	94.1	92.4
노인여가안전	297.0	491.7	459.3	93.4	1.4
인력활용확대	2063.5	2158.0	1984.0	91.9	6.1
대응기반	31.0	24.0	24.0	100.0	0.1

주: 1)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의 영역별(소득보장, 여가안전, 일자리확대, 고령친화, 대응기반)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경기도(표 5-36)

○ 경기도의 경우 울산시와 마찬가지로 고령사회 대책 관련 모든 세부영역에서 예산집행이 이루어졌으나,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에 대부분의 예산이 투입됨. 영역별 예산 투입 비중을 살펴보면, 노후소득보장 강화,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순으로 95.6 : 2.9 : 1.2 : 0.4로 나타남

-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의 예산집행률은 100.0%로 나타났고,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의 예산 집행률은 98.5%,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 96.3%,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의 예산 집행률은 67.1%로 나타남
-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기반강화 정책의 경우 1730만원 예산을 모두 집행하여 예산 집행률은 100.0%%인 것으로 나타남

〈표 5-36〉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경기도)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노후소득보장	58051.4	58051.4	58051.4	100.0	95.6
노인여가안전	308.6	701.5	691.3	98.5	1.2
인력활용확대	1878.8	1767.4	1702.4	96.3	2.9
고령친화	248.8	215.6	144.6	67.1	0.4
대응기반	22.7	17.3	17.3	100.0	0.0

주: 1)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의 영역별(소득보장, 여가안전, 일자리확대, 고령친화, 대응기반)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강원도(표 5-37)

- 강원도의 경우 고령사회 관련 모든 영역에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대부분의 예산은 노후소득 보장강화 영역에 투입됨. 영역별 예산 투입 비중을 살펴보면, 노후소득보장 강화,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순으로 97.7: 1.3 : 0.9 : 0.1로 나타남
-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의 예산집행률은 99.4%로 나타났고,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의 예산 집행률은 100.0%,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 93.5%,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 100.0%로 나타남

〈표 5-37〉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강원도)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노후소득보장	23351.8	22432.5	22296.1	99.4	97.7
노인여가안전	187.1	207.9	207.9	100.0	0.9
인력활용확대	305.9	305.9	285.9	93.5	1.3
고령친화	12.8	12.8	12.8	100.0	0.1

주: 1)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의 영역별(소득보장, 여가안전, 일자리확대, 고령친화, 대응기반)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충청북도(표 5-38)

- 충청북도의 경우 고령사회 대책 관련한 예산 투입은 주로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집중되어 있음. 영역별 예산 투입 비중을 살펴보면,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 순으로 95.4 : 3.2 : 1.3으로 나타남
-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의 예산집행률은 99.1%로 나타났고,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의 예산 집행률은 95.7%,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의 예산 집행률은 99.5%인 것으로 나타남

〈표 5-38〉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충청북도)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노후소득보장	35243.3	33960.8	33641.9	99.1	95.4
노인여가안전	545.1	471.1	450.6	95.7	1.3
인력활용확대	1159.4	1153.4	1147.1	99.5	3.2

주: 1)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의 영역별(소득보장, 여가안전, 일자리확대, 고령친화, 대응기반)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충청남도(표 5-39)

- 충청남도의 경우 고령사회 대책 관련한 예산 투입은 주로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집중되어 있음. 영역별 예산 투입 비중을 살펴보면,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 순으로 97.2: 2.6 : 0.2 으로 나타남
-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의 예산집행률은 100.0%로 나타났고,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의 예산 집행률은 100.0%,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의 예산 집행률은 100.0%로 나타남

〈표 5-39〉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충청남도)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노후소득보장	36883.3	35714.3	35714.3	100.0	97.2
노인여가안전	850.3	953.8	953.8	100.0	2.6
인력활용확대	75.0	62.7	62.7	100.0	0.2

주: 1)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의 영역별(소득보장, 여가안전, 일자리확대, 고령친화, 대응기반)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전라북도(표 5-40)

- 전라북도의 경우 고령사회 대책 관련한 예산 투입은 주로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고령사회 대책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예산이 투입됨. 영역별 예산 투입 비중을 살펴보면,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이 94.9 : 4.0 : 0.9 : 0.2로 나타남

-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의 예산 집행률은 98.8%로 나타났고,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의 예산 집행률은 97.7%,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의 예산 집행률은 99.5%,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의 집행률은 100.0%인 것으로 나타남

〈표 5-40〉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전라북도)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노후소득보장	41539.3	40135.9	39653.8	98.8	94.9
노인여가안전	420.6	390.4	381.2	97.7	0.9
인력활용확대	1699.0	1699.0	1691.1	99.5	4.0
고령친화	66.7	66.7	66.7	100.0	0.2

주: 1)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의 영역별(소득보장, 여가안전, 일자리확대, 고령친화, 대응기반)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전라남도(표 5-41)

- 전라남도의 경우 고령사회 대책 관련한 예산 투입은 주로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에 집중되어 있음. 영역별 예산 투입 비중을 살펴보면,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 98.5%,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1.5%로 나타남

- 노후소득보장 강화의 예산집행률은 99.8%로 나타났고,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의 예산 집행률은 95.5%으로 나타남

〈표 5-41〉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전라남도)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노후소득보장	32062.0	32062.0	31982.8	99.8	98.5
노인여가안전	482.2	482.2	460.3	95.5	1.5

주: 1)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의 영역별(소득보장, 여가안전, 일자리확대, 고령친화, 대응기반)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경상북도(표 5-42)

- 경상북도의 경우 고령사회 대책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예산이 투입되어 있고, 대부분의 예산은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집중되어 있음. 영역별 예산 투입

비중을 살펴보면,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이 94.2 : 4.9 : 0.8 : 0.1로 나타남

-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의 예산집행률은 100.0%로 나타났고,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의 예산 집행률은 90.6%,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 100.0%,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 100.0%로 나타남

〈표 5-42〉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경상북도)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노후소득보장	36792.6	35342.0	35342.0	100.0	94.2
노인여가안전	289.1	284.9	258.1	90.6	0.8
인력활용확대	1816.9	1825.5	1825.5	100.0	4.9
고령친화	50.0	50.0	50.0	100.0	0.1

주: 1)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의 영역별(소득보장, 여가안전, 일자리확대, 고령친화, 대응기반)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경상남도(표 5-43)

- 경상남도의 경우 고령사회 대책 관련한 예산 투입은 주로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고령사회 정책의 모든 세부영역에서 예산집행이 이루어짐. 영역별 예산 투입 비중을 살펴보면,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 순으로 90.9 : 5.1 : 3.4 : 0.6 으로 나타남
- 노후소득보장 강화영역의 예산집행률은 98.9%로 나타났고,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의 예산 집행률은 94.7%,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 92.8%,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 100.0%로 나타남

〈표 5-43〉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경상남도)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노후소득보장	43632.0	42224.9	41740.9	98.9	90.9
노인여가안전	289.9	277.7	263.0	94.7	0.6
인력활용확대	2099.0	2347.7	2179.4	92.8	5.1
고령친화	-	1599.5	1598.9	100.0	3.4

주: 1)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의 영역별(소득보장, 여가안전, 일자리확대, 고령친화, 대응기반)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제주특별자치도(표 5-44)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고령사회 대책 관련한 예산 투입은 주로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집중되어 있음. 영역별 예산 투입 비중을 살펴보면,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 여성, 중고령자 영역,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 순으로 94.1 : 5.3 : 0.6 로 나타남
-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령사회 정책의 영역별 예산 집행률은 모두 100%인 것으로 나타남

〈표 5-44〉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제주도)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노후소득보장	127352.0	127352.0	127352.0	100.0	94.1
노인여가안전	855.8	855.8	855.8	100.0	0.6
인력활용확대	7122.0	7122.0	7122.0	100.0	5.3
대응기반	25.0	25.0	25.0	100.0	0.0

주: 1)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의 영역별(소득보장, 여가안전, 일자리확대, 고령친화, 대응기반)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고령사회 정책 및 대응기반 강화 정책 영역 개별 사업의 집행률을 17개 시도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대부분의 개별 사업의 예산은 100% 집행됨
- 시·도별 고령사회 정책 및 대응기반 강화 전체 사업 중 예산이 100% 집행되지 않은 사업의 비중은 부산(3.8%, 3개 사업)과 경기도(1.6%, 3개 사업)의 경우에서만 발생함

〈표 5-45〉 시도별 예산달성정도별 고령사회 및 대응기반 사업 수

(단위: 개, %)

구분	0 ~ 100%미만	100%	100% 초과	계
부산	3 (3.8)	11 (13.9)	65 (82.3)	79
대구	0 (0.0)	16 (100.0)	0 (0.0)	16
인천	0 (0.0)	4 (6.5)	58 (93.5)	62
광주	0 (0.0)	6 (16.2)	31 (83.8)	37
대전	0 (0.0)	23 (44.2)	29 (55.8)	52
울산	0 (0.0)	24 (77.4)	7 (22.6)	31
세종	0 (0.0)	1 (14.3)	6 (85.7)	7
경기도	3 (1.6)	103 (56.3)	77 (42.1)	183
강원도	0 (0.0)	108 (81.8)	24 (18.2)	132
충북	0 (0.0)	45 (64.3)	25 (35.7)	70
충남	0 (0.0)	63 (100.0)	0 (0.0)	63
전북	0 (0.0)	84 (50.0)	84 (50.0)	168
전남	0 (0.0)	16 (18.2)	72 (81.8)	88
경북	0 (0.0)	266 (100.0)	0 (0.0)	266
경남	1 (0.3)	187 (57.0)	140 (42.7)	328
제주	0 (0.0)	10 (100.0)	0 (0.0)	10

주: 결측값은 제외됨.

나. 시지역·군지역·구지역별 공통사업

1) 저출산 대책 예산분석

□ 저출산 대책의 영역별 공통사업의 전체 예산, 결산(집행액), 예산 집행률을 시지역, 군지역, 구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5-46〉 참조)

○ 시지역, 군지역, 구지역전체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저출산 정책 영역 중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과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에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예산은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에 집중되어 전체 예산의 60%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특징이 있음

□ 시지역의 경우 전체 저출산 관련 정책의 3개 영역에 예산이 투입됨

○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에 61.6%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일·가정양립사각지대 해소 영역에 10.3%의 예산이 투입되었음

○ 시지역 저출산 관련 정책의 예산 집행률은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88.2%,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95.1%, 일·가정양립사각지대 해소 영역 100.0%로 나타남

□ 군지역의 경우 전체 저출산 관련 정책의 2개 영역에만 예산이 투입됨

○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에 89.7%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에 32.0%의 예산이 투입되었음

○ 군지역 저출산 관련 정책의 예산 집행률은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90.6%,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97.6%로 나타남

□ 구지역의 경우 전체 저출산 관련 정책의 3개 영역에 예산이 투입됨

○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에 81.7%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청년일자리·주거대책강화 영역에 9.7%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출생에 대한 사회

적 책임 강화 영역에 8.5%의 예산이 투입되었음

- 구지역 저출산 관련 정책의 예산 집행률은 청년일자리·주거대책강화 영역에 96.3%,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91.7%,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93.6%로 나타남

〈표 5-46〉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시지역	출산	557.0	528.6	466.5	88.2	6.4
	돌봄	4866.7	5053.4	4803.7	95.1	61.6
	일가정양립	2624.0	2624.0	2623.7	100.0	32.0
군지역	출산	88.3	94.9	86.0	90.6	10.3
	돌봄	893.4	822.7	803.1	97.6	89.7
구지역	청년	368.5	368.5	355.0	96.3	9.7
	출산	363.5	324.5	297.6	91.7	8.5
	돌봄	3068.1	3103.2	2903.2	93.6	81.7

주: 1)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2) 고령사회 대책 및 대응기반 강화 정책 예산분석

□ 고령사회 대책 및 대응기반 강화 정책의 영역별 공통사업의 전체 예산, 결산(집행액), 예산 집행률을 시지역, 군지역, 구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5-47〉 참조)

- 시지역, 군지역, 구지역전체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고령사회 대책의 모든 영역에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전체 고령사회 대책 영역 중 노후소득 보장 강화 영역에 예산이 약 90% 이상 집중되어 투입됨

□ 시지역의 경우 전체 고령사회 정책내의 모든 영역과 대응기반 강화 정책에 예산이 투입되어 있고, 이 중 노후소득 보장 강화 영역에 전체 예산의 94.4%가 투입됨

- 전체 고령사회 정책 예산 중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에

3.6%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에 1.1%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에 0.9%의 예산이 투입됨

○ 시지역 고령사회 정책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 예산집행률은 99.7%로 나타났고,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의 예산 집행률은 95.3%, 여성, 중 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 97.2%,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 97.0%인 것으로 나타남

○ 시지역 대응기반 강화 정책의 예산 집행률은 100.0%로 나타남

□ 군지역의 경우 전체 고령사회 정책내의 모든 영역과 대응기반 강화 정책에 예산이 투입되어 있고, 이 중 노후소득 보장 강화 영역에 전체 예산의 89.8%가 투입됨

○ 전체 고령사회 정책 예산 중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에 4.6%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에 4.4%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에 1.1%의 예산이 투입됨

○ 군지역 고령사회 정책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 예산집행률은 99.33%로 나타났고,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의 예산 집행률은 97.7%,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 95.9%,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 100.0%인 것으로 나타남

○ 군지역 대응기반 강화 정책의 예산 집행률은 100.0%로 나타남

□ 구지역의 경우 전체 고령사회 정책내의 모든 영역에 예산이 투입되어 있고, 이 중 노후소득 보장 강화 영역에 전체 예산의 94.9%가 투입되었으나, 대응기반 강화 정책에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음

○ 전체 고령사회 정책 예산 중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에 4.1%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에 1.0%의 예산이 투입됨

- 구지역 고령사회 정책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 예산집행률은 98.7%로 나타났고,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의 예산 집행률은 91.3%, 여성, 중 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 96.5%,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 100.0%인 것으로 나타남

〈표 5-47〉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시지역	노후소득보장	58202.5	57179.6	57002.4	99.7
	노인여가안전	439.0	521.5	496.8	95.3
	인력활용확대	2081.8	2180.5	2119.0	97.2
	고령친화	134.2	669.0	648.7	97.0
	대응기반	25.2	20.0	20.0	100.0
군지역	노후소득보장	22958.8	22386.2	22237.3	99.3
	노인여가안전	287.2	277.7	271.3	97.7
	인력활용확대	1120.9	1153.0	1106.1	95.9
	고령친화	38.5	1108.9	1108.4	100.0
	대응기반	8.0	5.0	5.0	100.0
구지역	노후소득보장	50052.5	49473.7	48834.8	98.7
	노인여가안전	527.0	519.5	474.3	91.3
	인력활용확대	2137.4	2157.4	2082.2	96.5
	고령친화	1.0	1.0	1.0	100.0
	대응기반	5.6	0.0	0.0	0.0

주: 1)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의 영역별(소득보장, 여가안전, 일자리확대, 고령친화, 대응기반)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다. 지역유형별 공동사업

1) 저출산 대책

- 저출산 정책의 예산의 규모와 관련하여 인구지표를 토대로 유형화한 12개의 지역유형에 따른 저출산 정책의 영역별 예산, 결산, 예산 대비 결산으로 산출되는 예산 집행률을 살펴보고자 함

□ 일반-인구유출

- “일반-인구유출”유형은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에 70.7%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에 29.3%의 예산이 투입되었음
- “일반-인구유출”유형 저출산 대책의 예산 집행률은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86.1%,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99.3%로 나타남

〈표 5-48〉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일반-인구유출)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출산	3828.7	3013.0	2595.2	86.1	29.3
돌봄	6459.2	7279.9	7232.2	99.3	70.7

주: 1)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일반-평균

- “일반-평균”유형은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에 91.7%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에 8.3%의 예산이 투입되었음
- “일반-평균”유형 저출산 대책의 예산 집행률은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89.2%,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96.6%로 나타남

〈표 5-49〉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일반-평균)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출산	338.1	326.9	291.5	89.2	8.3
돌봄	3648.3	3612.2	3489.2	96.6	91.7

주: 1)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일반-인구유입

- “일반-인구유입”유형은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에 70.7%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청년일자리·주거대책강화 영역에 8.2%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에 5.6%의 예산이 투입되었음
- “일반-인구유입”유형 저출산 대책의 예산 집행률은 청년일자리·주거대책강화 영역 100.0%,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95.4%,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93.7%로 나타남

〈표 5-50〉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일반-인구유입)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청년	474.0	474.0	474.0	100.0	8.2
출산	263.7	320.2	305.5	95.4	5.6
돌봄	4405.4	4961.7	4648.4	93.7	86.2

주: 1)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초저출산-인구유출

- “초저출산-인구유출”유형은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에 84.7%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에 8.6%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청년일자리·주거대책강화 영역에 6.7%의 예산이 투입되었음
- “초저출산-인구유출”유형 저출산 대책의 예산 집행률은 청년일자리·주거대책강화 영역 97.5%,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88.9%,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93.5%로 나타남

〈표 5-51〉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초저출산-인구유출)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청년	283.0	283.0	276.0	97.5	6.7
출산	426.2	362.9	322.6	88.9	8.6
돌봄	3575.9	3576.3	3345.2	93.5	84.7

주: 1)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초저출산-평균

○ “초저출산-평균”유형은 저출산 대책의 모든 영역에 예산을 투입하였음

-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에 81.9%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청년일자리·주거대책강화 영역에 6.6%,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에 6.6%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일·가정양립사각지대 해소 영역에 4.9%의 예산이 투입되었음

○ “초저출산-평균”유형 저출산 대책의 예산 집행률은 청년일자리·주거대책 강화 영역 93.4%,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87.4%,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94.6%, 일·가정양립사각지대 해소 영역 99.6%로 나타남

〈표 5-52〉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초저출산-평균)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청년	358.5	358.5	335.0	93.4	6.6
출산	384.2	361.1	315.5	87.4	6.6
돌봄	3956.7	4458.6	4219.9	94.6	81.9
일·가정양립	264.0	264.0	263.0	99.6	4.9

주: 1)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초저출산-인구유입

○ “초저출산-인구유입”유형은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에 전체 저출산 사업 예산의 95.0%가 투입되었으며,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

역에 5.0%의 예산이 투입되었음

- “초저출산-인구유입”유형 저출산 대책의 예산 집행률은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94.4%,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95.1%로 나타남

〈표 5-53〉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초저출산-인구유입)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출산	305.4	256.0	241.7	94.4	5.0
돌봄	5958.3	4862.2	4622.4	95.1	95.0

주: 1)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초고령-인구유출

- “초고령-인구유출”유형은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에 전체 저출산 사업 예산의 93.8%가 투입되었으며,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에 6.2%의 예산이 투입되었음
- “초고령-인구유출”유형 저출산 대책의 예산 집행률은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89.0%,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98.7%로 나타남

〈표 5-54〉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초고령-인구유출)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출산	71.1	71.5	63.6	89.0	6.2
돌봄	1077.2	1077.2	1063.1	98.7	93.8

주: 1)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초고령-평균

- “초고령-평균”유형은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에 전체 저출산 사업 예산의 90.3%가 투입되었으며,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에 9.7%의 예산이 투입되었음

- “초고령-평균”유형 저출산 대책의 예산 집행률은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86.6%,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94.3%로 나타남

〈표 5-55〉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초고령-평균)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출산	91.7	95.2	82.4	86.6	9.7
돌봄	1000.3	883.7	832.9	94.3	90.3

주: 1)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초고령-인구유입

- “초고령-인구유입”유형은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에 전체 저출산 사업 예산의 92.1%가 투입되었으며,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에 7.9%의 예산이 투입되었음
- “초고령-인구유입”유형 저출산 대책의 예산 집행률은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95.4%,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98.0%로 나타남

〈표 5-56〉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초고령-인구유입)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출산	75.4	106.1	101.2	95.4	7.9
돌봄	918.8	1230.4	1205.7	98.0	92.1

주: 1)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초저출산·초고령-인구유출

- “초저출산·초고령-인구유출”유형은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에 전체 저출산 사업 예산의 92.7%가 투입되었으며,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에 7.3%의 예산이 투입되었음
- “초저출산·초고령-인구유출”유형 저출산 대책의 예산 집행률은 출생에 대

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84.1%,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98.6%로 나타남

〈표 5-57〉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초저출산 초고령-인구유출)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출산	89.4	85.4	71.8	84.1	7.3
돌봄	1180.8	1089.7	1074.5	98.6	92.7

주: 1)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초저출산·초고령-평균

- “초저출산·초고령-평균”유형은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에 전체 저출산 사업 예산의 90.8%가 투입되었으며,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에 9.2%의 예산이 투입되었음
- “초저출산·초고령-평균”유형 저출산 대책의 예산 집행률은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93.0%,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98.8%로 나타남

〈표 5-58〉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초저출산 초고령-평균)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출산	58.7	71.8	66.8	93.0	9.2
돌봄	788.5	712.6	703.8	98.8	90.8

주: 1)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초저출산·초고령-인구유입

- “초저출산·초고령-인구유입”유형은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에 전체 저출산 사업 예산의 68.0%가 투입되었으며,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에 32.0%의 예산이 투입됨
- 비록 전체 저출산 대책 영역 중 2가지 영역에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다른

유형의 지역보다 비교적 예산이 고르게 투입되었음

- “초저출산·초고령-인구유입”유형 저출산 대책의 예산 집행률은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95.8%,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102.8%로 나타남

〈표 5-59〉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초저출산 초고령-인구유입)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출산	166.2	205.5	196.8	95.8	32.0
돌봄	333.8	436.9	449.3	102.8	68.0

주: 1)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2) 고령사회 대책 및 대응기반 강화 정책

□ 고령사회 대책 및 대응기반 강화 정책의 예산의 규모와 관련하여 인구지표를 토대로 유형화한 12개의 지역유형에 따른 저출산 정책의 영역별 예산, 결산, 예산 대비 결산으로 산출되는 예산 집행률을 살펴보고자 함

□ 일반-인구유출

- “일반-인구유출”유형은 고령사회 대책 모든 영역에 예산이 투입되었고, 대응기반강화 정책에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음
- “일반-인구유출”유형의 고령사회 정책 관련한 예산 투입비중은 주로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에 집중되어 전체 고령사회 대책 예산의 88.9%가 투입됨
 -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에 8.4%,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에 1.7%,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에 1.0%,의 예산이 투입되었음
- “일반-인구유출”유형 고령사회 대책의 예산 집행률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 99.6%로 나타났고,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 95.4%,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 93.5%,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 100.0%인 것으로 나타남

〈표 5-60〉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일반-인구유출)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노후소득보장	53624.2	52733.2	52508.2	99.6	88.9
노인여가안전	624.8	598.9	571.1	95.4	1.0
인력활용확대	3716.4	5009.0	4683.5	93.5	8.4
고령친화	4.0	1003.8	1003.8	100.0	1.7

주: 1)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의 영역별(소득보장, 여가안전, 일자리확대, 고령친화, 대응기반)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일반-평균

- “일반-평균”유형은 고령사회 대책 모든 영역과 대응기반 강화 정책에 예산이 투입됨
- “일반-평균”유형의 고령사회 정책 관련한 예산 투입비중은 주로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에 집중되어 전체 고령사회 대책 예산의 94.2%가 투입됨
 -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에 4.1%,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에 0.9%,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에 0.7%,의 예산이 투입되었음
- “일반-평균”유형 고령사회 대책의 예산 집행률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 99.5%로 나타났고,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 97.3%,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 98.1%,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 100.0%인 것으로 나타남
 - 대응기반 강화 정책의 예산 집행률은 100.0%로 나타남

〈표 5-61〉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일반-평균)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노후소득보장	43799.4	42930.3	42710.2	99.5	94.2
노인여가안전	321.9	336.1	326.9	97.3	0.7
인력활용확대	1907.9	1885.1	1850.0	98.1	4.1
고령친화	16.1	401.7	401.7	100.0	0.9
대응기반	27.6	21.1	21.1	100.0	0.0

주: 1)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의 영역별(소득보장, 여가안전, 일자리확대, 고령친화, 대응기반)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일반-인구유입

- “일반-인구유입”유형은 고령사회 대책 모든 영역과 대응기반 강화 정책에 예산이 투입됨
- “일반-인구유입”유형의 고령사회 정책 관련한 예산 투입비중은 주로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에 집중되어 전체 고령사회 대책 예산의 92.8%가 투입됨
 -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에 4.0%,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에 2.4%,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에 0.8%,의 예산이 투입되었음
- “일반-인구유입”유형 고령사회 대책의 예산 집행률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 99.6%로 나타났고,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 96.3%,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 97.4%,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 95.5%인 것으로 나타남
 - 대응기반 강화 정책의 예산 집행률은 100.0%로 나타남

〈표 5-62〉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일반-인구유입)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노후소득보장	45007.2	44477.5	44312.2	99.6	92.8
노인여가안전	391.2	405.7	390.6	96.3	0.8
인력활용확대	1815.4	1901.1	1852.1	97.4	4.0
고령친화	440.0	1158.0	1105.7	95.5	2.4
대응기반	11.3	9.3	9.3	100.0	0.0

주: 1)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의 영역별(소득보장, 여가안전, 일자리확대, 고령친화, 대응기반)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초저출산-인구유출

- “초저출산-인구유출”유형은 고령사회 대책 영역 중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 예산이 투입됨
- “초저출산-인구유출”유형의 고령사회 정책 관련한 예산 투입비중은 주로 노후 소득보장 강화 영역에 집중되어 전체 고령사회 대책 예산의 95.8%가 투입됨.
 -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에 3.4%,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에 0.9%의 예산이 투입되었음
- “초저출산-인구유출”유형 고령사회 대책의 예산 집행률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 99.1%로 나타났고,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 92.9%,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 96.5%로 나타남

〈표 5-63〉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초저출산-인구유출)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노후소득보장	60444.6	59957.5	59422.0	99.1	95.8
노인여가안전	575.0	535.1	497.2	92.9	0.9
인력활용확대	2102.8	2101.2	2028.5	96.5	3.4
대응기반	5.5	0.0	0.0	0.0	0.0

주: 1)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의 영역별(소득보장, 여가안전, 일자리확대, 고령친화, 대응기반)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초저출산-평균

- “초저출산-평균”유형은 고령사회 대책 모든 영역에 예산이 투입됨
- “초저출산-평균”유형의 고령사회 정책 관련한 예산 투입비중은 주로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에 집중되어 전체 고령사회 대책 예산의 94.9%가 투입됨
 -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에 3.7%,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에 0.7%,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에 0.6%의 예산이 투입되었음
- “초저출산-평균”유형 고령사회 대책의 예산 집행률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 99.3%로 나타났고,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 90.8%,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 97.3%,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에 100.0%로 나타남

〈표 5-64〉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초저출산-평균)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노후소득보장	67708.4	66321.3	65886.9	99.3	94.9
노인여가안전	500.6	508.4	461.5	90.8	0.7
인력활용확대	2551.2	2616.8	2545.8	97.3	3.7
고령친화	9.0	408.8	408.8	100.0	0.6

주: 1)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의 영역별(소득보장, 여가안전, 일자리확대, 고령친화, 대응기반)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초저출산-인구유입

- “초저출산-인구유입”유형은 고령사회 대책 모든 영역에 예산이 투입됨
- “초저출산-인구유입”유형의 고령사회 정책 관련한 예산 투입비중은 주로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에 집중되어 전체 고령사회 대책 예산의 95.1%가 투입됨
 -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에 2.6%,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에 2.2%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에 0.0%(21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

- “초저출산-평균”유형 고령사회 대책의 예산 집행률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 99.6%로 나타났고,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 100.1%,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 97.3%,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 100.0%로 나타남

〈표 5-65〉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초저출산-인구유입)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노후소득보장	76845.8	76628.6	76349.0	99.6	95.1
노인여가안전	652.5	1770.0	1772.1	100.1	2.2
인력활용확대	2180.7	2127.4	2071.0	97.3	2.6
고령친화	21.0	21.0	21.0	100.0	0.0

주: 1)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의 영역별(소득보장, 여가안전, 일자리확대, 고령친화, 대응기반)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초고령-인구유출

- “초고령-인구유출”유형의 고령사회 정책 관련한 예산 투입비중은 주로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에 집중되어 전체 고령사회 대책 예산의 98.1%가 투입되었으며,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에 1.9%의 예산이 투입됨
- “초고령-인구유출”유형 고령사회 대책의 예산 집행률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 99.5%로 나타났고,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 96.3로 나타남

〈표 5-66〉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초고령-인구유출)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노후소득보장	25370.8	25370.8	25247.5	99.5	98.1
노인여가안전	499.1	499.1	480.7	96.3	1.9

주: 1)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의 영역별(소득보장, 여가안전, 일자리확대, 고령친화, 대응기반)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초고령-평균

- “초고령-평균”유형은 고령사회 대책 모든 영역에 예산이 투입됨
- “초고령-평균”유형의 고령사회 정책 관련한 예산 투입비중은 주로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에 집중되어 전체 고령사회 대책 예산의 91.2%가 투입됨
 -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에 4.7%,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에 3.1%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에 1.1%의 예산이 투입되었음
- “초고령-평균”유형 고령사회 대책의 예산 집행률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 99.4%로 나타났고,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 93.2%,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 99.0%,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 100.0%로 나타남

〈표 5-67〉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초고령-평균)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노후소득보장	27732.6	26841.3	26686.1	99.4	91.2
노인여가안전	321.0	309.5	288.5	93.2	1.1
인력활용확대	1400.0	1394.9	1380.7	99.0	4.7
고령친화	46.9	900.3	900.3	100.0	3.1

주: 1)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의 영역별(소득보장, 여가안전, 일자리확대, 고령친화, 대응기반)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초고령-인구유입

- “초고령-인구유입”유형은 고령사회 대책 모든 영역과 대응기반 강화 정책에 예산이 투입됨
- “초고령-인구유입”유형의 고령사회 정책 관련한 예산 투입비중은 주로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에 집중되어 전체 고령사회 대책 예산의 89.9%가 투입되었으며,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에 4.4%,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에 4.4%,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에 1.3%,

의 예산이 투입되었음

- 대응기반 강화 정책에는 24백만 원(0.1%)의 예산이 투입됨

○ “초고령-인구유입”유형 고령사회 대책의 예산 집행률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 98.7%로 나타났고,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 97.9%,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 96.2%,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 100.0%인 것으로 나타남

- 대응기반 강화 정책의 예산 집행률은 100.0%로 나타남

〈표 5-68〉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초고령-인구유입)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노후소득보장	25476.1	25061.0	24745.0	98.7	89.9
노인여가안전	356.0	355.9	348.5	97.9	1.3
인력활용확대	1190.3	1215.4	1169.3	96.2	4.4
고령친화	100.0	1222.6	1222.6	100.0	4.4
대응기반	31.0	24.0	24.0	100.0	0.1

주: 1)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의 영역별(소득보장, 여가안전, 일자리확대, 고령친화, 대응기반)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초저출산·초고령-인구유출

○ “초저출산·초고령-인구유출”유형은 고령사회 대책 영역 중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 예산이 투입됨

○ “초저출산·초고령-인구유출”유형의 고령사회 정책 관련한 예산 투입비중은 주로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에 집중되어 전체 고령사회 대책 예산의 92.7%가 투입됨

-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에 6.3%,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에 1.0%의 예산이 투입되었음

○ “초저출산·초고령”유형 고령사회 대책의 예산 집행률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 99.5%로 나타났고,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 94.7%,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 98.4%로 나타남

〈표 5-69〉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초저출산초고령-인구유출)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노후소득보장	30042.0	28834.5	28685.7	99.5	92.7
노인여가안전	321.6	321.6	304.5	94.7	1.0
인력활용확대	1930.3	1953.5	1921.8	98.4	6.3

주: 1)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의 영역별(소득보장, 여가안전, 일자리확대, 고령친화, 대응기반)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초저출산·초고령-평균

- “초저출산·초고령-평균”유형은 고령사회 대책 모든 영역에 예산이 투입됨
- “초저출산·초고령-평균”유형의 고령사회 정책 관련한 예산 투입비중은 주로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에 집중되어 전체 고령사회 대책 예산의 91.2%가 투입됨
 -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에 4.3%,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에 3.5%,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에 0.9%의 예산이 투입되었음
- “초저출산·초고령-평균”유형 고령사회 대책의 예산 집행률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 98.9%로 나타났고,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 98.4%,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 81.8%,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 99.9%로 나타남

〈표 5-70〉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초저출산초고령-평균)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노후소득보장	27121.0	26283.9	25997.0	98.9	91.2
노인여가안전	283.3	267.3	262.9	98.4	0.9
인력활용확대	897.9	1013.9	829.3	81.8	3.5
고령친화	14.3	1242.6	1240.9	99.9	4.3

주: 1)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의 영역별(소득보장, 여가안전, 일자리확대, 고령친화, 대응기반)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초저출산·초고령-인구유입

- “초저출산·초고령-인구유입”유형은 고령사회 대책 모든 영역과 대응기반 강화 정책에 예산이 투입됨
- “초저출산·초고령-인구유입”유형의 고령사회 정책 관련한 예산 투입비중은 주로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에 집중되어 전체 고령사회 대책 예산의 95.1%가 투입됨
 -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에 3.0%,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에 1.8%,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에 0.1%의 예산이 투입되었음
 - 대응기반 강화 정책에는 5백만 원(0.0%)의 예산이 투입됨
- “초저출산·초고령-인구유입”유형 고령사회 대책의 예산 집행률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 99.1%로 나타났고,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 98.4%,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 97.2%,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 100.0%로 나타남
 - 대응기반 강화 정책의 예산 집행률은 100.0%로 나타남

〈표 5-71〉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초저출산초고령-인구유입)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노후소득보장	23276.5	22943.8	22748.0	99.1	95.1
노인여가안전	431.6	444.8	437.7	98.4	1.8
인력활용확대	687.4	716.8	696.6	97.2	3.0
고령친화	25.0	25.0	25.0	100.0	0.1
대응기반	8.0	5.0	5.0	100.0	0.0

주: 1)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의 영역별(소득보장, 여가안전, 일자리확대, 고령친화, 대응기반)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제3절 자체사업 분석

1. 자체사업 규모

□ 여기서 분석한 전체 자체사업 관련 내용은 ‘2016년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실적’ 취합자료(2017. 5~10)를 기초로 분석한 것이며, 제출 당시의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상황에 따라 내용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영역별 사업 수와 비율(표 5-72)

-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을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면, 비교적 저출산 정책과 고령사회 정책에 고르게 사업이 분포되어 있음
 - 저출산 정책의 사업 수가 전체 사업의 54.3%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사회 정책은 42.8%로 분포되어 있으나, 대응기반 강화 정책은 2.9%에 불과함
- 분야별 영역에 있어서의 사업 수에 대한 비율을 살펴보면, 한 영역에 많은 사업이 편중되어 있는 특징을 보임
 - 저출산 분야에서는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의 사업이 2188개(64.1%)로 가장 많았으며, 고령사회 분야에서는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의 사업수가 2363개(87.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비교하여 각 분야별 영역에 있어서의 사업 수를 살펴보면, 저출산 정책 분야에서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의 사업 수가 가장 많았으며, 고령사회 분야에서는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의 사업수가 가장 많아, 지자체 자체사업의 경우와 동일한 특성을 보임
 - 반면,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은 분야의 각 영역에 비교적 고르게 사업이 분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임

〈표 5-72〉 2016년도 전체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자체사업과 중앙정부 사업의 규모

정책 분야	정책 영역	지자체 자체사업 수(비율)		중앙정부 사업 수(비율)	
총계		6292(100.0%)		189(100.0%)	
저출산	청년일자리·주거대책강화	49 (1.4%)	3413 (54.2%)	20 (24.7%)	81 (42.8%)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2188 (64.1%)		32 (39.5%)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1084 (31.8%)		17 (21.0%)	
	일·가정양립사각지대 해소	92 (2.7%)		12 (14.8%)	
	소계	3413 (100.0%)		81 (100.0%)	
고령 사회	노후소득보장 강화	39 (1.4%)	2696 (42.8%)	10 (10.2%)	98 (51.9%)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2363 (87.6%)		33 (33.7%)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239 (8.9%)		29 (29.6%)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55 (2.0%)		26 (26.5%)	
	소계	2696 (100.0%)		98 (100.0%)	
대응기반 강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183 (100.0%)	183 (2.9%)	10 (100.0%)	10 (5.3%)

자료: 1) 자체사업 수는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함

2) 중앙정부 사업 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6년도 중앙정부 시행계획(대한민국정부, 2015).

□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영역별 자체사업의 규모를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사업의 규모와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에 비해 공통사업은 대체로 저출산 영역에 많은 사업이 편중되어(77.1%) 차이를 보임
- 각 분야별 영역에 있어서의 사업 수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저출산 정책 분야에서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의 사업 수가 가장 많았으며, 고령사회 분야에서는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의 사업수가 가장 많게 나타남
- 그러나, 자체사업의 경우 공통사업의 경우와 비교하여 고령사회 분야에서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에 사업이 보다 편중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음(87.6% vs. 64.5%)

〈표 5-73〉 2016년도 전체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공통사업과 자체사업의 규모

정책 분야	정책 영역	지자체 공통사업 수(비율)		지자체 자체사업 수(비율)	
총계		8786(100.0%)		6292(100.0%)	
저출산	청년일자리·주거대책강화	46 (0.7%)	6770 (77.1%)	49 (1.4%)	3413 (54.2%)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4457 (65.8%)		2188 (64.1%)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2264 (33.4%)		1084 (31.8%)	
	일·가정양립사각지대 해소	3 (0.0%)		92 (2.7%)	
	소계	6770 (100.0%)		3413 (100.0%)	
고령 사회	노후소득보장 강화	195 (9.9%)	1964 (22.3%)	39 (1.4%)	2696 (42.8%)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1266 (64.5%)		2363 (87.6%)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348 (17.7%)		239 (8.9%)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155 (7.9%)		55 (2.0%)	
	소계	1964 (100.0%)		2696 (100.0%)	
대응기반 강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52 (100.0%)	52 (0.6%)	183 (100.0%)	183 (2.9%)

자료: 1) 자체사업 수는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함

가. 시도별 자체사업

1) 저출산

□ 저출산 정책의 영역별 자체사업 수를 17개 시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5-74〉 참조)

-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의 사업이 가장 많고, 청년일자리·주거대책강화 영역과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영역의 사업은 상대적으로 사업의 수가 작거나 없는 시도가 있음

- 청년일자리·주거대책강화 영역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광주

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에서는 수행된 사업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업수에 있어서는 경기도와 전라북도에서 각 14개로 가장 많은 수의 사업이 수행되었으며, 전체 사업에 대한 비율로 보았을 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가 15.7%(8개)로 가장 높은 비율로 수행되었음

- 일·가정양립사각지대 해소 영역의 경우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에서 수행된 사업이 부재한 반면, 부산광역시(23개), 경기도(11개), 울산광역시(10개)의 순으로 많은 사업이 수행되었으며, 전체 사업에 대한 비율로 보았을 때 광주광역시의 경우 전체 사업의 10%의 사업(5개)이 수행됨

〈표 5-74〉 시도에 따른 영역별 저출산 자체사업

(단위: 개)

구분	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계
서울	0	24	103	0	127
부산	1	264	230	23	518
대구	0	8	0	0	8
인천	1	28	34	0	63
광주	0	33	12	5	50
대전	0	32	9	1	42
울산	5	87	15	10	117
세종	2	26	16	4	48
경기	14	225	105	11	355
강원	0	152	143	2	297
충북	1	170	142	7	320
충남	0	185	56	6	247
전북	14	224	78	7	323
전남	0	156	5	3	164
경북	2	323	20	5	350
경남	1	227	101	4	333
제주	8	24	15	4	51

자료: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고령사회 및 대응기반

□ 고령사회 정책 및 대응 기반 강화 정책 의 영역별 자체사업 수를 17개 시도

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5-75〉 참조)

- 고령사회 정책에 있어서는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의 자체사업이 전체 자체사업 대비 비율이 80% 이상으로 가장 많이 수행되었음
 - 특히,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의 경우는 자체사업으로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의 사업만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영역의 사업이 다음으로 많이 수행되었음
 - 사업 수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65개로 가장 많은 사업이 수행되었으며, 전체 사업 대비 비율에 있어서는 울산광역시가 13.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대응기반 강화 정책에 있어서는 경상북도(52개), 서울특별시(25개), 충청남도(23개)의 순으로 많은 수의 사업이 추진되었음

〈표 5-75〉 시도에 따른 영역별 고령사회 및 대응기반 자체사업

(단위: 개)

구분	노후소득보장	노인여가안전	일자리확대	고령친화	대응기반	계
서울	0	0	0	0	25	25
부산	0	169	12	9	17	207
대구	0	11	0	0	1	12
인천	0	10	0	0	8	18
광주	0	86	6	0	2	94
대전	0	22	0	0	8	30
울산	0	44	7	0	1	52
세종	0	24	2	0	2	28
경기	7	520	65	0	16	608
강원	18	187	27	24	3	259
충북	5	122	9	12	12	160
충남	5	222	21	1	23	272
전북	0	215	17	0	1	233
전남	1	232	3	1	3	240
경북	0	250	39	0	52	341
경남	3	228	30	8	4	273
제주	0	21	1	0	5	27

자료: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나. 시지역 · 군지역 · 구지역별 자체사업

1) 저출산

□ 저출산 정책의 영역별 자체사업 수를 시지역, 군지역, 구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5-76〉 참조)

-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시지역, 군지역, 구지역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의 사업이 가장 많고, 청년일자리·주거대책강화 영역의 사업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군지역과 구지역 단위에서는 청년일자리·주거대책강화 영역의 자체사업은 전체 자체사업 수 대비 1% 미만으로 나타남

〈표 5-76〉 시지역 · 군지역 · 구지역에 따른 영역별 저출산 자체사업

(단위: 개)

구분	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계
시	32	833	363	39	1,267
군	11	926	338	18	1,293
구	6	429	383	35	853

자료: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고령사회 및 대응기반

□ 고령사회 정책 및 대응기반 강화 정책의 영역별 공통사업 수를 시지역, 군지역, 구지역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5-77〉 참조)

- 고령사회 정책에 있어서는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의 사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영역의 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시지역은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의 자체사업이 전체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군지역과 구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구지역은 수행된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의 자체사업이 부재함

〈표 5-77〉 시지역·군지역·구지역에 따른 영역별 고령사회 및 대응기반 자체사업

(단위: 개)

구분	노후소득보장	노인여가안전	일자리확대	고령친화	대응기반	계
시	20	1100	131	11	66	1,328
군	19	945	84	36	55	1,139
구	0	318	24	8	62	412

자료: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다. 지역유형별 자체사업

1) 저출산

□ 저출산 정책의 영역별 자체사업 수를 12개의 인구지표에 따른 지역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5-78〉 참조)

- 지역유형에 상관없이 대체로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의 사업 비중이 6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저출산 분야에 정책적 우선순위가 부여될 필요가 있는 “초저출산”(초저출산, 초저출산·초고령) 유형은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사업의 비율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낮고,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사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유형과 차이를 보임
- 저출산 분야에 정책적 우선순위가 부여될 필요가 있는 “순인구 유출”의 문제가 나타나는 지역의 경우는 “초저출산-인구유출”유형의 지역을 제외하고 전체 수행되는 사업의 수가 다른 유형의 지역보다 작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표 5-78〉 지역유형에 따른 영역별 저출산 사업

(단위: 개)

구분	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계
일반-인구유출	1	53	26	3	83
일반-평균	7	256	91	16	370
일반-인구유입	10	338	164	23	535
초저출산-인구유출	12	226	206	15	459
초저출산-평균	5	244	195	10	454
초저출산-인구유입	0	56	38	2	96
초고령-인구유출	0	38	3	1	42
초고령-평균	9	570	137	10	726
초고령-인구유입	3	101	39	5	148
초저고-인구유출	1	76	58	5	140
초저고-평균	1	165	82	1	249
초저고-인구유입	0	65	45	1	111

자료: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고령사회 및 대응기반

□ 고령사회 정책 및 대응기반 강화 정책의 영역별 자체사업 수를 12개의 인구지표에 따른 지역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5-79〉 참조)

- 지역유형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의 사업 비율이 전체 자체사업의 8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영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의 자체사업이 부재한 지역의 유형은 “초저출산·초고령-인구유출”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의 자체사업이 부재한 지역의 유형은 “일반-인구유출” 유형으로 나타남
- “초고령사회”, “순인구 유출” 등의 문제가 나타나는 지역은 고령사회 분야에 정책적 우선순위가 부여될 필요가 있으나, 실제 “초고령-인구유출” 유형 지역은 고령사회 분야 자체사업의 수가 53개로 12개의 유형 중 가장 수행된 사업 수가 작고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의 자체사업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초저출산·초고령-인구유출” 유형 지역의 경우도 다른 유형에 비해 고령사회 분야 자체사업의 수가 79개로 두 번째로 적은 편이며 노후소득강화 분야 자체사업이 수행되지 않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표 5-79〉 지역유형에 따른 영역별 고령사회 및 대응기반 자체사업

(단위: 개)

구분	노후소득보장	노인여가안전	일자리확대	고령친화	대응기반	계
일반-인구유출	3	66	8	0	2	79
일반-평균	8	286	30	7	12	343
일반-인구유입	6	400	38	8	29	481
초저출산-인구유출	1	216	20	3	42	282
초저출산-평균	3	246	34	7	19	309
초저출산-인구유입	2	99	14	1	4	120
초고령-인구유출	1	50	1	0	1	53
초고령-평균	3	574	55	6	49	687
초고령-인구유입	1	113	7	3	6	130
초저고-인구유출	0	62	6	3	8	79
초저고-평균	8	181	22	13	6	230
초저고-인구유입	3	70	4	4	5	86

자료: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자체사업 예산규모

가. 시도별 자체사업

1) 저출산 정책 예산분석

□ 저출산 정책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의 예산의 규모와 관련하여 17개 시도에 따른 저출산 정책의 영역별 예산, 결산, 예산 대비 결산으로 산출되는 예산 집행률을 살펴보고자 함

□ 서울특별시(표 5-80)

○ 서울특별시의 경우 자체사업의 예산 투입은 대체로 출생에 대한 사회

적 책임 강화 영역에 집중되어 있음

-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90.6%로 낮았고,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100.0%로 나타남

〈표 5-80〉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서울시)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출산	21140.0	21140.0	19148.0	90.6	99.9
돌봄	23.8	23.8	23.8	100.0	0.1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부산광역시(표 5-81)

- 부산광역시의 경우 자체사업의 예산 투입은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영역에 투입되었는데,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의 예산 투입(62.2%)이 가장 큰 반면,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영역의 예산 투입(9.5%)은 가장 작게 나타남
-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96.0%,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101.8%,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65.6%로 나타남

〈표 5-81〉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부산시)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출산	237.0	236.5	226.9	96.0	26.5
돌봄	554.4	556.4	566.4	101.8	62.2
일가정양립	102.5	84.6	55.5	65.6	9.5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대구광역시(표 5-82)

- 대구광역시의 경우 자체사업은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에만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남
-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100.0%로 나타남

〈표 5-82〉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대구시)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출산	2.8	139.6	111.4	79.8	100.0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인천광역시(표 5-83)

- 인천광역시의 경우 자체사업의 예산은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영역,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영역에 투입되었는데, 전체 자체사업 예산의 78.8%는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에 투입됨
-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영역의 예산 집행률은 100.0%,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95.0%,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99.6%로 나타남

〈표 5-83〉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인천시)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청년	20.0	20.0	20.0	100.0	2.4
출산	663.9	670.8	637.6	95.0	78.8
돌봄	173.7	160.1	159.5	99.6	18.8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광주광역시(표 5-84)

- 광주광역시의 경우 자체사업의 예산 투입은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영역에 투입되었는데,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의 예산 투입 비율(60.2%)이 가장 높은 반면,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영역의 예산 투입 비율(1.5%)은 가장 낮게 나타남
-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87.9%,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747.2%,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100.0%로 나타남

〈표 5-84〉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광주시)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출산	88.9	90.7	79.7	87.9	38.4
돌봄	148.0	142.2	1062.5	747.2	60.2
일가정양립	15.4	3.5	3.5	100.0	1.5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대전광역시(표 5-85)

- 대전 광역시의 경우 자체사업의 예산 투입은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영역에 각 18.1%, 81.9% 투입됨
-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97.0%,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93.7%로 나타남

〈표 5-85〉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대전시)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출산	18.1	19.5	18.9	97.0	18.1
돌봄	91.1	88.0	82.4	93.7	81.9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울산광역시(표 5-86)

○ 울산광역시의 경우 자체사업의 예산은 저출산의 모든 영역에 투입됨

- 예산 투입 비율은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영역에는 전체 사업의 6.1%로 낮게 투입되었으나, 나머지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50.2%),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19.2%),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영역(24.3%)에 비교적 골고루 예산이 투입됨
-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100.0%,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96.0%,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101.8%,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65.6%로 나타남

〈표 5-86〉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울산시)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청년		23.0	23.0	100.0	6.1
출산	221.3	188.4	156.7	83.2	50.2
돌봄	54.4	72.1	57.6	79.9	19.2
일가정양립	89.6	92.1	89.6	97.2	24.5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세종특별자치시(표 5-87)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자체사업의 예산은 저출산의 모든 영역에 투입됨

- 전체 자체사업 대비 예산 투입 비율은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영역(1.6%)과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영역(0.1%)에서 매우 낮게 나타난 반면,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의 사업에 전체 예산의 97.2%가 투입됨
-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100.0%,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41.6%,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93.8%,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100.0%로 나타남

〈표 5-87〉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세종시)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청년	40.0	40.0	40.0	100.0	1.6
출산	274.4	276.4	114.9	41.6	11.0
돌봄	1867.6	2187.4	2051.8	93.8	87.2
일가정양립	3.7	3.7	3.7	100.0	0.1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경기도(표 5-88)

○ 경기도의 자체사업의 예산은 저출산 정책의 모든 영역에 투입됨

- 영역별 자체사업의 예산은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영역(34.2%),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17.2%),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38.5%),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영역(10.1%)에 골고루 투입됨
-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98.5%,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95.8%, 맞춤형 돌봄확대·교

육개혁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98.1%,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87.8%로 나타남

〈표 5-88〉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경기도)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청년	1090.3	1064.2	1048.0	98.5	34.2
출산	590.6	536.3	513.5	95.8	17.2
돌봄	1282.2	1198.1	1175.5	98.1	38.5
일가정양립	315.0	315.0	276.6	87.8	10.1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강원도(표 5-89)

○ 강원도의 경우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과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영역의 예산 투입 비율이 각 31.5%, 68.5%로 예산은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영역에 보다 집중됨

-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84.6%,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96.4%로 나타남

〈표 5-89〉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강원도)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출산	240.9	241.5	204.3	84.6	31.5
돌봄	524.8	524.3	505.7	96.4	68.5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충청북도(표 5-90)

○ 충청북도의 경우 자체사업에 있어서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55.6%),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22.0%), 일·가정양립 사각

지대 해소 영역(22.4%)에 전체 예산이 비교적 골고루 투입됨

-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99.1%,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99.4%,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93.8%로 나타남

〈표 5-90〉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충청북도)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출산	397.5	334.2	331.1	99.1	55.6
돌봄	130.0	132.2	131.4	99.4	22.0
일가정양립	134.7	134.7	126.3	93.8	22.4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충청남도(표 5-91)

○ 충청남도의 자체사업의 예산은 대체로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76.3%)에 집중되어 투입되었고,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17.9%),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영역(5.7%)에 일부 투입됨

-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99.2%,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99.7%,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99.3%로 나타남

〈표 5-91〉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충청남도)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출산	238.9	225.2	223.3	99.2	17.9
돌봄	1292.9	957.9	955.3	99.7	76.3
일가정양립	64.6	71.8	71.3	99.3	5.7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전라북도(표 5-92)

○ 전라북도의 자체사업의 예산은 저출산 정책의 모든 영역에 투입됨

- 영역별 자체사업의 예산은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영역(25.9%),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24.3%),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16.1%),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영역(33.7%)에 골고루 투입됨
-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77.9%,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95.5%,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99.2%,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97.0%로 나타남

〈표 5-92〉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전라북도)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청년	278.6	278.6	217.1	77.9	25.9
출산	257.8	261.7	249.9	95.5	24.3
돌봄	173.2	173.3	171.9	99.2	16.1
일가정양립	338.0	363.0	352.0	97.0	33.7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전라남도(표 5-93)

○ 전라남도의 자체사업의 예산은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40.8%),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31.5%)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영역(27.7%)에 비교적 골고루 투입됨

-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92.2%,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87.7%,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76.7%로 나타남

〈표 5-93〉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전라남도)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출산	248.8	249.1	229.8	92.2	40.8
돌봄	195.3	192.5	168.8	87.7	31.5
일가정양립	196.5	169.5	130.0	76.7	27.7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경상북도(표 5-94)

○ 경상북도의 자체사업의 예산은 저출산 정책의 모든 영역에 투입됨

-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영역의 경우는 전체 자체사업 예산의 0.1%만 투입된 반면,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영역에는 전체 예산의 56.4%가 투입되어 대조를 이룸
-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100.0%,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95.1%,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95.6%,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90.2%로 나타남

〈표 5-94〉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경상북도)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청년	1.0	1.0	1.0	100.0	0.1
출산	227.7	228.9	217.7	95.1	25.8
돌봄	157.5	156.9	150.0	95.6	17.7
일가정양립	500.0	500.0	451.0	90.2	56.4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경상남도(표 5-95)

- 경상남도의 경우 저출산 정책의 모든 영역에서 자체사업의 예산을 투입함
-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영역의 경우는 전체 자체사업 예산의 2.9%만 투입된 반면, 대부분의 예산이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16.2%),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32.3%)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영역(48.5%)에 비교적 골고루 투입됨
 -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100.0%,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98.4%,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94.7%,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83.0%로 나타남

〈표 5-95〉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경상남도)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청년	30.0	30.0	30.0	100.0	2.9
출산	168.5	165.7	163.0	98.4	16.2
돌봄	320.4	329.9	312.3	94.7	32.3
일가정양립	562.0	495.0	410.7	83.0	48.5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제주특별자치도(표 5-96)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저출산 정책의 모든 영역에서 자체사업의 예산을 투입한 반면, 전체 자체사업 예산의 대부분(83.2)은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에 집중 투입되어 있음
-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88.6%,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95.7%,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98.1%,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98.6%로 나타남

〈표 5-96〉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제주도)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청년	868.0	944.9	837.1	88.6	8.0
출산	705.4	934.9	894.4	95.7	7.9
돌봄	9891.6	9880.6	9696.5	98.1	83.2
일가정양립	110.0	110.0	108.5	98.6	0.9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저출산 영역 지방자치단체 개별 자체사업의 집행률을 17개 시도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대부분의 개별 자체사업의 예산은 100%이상 집행됨
- 100%미만으로 예산이 집행된 사업이 없는 시도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4개에 불과함
- 시·도별 저출산 전체 사업 중 예산이 100% 집행되지 않은 사업의 비율은 0.4%(전라북도)~7.1%(제주특별자치도)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사업 수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시도에서 1개~15개 사업의 예산이 100%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공통사업과 비교 시 실적이 저조함

〈표 5-97〉 시도별 예산달성정도별 저출산 사업 수

(단위: 개, %)

구분	0 ~ 100미만	100	100 초과	계
서울	0 (0.0)	86 (80.4)	21 (19.6)	107
부산	8 (1.9)	213 (51.3)	194 (46.7)	415
대구	0 (0.0)	4 (57.1)	3 (42.9)	7
인천	0 (0.0)	29 (52.7)	26 (47.3)	55
광주	1 (2.9)	20 (58.8)	13 (38.2)	34
대전	1 (3.4)	16 (55.2)	12 (41.4)	29
울산	0 (0.0)	70 (67.3)	34 (32.7)	104
세종	0 (0.0)	32 (74.4)	11 (25.6)	43
경기도	4 (1.3)	154 (49.2)	155 (49.5)	313
강원도	7 (2.8)	66 (26.0)	181 (71.3)	254
충북	3 (1.3)	173 (73.9)	58 (24.8)	234
충남	6 (2.9)	144 (68.6)	60 (28.6)	210
전북	1 (0.4)	173 (64.1)	96 (35.6)	270
전남	6 (4.3)	70 (50.0)	64 (45.7)	140
경북	3 (1.0)	192 (65.1)	100 (33.9)	295
경남	15 (4.9)	203 (65.9)	90 (29.2)	308
제주	3 (7.1)	15 (35.7)	24 (57.1)	42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2) 고령사회 대책·대응기반 예산분석

□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고령사회 대책,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의 영역별 예산의 규모와 관련하여 17개 시도별 영역별 예산, 결산, 예산 대비

결산으로 산출되는 예산 집행률을 살펴보고자 함

□ 부산광역시(표 5-98)

- 부산광역시의 경우 고령사회 대책의 자체사업 예산은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66.4%)과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28.2%)에 집중 투입됨
 -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86.7%,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98.3%,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100.0%, 대응기반강화 정책의 세부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98.8%로 나타남

〈표 5-98〉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부산시)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노인여가안전	259.8	262.0	227.1	86.7	66.4
일자리확대	8.1	7.4	7.3	98.3	1.9
고령친화	111.1	111.1	111.1	100.0	28.2
대응기반	14.5	13.8	13.6	98.8	3.5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대구광역시(표 5-99)

- 대구광역시의 경우 고령사회 대책의 자체사업 예산은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에만 투입되었고, 이와 비교하여 대응기반 강화 정책의 자체사업 예산은 매우 낮은 수준(12백만 원)으로 투입됨
 -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 사업과 대응기반강화 정책의 세부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모두 100.0%로 전액 집행됨

〈표 5-99〉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대구시)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노인여가안전	279.1	279.1	279.1	100.0	95.9
대응기반	12.0	12.0	12.0	100.0	4.1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인천광역시(표 5-100)

○ 인천광역시의 경우 고령사회 대책의 자체사업 예산은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에만 투입되었고, 이와 비교하여 대응기반 강화 정책의 자체사업 예산은 낮은 수준(16백만 원)으로 투입됨

-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97.0%, 대응기반 강화 정책의 세부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97.9%로 나타남

〈표 5-100〉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인천시)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노인여가안전	42.7	40.9	39.7	97.0	71.9
대응기반	23.0	16.0	15.7	97.9	28.1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광주광역시(표 5-101)

○ 광주광역시의 경우 고령사회 대책의 자체사업 예산은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89.0%)과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10.9%)에 집중 투입되었고 대응기반강화 정책의 자체사업 예산은 전체 고령사회 대책 및 대응기반강화 정책 자체사업 예산의 0.1%에 불과함

-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99.7%,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99.8%, 대

응기반강화 정책의 세부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100.0%로 나타남

〈표 5-101〉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광주시)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노인여가안전	181.8	1802.5	1797.5	99.7	89.0
일자리확대	221.0	221.0	220.7	99.8	10.9
대응기반	4.0	2.0	2.0	100.0	0.1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대전광역시(표 5-102)

○ 대전광역시의 경우 고령사회 대책의 자체사업 예산은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에만 투입되었고, 대응기반 강화 정책의 자체사업 예산은 전체 고령사회 대책 및 대응기반 강화 정책 예산의 21.2%가 투입됨

-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98.0%, 대응기반강화 정책의 세부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99.3%로 나타남

〈표 5-102〉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대전시)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노인여가안전	205.3	204.9	200.9	98.0	78.8
대응기반	257.0	55.0	54.6	99.3	21.2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울산광역시(표 5-103)

○ 울산광역시의 경우 고령사회 대책의 자체사업 예산은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64.3%)에 집중 투입되었고, 나머지 예산은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23.7%), 대응기반강화 정책(12.0%)에 과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28.2%)에 비교적 골고루 투입됨

-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102.1%,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99.6%, 대응기반 강화 정책의 예산집행률은 100.0%로 나타남

〈표 5-103〉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울산시)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노인여가안전	369.4	338.1	345.2	102.1	64.3
일자리확대	123.2	124.5	124.0	99.6	23.7
대응기반	63.0	63.0	63.0	100.0	12.0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세종특별자치시(표 5-104)

○ 세종특별자치시의 고령사회 대책 자체사업 예산은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97.2%)에 집중 투입됨

-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75.1%,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76.9%, 대응기반 강화 정책의 예산집행률은 100.0%로 나타남

〈표 5-104〉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세종시)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노인여가안전	248.5	331.6	249.1	75.1	97.2
일자리확대	6.5	6.5	5.0	76.9	1.9
대응기반	3.0	3.0	3.0	100.0	0.9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경기도(표 5-105)

○ 경기도의 고령사회 대책 자체사업 예산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91.9%)

에 집중 투입되었고,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 사업과 대응 기반강화 정책내의 사업의 예산 투입률은 1.0% 미만으로 예산이 매우 낮게 투입됨

-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73.1%,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97.4%,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98.9%, 대응기반강화 정책의 예산집행률은 91.9%로 나타남

〈표 5-105〉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경기도)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노후소득보장	28880.0	28900.1	21114.0	73.1	91.9
노인여가안전	2435.0	2372.0	2309.3	97.4	7.5
일자리확대	173.6	181.2	179.1	98.9	0.6
대응기반	10.9	9.9	9.1	91.9	0.0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강원도(표 5-106)

○ 강원도의 고령사회 대책 자체사업은 모든 영역에서 예산이 투입되고 집행되었으나, 예산은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49.8%)과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 사업(39.4%)에 집중 투입됨

-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73.7%,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94.2%,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99.4%,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85.0%, 대응기반강화 정책의 예산집행률은 90.9%로 나타남

〈표 5-106〉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강원도)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노후소득보장	45.3	45.3	33.4	73.7	5.7
노인여가안전	410.3	399.1	375.9	94.2	49.8
일자리확대	311.9	315.7	313.7	99.4	39.4
고령친화	5.3	5.3	4.5	85.0	0.7
대응기반	36.7	36.7	33.3	90.9	4.6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충청북도(표 5-107)

○ 충청북도의 고령사회 대책 자체사업은 모든 영역에서 예산이 투입되고 집행되었으나, 대부분의 예산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70.1%)에 투입되었음

-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99.0%,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97.9%,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영역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94.8%,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99.7%, 대응기반강화 정책의 예산집행률은 90.7%로 나타남

〈표 5-107〉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충청북도)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노후소득보장	994.4	995.6	985.8	99.0	70.1
노인여가안전	154.0	154.1	150.9	97.9	10.9
일자리확대	221.1	221.1	209.6	94.8	15.6
고령친화	30.8	31.8	31.8	99.7	2.2
대응기반	16.7	16.7	15.1	90.7	1.2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충청남도(표 5-108)

○ 충청남도의 고령사회 대책 자체사업은 모든 영역에서 예산이 투입되고 집행되었으나, 대부분의 예산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71.0%)에 투입되었음

-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99.3%,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90.3%,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89.9%,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100.0%, 대응기반강화 정책의 예산집행률은 100.0%로 나타남

〈표 5-108〉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충청남도)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노후소득보장	937.0	934.2	927.8	99.3	71.0
노인여가안전	159.4	164.9	148.9	90.3	12.5
일자리확대	143.0	162.9	146.4	89.9	12.4
고령친화	7.0	7.0	7.0	100.0	0.5
대응기반	46.2	46.2	46.2	100.0	3.5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전라북도(표 5-109)

○ 전라북도의 고령사회 대책 자체사업 예산은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51.4%)과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48.6%)에만 투입되었으며 대응기반 강화 정책의 영역에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음

-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108.4%,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99.7%로 나타남

〈표 5-109〉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전라북도)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노인여가안전	472.1	479.4	519.6	108.4	51.4
일자리확대	414.2	454.2	453.0	99.7	48.6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전라남도(표 5-110)

○ 전라남도의 고령사회 대책 자체사업은 모든 영역에서 예산이 투입되고 집행되었으나, 대부분의 예산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62.0%)에 투입되었음

-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92.7%,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89.9%,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영역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96.6%,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100.0%, 대응기반강화 정책의 예산집행률은 92.3%로 나타남

〈표 5-110〉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전라남도)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노후소득보장	332.0	510.0	473.0	92.7	62.0
노인여가안전	83.9	90.1	80.9	89.9	11.0
일자리확대	147.3	156.3	151.0	96.6	19.0
고령친화	53.0	53.0	53.0	100.0	6.4
대응기반	13.0	13.0	12.0	92.3	1.6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경상북도(표 5-111)

○ 경상북도의 경우 고령사회 대책의 자체사업 예산은 활기차고 안전한 노

후 실현 영역(66.4%)과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28.2%)에 집중 투입됨

-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86.7%,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98.3%,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100.0%, 대응기반강화 정책의 세부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98.8%로 나타남

〈표 5-111〉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경상북도)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노인여가안전	132.3	146.5	132.0	90.2	69.1
일자리확대	52.6	52.6	50.6	96.1	24.8
대응기반	12.8	13.0	13.0	100.5	6.1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경상남도(표 5-112)

○ 경상남도의 고령사회 대책 자체사업은 모든 영역에서 예산이 비교적 골고루 투입되고 집행됨

-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96.2%,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108.4%,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99.5%,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131.5%, 대응기반강화 정책의 예산집행률은 93.8%로 나타남

〈표 5-112〉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경상남도)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노후소득보장	231.0	200.7	193.0	96.2	29.9
노인여가안전	80.8	87.7	95.1	108.4	13.1
일자리확대	84.4	86.0	85.6	99.5	12.8
고령친화	562.3	288.6	379.6	131.5	43.0
대응기반	8.0	8.0	7.5	93.8	1.2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제주특별자치도(표 5-113)

-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령사회 대책 자체사업 예산은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에만 투입되었으며 대응기반 강화 정책의 영역에는 매우 낮은 수준의 예산이 투입됨
-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104.2%, 대응 기반 강화정책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100.0%로 나타남

〈표 5-113〉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제주도)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노인여가안전	1960.1	1982.3	2064.8	104.2	99.1
대응기반	17.2	17.2	17.2	100.0	0.9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고령사회 정책 및 대응기반 강화 정책 영역 개별 자체사업의 예산 집행률을 17개 시도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대부분의 개별 자체사업의 예산은 100% 이상 집행됨
- 시·도별 저출산 전체 사업 중 예산이 100% 집행되지 않은 사업의 비중은 경상남도(5.0%, 12개 사업), 경기도(2.4%, 13개 사업), 충청북도(1.9%,

3개 사업), 광주광역시(1.1%, 1개 사업), 경상북도(0.9%, 2개 사업), 충청남도(0.8%, 2개 사업), 전라북도(0.5%, 1개 사업), 전라남도(0.4%, 1개 사업) 등 공통사업의 예산 집행률에 비해 실적이 저조함

〈표 5-114〉 시도별 예산달성정도별 고령사회 및 대응기반 사업 수

(단위: 개, %)

	0 ~ 100미만	100	100 초과	계
부산	0 (0.0)	127 (69.4)	56 (30.6)	183
대구	0 (0.0)	12 (100.0)	0 (0.0)	12
인천	0 (0.0)	11 (78.6)	3 (21.4)	14
광주	1 (1.1)	73 (83.0)	14 (15.9)	88
대전	0 (0.0)	15 (60.0)	10 (40.0)	25
울산	0 (0.0)	45 (90.0)	5 (10.0)	50
세종	0 (0.0)	11 (42.3)	15 (57.7)	26
경기도	13 (2.4)	372 (68.5)	158 (29.1)	543
강원도	0 (0.0)	143 (65.0)	77 (35.0)	220
충북	3 (1.9)	116 (75.3)	35 (22.7)	154
충남	2 (0.8)	209 (82.9)	41 (16.3)	252
전북	1 (0.5)	159 (79.5)	40 (20.0)	200
전남	1 (0.4)	169 (73.2)	61 (26.4)	231
경북	2 (0.9)	205 (88.4)	25 (10.8)	232
경남	12 (5.0)	155 (64.3)	74 (30.7)	241
제주	1 (4.0)	17 (68.0)	7 (28.0)	25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나. 시지역·군지역·구지역별 자체사업

1) 저출산 대책 예산분석

□ 저출산 대책의 영역별 자체사업의 전체 예산, 결산(집행액), 예산 집행률을 시지역, 군지역, 구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 시지역, 군지역, 구지역전체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저출산 정책 4개 영역 모두에 예산을 투입하고 집행하였으며, 다른 영역에 비해 일·가정양립사각지대 해소 영역에 가장 적은 예산을 투입함

□ 시지역의 경우 저출산 정책 4개 영역 모두에 예산을 비교적 골고루 투입함

- 전체 저출산 관련 정책의 영역 중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함(46.0%)
- 시지역 저출산 관련 정책의 예산 집행률은 청년일자리·주거대책강화 영역 92.1%,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96.4%,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98.0%, 일·가정양립사각지대 해소 영역 88.7%로 나타남

□ 군지역의 경우 저출산 정책 4개 영역 모두에 예산을 비교적 골고루 투입함

- 전체 저출산 관련 정책의 영역 중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함(32.8%)
- 군지역 저출산 관련 정책의 예산 집행률은 청년일자리·주거대책강화 영역 97.8%,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91.2%,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95.3%, 일·가정양립사각지대 해소 영역 92.9%로 나타남

□ 구지역의 경우 전체 저출산 관련 정책의 영역 중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에 대부분의 예산이 집중됨(76.9%)

- 청년일자리·주거대책강화 영역에 1.2%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개혁 영역에 18.3%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일·가정양립사각지대 해소 영역 영역에 3.6%의 예산이 투입되었음
- 구지역 저출산 관련 정책의 예산 집행률은 청년일자리·주거대책강화 영역 100.0%,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92.3%,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107.8%, 일·가정양립사각지대 해소 영역 영역 79.2%로 나타남

〈표 5-115〉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시지역	청년	846.96	865.46	797.32	92.1	30.9
	출산	436.60	413.30	398.52	96.4	14.8
	돌봄	1318.91	1287.81	1261.74	98.0	46.0
	일가정양립	246.46	232.72	206.52	88.7	8.3
군지역	청년	113.10	104.91	102.64	97.8	20.3
	출산	171.22	169.78	154.82	91.2	32.8
	돌봄	159.21	158.20	150.79	95.3	30.6
	일가정양립	84.25	84.25	78.25	92.9	16.3
구지역	청년	20.00	22.40	22.40	100.0	1.2
	출산	1528.54	1460.54	1348.81	92.3	76.9
	돌봄	347.67	348.19	375.24	107.8	18.3
	일가정양립	74.19	69.00	54.65	79.2	3.6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2) 고령사회 대책 및 대응기반 강화 정책 예산분석

□ 고령사회 대책 및 대응기반 강화 정책의 영역별 자체사업의 전체 예산, 결산(집행액), 예산 집행률을 시지역, 군지역, 구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5-116〉 참조)

- 시지역과 군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공통적으로 고령사회 대책 4개 영역 모두에 예산을 투입하고 집행함

- 시지역, 군지역, 구지역 지방자치단체는 대응기반 강화 정책에 가장 낮은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음
- 시지역의 경우 전체 고령사회 정책내의 모든 영역과 대응기반 강화 정책에 예산이 투입되어 있고, 이 중 노후소득 보장 강화 영역에 전체 예산의 87.3%가 투입됨
 - 시지역 고령사회 대책 및 대응기반 강화 정책의 예산 집행률을 살펴보면,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 사업 73.9%,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 97.9%,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 98.1%,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 124.9%, 대응기반강화 정책 93.8%로 나타남
- 군지역의 경우 전체 고령사회 정책내의 모든 영역과 대응기반 강화 정책에 예산이 투입됨
 - 노후소득 보장 강화 영역(33.9%)과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32.4%)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전체적으로 모든 영역에 골고루 예산이 투입됨
 - 군지역 고령사회 대책 및 대응기반 강화 정책의 예산 집행률을 살펴보면,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 사업 95.1%,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 95.4%,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 97.8%,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 130.1%, 대응기반강화 정책 98.1%로 나타남
 - 구지역의 경우 전체 고령사회 정책내의 영역 중 노후소득 보장 강화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 예산이 투입됨
 -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73.4%)에 예산이 집중 투입됨
 - 군지역 고령사회 대책 및 대응기반 강화 정책의 예산 집행률은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 99.1%,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 99.7%,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 100.0%, 대응기반강화 정책 100.6%로 나타남

〈표 5-116〉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시지역	노후소득보장	10487.40	10487.45	7754.65	73.9	87.3
	노인여가안전	1307.28	1293.57	1265.81	97.9	10.8
	일자리확대	206.96	215.29	211.22	98.1	1.8
	고령친화	7.09	7.09	8.86	124.9	0.1
	대응기반	15.25	14.91	13.98	93.8	0.1
군지역	노후소득보장	205.79	217.32	206.63	95.1	33.9
	노인여가안전	205.39	207.74	198.19	95.4	32.4
	일자리확대	119.03	120.73	118.08	97.8	18.9
	고령친화	71.19	72.91	94.88	130.1	11.4
	대응기반	21.88	21.74	21.33	98.1	3.4
구지역	노인여가안전	231.87	679.45	673.60	99.1	73.4
	일자리확대	105.67	100.63	100.32	99.7	10.9
	고령친화	119.88	119.88	119.88	100.0	12.9
	대응기반	81.13	26.00	26.17	100.6	2.8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다. 지역유형별 자체사업

1) 저출산 대책

□ 저출산 정책 자체사업 예산의 규모와 관련하여 인구지표를 토대로 유형화한 12개의 지역유형에 따른 저출산 정책의 영역별 예산, 결산, 예산 대비 결산으로 산출되는 예산 집행률을 살펴보고자 함

□ 일반-인구유출

- “일반-인구유출”유형은 저출산 대책의 4가지 영역에 10%이상의 예산이 비교적 고르게 투입됨
- “일반-인구유출”유형 저출산 대책의 예산 집행률은 청년일자리·주거대책 강화 영역 97.6%,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98.2%, 맞

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98.4%, 일·가정양립사각지대 해소 영역 78.6%로 나타남

〈표 5-117〉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일반-인구유출)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청년	123.00	123.00	120.00	97.6	10.5
출산	323.20	322.52	316.77	98.2	27.6
돌봄	424.24	409.04	402.50	98.4	35.0
일가정양립	284.00	313.50	246.50	78.6	26.8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일반-평균

- “일반-평균”유형은 저출산 대책의 4가지 영역에 예산이 비교적 고르게 투입됨
 - 일·가정양립사각지대 해소 영역에는 다른 영역에 비해 전체 자체사업 예산 중 해당 사업의 투입된 예산 비율이 1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남
- “일반-평균”유형 저출산 대책의 예산 집행률은 청년일자리·주거대책강화 영역 96.6%,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97.7%,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96.5%, 일·가정양립사각지대 해소 영역 90.8%로 나타남

〈표 5-118〉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일반-평균)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청년	461.67	242.33	234.00	96.6	22.8
출산	407.89	348.55	340.40	97.7	32.8
돌봄	376.22	373.45	360.54	96.5	35.1
일가정양립	90.14	98.11	89.11	90.8	9.2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일반-인구유입

- “일반-인구유입”유형은 대체로 저출산 대책의 4가지 영역에 예산이 고르게 투입됨
 - 일·가정양립사각지대 해소 영역에는 다른 영역에 비해 전체 자체사업 예산 중 해당 사업의 투입된 예산 비율이 5.7%으로 낮게 나타남
- “일반-인구유입”유형 저출산 대책의 예산 집행률은 청년일자리·주거대책강화 영역 89.5%,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95.1%,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101.4%, 일·가정양립사각지대 해소 영역 93.3%로 나타남

〈표 5-119〉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일반-인구유입)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청년	843.44	822.90	736.70	89.5	31.0
출산	273.85	280.77	267.02	95.1	10.6
돌봄	1407.87	1401.57	1421.31	101.4	52.8
일가정양립	148.62	151.69	141.58	93.3	5.7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초저출산-인구유출

- “초저출산-인구유출”유형은 대체로 저출산 대책의 4가지 영역에 예산이 고르게 투입됨
 - 일·가정양립사각지대 해소 영역에는 다른 영역에 비해 전체 자체사업 예산 중 해당 사업의 투입된 예산 비율이 6.3%으로 낮게 나타남
- “초저출산-인구유출”유형 저출산 대책의 예산 집행률은 청년일자리·주거대책강화 영역 98.6%,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91.0%,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98.6%으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일·가정양립사각

지대 해소 영역 55.2%로 낮게 나타남

〈표 5-120〉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초저출산-인구유출)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청년	141.22	202.10	199.20	98.6	21.1
출산	227.68	226.47	206.15	91.0	23.6
돌봄	482.07	471.13	464.53	98.6	49.1
일가정양립	59.89	60.22	33.25	55.2	6.3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초저출산-평균

- “초저출산-평균”유형은 저출산 대책의 모든 영역 자체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였음
 - 일·가정양립사각지대 해소 영역에는 다른 영역에 비해 전체 자체사업 예산 중 해당 사업의 투입된 예산 비율이 6.6%으로 낮게 나타남
- “초저출산-평균”유형 저출산 대책의 예산 집행률은 청년일자리·주거대책강화 영역 92.7%,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92.9%,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104.7%, 일·가정양립사각지대 해소 영역 95.7%로 나타남

〈표 5-121〉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초저출산-평균)

(단위: 백만원)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청년	4177.33	3138.75	2910.25	92.7	43.1
출산	2867.33	2755.74	2559.69	92.9	37.8
돌봄	894.85	912.24	955.01	104.7	12.5
일가정양립	479.17	478.00	457.40	95.7	6.6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초저출산-인구유입

- “초저출산-인구유입”유형은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에 전체 저출산 자체사업 예산의 66.8%가 투입되었으며,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에 30.3%가 투입되었고, 일·가정양립사각지대 해소 영역에는 예산 투입률이 2.9%로 매우 낮게 나타남
- “초저출산-인구유입”유형 저출산 대책의 예산 집행률은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93.0%,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99.1%로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일·가정양립사각지대 해소 영역은 95.7%로 낮게 나타남

〈표 5-122〉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초저출산-인구유입)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출산	253.13	255.15	237.19	93.0	30.3
돌봄	651.94	562.92	557.74	99.1	66.8
일가정양립	24.50	24.50	18.50	75.5	2.9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초고령-인구유출

- “초고령-인구유출”유형은 청년일자리·주거대책강화 영역을 제외한 저출산 대책의 모든 영역에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에 전체 자체사업 예산의 50%가 투입되었음
- “초고령-인구유출”유형 저출산 대책의 예산 집행률은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89.6%,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87.2%, 일·가정양립사각지대 해소 영역 76.8%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5-123〉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초고령-인구유출)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출산	176.61	149.00	133.53	89.6	30.0
돌봄	252.00	248.33	216.67	87.2	50.0
일가정양립	99.00	99.00	76.00	76.8	19.9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초고령-평균

- “초고령-평균”유형은 저출산 대책의 모든 영역 자체사업에 비교적 골고루 예산을 투입하였음
- “초고령-평균”유형 저출산 대책의 예산 집행률은 청년일자리·주거대책강화 영역 92.6%,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92.2%,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개혁 영역 97.2%, 일·가정양립사각지대 해소 영역 93.0%로 나타남

〈표 5-124〉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초고령-평균)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청년	111.00	111.00	102.78	92.6	17.0
출산	219.51	220.97	203.75	92.2	33.8
돌봄	156.67	151.96	147.65	97.2	23.3
일가정양립	189.40	169.17	157.33	93.0	25.9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초고령-인구유입

- “초고령-인구유입”유형은 저출산 대책의 모든 영역 자체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대부분의 예산이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에 집중된 반면, 청년일자리·주거대책강화 영역과 일·가정양립사각지대 해소 영역에는

전체 저출산 자체사업 예산의 5.0% 미만이 투입됨

- “초고령-인구유입”유형 저출산 대책의 예산 집행률은 청년일자리·주거대책 강화 영역 98.9%,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93.9%로 양호한 반면,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72.8%)과 일·가정양립사각지대 해소 영역(77.7%)의 경우는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 5-125〉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초고령-인구유입)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청년	43.50	43.50	43.00	98.9	3.4
출산	154.78	169.58	123.43	72.8	13.4
돌봄	955.33	992.82	932.08	93.9	78.3
일가정양립	76.25	62.75	48.75	77.7	4.9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초저출산·초고령-인구유출

- “초저출산·초고령-인구유출”유형은 저출산 대책의 모든 영역 자체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청년일자리·주거대책강화 영역에는 예산의 0.2%만이 투입되었음
- “초저출산·초고령-인구유출”유형 저출산 대책의 예산 집행률은 청년일자리·주거대책강화 영역 100.0%,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99.7%,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100.6%로 양호한 반면, 일·가정양립사각지대 해소 영역(44.4%)의 경우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 5-126〉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초저출산 초고령-인구유출)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청년	1.00	1.00	1.00	100.0	0.2
출산	263.98	259.05	258.15	99.7	41.4
돌봄	280.04	276.42	278.20	100.6	44.2
일가정양립	99.00	89.00	39.50	44.4	14.2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초저출산·초고령-평균

- “초저출산·초고령-평균”유형은 일·가정양립사각지대 해소 영역을 제외한 모든 저출산 대책 영역에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과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에 전체 저출산 사업 예산의 85% 이상이 투입되었음
- “초저출산·초고령-평균”유형 저출산 대책의 예산 집행률은 청년일자리·주거대책강화 영역 100.0%,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97.6%,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93.6%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남

〈표 5-127〉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초저출산 초고령-평균)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청년	30.00	30.00	30.00	100.0	12.2
출산	96.65	93.69	91.42	97.6	38.1
돌봄	127.10	122.21	114.35	93.6	49.7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3) 일가정양립은 비예산으로만 구성되어 제외됨.

□ 초저출산·초고령-인구유입

- “초저출산·초고령-인구유입”유형은 청년일자리·주거대책강화 영역을 제외

한 모든 저출산 대책의 영역에 예산이 투입되었음

-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에 전체 저출산 자체사업 예산의 62.1%가 투입된 반면, 의 예산이 투입됨
- 비록 전체 저출산 대책 영역 중 2가지 영역에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다른 유형의 지역보다 비교적 예산이 고르게 투입되었음
- “초저출산·초고령-인구유입” 유형 저출산 대책의 예산 집행률은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개혁 영역 94.2%, 일·가정양립사각지대 해소 영역 100.0%로 양호한 반면,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76.3%)의 경우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 5-128〉 저출산정책 예산분석 (초저출산 초고령-인구유입)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출산	116.97	136.03	103.79	76.3	62.1
돌봄	75.84	78.93	74.33	94.2	36.0
일가정양립	4.00	4.00	4.00	100.0	1.8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2) 고령사회 대책 및 대응기반 강화 정책

□ 고령사회 대책 및 대응기반 강화 정책의 자체사업 예산의 규모와 관련하여 인구지표를 토대로 유형화한 12개의 지역유형에 따른 저출산 정책의 영역별 예산, 결산, 예산 대비 결산으로 산출되는 예산 집행률을 살펴보고자 함

□ 일반-인구유출

- “일반-인구유출” 유형은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을 제외한 모든 고령사회 대책 영역과 대응기반강화 정책에 예산이 투입되었음
- “일반-인구유출” 유형의 고령사회 정책 관련한 예산은 3개 영역에 비

교적 골고루 투입되었음

- 대응기반 강화 정책의 예산 투입률은 전체 고령사회 대책과 대응기반 강화 정책 예산의 9.7%로 비교적 낮게 나타남

○ “일반-인구유출”유형 고령사회 대책의 예산 집행률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 93.1%로 나타났고,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 100.7%,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 99.8%로 양호한 반면, 대응기반 강화 정책의 경우는 71.0%로 비교적 낮게 나타남

〈표 5-129〉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일반-인구유출)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노후소득보장	99.00	92.00	85.67	93.1	13.6
노인여가안전	299.88	304.16	306.18	100.7	44.9
일자리확대	214.75	215.00	214.50	99.8	31.8
대응기반	65.50	65.50	46.50	71.0	9.7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일반-평균

○ “일반-평균”유형은 고령사회 대책 모든 영역과 대응기반 강화 정책에 예산이 투입됨

- “일반-평균”유형의 고령사회 정책 관련한 예산은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0.6%)을 제외하고 비교적 골고루 투입됨
- 대응기반 강화 정책의 예산 투입률은 전체 고령사회 대책과 대응기반 강화 정책 예산의 1.5%로 비교적 낮게 나타남

○ “일반-평균”유형 고령사회 대책의 예산 집행률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 98.4%로 나타났고,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 99.8%,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 99.7%,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 133.8%인 것으로 나타남

- 대응기반 강화 정책의 예산 집행률은 99.3%로 나타남

〈표 5-130〉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일반-평균)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노후소득보장	580.00	580.00	570.63	98.4	49.2
노인여가안전	376.94	375.35	374.59	99.8	31.9
일자리확대	196.66	197.07	196.38	99.7	16.7
고령친화	7.29	7.29	9.75	133.8	0.6
대응기반	18.13	18.13	18.00	99.3	1.5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일반-인구유입

- “일반-인구유입”유형은 고령사회 대책 모든 영역과 대응기반 강화 정책에 예산이 투입됨
- “일반-인구유입”유형의 고령사회 정책 관련한 예산은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0.9%)을 제외하고 비교적 골고루 투입됨
 - 대응기반 강화 정책의 예산 투입률은 전체 고령사회 대책과 대응기반 강화 정책 예산의 0.9%로 매우 낮게 나타남
- “일반-인구유입”유형 고령사회 대책의 예산 집행률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 99.3%로 나타났고,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 99.2%,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 96.2%,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 115.9%인 것으로 나타남
 - 대응기반 강화 정책의 예산 집행률은 100.0%로 나타남

〈표 5-131〉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일반-인구유입)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노후소득보장	725.50	726.83	721.83	99.3	55.6
노인여가안전	413.06	416.92	413.66	99.2	31.9
일자리확대	121.00	140.39	135.11	96.2	10.7
고령친화	11.50	11.50	13.33	115.9	0.9
대응기반	11.96	12.09	12.09	100.0	0.9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초저출산-인구유출

- “초저출산-인구유출”유형은 고령사회 대책의 모든 영역과 대응기반 강화 정책에 예산이 투입됨
 - “초저출산-인구유출”유형의 고령사회 정책 관련한 예산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65.2%)에 집중 투입됨
 - 대응기반 강화 정책의 예산 투입률은 전체 고령사회 대책과 대응기반 강화 정책 예산의 1.6%로 낮게 나타남
- “초저출산-인구유출”유형 고령사회 대책의 예산 집행률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 97.7%로 나타났고,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 97.1%,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 98.8%,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 100.0%인 것으로 나타남
 - 대응기반 강화 정책의 예산 집행률은 102.2%로 나타남

〈표 5-132〉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초저출산-인구유출)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노후소득보장	1236.00	1250.00	1221.00	97.7	65.2
노인여가안전	438.52	432.63	420.01	97.1	22.6
일자리확대	109.28	103.63	102.37	98.8	5.4
고령친화	98.33	98.33	98.33	100.0	5.1
대응기반	114.85	31.27	31.95	102.2	1.6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초저출산-평균

- “초저출산-평균”유형은 고령사회 대책 모든 영역과 대응기반 강화 정책에 예산이 투입됨
 - “초저출산-평균”유형의 고령사회 정책 관련한 예산 투입비중은 주로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에 집중되어 전체 고령사회 대책 및 대응기반 강화 정책 자체사업 예산의 58.4%가 투입됨
 - 대응기반 강화 정책의 예산 투입률은 전체 고령사회 대책과 대응기반 강화 정책 예산의 0.9%로 매우 낮게 나타남
- “초저출산-평균”유형 고령사회 대책의 예산 집행률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 92.1%로 나타났고,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 100.1%,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 98.4%,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에 137.0%로 나타남
 - 대응기반 강화 정책의 예산 집행률은 98.8%로 나타남

〈표 5-133〉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초저출산-평균)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노후소득보장	383.00	383.00	352.67	92.1	20.4
노인여가안전	499.25	1095.48	1097.12	100.1	58.4
일자리확대	327.44	320.24	315.27	98.4	17.1
고령친화	60.29	60.29	82.60	137.0	3.2
대응기반	17.80	16.80	16.60	98.8	0.9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초저출산-인구유입

- “초저출산-인구유입”유형은 고령사회 대책 모든 영역과 대응기반 강화 정책에 예산이 투입됨
- “초저출산-인구유입”유형의 고령사회 정책 및 대응기반 강화 정책 관련 한 예산은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에 집중되어 전체 고령사회 대책 예산의 대부분이(96.7%) 투입됨
 - 대응기반 강화 정책의 예산 투입률은 전체 고령사회 대책과 대응기반 강화 정책 예산의 0.2%로 매우 낮게 나타남
- “초저출산-평균”유형 고령사회 대책의 예산 집행률은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 96.2%,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 99.9%로 양호한 반면,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의 경우는 74.3%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의 경우는 0.0%로 나타남
 - 대응기반 강화 정책의 예산 집행률은 78.0%로 비교적 낮게 나타남

〈표 5-134〉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초저출산-인구유입)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노후소득보장	156.50	156.50	116.31	74.3	1.6
노인여가안전	9387.49	9384.16	9029.84	96.2	96.7
일자리확대	145.86	146.29	146.14	99.9	1.5
고령친화	2.00	2.00	0.0	0.0	0.0
대응기반	18.00	14.75	11.50	78.0	0.2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초고령-인구유출

○ “초고령-인구유출”유형의 고령사회 정책 관련한 예산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 100.1%,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에 투입되었고 특히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에 비교적 많은 예산이 투입된 반면,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에는 8.7%의 비교적 낮은 수준의 예산이 투입됨

- 대응기반 강화 정책에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음

○ “초고령-인구유출”유형 고령사회 대책의 예산 집행률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 92.7%,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 95.2%로 비교적 양호하나,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 84.6%로 비교적 낮게 나타남

〈표 5-135〉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초고령-인구유출)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노후소득보장	332.00	510.00	473.00	92.7	55.3
노인여가안전	72.49	79.96	67.67	84.6	8.7
일자리확대	300.00	333.00	317.00	95.2	36.1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초고령-평균

○ “초고령-평균”유형은 고령사회 대책 모든 영역과 대응기반 강화 정책에 예산이 투입됨

- “초고령-평균”유형의 고령사회 정책 관련한 예산 투입비중은 비교적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에 집중되어 투입됨(56.5%) 반면,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에는 비교적 낮은 수준(3.2%)으로 예산이 투입됨
- 대응기반 강화 정책의 예산 투입률은 전체 고령사회 대책과 대응기반 강화 정책 예산의 4.0%로 비교적 낮게 나타남

○ “초고령-평균”유형 고령사회 대책의 예산 집행률은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 96.2%,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 99.7%,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 131.4%로 양호한 반면,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 69.9%로 비교적 저조함

〈표 5-136〉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초고령-평균)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노후소득보장	37.67	37.67	26.33	69.9	7.6
노인여가안전	274.37	282.07	271.31	96.2	56.5
일자리확대	127.34	143.12	142.65	99.7	28.7
고령친화	16.17	16.17	21.25	131.4	3.2
대응기반	19.71	19.86	19.74	99.4	4.0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초고령-인구유입

○ “초고령-인구유입”유형은 고령사회 대책 모든 영역과 대응기반 강화 정책에 예산이 투입됨

- “초고령-인구유입”유형의 고령사회 정책 예산은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을 제외하고 비교적 골고루 투입됨

- 대응기반 강화 정책의 예산 투입률은 전체 고령사회 대책과 대응기반 강화 정책 예산의 0.2%로 매우 낮게 나타남
- “초고령-인구유입”유형 고령사회 대책의 예산 집행률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 99.3%,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 90.6%,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 96.1%으로 양호하나,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의 경우 76.6%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집행됨
- 대응기반 강화 정책의 예산 집행률은 88.9%로 나타남

〈표 5-137〉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초고령-인구유입)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노후소득보장	577.00	577.00	573.00	99.3	38.6
노인여가안전	153.06	172.73	156.51	90.6	11.6
일자리확대	89.00	89.00	68.17	76.6	6.0
고령친화	562.33	653.33	627.67	96.1	43.7
대응기반	3.00	3.00	2.67	88.9	0.2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초저출산·초고령-인구유출

- “초저출산·초고령-인구유출”유형은 고령사회 대책 영역 중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과 대응기반 강화 정책에 예산이 투입됨
- “초저출산·초고령-인구유출”유형의 고령사회 정책 관련한 예산 투입 비중은 주로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에 집중되어 전체 고령사회 대책 및 대응기반 강화 정책 예산의 63.4%가 투입된 반면,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에는 2.6%의 예산이 투입되었음
- 대응기반 강화 정책의 예산 투입률은 전체 고령사회 대책과 대응기반 강화 정책 예산의 2.2%로 비교적 낮게 나타남
- “초저출산·초고령”유형 고령사회 대책의 예산 집행률은 노후소득보장 강

화 영역 99.5%로 나타났고,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 94.7%,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 98.4%로 나타남

〈표 5-138〉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초저출산초고령-인구유출)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노인여가안전	187.86	184.38	161.96	87.8	63.4
일자리확대	7.50	7.50	7.50	100.0	2.6
고령친화	92.33	92.33	92.33	100.0	31.8
대응기반	6.50	6.50	5.60	86.2	2.2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초저출산·초고령-평균

- “초저출산·초고령-평균”유형은 고령사회 대책 모든 영역과 대응기반 강화 정책에 예산이 투입됨
 - “초저출산·초고령-평균”유형의 고령사회 정책 관련한 예산은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4.3%)을 제외하고 비교적 골고루 투입됨
 - 대응기반 강화 정책의 예산 투입률은 전체 고령사회 대책과 대응기반 강화 정책 예산의 6.2%로 비교적 낮게 나타남
- “초저출산·초고령-평균”유형 고령사회 대책의 예산 집행률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 95.0%로 나타났고,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 100.8%,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 95.7%,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 99.0%로 나타남
 - 대응기반 강화 정책의 예산 집행률은 89.8%로 나타남

〈표 5-139〉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초저출산초고령-평균)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노후소득보장	192.25	191.25	181.63	95.0	40.5
노인여가안전	93.57	92.61	93.40	100.8	19.6
일자리확대	140.37	138.86	132.95	95.7	29.4
고령친화	21.13	20.08	19.89	99.0	4.3
대응기반	29.33	29.33	26.33	89.8	6.2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 초저출산·초고령-인구유입

○ “초저출산·초고령-인구유입”유형은 고령사회 대책 모든 영역과 대응기반 강화 정책에 예산이 투입됨

- “초저출산·초고령-인구유입”유형의 고령사회 정책 관련한 예산은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을 제외하고 비교적 고르게 투입됨
- 대응기반 강화 정책의 예산 투입률은 전체 고령사회 대책과 대응기반 강화 정책 예산의 2.3%로 비교적 낮게 나타남

○ “초저출산·초고령-인구유입”유형 고령사회 대책의 예산 집행률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 96.5%로 나타났고,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실현 영역 99.9%,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 활용 확대 영역 99.2%,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 124.6%로 나타남

- 대응기반 강화 정책의 예산 집행률은 94.4%로 나타남

〈표 5-140〉 고령사회 대응기반 정책 예산분석 (초저출산초고령-인구유입)

(단위: 백만원)

구분	시행계획 예산	최종 예산	결산	예산 집행률	예산투입 비중 ¹⁾
노후소득보장	436.00	452.33	436.67	96.5	47.8
노인여가안전	307.37	303.57	303.23	99.9	32.1
일자리확대	130.50	131.50	130.50	99.2	13.9
고령친화	38.00	38.00	47.33	124.6	4.0
대응기반	26.25	21.40	20.20	94.4	2.3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2) 저출산정책의 영역별(청년, 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차지하는 예산비중으로 저출산정책이 100% 일때의 비율을 의미함.

3. 자체사업 급여(서비스)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분야 개별 자체사업의 급여(서비스)의 기준을 시도별, 시군구별, 인구지표에 따른 지역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함

□ 개별 자체사업의 급여(서비스) 기준에 대한 구성은 다음과 같이 파악됨

- 개별 자체사업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성별, 연령, 소득, 자녀수, 기타, 기준이 없는 보편 사업의 경우는 '없음'으로 분류하여 파악함
- 사업의 급여 기준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 모두 표시하여 중복 응답으로 처리함

가. 시도별 자체사업

1) 저출산

□ 17개 시도에 따른 저출산 분야 사업의 급여(서비스) 기준별 자체사업 수를 살펴보고자 함

〈표 5-141〉 시도별 저출산 사업별 급여(서비스) 기준

(단위: 개)

구분	성별	연령	소득	자녀수	기타	없음	계
서울	0	26	0	22	77	3	126
부산	13	97	39	93	198	106	518
대구	2	0	0	1	4	1	8
인천	4	4	2	10	29	19	63
광주	3	4	3	11	18	14	50
대전	0	6	0	3	24	7	40
울산	12	9	5	12	22	50	110
세종	1	9	7	1	8	21	47
경기	8	48	13	57	140	105	349
강원	5	35	61	67	153	16	297
충북	7	74	2	17	81	106	286
충남	12	48	7	24	91	83	246
전북	2	7	71	93	110	29	268
전남	1	17	7	34	69	37	164
경북	6	29	54	149	90	84	342
경남	23	60	32	56	168	44	332
제주	2	14	1	11	23	3	51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 공통적으로 저출산 대책 자체사업이 성별, 연령, 소득, 자녀수 등 다양한 기준으로 대상자가 선정되고 있으며, 많은 사업이 기타 다양한 기준과 급여(서비스) 기준이 없는 보편 사업으로 파악됨

○ 서울특별시의 경우 저출산 대책 자체사업의 급여 기준으로 연령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녀수의 기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부산광역시의 경우 저출산 대책 자체사업은 기준이 없는 보편 사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녀수의 기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대구광역시의 경우 저출산 대책 자체사업은 성별, 자녀수, 기타의 기준으로 대상자가 선정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자녀수의 기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인천광역시의 경우 저출산 대책 자체사업은 비교적 기준이 없는 보편 사

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녀수의 기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광주광역시의 경우 저출산 대책 자체사업은 비교적 기준이 없는 보편 사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녀수의 기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대전광역시의 경우 저출산 대책 자체사업은 연령, 자녀수, 기타의 기준으로 대상자가 선정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기준이 없는 보편 사업과 연령의 기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울산광역시의 경우 저출산 대책 자체사업은 기준이 없는 보편 사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녀수의 기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저출산 대책 자체사업은 기준이 없는 사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연령, 소득순으로 급여 기준이 많이 나타남
- 경기도의 경우 저출산 대책 자체사업의 급여 기준을 살펴보면, 기준이 없는 보편 사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녀수, 연령순으로 많이 나타남
- 강원도의 경우 저출산 대책 자체사업의 급여 기준은 자녀수, 소득, 연령순으로 많이 나타남
- 충청북도의 경우 저출산 대책 자체사업은 기준이 없는 보편 사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연령 기준의 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충청남도의 경우 저출산 대책 자체사업은 기준이 없는 보편 사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연령 기준의 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의 경우 저출산 대책 자체사업은 기타의 기준이 많고, 자녀수, 소득 기준의 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라남도의 경우 저출산 대책 자체사업은 기타의 기준 다음으로 기준이 없는 보편 사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녀수 기준의 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경상북도의 경우 저출산 대책 자체사업은 급여 기준이 자녀수인 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경상남도의 경우 저출산 대책 자체사업은 급여 기준이 기타의 기준인 경

우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연령, 자녀수의 기준 순으로 많이 나타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저출산 대책 자체사업은 기타의 기준 다음으로 연령 기준의 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2) 고령사회 및 대응기반 강화

□ 17개 시도에 따른 고령사회 분야 사업의 급여(서비스) 기준별 자체사업 수를 살펴보고자 함

〈표 5-142〉 시도별 고령사회 사업별 급여(서비스) 유형

(단위: 개)

구분	현금	현물	바우처	서비스	기타	계
서울	-	-	-	-	-	-
부산	86	6	1	55	38	186
대구	6	0	0	5	0	11
인천	3	2	1	2	2	10
광주	51	15	0	18	4	85
대전	3	1	0	12	6	20
울산	15	5	0	18	12	50
세종	15	4	0	6	0	25
경기	191	86	2	195	149	588
강원	141	73	0	36	51	253
충북	68	17	0	38	22	145
충남	155	12	1	52	23	243
전북	38	12	0	80	33	163
전남	27	40	1	52	103	220
경북	60	84	0	122	22	285
경남	110	28	0	108	31	268
제주	12	2	0	3	5	21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 17개 시도에서 소득기준으로 급여(서비스) 대상자가 선정되는 고령사회 정책 자체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반면, 성별, 연령, 소득, 자녀수 등 다양한 기준으로 대상자가 선정되는 지방자치단체는 5개에 불과함

- 성별, 연령, 소득, 자녀수 등 다양한 기준으로 대상자가 선정되는 지자체는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임

□ 17개 시도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부산광역시의 경우 고령사회 분야 자체사업은 표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의 기준인 사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녀수의 기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대구광역시의 경우 고령사회 분야 자체사업은 기타의 기준으로 대상자가 선정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음
- 인천광역시의 경우 고령사회 분야 자체사업은 기타의 기준으로 대상자가 선정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고, 기준이 없는 보편 사업, 연령과 소득 기준의 사업이 있음
- 광주광역시의 경우 고령사회 분야 자체사업은 기타의 기준으로 대상자가 선정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연령의 기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대전광역시의 경우 고령사회 분야 자체사업은 연령의 기준으로 대상자가 선정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울산광역시의 경우 고령사회 분야 자체사업은 연령 기준의 사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소득 기준의 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고령사회 분야 자체사업은 연령 기준의 사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의 경우 고령사회 분야 자체사업의 급여 기준으로 연령이 가장 많음
- 강원도의 경우 고령사회 분야 자체사업의 기타의 기준으로 대상자가 선정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연령이 급여 기준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충청북도의 경우 고령사회 분야 자체사업으로 연령 기준의 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충청남도의 경우 고령사회 분야 자체사업은 기준이 없는 보편 사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연령 기준의 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의 경우 고령사회 분야 자체사업은 기타의 기준으로 대상자가 선정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준이 없는 보편 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라남도의 경우 고령사회 분야 자체사업은 연령 기준으로 대상자가 선정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소득 기준의 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경상북도의 경우 고령사회 분야 자체사업은 기타의 기준으로 대상자가 선정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급여 기준이 연령인 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경상남도의 경우 고령사회 분야 자체사업은 급여 기준이 연령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고령사회 분야 자체사업은 기타의 기준으로 대상자가 선정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연령 기준의 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17개 시도에 따른 대응기반 강화 분야 자체사업의 급여(서비스) 기준별 자체사업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저출산 및 고령사회 분야와 비교했을 때 성별, 연령, 소득, 자녀수와 같은 기준보다는 기준이 없는 보편적인 기반 사업과 기타로 분류되는 사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 성별이 급여(서비스) 기준인 자체사업이 있는 시도는 대전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로 나타남
 - 연령이 급여(서비스) 기준인 자체사업이 있는 시도는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로 나타남

○ 소득이 급여(서비스) 기준인 자체사업이 있는 시도는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로 나타남

○ 자녀수가 급여(서비스) 기준인 자체사업이 있는 시도는 부산광역시임

〈표 5-143〉 시도별 대응기반 사업별 급여(서비스) 기준

(단위: 개)

구분	성별	연령	소득	자녀수	기타	없음	계
서울	0	0	0	0	25	0	25
부산	0	5	3	1	2	7	17
대구	0	0	0	0	0	1	1
인천	0	0	0	0	0	8	8
광주	0	0	1	0	2	0	2
대전	1	2	0	0	3	2	8
울산	0	0	0	0	0	1	1
세종	0	0	0	0	0	1	1
경기	0	0	0	0	4	10	14
강원	1	0	0	0	2	0	3
충북	0	2	0	0	3	7	12
충남	0	2	0	0	4	16	22
전북	0	0	0	0	0	0	0
전남	0	0	0	0	1	2	3
경북	4	5	0	0	10	37	51
경남	0	1	0	0	2	2	4
제주	0	0	0	0	2	3	5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나. 시지역 · 군지역 · 구지역별 자체사업

1) 저출산

□ 저출산 분야 개별 사업의 급여(서비스) 기준별 자체사업 수를 시지역, 군지역, 구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5-144〉 참조)

〈표 5-144〉 시지역·군지역·구지역별 저출산 사업별 급여(서비스) 기준

(단위: 개)

구분	성별	연령	소득	자녀수	기타	없음	계
시지역	44	180	127	263	495	267	1232
군지역	25	169	132	253	460	290	1221
구지역	32	138	45	145	350	171	844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 개별 사업의 급여(서비스) 기준은 시군구에 따른 차이 없이 저출산 분야 사업으로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짐

- 공통적으로 저출산 대책 자체사업이 성별, 연령, 소득, 자녀수 등 다양한 기준으로 대상자가 선정되고 있음
- 시군구지역에 상관없이 많은 사업이 기타 다양한 기준을 급여(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가지고 있고, 다음으로 급여(서비스) 기준이 없는 보편 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저출산 분야 사업인 만큼 성별, 연령, 소득, 자녀수의 기준 중에서는 자녀수의 기준이 자체사업의 급여 기준으로 가장 많음

2) 고령사회 및 대응기반 강화

□ 고령사회 분야 개별 사업의 급여(서비스) 기준별 자체사업 수를 시지역, 군지역, 구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5-145〉 참조)

〈표 5-145〉 시지역·군지역·구지역별 고령사회 사업별 급여(서비스) 기준

(단위: 개)

구분	성별	연령	소득	자녀수	기타	없음	계
시지역	49	509	222	7	326	245	1240
군지역	47	405	193	1	291	261	1051
구지역	11	115	45	0	116	104	340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 고령사회 분야 개별 자체사업의 급여(서비스) 기준에 있어서 시지역과 군지역이 구지역과 다른 비슷한 특징을 가짐

- 시지역과 군지역은 공통적으로 고령사회 분야 자체사업이 성별, 연령, 소득, 자녀수 등 다양한 기준으로 대상자가 선정되고 있음
- 시지역과 군지역은 공통적으로 연령이 급여(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인 사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타의 기준을 가진 사업, 급여(서비스) 기준이 없는 보편 사업 순으로 많이 나타남
- 구지역은 기타의 기준을 가진 사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연령이 자체사업의 급여 기준으로 가장 많음

□ 대응기반 강화 분야 개별 사업의 급여(서비스) 기준별 자체사업 수를 시지역, 군지역, 구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5-146〉 참조)

〈표 5-146〉 시지역·군지역·구지역별 대응기반 사업별 급여(서비스) 기준

(단위: 개)

구분	성별	연령	소득	자녀수	기타	없음	계
시지역	1	3	0	0	19	40	62
군지역	4	7	0	0	9	38	53
구지역	1	7	4	1	32	19	62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 개별 사업의 급여(서비스) 기준에 있어서 시지역과 군지역은 구지역과 달리 비슷한 특징이 있음

- 시지역과 군지역은 소득기준과 자녀수기준의 사업은 없고 성별, 연령, 기타의 기준과 기준이 없는 사업이 있음
- 시지역과 군지역과 달리, 구지역의 자체사업의 경우 성별, 연령, 소득, 자녀수 등 다양한 기준으로 대상자가 선정되고 있음
- 시지역과 군지역에는 급여(서비스) 기준이 없는 보편 사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타 다양한 기준을 급여(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가지고 있음

- 구지역에는 기타 다양한 기준을 급여(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가진 사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급여(서비스) 기준이 없는 보편 사업이 많음
- 성별, 연령, 소득, 자녀수의 기준 중에서는 연령의 기준이 자체사업의 급여 기준으로 가장 많음

다. 지역유형별 자체사업

1) 저출산

□ 저출산 분야 개별 사업의 급여(서비스) 기준별 자체사업 수를 12개의 인구조표에 따른 지역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5-147〉 참조)

〈표 5-147〉 지역유형별 저출산 사업별 급여(서비스) 기준

(단위: 개)

구분	성별	연령	소득	자녀수	기타	없음	계
일반-인구유출	9	14	10	13	33	21	83
일반-평균	15	37	42	79	126	89	355
일반-인구유입	20	88	37	96	197	123	520
초저출산-인구유출	11	72	19	84	209	85	458
초저출산-평균	20	80	35	75	191	83	447
초저출산-인구유입	3	17	8	15	36	24	94
초고령-인구유출	0	5	1	11	11	14	42
초고령-평균	11	82	95	193	262	125	676
초고령-인구유입	3	23	16	17	50	42	143
초저고-인구유출	0	24	12	25	54	33	140
초저고-평균	8	31	25	39	94	59	237
초저고-인구유입	1	14	4	14	42	30	102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 개별 사업의 급여(서비스) 기준은 12개의 지역유형에 관계없이 대체로 저출산 분야 사업으로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짐

- ‘초고령-인구유출’지역과 ‘초저출산·초고령-인구유출’지역을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저출산 분야 자체사업이 성별, 연령, 소득, 자녀수 등 다양한 기준으로 대상자가 선정되고 있음
- ‘초고령-인구유출’지역과 ‘초저출산·초고령-인구유출’지역 저출산 분야 자체사업은 성별기준으로 급여(서비스) 대상자는 선정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초고령-인구유출’지역과 ‘초고령-평균’지역을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기타 다양한 기준을 급여(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급여(서비스) 기준이 없는 보편 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초고령-인구유출’지역의 경우는 급여(서비스) 기준이 없는 보편 사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타 기준의 자체 사업이 많음
- ‘초고령-평균’지역 저출산 분야 자체사업은 기타 기준의 사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녀수를 기준으로 급여(서비스) 대상자는 선정하는 사업이 많음

2) 고령사회 및 대응기반 강화

□ 고령사회 분야 개별 사업의 급여(서비스) 기준별 자체사업 수를 12개의 인구지표에 따른 지역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5-148〉 참조)

〈표 5-148〉 지역유형별 고령사회 사업별 급여(서비스) 기준

(단위: 개)

구분	성별	연령	소득	자녀수	기타	없음	계
일반-인구유출	2	31	18	1	16	15	77
일반-평균	16	137	69	1	96	52	325
일반-인구유입	15	197	68	1	107	104	443
초저출산-인구유출	4	89	41	1	59	63	237
초저출산-평균	10	109	48	1	97	57	281
초저출산-인구유입	6	46	22	0	38	10	116
초고령-인구유출	0	13	12	0	4	22	51
초고령-평균	39	211	109	3	202	135	609
초고령-인구유입	2	58	18	0	13	37	118
초저고-인구유출	3	18	8	0	28	24	70
초저고-평균	7	81	32	0	54	77	223
초저고-인구유입	3	39	15	0	19	14	81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 개별 사업의 급여(서비스) 기준은 12개의 지역유형에 관계없이 대체로 고령사회 분야 사업으로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짐

- '초고령-인구유출' 지역과 '초저출산·초고령-인구유출' 지역을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고령사회 분야 자체사업의 급여(서비스) 기준으로 연령이 가장 많음
 - '초고령-인구유출' 지역은 급여(서비스) 기준이 없는 보편 사업이 많고 다음으로 연령 기준의 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초저출산·초고령-인구유출' 지역 고령사회 분야 자체사업은 기타의 기준으로 급여(서비스) 대상자는 선정하는 사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급여(서비스) 기준이 없는 보편 사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대응기반 강화 분야 개별 사업의 급여(서비스) 기준별 자체사업 수를 12개의 인구지표에 따른 지역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5-149〉 참조)

〈표 5-149〉 지역유형별 대응기반 사업별 급여(서비스) 기준

(단위: 개)

구분	성별	연령	소득	자녀수	기타	없음	계
일반-인구유출	0	0	0	0	0	2	2
일반-평균	0	1	0	0	2	8	11
일반-인구유입	1	2	2	0	9	17	29
초저출산-인구유출	0	5	1	1	24	11	42
초저출산-평균	0	2	0	0	8	10	19
초저출산-인구유입	1	0	0	0	0	2	3
초고령-인구유출	0	0	0	0	0	1	1
초고령-평균	4	7	0	0	13	28	47
초고령-인구유입	0	0	0	0	0	5	5
초저고-인구유출	0	0	1	0	1	6	8
초저고-평균	0	0	0	0	2	4	6
초저고-인구유입	0	0	0	0	1	3	4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 개별 사업의 급여(서비스) 기준은 12개의 지역유형에 관계없이 대체로 대응기반 강화 분야 사업으로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짐

- 저출산 및 고령사회 분야와 비교했을 때 성별, 연령, 소득, 자녀수와 같은 기준보다는 기준이 없는 보편적인 기반 사업과 기타로 분류되는 사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 성별이 급여(서비스) 기준인 자체사업이 있는 지역유형은 '일반-인구유입', '초저출산-인구유입', '초고령-평균' 지역으로 나타남
- 연령이 급여(서비스) 기준인 자체사업이 있는 지역유형은 '일반-평균', '일반-인구유입', '초저출산-인구유출', '초저출산-평균', '초고령-평균' 지역으로 나타남
- 소득이 급여(서비스) 기준인 자체사업이 있는 지역유형은 '일반-인구유입', '초저출산-인구유출', '초저출산·초고령-인구유출' 지역으로 나타남
- 자녀수가 급여(서비스) 기준인 자체사업이 있는 지역유형은 '초저출산-인구유출' 지역임

4. 자체사업 급여(서비스) 유형

□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분야 개별 자체사업의 급여(서비스) 유형을 시도별, 시군구별, 인구지표에 따른 지역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함

□ 개별 자체사업의 급여(서비스) 기준에 대한 구성을 다음과 같이 파악함

- 개별 자체사업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성별, 연령, 소득, 자녀수, 기타, 기준이 없는 보편 사업의 경우는 '없음'으로 분류하여 파악함
- 개별 사업의 급여 기준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 모두 표시하여 중복 응답으로 처리함

가. 자체사업 시도별

1) 저출산

□ 17개 시도에 따른 저출산 분야 사업의 급여(서비스) 유형별 자체사업 수를 살펴보고자 함(〈표 5-150〉 참조)

〈표 5-150〉 시도별 저출산 사업별 급여(서비스) 유형

(단위: 개)

구분	현금	현물	바우처	서비스	기타	계
서울	98	0	0	28	0	126
부산	251	41	86	90	62	513
대구	1	1	0	6	0	8
인천	37	2	3	16	4	62
광주	13	6	1	24	7	49
대전	9	5	1	15	8	38
울산	40	6	6	32	28	111
세종	10	6	1	21	8	44
경기	167	51	10	88	43	345
강원	161	83	2	48	8	295

충북	191	9	3	61	17	281
충남	81	28	4	106	33	243
전북	164	50	3	13	39	267
전남	60	35	6	45	18	164
경북	157	67	16	84	30	344
경남	226	34	22	39	17	333
제주	40	0	0	6	6	51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 공통적으로 저출산 대책 자체사업은 대체로 현금과 서비스의 형태로 이루어짐

-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시도는 공통적으로 현금, 현물, 바우처, 서비스, 기타 등 다양한 유형의 급여(서비스)를 가지고 있음
 -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현금과 서비스의 두 가지 유형의 사업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강원도와 전라북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는 현금을 제공하는 사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많음
 - 강원도와 전라북도는 현금을 제공하는 자체사업이 가장 많음

2) 고령사회 및 대응기반 강화

□ 17개 시도에 따른 고령사회 분야 사업의 급여(서비스) 유형별 자체사업 수를 살펴보고자 함(〈표 5-151〉 참조)

〈표 5-151〉 시도별 고령사회 사업별 급여(서비스) 유형

(단위: 개)

구분	현금	현물	바우처	서비스	기타	계
부산	86	6	1	55	38	186
대구	6	0	0	5	0	11
인천	3	2	1	2	2	10
광주	51	15	0	18	4	85
대전	3	1	0	12	6	20
울산	15	5	0	18	12	50
세종	15	4	0	6	0	25
경기	191	86	2	195	149	588
강원	141	73	0	36	51	253
충북	68	17	0	38	22	145
충남	155	12	1	52	23	243
전북	38	12	0	80	33	163
전남	27	40	1	52	103	220
경북	60	84	0	122	22	285
경남	110	28	0	108	31	268
제주	12	2	0	3	5	21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 공통적으로 고령사회 분야 시도의 자체사업은 대체로 현금, 현물, 서비스의 형태로 이루어짐

-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를 제외한 시도는 공통적으로 현금, 현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가지고 있음
 - 대구광역시의 경우는 현금과 서비스의 두 가지 유형의 사업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바우처를 제공하는 자체사업이 있는 시도는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남도임
- 대부분의 시도는 현금을 제공하는 사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많음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

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가 해당됨

-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현금을 제공하는 사업이 많은 시도는 다음과 같음

-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 17개 시도에 따른 대응기반 강화 분야 사업의 급여(서비스) 유형별 자체사업 수를 살펴보고자 함(〈표 5-152〉 참조)

□ 대체로 대응기반 강화 분야 시도 자체사업의 서비스(급여) 유형은 서비스나 기타의 형태로 이루어짐

-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없는 시도는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임

- 기타유형을 제공하는 사업이 없는 시도는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임

- 현금을 제공하는 자체사업이 있는 시도는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임

- 현물을 제공하는 자체사업이 있는 시도는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상북도임

- 바우처를 제공하는 자체사업이 있는 시도는 부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임

- 대응기반 강화 분야 자체사업에서 한 가지 유형의 급여만을 제공하고 있는 시도는 다음과 같음

-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 경상북도의 대응기반 강화 분야 자체사업은 현금, 현물, 바우처, 서비스, 기타 등 모든 유형의 급여를 제공함

〈표 5-152〉 시도별 대응기반 사업별 급여(서비스) 유형

(단위: 개)

구분	현금	현물	바우처	서비스	기타	계
서울	0	0	0	0	25	25
부산	0	6	1	3	7	17
대구	-	-	-	-	-	-
인천	0	2	0	1	5	8
광주	0	0	0	2	0	2
대전	0	0	0	3	5	8
울산	0	0	0	0	1	1
세종	1	0	0	0	0	1
경기	1	0	0	6	7	14
강원	1	0	1	1	0	3
충북	3	0	0	4	5	12
충남	2	0	0	3	17	22
전북	-	-	-	-	-	-
전남	0	0	0	0	3	3
경북	2	3	1	33	15	52
경남	0	0	0	2	2	4
제주	0	0	0	1	4	5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나. 시지역 · 군지역 · 구지역별 자체사업

1) 저출산

□ 저출산 분야 개별 사업의 급여(서비스) 유형별 자체사업 수를 시지역, 군지역, 구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5-153〉 참조)

〈표 5-153〉 시지역·군지역·구지역별 저출산 사업별 (서비스) 유형

(단위: 개)

구분	현금	현물	바우처	서비스	기타	계
시지역	634	184	32	278	130	1223
군지역	652	182	43	254	97	1212
구지역	420	58	89	190	101	839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 개별 사업의 (서비스) 유형은 시군구 지역에 따른 차이 없이 저출산 분야 사업으로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짐

- 공통적으로 저출산 대책 자체사업은 현금, 현물, 바우처, 서비스, 기타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되고 있음
- 시군구지역에 상관없이 현금을 제공하는 사업이 가장 많음
- 시지역과 군지역은 공통적으로 현금, 서비스, 현물의 순서로 제공되는 사업의 수가 많음
- 구지역은 현물로 제공되는 사업보다 서비스와 기타유형으로 제공되는 사업이 더 많아 시지역 및 군지역과 차이를 보임

2) 고령사회 및 대응기반 강화

□ 고령사회 분야 개별 사업의 급여(서비스) 유형별 자체사업 수를 시지역, 군지역, 구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5-154〉 참조)

〈표 5-154〉 시지역·군지역·구지역별 고령사회 사업별 (서비스) 유형

(단위: 개)

구분	현금	현물	바우처	서비스	기타	계
시지역	460	184	3	382	247	1222
군지역	369	176	1	318	195	1014
구지역	152	27	2	102	59	337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 고령사회 분야 개별 자체사업의 급여(서비스) 유형에 있어서 시군구지역에 따른 차이 없이 공통된 특징을 가짐

- 공통적으로 고령사회 분야 자체사업은 현금, 현물, 바우처, 서비스, 기타 등 다양한 유형으로 이루어짐
- 공통적으로 연령이 현금 유형의 자체사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비스, 기타, 현물의 순서로 많음

□ 대응기반 강화 분야 개별 사업의 (서비스) 유형별 자체사업 수를 시지역, 군지역, 구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5-155〉 참조)

〈표 5-155〉 시지역·군지역·구지역별 대응기반 사업별 (서비스) 유형

(단위: 개)

구분	현금	현물	바우처	서비스	기타	계
시지역	5	1	0	26	31	63
군지역	5	2	2	24	22	53
구지역	0	8	1	9	43	61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 대응기반 강화 분야 개별 사업의 급여(서비스) 유형에 있어서 기타 유형의 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비스 사업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 시지역, 군지역, 구지역에 따라 구별되는 특징을 보임

- 시지역은 바우처를 제공하는 자체사업이 없어 군지역 및 구지역과 차이를 보임
- 군지역의 대응기반 강화 분야 자체사업은 현금, 현물, 바우처, 서비스, 기타 등 다양한 유형으로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음
- 구지역은 현금을 제공하는 자체사업이 없어 시지역 및 군지역과 차이를 보임

다. 지역유형별 자체사업

1) 저출산

□ 저출산 분야 개별 사업의 급여(서비스) 유형별 자체사업 수를 12개의 인구지표에 따른 지역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5-156〉 참조)

〈표 5-156〉 지역유형별 저출산 사업별 (서비스) 유형

(단위: 개)

구분	현금	현물	바우처	서비스	기타	계
일반-인구유출	46	13	2	14	10	83
일반-평균	192	56	12	63	32	352
일반-인구유입	274	56	20	128	48	513
초저출산-인구유출	224	23	32	124	58	452
초저출산-평균	231	56	34	95	49	447
초저출산-인구유입	52	14	2	15	12	95
초고령-인구유출	19	13	0	8	2	42
초고령-평균	340	115	20	146	71	677
초고령-인구유입	61	21	5	37	20	140
초저고-인구유출	73	15	20	25	9	138
초저고-평균	137	35	11	44	8	234
초저고-인구유입	57	7	6	23	9	101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 개별 사업의 급여(서비스) 유형은 12개의 지역유형에 관계없이 대체로 저출산 분야 사업으로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짐

- 공통적으로 저출산 분야 자체사업은 현금을 제공하는 사업이 가장 많고, 인구유출 지역('초저출산-인구유출', '초고령-인구유출', '초저출산·초고령-인구유출')을 제외하고 현금 다음으로 서비스, 현물 순으로 많이 제공되고 있음
- '초저출산-인구유출'지역의 경우 저출산 분야 자체사업은 현금을 제공하는 사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타유형, 서비스 순으로 많이 제공

되고 있음

- ‘초고령-인구유출’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유형과 달리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 부재하고, 현금을 제공하는 사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현물, 서비스 순으로 많이 제공되고 있음
- ‘초저출산·초고령-인구유출’지역의 경우는 현금을 제공하는 사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비스, 바우처 순으로 많이 제공되고 있음

2) 고령사회 및 대응기반 강화

□ 고령사회 분야 개별 사업의 급여(서비스) 유형별 자체사업 수를 12개의 인구지표에 따른 지역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5-157〉 참조)

〈표 5-157〉 지역유형별 고령사회 사업별 (서비스) 유형

(단위: 개)

구분	현금	현물	바우처	서비스	기타	계
일반-인구유출	34	12	0	21	16	76
일반-평균	112	59	0	92	73	317
일반-인구유입	187	51	2	122	92	437
초저출산-인구유출	89	27	2	83	46	237
초저출산-평균	117	43	1	86	41	278
초저출산-인구유입	46	16	0	35	27	116
초고령-인구유출	6	5	0	9	22	42
초고령-평균	177	96	1	222	109	587
초고령-인구유입	46	17	0	34	16	113
초저고-인구유출	30	9	0	17	15	70
초저고-평균	107	38	0	57	29	221
초저고-인구유입	30	14	0	24	15	79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 개별 사업의 급여(서비스) 유형은 12개의 지역유형에 따른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짐

- 공통적으로 모든 지역에 현금, 현물, 서비스, 기타 유형의 급여가 제공

되는 사업이 있음

-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은 ‘일반-인구유입’, ‘초저출산-인구유출’, ‘초저출산-평균’, ‘초고령-평균’지역에만 있음

○ ‘초고령-인구유출’지역과 ‘초고령-평균’지역을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현금을 제공하는 사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많음

- ‘초고령-인구유출’지역의 경우 기타 유형이 제공되는 사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사업이 많음
- ‘초고령-평균’지역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현금을 제공하는 사업이 많음

□ 대응기반 강화 분야 개별 사업의 급여(서비스) 유형별 자체사업 수를 12개의 인구지표에 따른 지역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5-158〉 참조)

〈표 5-158〉 지역유형별 대응기반 사업별 (서비스) 유형

(단위: 개)

구분	현금	현물	바우처	서비스	기타	계
일반-인구유출	1	0	0	0	1	2
일반-평균	0	0	0	10	2	12
일반-인구유입	3	0	0	10	15	28
초저출산-인구유출	0	5	1	6	29	41
초저출산-평균	0	1	0	5	13	19
초저출산-인구유입	2	0	0	2	0	4
초고령-인구유출	0	0	0	0	1	1
초고령-평균	1	3	1	21	23	47
초고령-인구유입	1	0	0	1	3	5
초저고-인구유출	0	2	0	2	4	8
초저고-평균	1	0	1	2	2	6
초저고-인구유입	1	0	0	0	3	4

주: 1) 자체사업 내용은 2017년 5~10월까지 취합한 ‘2016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며, 일부는 기초 지자체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표를 해석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함

□ 대응기반 강화 분야 개별 사업의 급여(서비스) 유형은 12개의 지역유형에 따른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짐

- 대체로 저출산 및 고령사회 분야와 비교했을 때 현금, 현물, 바우처, 서비스와 같은 급여(서비스) 유형보다는 기타 유형의 사업이 많음
 - 기타 유형이 제공되는 사업이 없는 지역은 '초저출산-인구유입'지역임
- '일반-인구유출', '초고령-인구유출', '초저출산·초고령-인구유입'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서비스로 제공되는 자체사업을 가지고 있음
- 현금으로 제공되는 자체사업이 없는 성별이 (서비스) 유형인 자체사업이 있는 지역유형은 '일반-인구유출', '일반-인구유입', '초저출산-인구유입', '초고령-평균', '초고령-인구유입', '초저출산·초고령-평균', '초저출산·초고령-인구유입' 지역으로 나타남
- 현물로 제공되는 자체사업이 있는 지역유형은 '초저출산-인구유출', '초저출산-평균', '초고령-평균', '초저출산·초고령-인구유출' 지역으로 나타남
- 바우처로 제공되는 자체사업이 있는 지역유형은 '초저출산-인구유출', '초고령-평균', '초저출산·초고령-평균' 지역으로 나타남

제4절 소결

□ 본 장에서는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시행계획 사업을 분석하였음

-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중앙정부와 공통으로 수행되는 공통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되는 자체사업으로 구분하고 저출산 대책, 고령사회 대책, 대응기반 강화 정책의 세 가지 정책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함
- 분석된 사업은 공통사업 8,786개와 자체사업 6,292개임

□ 사업의 규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과 공통사업을 비교한 결과, 자체사업보다 공통사업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저출산 분야의 경우 공통사업은 6,770개로 자체사업(3,413개)의 약 2배로 나타난 반면, 고령사회 분야 및 대응기반 강화 분야는 자체사업의 수(고령사회 분야 2,696개, 대응기반 강화 분야 183개)가 공통사업의 수(고령사회 분야 1,964개, 대응기반 강화 분야 52개)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됨

○ 공통사업은 자체사업에 비해 대체로 저출산 영역에 보다 많은 사업이 편중되어(77.1%) 차이를 보임

○ 각 분야별 영역에 있어서의 사업 수를 살펴보면, 저출산 정책 분야에서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의 사업 수가 가장 많고, 고령사회 분야에서는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의 사업수가 가장 많다는 공통점이 있음

□ 사업의 규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사업, 자체사업,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비교한 결과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 공통사업을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분야로 구분했을 때 저출산 정책에 많은 사업이 편중되어 있고, 각 분야에서도 한 영역에 편중되어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특징이 있음

- 즉, 저출산 분야에서는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의 사업 수가 4457개(65.8%)로 가장 많았으며, 고령사회 분야에서는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의 사업수가 1266개(64.5%)로 가장 많음

○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의 경우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분야로 구분했을 때 비교적 고르게 사업이 분포되어 있는 반면, 각 분야 내에서는 한 영역에 편중되어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특징이 있음

- 공통사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저출산 분야에서는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의 사업이 2188개(64.1%)로 가장 많았으며, 고령사회 분야에서는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의 사업수가 2363개(87.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비교한 결과, 중앙정부의 경우는 저출산 분야와 고령사회 분야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고 세부 영역에도 사업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에 비해, 지방자치단체 공통사업과 자체사업은 저출산 정책과 비교하여 고령사회 정책과 대응기반 강화 정책의 규모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사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17개 시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저출산 분야에서는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의 사업이 가장 많고, 청년일자리·주거대책강화 영역과 일·가정양립사각지대 해소 영역의 사업은 거의 부재함
 - 또한, 고령사회 정책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의 사업이 가장 많고, 많은 시도에서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의 사업과 대응기반 강화 분야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시지역, 군지역, 구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군지역과 구지역 단위에서는 저출산 분야에서 일·가정양립사각지대 해소 영역의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시지역과 군지역, 구지역에 있어서 고령사회 정책 및 대응기반 강화 정책의 영역별 사업 수의 전체 사업 수 대비 비율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남
- 저출산 정책의 영역별 공통사업 수를 12개의 인구지표에 따른 지역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초저출산”과 “순인구 유출”의 문제가 나타나는 지역은 저출산 분야에 정책적 우선순위가 부여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인구유출”유형 지역에는 청년일자리·주거대책강화 영역의 사업은 4개 (0.4%)이고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영역에 해당되는 사업이 부재하다는 점, 그리고 “초저출산·초고령-인구유출”유형 지역에는 청년일자리·주거대책 강화 영역과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영역에 해당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고령사회 및 대응기반 강화 분야의 경우, “초고령사회”, “순인구 유출” 등의 문제가 나타나는 지역은 고령사회 분야에 정책적 우선순위가 부여될 필요가 있으나, 실제 “초고령-인구유출”유형 지역은 고령사회 분야 정책

중 노후소득 보장 강화 영역,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의 사업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영역과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의 사업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17개 시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공통사업과 유사한 특징이 있음

- 대체로 저출산 분야에서는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의 사업이 가장 많고, 청년일자리·주거대책강화 영역과 일·가정양립사각지대 해소 영역의 사업은 상대적으로 사업의 수가 작거나 없는 시도가 있음
- 고령사회 분야에서는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영역의 자체사업이 전체 자체사업 대비 비율이 80% 이상으로 가장 많이 수행되었음

○ 시지역, 군지역, 구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시지역, 군지역, 구지역 모두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분야의 세부 영역에서 골고루 사업이 수행되었다는 공통점이 있고, 구지역에서 노후소득보장 강화 영역의 자체사업이 부재하다는 차이점이 있음

○ 저출산 정책의 영역별 자체사업을 12개의 인구지표에 따른 지역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저출산 분야에 정책적 우선순위가 부여될 필요가 있는 “초저출산”(초저출산, 초저출산·초고령) 유형은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영역 사업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낮고,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영역 사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유형과 차이를 보임

- 또한, 저출산 분야에 정책적 우선순위가 부여될 필요가 있는 “순인구 유출”의 문제가 나타나는 지역의 경우는 “초저출산-인구유출”유형의 지역을 제외하고 전체 수행되는 사업의 수가 다른 유형의 지역보다 작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고령사회 정책 및 대응기반 강화 정책의 영역별 자체사업 수를 12개 지역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초고령사회”, “순인구 유출” 등의 문제가 나타나

는 지역은 고령사회 분야에 정책적 우선순위가 부여될 필요가 있으나, 실제 “초고령-인구유출”유형 지역은 고령사회 분야 자체사업의 수가 53개로 12개의 유형 중 사업 수가 가장 작고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영역의 자체사업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초저출산·초고령-인구유출” 유형 지역의 경우도 다른 유형에 비해 고령사회 분야 자체사업의 수가 79개로 두 번째로 작은 편이며 노후소득강화 분야 자체사업이 수행되지 않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의 급여(서비스) 기준과 유형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17개 시도로 구분하여 급여 기준을 살펴본 결과, 저출산 대책 자체사업은 성별, 연령, 소득, 자녀수 등 다양한 기준으로 대상자가 선정되고 있으나, 많은 사업이 기타 다양한 기준과 급여(서비스) 기준이 없는 보편 사업으로 파악됨

- 고령사회 분야의 자체사업은 대체로 소득기준으로 급여(서비스) 대상자가 선정되고 있으며, 성별, 연령, 소득, 자녀수 등 다양한 기준으로 대상자가 선정되는 지방자치단체는 5개 지역으로 제한적임

○ 시지역, 군지역, 구지역으로 구분하여 급여 기준을 살펴본 결과, 저출산 분야에서 성별, 연령, 소득, 자녀수 등 다양한 기준으로 대상자가 선정되고 있으며, 성별, 연령, 소득, 자녀수의 기준 중에서는 자녀수의 기준이 자체사업의 급여 기준으로 가장 많음

- 고령사회 분야에 있어서 시지역과 군지역은 소득기준과 자녀수기준의 사업은 없고 성별, 연령, 기타의 기준과 기준이 없는 사업이 있는 반면, 구지역의 자체사업의 경우 성별, 연령, 소득, 자녀수 등 다양한 기준으로 대상자가 선정되고 있다는 차이를 보임. 성별, 연령, 소득, 자녀수의 기준 중에서는 연령의 기준이 자체사업의 급여 기준으로 가장 많음

○ 17개 시도 또는 시·군·구 지역의 급여 형태를 살펴본 결과,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자체사업은 현금, 현물, 바우처, 서비스, 기타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대체로 현금과 서비스의 형태가 많음

□ 예산 대비 결산으로 산출되는 예산 집행률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개별사업의 예산은 100% 집행되었고, 공통사업의 예산 집행 실적이 자체사업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시·도별 저출산 전체 공통사업 중 예산이 100% 집행되지 않은 공통사업의 비율은 서울특별시가 10.5%(26개 사업)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충청남도(3.5%, 11개 사업), 경상북도(3.3%, 14개)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고령사회 정책 및 대응기반 강화 정책 영역 개별 공통사업의 경우 예산이 100% 집행되지 않은 사업의 비중은 부산(3.8%, 3개 사업)과 경기도(1.6%, 3개 사업)의 경우에서만 발생함

○ 시·도별 저출산 전체 자체사업 중 예산이 100% 집행되지 않은 자체사업이 있는 시도는 13개로 나타났고, 예산 100% 미집행 자체사업의 비율은 0.4%(전라북도)~7.1%(제주특별자치도)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사업 수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시도에서 1개~15개 사업의 예산이 100%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공통사업과 비교 시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함

○ 시·도별 고령사회 및 대응기반 강화 분야 전체 사업 중 예산이 100% 집행되지 않은 사업의 비율은 경상남도(5.0%, 12개 사업), 경기도(2.4%, 13개 사업), 충청북도(1.9%, 3개 사업), 광주광역시(1.1%, 1개 사업), 경상북도(0.9%, 2개 사업), 충청남도(0.8%, 2개 사업), 전라북도(0.5%, 1개 사업), 전라남도(0.4%, 1개 사업) 등 공통사업의 예산 집행률에 비해 실적이 저조함

□ 본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내용 분석은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의 제한점으로 인한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분석 결과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분석을 위해 수집된 분석 대상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제출담당자와 여건에 따라 그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 예를 들어, 임신진료비 사업 항목을 한 개의 사업으로 보고한 지자체가 있는 반면, 임신진료비, 예방접종비, 산전검사비 지원 사업을 한 개의 사업으로 파악하여 한 개의 사업으로 보고한 지자체가 있어 사업 수에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음

- 또한, 실제로 추진된 사업이 존재하나, 보고되지 않고 누락된 사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사업의 규모가 왜곡되어 해석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 본 분석에서의 분석단위는 시·군·구이기 때문에 시·도 단위의 사업, 교육청 및 기타단체·기관에서 수행되는 사업은 분석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전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제 6 장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성과관리 방안

제1절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 성과와 한계

제2절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성과 관리의 필요성

제3절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성과 관리 방안

6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 성과관리 방안

제1절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 성과와 한계

1.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 과정

- 2006년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추진되면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함
 - 그동안 매년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은 기초자치단체의 시행계획 내용을 광역자치단체가 종합하여 수립 및 시행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광역자치단체 종합 수립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수립과정이 아직까지 형식적으로 독립되지 않는 실정
 - 중앙부처 시행계획은 매년 성과관리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음
-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의미를 이해하고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심각성에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대처하기 시작함
 - 연도별 시행계획을 계기로 기초자치단체별로 적극적인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개발하기 시작함
 - 자치단체별로 지원 수준은 차별적이지만, 점차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임신 및 출산, 그리고 자녀 돌봄 및 양육을 지원하고, 임신부 및 영유아의 건강

관리에 투자하고자 노력함

- 중앙정부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 대응에 공동 대응하고자 노력하기 시작함
 - 광역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까지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함께 인구현상에 대한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꾸준히 수립 시행하면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모범적 사례가 발굴 전파되고 있음
- 점차 자치단체 내에서 업무가 분담되고 조직적으로 업무 계통을 확립하는 성과를 만들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까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시행계획 업무를 공식화하고 매년 시행계획 수립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음

2.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과정의 문제점

□ 지역의 인구특성 및 정책 환경을 반영한 정책 목표 설정 필요

- 본 연구의 기초자치단체 인구 특성 분석 결과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더욱 심화, 고착되어 가고 있으며 인구변동의 많은 부분을 인구이동이 결정하고 있음
 - 연령별 출산율에서 20대 여성 출산율이 2010~2015년 사이 크게 하락하였으며, 25~29세 여성 1,000명당 50명 이하 출생 지역이 2005년 2곳에서 2015년 48지역으로 확대
 - 노년인구가 20%이상 되는 초고령지역이 2005년 42개에서 2015년 82개로 빠르게 증가
 - 2015년 기준 인구증가율과 순이동률이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인구증가율과 조출생률 사이의 관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증감은 인구이동에 의해 주로 결정되고 있음
-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 환경 분석에서 자녀 양육 및 노인 지원 인프라 등 지역의 정주 여건이 지역의 인구 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대도시 또는 지방 중소도시에 미혼 및 자녀를 둔 젊은 층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지방 농어촌 지역의 경우 노인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남

- 이것은 보건의료 인프라, 자녀 양육 및 노인을 위한 돌봄 인프라, 주거 환경과 일자리 환경과 같은 지역의 전반적 거주 여건이 자녀 출산 및 양육과 노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임
- 특히 지역의 주거 환경은 인구 변동에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예를 들어 12개 지역 유형별 분석에서 부산 강서구와 나주시 사례를 통해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이 인구 변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은 인구특성 및 지역의 정책 환경을 반영한 정책 목표를 설정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인구 유입을 위해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현재 인구 변동의 3요소 중 출생과 사망 요인보다 인구 이동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서, 출생 및 사망 요인보다 인구 이동 요인에 집중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실효성이 없음
- 국가 차원에서 한 지역의 인구 증가는 인근 지역의 인구 감소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임
- 인구 유입을 위한 단기적 대책보다 지역의 거주 여건 개선 전반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의 목표가 설정되어야 함

□ 지자체 시행계획의 내용적 한계

○ 현재 지자체 시행계획의 내용은 지역의 인구변동, 정책 환경, 주민의 욕구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12개 지역 유형 심층사례분석 결과에 따르면, 각 지역의 인구 특성에 따라 정책적 차별성은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음. 저출산 심화지역과 고령화 심화 지역의 차이 또는 인구유출 지역과 인구유입 지역의 차이 등이 정책에 반영

되어 있지 않음

- 전체 기초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역별(임신출산, 돌봄, 일가정양립, 노인 소득보장, 사회참여, 중고령자 인력 등), 급여 지급 기준(연령, 소득, 자녀수 등)별, 급여유형(현금, 현물, 바우처, 서비스 등)별 비중이나 지역 유형 군집(12개 유형분류 체계)에 따른 정책적 차별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전체적으로 시행계획의 내용이 지역의 인구 특성, 보건의료와 돌봄 등 인프라, 주거와 같은 정책환경, 주민 욕구 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함

○ 보건소와 시군구청의 분담체계, 또는 시군구청 내부 담당 부서에 따라 시행계획 내용의 편차가 크게 나타남

- 보건소가 중심 추진체계일 경우는 저출산 분야에서 임신 출산 관련 사업이 중심을 이루고, 시군구청이 중심 추진체계일 경우는 일반적 복지사업이 중심이 되는 실정
- 시군구청이 중심이 되는 경우에도 아동, 여성, 가족, 복지일반, 노인 등 담당부서에 따라서 내용의 영역 편중이 매우 큰 실정임
 - 국비 보조 사업이라 해도 기초자치단체별로 사업 명칭이 상이하고, 자체 사업의 경우도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년도별(작성자별) 사업명칭이 상이함

□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추진 체계의 문제점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정도가 충분하지 못함

- 기초자치단체까지 시행계획의 수립 필요성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으며, 수립된 시행계획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연속성 있게 적절히 관리되지 않고 있음
-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은 통일적 기준이 없이 담당부서(담당 계 수준)에서 비체계적으로 취합되고 있는 실정

○ 중앙정부-지방정부-지방정부 내의 통일적 추진체계 부재

-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지방 정부 내 담당 부서 간 시행계획의 수립과정이 전혀 통일적 체계를 따르지 않고 있음
- 중앙정부와 광역, 기초 지자체까지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업무의 협조체계 취약하고, 지방 정부 내에서 보건소와 시군구청 간, 시군구청 내에서도 부서별 협조체계가 취약하여 시행계획 내용의 편차가 심각한 수준

□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평가의 한계

○ 기초자치단체 시행계획 내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통사업과 자체사업의 구분, 저출산 분야와 고령사회 분야의 영역 구분, 시도 및 시군구의 구분, 예산 구조 상 국비와 시도비 및 시군구비의 구분과 함께 일치성 등이 방대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28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취합 자료에 따르면, 공통사업 10,343개, 자체사업 7,539개에 달하기 때문에, 통일적 체계를 가지고 시행계획의 성과를 관리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현 시행계획 수립 과정 및 관리 상태가 지자체간 편차가 크고, 수립 단계에서 평가를 고려하지 않고 수립되었기 때문에, 통일적 기준을 적용한 성과관리(평가)는 매우 어려운 실정

- 현재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의 적절성, 실효성 등을 살펴볼 때, 실질적 성과관리를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됨

○ 향후 기초자치단체까지 포괄하는 시행계획 성과관리를 위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현 상태에서 바로 성과관리를 시작한다면 그 결과는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 평가 결과를 두고 갈등이 유발될 우려가 있음

○ 요컨대 향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성과관리를 위한 준비 단계와 시범적 시행을 거쳐 본 성과관리를 추진 할 필요성이 있음

제2절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성과 관리의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성과 관리의 필요성

- 현 단계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관리를 즉시 시행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향후 적절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성과관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해야 함
 - 법 21조 4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함
 - 시행령 제 4조 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 지침에 따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 대응의 필요성 제기
 -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급속한 진전 속도와 장기지속성을 고려하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적극 참여하는 전사회적 공동 대응이 필요한 상황
 - 전사회적 공동 대응을 위해 특히 지방정부의 현장감 있고 주민의 생활 밀착형 정책 추진의 중요성이 제기됨
 - 정부의 재정 투입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민간자원을 통합하여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공동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의 시행계획 수립과 추진 성과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
- 2006년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추진 이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중앙정부 시행계획은 지속적으로 성과관리가 시행되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관리는 추진되지 않고 있음
 - 지방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설정의 적절성,

추진과정의 적합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진단과 평가 결과의 환류 과정이 요구됨

□ 지자체 시행계획 성과 관리의 목적

- 지방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추진 방향 및 추진 목표의 적절성과 정책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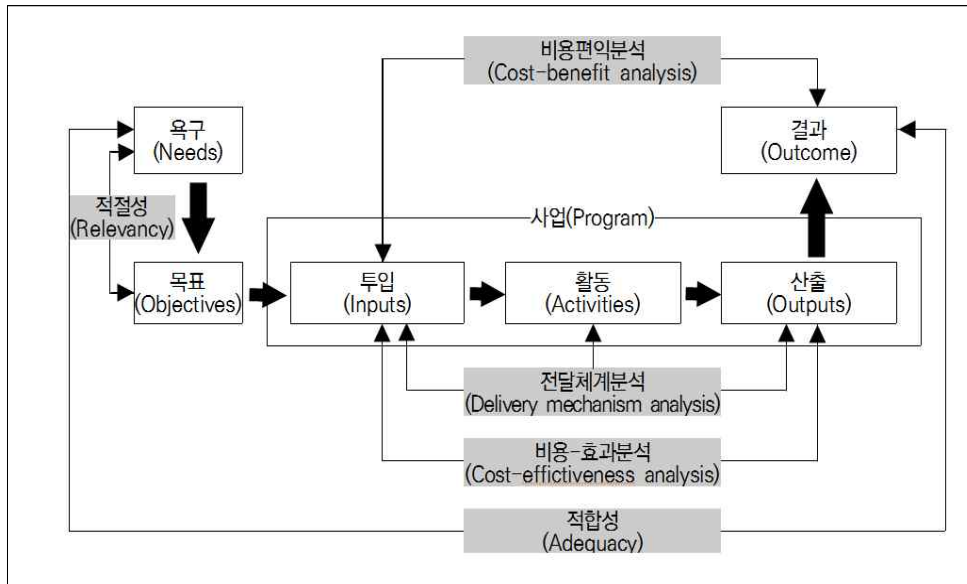
제3절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성과 관리 방안

1. 정책 성과 평가의 개요

□ 정책평가의 논리 모형

- 다음 그림으로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정책 평가는 정책 추진 단계별로 적절성(Relevancy) 평가, 사업(Program) 평가, 전달체계 분석, 비용-효과분석, 비용편익분석, 적합성(Adequacy) 분석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적절성 평가는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정책 욕구를 반영하는 정책 목표 설정이 적절했는지 평가
 - 사업 평가는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점검과 자원의 투입 대비 산출(Outputs)의 성과 정도, 또는 효과의 인과성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평가 논리 모형은 평가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음
 - 평가 과정을 더욱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업목표의 적절성 평가, 사업 추진과정 에 대한 성과평가, 정책 결과에 대한 효과성 평가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음

[그림 6-1] 정책평가 논리 모형 예시



자료: 한국개발연구원(2012). 정부재정사업심층평가지침.

□ 정책 평가를 위한 방법론적 검토

- 정책 추진과정 및 추진 성과에 대한 적절한 자료와 방법론적 접근이 요구됨
 - 정량적 성과 평가 방법으로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누적된 양적 자료가 필요하며, 정교한 실증분석 모형에 의한 통계적 검증 과정이 요구됨
 - 실증 분석을 위해서는 통일성을 갖춘 신뢰할 만한 시계열자료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며, 이런 경우에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음

□ 지자체 시행계획 성과 관리를 위한 접근 방법

- 현 단계에서 지자체 성과관리는 정책 목표 설정의 적절성(Relevancy)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포함하여, 제한적으로 추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성격의 성과 점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음
- 반면, 양적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는 효과성 평가 단계로 접근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지자체에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양적 자료 구축의 한계로 인하여, 효

과성 평가 모형을 검증할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자료 구축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임

2.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성과관리 방안

가. 추진체계 정비

□ 시행계획 범위의 특성 상 총괄부서의 필요성

-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시행계획 수립 및 관리 업무는 특정 부서에 국한되지 않고 자치단체 업무 전반을 포괄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총괄 부서에서 전담하는 것이 효과적임
- 보건소보다는 시군구청에서 총괄하여 담당하도록 하고, 시군구청 내에서도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에서 시행계획 수립, 관리, 평가 업무를 통일적으로 전담하도록 하여, 업무가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 정비가 필요함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통일적 추진체계 정립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중앙정부에서부터 광역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의 담당 부서까지 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업무의 계통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업무는 자치단체별로 매우 상이하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된 ‘지역 인구정책 전담 조직’의 업무가 시행계획 업무와 중복되고 있는 실정임
 - 기초 자치단체의 ‘지역 인구정책 전담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업무를 전담 조직에 이관하여 통일성을 기하면 향후 시행계획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나. 성과관리 방법 검토

□ 정책평가 논리 모형 검토

- 정책 평가 논리모형을 사업목표의 적절성 평가,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성과평가, 정책 결과에 대한 효과성 평가로 구분함
- 현 단계에서 지자체 성과관리는 정책 목표 설정의 적절성(Relevancy)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포함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성격의 성과평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양적 자료 구축의 한계로 인하여, 효과성 평가 모형을 검증할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자료 구축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임

□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하여, 정성평가와 제한적 정량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함

- 시행계획의 개별 사업별로 정책 목표 설정의 적절성에 대한 정성평가와 예산 및 성과지표의 달성 정도에 대한 정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평가를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 전문화 추진

-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성과평가에서 점차 효과성 평가로 확대
 - 정책평가 방법으로 제한적 정량분석 단계인 사업 추진 과정 성과평가에서 결과에 대한 인과성 검증 단계에 해당하는 효과성 평가로 확대
 - 향후 효과성 평가를 위하여 시행계획 성과 자료와 정책 환경 지표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축적이 요구됨
- 자체평가에서 3차 평가로 전문화 추진
 - 우선 지방자치단체 자체 평가로 시작해서 향후 전문 평가기관 또는 평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적 평가로 발전시킴

다.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지침

□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수립 지침

- 현재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은 포괄범위의 측면, 내용 구성의 측면, 정책 영역 구분, 계획의 구체성, 성과지표 설정 및 목표 설정 등 제반 사항에 있어서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통일성을 갖추어 기본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중앙정부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함
 - 현재와 같이 통일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동일한 체계와 기준을 적용하는 성과관리는 불가능한 실정임
 - 따라서 성과관리가 가능한 상태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통일적인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 할 필요가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은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각각 수립토록 함
 - 각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거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제출함
 - 제출된 시행계획은 연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추진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함
- 시행계획 수립 지침은 시행계획 포괄 범위, 사업별 시행계획 내용의 구성요소, 내용의 구체성 정도, 추진 일정, 정책 영역 구분 방법, 예산 현황, 성과지표와 성과 목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야 함
 -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양식을 개발하여 주요 내용을 예시와 함께 설명함
 -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포괄 범위는 기본적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사업 범위와 중앙정부 시행계획의 사업 범위를 포괄해야 하며, 기본계획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해당 자치단체의 추가 사업을 추가할 수 있음

- 사업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정책 목표와 관련 현황, 사업의 주요 내용, 월별 또는 분기별 추진 일정, 예산 현황, 성과지표와 성과 목표, 담당자 연락처 등을 포함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일정과 향후 성과관리 일정을 포함

○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관리 및 추진 성과 자체 점검 방법 포함

- 기초자치단체 시행계획 총괄업무 담당자는 시행계획을 수립, 기관장 승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출 이후, 자체적으로 사업별 담당 부서의 사업 추진 과정을 연중 (분기 또는 반기 단위)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함

□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성과관리 지침

○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성과관리를 위하여 ‘추진과정에 대한 성과평가’와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방법을 제안하며, 아래에서는 이에 준하여 성과관리 지침의 주요 내용을 제시함

○ 시행계획 성과관리의 배경 및 목적을 설명함

-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추진 방향 및 추진 목표의 적절성과 정책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 평가방법을 설명함

-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성과관리는 자치단체가 자체평가서를 작성 제출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종합 정리하는 방법을 따름
-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을 완료한 후, 자체 성과평가서를 작성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제출함
- 자체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 년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함

○ 평가를 위한 공통양식(엑셀)을 개발 및 제공하고, 이 양식에 따라 시행계획을

- 〈표 6-2〉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자체평가 작성서식 예(자체사업)

(단위 : 백만원, 명, 개, %, 회)

[illegible]

목표달성도			미흡 사유	지급방법			주요내 용	담당자		
성과지 표	성과목 표	추진실 적		수혜구 분	급여기 준	급여유 형		성명	부서명	연락처
임산부 등록률 (%)	100	96								

○ 자체평가를 위한 공통 양식은 연중 관리하도록 함

- 공통양식은 수행계획 수립 단계에 기본 정보를 입력하여 연중 관리하면, 사업이 완료된 이후 추진 성과와 예산 부분만 추가 작성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연중 상시 점검 방법을 설명함

- 기초자치단체 시행계획 총괄업무 담당자는 시행계획을 수립, 기관장 승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출 이후, 성과관리를 위한 공통양식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사업별 담당 부서의 사업 추진 과정을 연중 (분기 또는 반기 단위)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 최종 자체평가서 작성 제출

- 사업이 완료된 이후 성과목표 달성 정도와 달성 정도가 미흡한 경우 그 사유를 작성하도록 함
- 자체 평가 양식을 완성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출함

○ 성과 관리 전체 일정 포함함

라. 인적 역량 강화

-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업무 담당자에 대한 훈련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시행계획 수립 단계와 최종 자체평가서 작성 단계에 각 1회 집체 교육 실시
- 집체 교육을 통하여 시행계획 수립과정과 시행계획 성과관리 지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종합 평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최종 자체평가서를 종합 평가함
- 종합 평가에서 제한적인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추진 상황에 대한 경향성을 파악함
 - 정량평가는 예산 집행 실적, 성과 목표 달성 정도를 중심으로 평가함
 - 성과 목표 달성 미흡 사유에 대하여 정성평가를 실시함
- 정량 평가 시 적절한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주요한 특성을 파악함
 - 저출산 분야, 고령사회 분야를 구분하고, 각 분야 별 중영역과 세부 영역을 다시 구분하여 사업 추진 성과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파악함
 - 예를 들어 특정 영역이나 세부 영역에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목표 달성도가 저조한지 파악함
 - 시도 및 시군구 등 지역 구분을 적용하여 지역별 사업 성과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파악함
- 종합평가 결과는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공지하여, 다음 년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참고문헌 <<

- 공동성, 구교준, 김선아, 민나은, 박기찬, 박노옥, 박상규, 박성민, 박중훈, 송상훈, 신황선, 양승범, 오철호, 윤기웅, 윤지웅, 이정옥, 임도빈, 임성일, 정문기, 조문석, 최상옥, 최영출, 홍형득(2013). 성과관리-외국제도편. 대영문화사. pp.1-455.
- 국무조정실(2007). 정부업무평가 백서.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2016).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2017. 7. 4.). 보도자료: 새 정부 국정과제·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정부업무평가 실시.
- 김명수(2003). 공정정책평가론. 서울: 박영사.
- 안혁근, 박중훈, 이광희, 황혜신, 조세현, 이광훈(2015). 2015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이근주(2001). 특집: 정책평가와 정부업무 평가제도: 미국 GPRA의 현황과 평가. 한국행정연구, 10(1), pp.19-40.
- 이삼식, 이지혜, 김세진(2014). 2013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영, 강은나, 이재량, 박성희, 김정근, 김태현, 이수옥, 최재성(2016). 2015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인병택, 신희권, 김미경, 임성은(2015).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의 정책적 활용방안. 한국정책홍보연구원.
- 주혜정(2009). 과학기술정책 수용의 제도적 맥락과 상이성: 한국과 미국의 R&D 성과평가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8(3), pp.121-159.
- 행정자치부(2016). 2017년('16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및 매뉴얼.
- 황혜신, 최성락(2013). 해외사례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